

이 資料集은 統一問題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9個中央
綜合日刊紙(서울신문, 世界日報, 朝鮮日報,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京鄉新聞, 國民日報, 東亞日報, 中央日報)에서 1988年 11月 1日
부터 1989年 4月 30日 사이에 다룬 統一論議중 社說과 時論을
統一關係, 南北韓關係, 理念問題, 北方政策, 南北會談, 文牧師入北
問題 6個 分野로 分類, 日字順으로 編輯한 것임.

統一 論議

資料集Ⅲ
(’88.11.1~’89.4.30)

國土統一院

目 次

I. 統一關係

통일論의 새 接點	13
中心있는 對北 정책을	15
北을 向한 百花齊放	17
南北對話와 統一院의 位相定立	19
南北교류의 질사와 一貫性	21
북한 바로 알기의 문제점	23
對話의 窓口는 하나로	25
北方 창구의 制度化	27
成年 맞은 統一院	29
統一政策의 一元化	31
時流에 좌우돼선 안된다	33
『統一論』을 統一할때	35
對北韓政策에 自信感을	37
統一논의, 理性的으로 대처해야	39
‘7·7 선언’ 9개월과 통일정책의 혼란	41
『統一』논의와 與野의 책임	44
危機克服의 根本對策이 필요하다	46
保革論爭과 統一論議	49
統一정책, 확고한 원칙을 밝혀라	51
統一意志와 정책 흔들릴 수 없다	53
自信感和 幻想	55

나라를 위한 질문들	58
‘통일의 방안’과 ‘방안의 통일’	62
南北문제에 『上智』를 모으자.....	65
信賴구축이 統一의 先行 조건	68
『이상한 統一論』배격되어야 한다.....	71
이 답답한 民族史의 고통	75

II. 南北韓關係

北韓은 眞實과 誠意를 보여야한다	81
北韓은 變化하는가.....	83
北韓은 變하려는가.....	85
北의 變化를 기대한다	87
北韓의 부산한 움직임	89
南北關係만 뒤쳐지나.....	91
南北韓 관계에 變化기대	93
北의 제안과 우리의 대응	95
靈的 救援과 南北和合	97
南北關係의 實體.....	99
北도 바깥 變化를 읽어라	102
金日成의 幻想과 北의 政治的 限界	104
南의 잣대, 北의 잣대	106
經濟人 첫 訪北	108
1百萬의 和戰法	110
南과 北의 合作	112
金剛山개발, 너무 흥분 말아야.....	114
가까와진 金剛山.....	116
南北의 基本構圖는 變하고 있는가	118

금강산 개발과 정주영씨	120
남과 북이 저작권 협정을 맺어야.....	123
『離散의 만남』도 급하다.....	125
北風은 아직 차다	127
北韓은 變하지 않았다	129
北韓 百萬軍 무슨 뜻인가.....	131
對北 試行錯誤는 안된다	133
統一外交의 장애는 무엇인가.....	135
보안법·남북교류 특별법 공청회를.....	137
對北韓觀의 正照準.....	139
統一을 外面한건 어느쪽인가.....	141
개혁이 필요없다면.....	143
開放 거부하는 北韓	145
北도 페레스트로이카를.....	147
北韓이 변하려면.....	149
北韓은 『달힌 門』을 열라	151
北韓도 해빙에 同參하라	154
北에서 던져오는 『不和의 사과』.....	158
南北간의 먼길 가까운길	161
南과 北을 잇는 길은	164
시계 鍾는 갈곳이 없다.....	167
『生活』에 눈뜨는 北韓	171
北韓의 개혁없는 경제 교류엔 限界.....	174
北風에 흔들리는 『보통사람들』.....	177
금강산, 그 幻想과 現實의 차이.....	180
남북한 軍事力.....	183
南北韓 교류 教會가 앞장을	186

Ⅲ. 理念問題

북한의 책들도 '수입개방'해야	191
사회주의 보다 자유가	193
『北韓』出版과 良識	195
北韓서적 出版 문제	197
大學街의 思想汚染	199
인간 절규의 북한학생 亡命	201
北韓속의 北韓	203
教條主義의 退潮	205
『反共은 안된다』는 주장의 虛構	207
主體사상, 金日成 종교	209
『左傾』수사 限界 분명해야	211
民主主義를 '意識化教育'하도록	213
『생각하는 教育』 필요하다	215
高校生 『意識化』를 막는길	217
다시 左傾 서적 단속	219
『左傾』출판에 源泉 대처를	221
왜곡된 『民主市民 教育』	223
6·25가 『해방전쟁』이라니	225
『革命정부』수립이라니?	227
思想 갈등의 민주적 극복	229
『保·革』兩分은 시대착오	233
自由民主主義부터 확립하자	236
大學街 『北韓 환상』을 경계한다	239
통일열기 찬물 끼었어선 안된다	242
이쪽 저쪽 大學生들	245
현실과 思想과 幻想사이	248

『主體思想』에 대한 올바른 對應	251
大學生은 강의실로	254

IV. 北方政策

韓蘇關係 발전의 兩面性	259
모스크바 行 『急行列車』	261
北方政策을 위한 民官合同기구	263
北方정책은 實利위에	265
정략에 통일이 희생될 수는 없다	267
『蘇聯特級』타기전에 할일	269
對北方 經濟交流의 調整	271
北方정책에 拙速은 禁物	273
蘇聯의 韓半島정책, 그 表裏	275
北方 經濟 교류의 方略	277
北方창구 一元化하라	279
웨이리 방정 떠는가	281
北方政策은 巨視的 안목으로	283
方北政策의 再檢討	285
北方정책이라는 것	287
毅然해야 할 北方政策	289
北方政策은 毅然하게	291
北方外交와 北韓의 저항	293
北方정책에 衆智모으자	296
北方진출 속도늦추자	299
『北方』이라는 이름의 신기루	302
北方정책과 東方정책	305
北方외교 限界性 극복의 길	308

政府, 어디로 가고 있는가.....311
 “北方정책은 온 국민 지혜로”314
 北方정책과 責任윤리..... 319

V. 南北會談

學術交流는 南北이 먼저 325
 南北韓 學者들이 만나라 327
 南北 國會회담 性格 分明하게329
 南北회담의 새 可能性 331
 남북 정치·군사 회담에 적극 나서라..... 333
 對北 교류의 확대335
 南北交流는 꿈이 아니다337
 單一팀 만들때 됐다339
 북한의 동시 多發提案 341
 南北 單一팀 構成 하려면343
 總理회담으로 南北간의 돌파구 찾자345
 통일각의 冷氣流.....347
 北韓은 진정 對話에 뜻이 있는가..... 349
 『北南……연석회의』 제안.....351
 『平壤祝典』參加의 條件.....353
 남북의 청년학생들끼리 만나게.....355
 南北學街교류의 必要性..... 357
 原則있는 南北대화..... 359
 南北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361
 北韓 억지와 우리의 인내363
 和解기류 冷却시킨 北의 트집 365
 아직도 『南朝鮮 혁명』인가.....367
 과열도 냉각도 禁物369

平壤 가기전 준비부터 차분히	371
北의 實情을 먼저 알자	373
남북동포의 통일운동 무력으로 막지 말라	375
南北문제, 쉬운것부터 푸는 智慧	377
南北體育會談에의 期待	379
體育會談에 政治는 배제해야	381
對話·交流엔 相對가 있다	383
北의 진정한 意圖는 무엇인가	385
'對話연기 통보'가 뜻하는 北의 전략	387
北韓은 잘못 알고 있다	389

VI. 文牧師 入北

文목사의 돌연한 訪北	393
統一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다	395
南北統一의 論理와 幻想	397
그는 大韓民國을 무시했다	400
충격과 소모를 줄이자	402
시급한 反共 관계법 整備	404
文益煥씨의 反國家 행위	406
문목사의 평양행을 '통일'의 역사적 계기로	408
個別 入北초청 嚴戒해야	411
北의 새로운 平和攻勢	413
時針을 뒤로 돌릴순 없다	415
文씨 訪北과 우리의 대응	417
統一에 관한 國論과 정치인의 責務	419
統一노력의 理想과 現實	421
文목사 환영 대회라니	423
文목사의 『板門店 귀환』	425

누구를 환영하겠다는 말인가.....	427
文益煥씨의 記者會見.....	429
文씨의 『聯北』노선.....	431
문목사 방북 놓고 흑백논리 강요 말라.....	433
文益煥씨의 誤判.....	436
文목사를 證言臺에.....	438
批判되어야 할 文益煥씨 북한 行脚.....	440
『聯邦制』란 이름의 함정.....	442
文益煥씨의 責任.....	444
統一문제에 毅然한 자세를.....	446
文목사 拘束이후.....	448
文씨 衝擊이후의 課題.....	450
文목사 訪北의 충격과 비극성.....	452
主權이 흔들리고 있다.....	455
『존경하는 金日成 주석』?.....	459
金日成은 웃고 있다.....	463
『존경하는 主席』과의 포옹.....	466
文목사가 걷는 길.....	469
鄭씨-文씨와 統一논의.....	472
‘문목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476
『獨裁者의 선전원』.....	478
꿈과 念願과 現實과.....	482
『文益煥 쇼크』가 남긴것.....	485
文씨 訪北의 의도와 결과.....	488
文씨 쇼크와 悲劇의 뿌리.....	491
사법처리와 형평의 원칙.....	494
變革에도 飛躍은 없다.....	496
文목사, 말좀 해봅시다.....	499

이제 분명한 목소리들을····· 502
金日成 면담과 초월성····· 505
文목사 入北의 충격과 教訓····· 508

↓ 統一關係

통일論의 新接點

- 保守·進歩세력을 연결하는 『톱니』를 -

京郷新聞 社說('88.12.20.)

서울이 평양쪽으로 가고있는가 아니면 평양이 서울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냉전 이데올로기체제 아래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굴복 시키느냐는 정치게임의 視角에서가 아니다.

적어도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새로운 변화의 대세가 어디로 부터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狀況 감지력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민주화 이후 남쪽에서는 이른바 민중통일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동질성회복 운동이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論者들은 이제 통일의 과제는 낡은 것의 지양이며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과 자주화 운동이 일단락 지어질 때 남북 사회간에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통일의 기반은 성숙된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이 論理는 외세의존적이며 파쇼적 세력은 엄청난 물리력 자본력 그리고 여론·의식수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無力化시켜야만 민족화 민주화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그런 맥락에서 민중주체의 통일운동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또한 통일을 위해 남북 민중의 자각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 적어도 남북문제를 보는 안팎의 이런 새로운 視角들이 민족문제의 큰 전환점의 기초를 이루어 가고있음을 여러징후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게 지금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한의 많은 『그림』들을 보고있고 북의 공식 국가 칭호를 원산지로한 모시조개가 남쪽으로 수입돼 들어온 것은 이제 남북관계가 『휴전선』만으로 상징되던 시대는 아니라는 감지력을 높여주는 자료들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통일원의 여론조사에서 남북관계의 장래에 대해 69%가 낙관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可視的변화에만 토대를 둔 것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 모스크바에서, 북경에서,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 즉 한 時代의 思潮를 잠재우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각자의 판단력과 상상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민중적 시각이나 민족동질성 회복을 향한 줄기찬 『외침』들은 대내적 상황인식을 바꾸어 놓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 논의의 개방성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기적意味』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큰 테두리의 北方정책 또한 이와같은 論議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바 있음 또한 사실이다. 물론 88올림픽을 계기로 일어나고 있는 東歐圈과의 교류나 남북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자세는 新데탕트時代의 産物이긴 하다. 그러나 시대조류에 대한 정권적 적응력을 산출해내는 것은 역시 국민적 지지기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정권안보의 측면에서 禁忌時 되어왔던 진보적 통일론을 제도권정치가 흡수하는 노력이며 在野의 일각과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한 민중통일론의 주창자들이 통일을 위해 진정한 매개체적 역할을 진전된 현실상황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과거 갈등과 대립상을 보이며 두개의 軸으로 따로 움직였던 통일방책들이 하나의 톱니로 연결된다면 폐쇄적 평양이 서울로 얼굴을 돌리는 개방자세를 보다 적극화하리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盧정권은 민주화가 함축하는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역사적 의미를 高濃度로 정책에 응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在野세력은 서울의 정권에 대해서만 화살을 쏘아댈 것이 아니라 평양쪽에도 『민주화』의 과녁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민중적 자각과 행동을 놓고 볼 때 北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中心있는 對北 정책을

朝鮮日報 社說('88.12.27.)

요즘 정부나 국회 또는 경제계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對北접촉은 마치 깜짝쇼라도 벌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가벼운 충격』이나 주고마는 깜짝쇼와는 달리, 우리 지도층이 主導하고 있는 對北접촉은 민족전체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사건을 蓄積해가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수 없다.

北을 수용하고, 또한 北을 개방시키는 통일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 정부나 國會 또는 경제계등에서 흘러나오는 일련의 對北접촉은 그러한 역사적 과업이라는 使命感보다는 無謀한 시위효과 아니면 無爲한 상호경쟁의 결과와도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자 朝刊들의 1면 머리기사들만 봐도 그렇다. 세 조간은 새해 3월쯤에 平壤에서 南北국회본회담이 열릴 것이라고했고, 한 신문은 盧대통령이 취임1주년을 기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등 새 『통일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대표를 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韓-蘇간 直交易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잇달아 나왔다.

요 얼마동안 平壤-모스크바를 비롯한 共產圈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현지보고들이 都下신문들과 TV畫面을 장식하고 있는것은 그만큼 우리의 북방외교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증명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전국이래 지난 수 십년동안, 북한 또는 소련이라는 실체에 대해 갖고있던 모든 지식과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거나 소련이 최선에 전투기들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북한주민 전체가 對南臨戰태세를

잠시도 풀지 않고 있다는 사실, 金日成唯一사상의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도, 김일성父子에 반대하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容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당장 내일이라도 웃으며 손잡고 대화하며 交易하고 往來할 수 있는 평화적 분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저쪽은 『하나의 조선』 정책을 손톱끝만큼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두개의 조선』을 획책하는 미국과 그 군대는 즉각 남한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두개의 한국』을 전제로 한 평화적 대화와 공존과 교역과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능케 할 卞족한 수를 갖고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민족의 단합과 국토의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필요불가결한 단계요 과정으로서 정부나 국회나 경제계가 확신을 갖고 앞으로 밀고가는 것이라면, 이에 반대할 한국인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정부나 국회나 경제계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것 같지가 않다. 저쪽은 끄떡도 하지 않는데 이쪽이 공연히 들떠 있는것만 같다. 국회의원 2백 99명이 평양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엇그제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던』 남-북국회의원전원 참석하의, 北側의 평양회담안이 왜 갑자기 수용됐는지 그 경위 설명은 왜 없는가. 盧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으로 평화협정은 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를 비롯한 나라의 지도층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北을 向한 百花齊放

朝鮮日報 社說('89.1.6.)

89년을 여는 對北 제스처의 하나로 한·미간의 전통적인 합동 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의 대화를 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여러 측면의 정치적 제의와 내용들은 오갔지만, 군사적 측면의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도 남음이 있다.

훈련규모 축소의 문제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발표시기를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다소 늦추고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이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축성을 두는 것 뿐이라면 훈련의 실질적-상징적 의미에는 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훈련의 실질적 축소나 상징성의 후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도적 발상이고, 또 北의 소련과의 합동해군훈련을 규모면에서 상쇄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라면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새삼 우리 정부, 또는 지도층에 과연 對北정책을 통괄하고 조감하는 中心的 기능이 있는 것이며, 또 우리의 對北정책이 어떤 커다란 윤곽과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對北정책이 衆口難防식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쏟아져 나오는 北韓의 일련의 對南공세와 제의들이 하나같이 北의 일관된 對南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남쪽에서 제기되는 각종 對北 제의와 제스처는 어떤 일관된 정책노선에 따른것이라기 보다는 저마다 한번씩 해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라고 北韓행 열차에 빠질소냐는식의, 인기위주의 또는 流行性, 특흥적, 感傷적 성격이 짙은 것들이라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통일원에서 간접적으로 흘러고있는 이른바 『체제연합』이니 하는 개념들도 어

면 실현성이나 실효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는 아카데미적이고 理想주의적 발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팀스피리트훈련 규모의 축소 운운도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의식한 절도있는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발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에의 접근은 궁극적으로 金日成 집단의 생각이나 정책이 바뀌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金日成의 赤化통일의 야욕이 남아있는한, 金에 대한 개인숭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北韓은 사실상 그들의 對南 자세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우리가 그 前까지 해두어야하는 것은 金日成체제가 붕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통일을 모색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對北정책을 체계있게 다듬어 놓고 알뜰하게 기다리며 그 중간에라도 그들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 이상의 중구난방식 인기위주의 말장난과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對北모험주의들은 오히려 金日成집단을 오관하게 만들어 그들의 對南정책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南北對話와 統一院의 位相定立

서울신문 社說('89.1.25.)

昨今年에 들어 정부내에서 가장 바빠진 부서가 아마도 國土統一院일 듯하다. 7·7선언 이래 정부가 과감한 통일및 對北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만큼 업무량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즈음 통일원 당국자들은 묘한 허전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것같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갑작스레 주요 부서로 부각되어 업무가 늘고 기능이 강화됐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 내의 다른 관계부서가 『많은 일』을 해 왔던 터여서 갑자기 獨立步行이 힘겹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얼핏 살펴봐도 현재의 통일원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정책기획실같은 기구가 없다. 그 대신 조사연구실·교육홍보실·자료관리국·대화사무국등 조사연구기구와 예산행정관리 기구가 주를 이룬다. 가장 중요한 정책입안추진기능은 편의에 따라 자체내 다른 기구 또는 정부관계 부서에 맡겨져 왔다. 전체 직원이라야 고용직을 합쳐 3백 80여명이며 예산은 정부예산의 0.07%에 불과하다. 통일원 이름에 걸맞지 않다.

통일원 이외의 『관계부서』가 과거 통일문제에 간여해 왔었다는 사실을 구태여 부인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원이 합리적인 인원과 예산·기구를 갖춰 새로운 位相을 정립하면된다. 그러려면 현재 국민적 至上價値인 통일업원을 극대적으로 반영 수렴하겠다는 의지와 노력 아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 작업을 지금 행정개혁위원회가 하고있는 것 같다. 통일원이 남북교류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원장관을 副總理급으로 格上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구도, 예산도 인원도 늘어날 것이다. 물론 행정수요라든가 기능적 측면에서 기구의 확대가 효율성 제고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국토통일원의 특수성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통일원은 이제 對北개방과 통일업무의 수요급증등 새로운 狀況에 即應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원의 주업무와 기능이 통일문제와 北韓과 分斷國들에 대한 조사 연구분석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다른 유관부서의 지원부서로 뒤쳐져서도 안된다. 통일문제에 관한 한 최대의 權能을 가진 정부부처로서 北韓의 동향을 예의 관찰 분석해야 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각종 대화전략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분산됐던 기능과 역할을 한데 모아 국민적합의를 창출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唯一 최대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법적 보완이나 제도개혁의 측면에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잠정적으로라도 그 같은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두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南北韓 관계는 다방면에 걸친 교섭과 교류의 새 국면 전개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또 우리는 지금 통일논의의 질서있는 개방과 對北교섭의 單一창구화라는 두 개의 필요성을 接合시켜야 할 단계에 와 있다. 百花齊放의 통일논의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단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그 여과된 결론은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권위 아래 政府 즉 통일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추진되고 질서있게 집행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代表性을 위임받은 국토통일원의 位相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自明해질 것이다.

南北교류의 질서와 一貫性

世界日報 社說('89.2.11.)

北方정책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충되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實體와 方向을 잡는데 당황하고 있다. 또한 北方외교와 관련된 행위가 현행 實定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正當性 여부에 관해 적지않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鄭周永 現代회장의 北韓방문, 북한과의 비공식적인 物資교역, 그리고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는 南北당국자들간의 접촉은 일관성 있는 對北정책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각기 개별적인 행동이었는가. 北韓은 韓國과의 교역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국내 일부 기업들이 北韓당국과 추진하고 있는 商談의 내막은 무엇인가. 北韓과의 人的 物的 교류와 現行法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政府와 民正黨은 그와같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南北교류와 北方정책을 一元化하기 위해 『南北교류特別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政府는 北方의 교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앞으로 南北교류가 더 활성화 될 경우에 대비해서 벌써 그와 같은 立法에 착안했어야 했다. 鄭회장의 北韓방문만 하더라도 현행 國家保安法의 차원에서는 합당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의 경우 통치권자에 의한 통치행위차원에서 억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北韓과의 人的 교류가 증가할 경우 이를 모두 통치행위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特別法을 제정하여 거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國家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韓교역에 있어서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약하는 장애가 많다. 北韓을 反國家 단체 또는 敵性집단으로 규정한 法律, 그리고 北韓과의 通信과 輸送을 규제하는 法律등이 그것이다. 南北韓을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규정한 7·7 宣言은 南北韓 교역을 民族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北韓과의 거

래에 關稅와 防衛稅를 부과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교류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려면 分野別로 전담부서를 결정하는 동시에 一元的인 政策조정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北方外交를 담당해야 할 外務部의 업무나 南北대화와 교류를 담당해야 할 統一院의 업무에 다른 부처나 기관이 끼어들어 정책에 혼선을 빚게해서는 안된다. 또한 南北교류에 있어서는 여권을 발급하는 外務部, 물자교류를 조정하는 商工部, 輸送문제를 운영할 交通部, 통신문제를 담당한 遞信部등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를 一元的으로 調整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즘 北方정책이나 南北교류문제에 이따금 혼선이 생기는 것은 그러한 조정기능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北方정책과 관련된 행위와 현행 法律사이의 괴리는 特別法의 제정으로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北方정책과 직접 관련된 諸法律 즉 보안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대외무역법 우편-통신관계법 등도 보다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지금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北方정책이나 南北교류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릇된 인식을 갖거나 부질없이 들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政府는 特別法 추진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바로알기의 문제점

東亞日報 社說('89.2.18.)

이쪽에서 『金日成의 머리에 뿔이났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남조선 어린이들이 배가 고파 깡통을 차고 다닌다』고 한다. 이것이 남북의 상대방에 대한 허구적 현실인식의 단적인 예이다. 또 한편으로 일부 운동권 학생들간에는 父子세습王朝獨재의 金日成家門 숭배집단인 북한을 사실과는 정반대로 美化하여 마치 北韓이 민족정통성을 가지고 이 지구상의 지상낙원인양 환상적 南北觀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이런 극단적 억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교육 현장이나 사회교육에 활용해야할 때가 됐다.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보고듣는 북한의 실상이 이제까지 학교나 반공교육을 통해 배워온 그것과 다르다는 지적을 해와 교사들을 당황케하고 있다한다. 요즘 영상이나 신문에 표현되는 북한의 山河가 뜻밖에 아름답고 그들의 선전물만 보아서는 마치 종교의 자유라도 있는듯 보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의식속에 자리잡은 북한의 이미지와 요즘 출판과 필름으로 나타난 인상과의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어린 학생들뿐아니라 6·25동란 이후에 성장한 30~40대 어른들의 북한 인식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조지 오웰』식의 통치체제와 주민생활이나 문화적 실체가 모두 정치화되고 획일적 개인숭배화 되고 있어 우리의 일상적 통념으로 북한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서 북한을 전쟁상대국인 敵으로 간주함에 따른 증오심이 反共교육의 基底가 되어왔다. 6·25동란이후 分斷현실과 계속되는 테러와 납치는 우리의 군사적 적국으로서 북한을 경계해야함도 불가피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優位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은 共存과 동반자의 대상으로 자

리를 바꾸고 있다. 成敗는 차치하고 정치차원의 각급 접촉이 시도되는가 하면 경제교류가 可視化하고 있다. 앞으로 남과 북이 벌여야 할 일은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뒤이은 민족 민주통일의 실현이다. 이에 앞서는 일은 金日成의 東西古今역사적으로도 해괴한 독재왕조의 실체와 또 이와 별도로 존재하는 2천만 동족의 북한을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들의 북한인식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는 각급학교의 반공교육에서 종래의 감정적 시각을 객관적 비판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간의 자연 자유 정의 평등 다원 개방 유연 문명 등 보편적 가치에서 볼 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무엇인가, 『스탈린』 毛澤東主義의 잇따른 金日成의 주체사상이 오늘날 공산 사회 및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들은 과연 西方社會에 비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가르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즘 書店街에 나도는 교육적인 검증없는 北韓原典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북한인식을 혼란시키는 有害한 출판물들이다.

새학기부터 개편되는 초중고교의 교과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또 일선교사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부의 명확한 지침도 시급하지만 우선 교사들의 지도자료라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북교류와 민족공동체로서의 북한의 존재를 여하히 인식해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치와 삶에 대한 확고한 평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對話의 窓口는 하나로

— 『汎民族大會』 無理해서는 안된다 —

한국일보 社說('89.2.22.)

재야세력의 모임인 全民聯이 제의, 북한측이 수락한 이른바 汎민족대회개최를 위해 3월 1일 판문점에서 가지려는 실무접촉의 성사여부가 벌써부터 국민의 중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전민련 간부들은 20일 통일원을 방문, 남북실무접촉에 적극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판문점행은 물론 대회추진도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하여 이 문제는 정국의 새 불씨가 될 조짐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함께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순수한 모임이라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남북대화도 적극 찬성하며, 권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汎민족대회와 관련한 이번 접촉의 경우 북한의 불순한 정치·군사적 저의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민련에 대해 自制와함께 대화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줄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전민련이 내세운 대회추진의 논리는 일응 이해할 수 있다. 국토분단이래 對北·통일정책을 당국이 독점하고 때로는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해 왔다고 보고 민간차원에서 남과북 및 해외동포대표들이 모여 통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요구하며 예정된 국회예비회담을 중단시키고 또 우리측의 적십자회담등 각분야의 대화제의를 모조리 거부하면서 유독 汎민족대회접촉에 선뜻 응한 것은 그들의 속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남쪽 정부와는 모든 공식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민간단체와는 접촉을 갖는 이중전략을 구사하며 둘째 전민련이 현정권의 타도를 선언한데다 북한과 같이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미군철수 핵철폐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민주화바람을 이용, 민간단체와의 통일논의를 이유로 反정부 및 反외

세투쟁을 부채질하여 남한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조성, 적화통일의 유리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산이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른바 통일구도, 對남전략이 40년간 일관되어 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소위 남조선혁명론 -反帝 反봉건·민주혁명론-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이름만 바꿨지 한결같이 남쪽을 해방, 붉은 혁명을 완수하겠다는게 不變의 기본노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민련 전대협등과의 대화와 접촉에 동의한 것은 곧 남한의 정권을 타도하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간차원의 대화란 것도 북한의 경우 말도되지 않는다. 김일성유일 사상으로 전주민을 완전통제한 체제에서 비판이나 도전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전민련이 초청대상으로 삼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과 같이 노동당의 위장된 평화통일정책을 선전·구현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부기관으로 위원장이 통일정책담당정치국원인 許鎔인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것인가는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전민련이 민간차원으로 통일논의에 참여한다면 가장 쉽고 공통적인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이산가족재회와 生死확인 상호방문등 인도적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북한 역시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조건없이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통일정책의 창구와 목소리는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민련이 북한의 저의를 바로알고 대회를 재고할 것을 권유한다. 정부도 북한 정보의 과감한 개방과 대화의 다변화로 통일논의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믿는다.

北方창구의 制度化

東亞日報 社說('89.2.22.)

盧泰愚정권의 최대 역점과제이기도 한 對北韓 및 對北方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신중한 검증이 모색되고 있다.

年初『헝가리』와의 修交, 鄭周永씨의 訪北등으로 北方관계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때도 있었다. 아울러 南北韓 頂上회담 개최설과 밀사회담설등은 그같은 분위기를 한결 고조시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一黨독제체제의 共產국가를 상대로하는 北方외교에 있어서의 보다 면밀하고 세련된 자세를 촉구했었다. 더구나 김일성의 主體사상과 唯一체제로 굳어진 北韓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가일층의 신중함과 고도의 전략이 병행하지 않으면 北의 對南전술에 놀아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우리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北韓은 지난 8일 南北고위 당국자 회담 예비회담에서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중지와 金日成선집등의 보급단속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이같은 억지요구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연이어 국회회담 적십자회담 등 모든 정부차원의 대화를 같은 이유로 중단을 통고했다.

그러면서도 北측은 盧대통령을 民正黨총재로 초청하는 식의 정당 사회단체 회담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全民聯과의 『汎민족대회』를 찬성하고 全大協을 이른바 『學生축전』에 초청하고 있다.

또한 소련과 中國도 政經분리원칙의 방침을 밝히면서 民間차원의 경제적 교류만을 추진할 뿐 정치적 관계개선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北方정책의 새로운 검증을 착수한 것은 당연한 처사로 보며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9일 黨政회의에서 밀사외교를 制度외교로 전환시킬 것이 합의되고 10일

에는 趙淳부총리가 對北접근에서의 政經연계를 밝힌것은 고무적인 진전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20일에는 統一院장관이 全民聯대표들을 만나 汎민족대회추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21일에는 姜英勳국무총리가 鄭周永씨가 합의한 『시베리아』개발공동진출과 元山조선수리소 건설등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들뜬 사회적 분위기를 自制의 방향으로 선회시키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우리는 全民聯측이 강력한 추진을 거듭 밝히고 있는 汎민족대회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존중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北韓은 우리의 民主的이고 多樣한 사회적 견해를 그들의 對南전략에 교묘하게 이용,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全民聯의 대화상대로 나타난 北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란 단체는 로동당의 정치국원인 許談이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또한 對北창구는 정부중심으로 單一化되어야하며 국민적합의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全民聯의 汎민족대회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믿는다. 全民聯이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비록 多樣하고 多元化된 우리 사회일지라도 外交에 있어서, 특히 對北접촉에 있어서는 입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對外창구를 單一化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국민적 합의도출에 보다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란다.

成年 맞은 統一院

— 名實相符한 統一 주도기관 되길 —

한국일보 社說('89.3.4.)

창설 20돌을 맞은 통일원이 작년이래 불어닥친 對북방 및 북한교류무드 속에 뒤늦게나마 제구실 찾기를 모색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통일원이 변전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북한과의 교류는 물론 장래 통일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연구에서 정책입안과 추진·실천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관련한 명실상부하게 책임있는 주도적 기관으로 정비, 보강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정부조직법등 관계법등에 의해 통일문제는 엄연히 통일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동안 통일방안마련과 남북대화 등에 기여한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3~5 공화국 기간동안 통일정책과 對北관계를 안기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어느 의미에서 歷代정권이 말로는 대화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실은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음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공화국에 들어 7·7선언을 계기로 통일원이 북한문제·통일정책에 관해 능동적 자세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오랫동안 젖어온 依他 및 소극적 자세와 연구기관의 수준을 못 벗어 국민들의 폭발적인 통일열망과 對북한 관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소위 『密使행각』 『비밀활동』에 의한 對북한 및 북방관계 타진·접촉은 정부의 북방정책 전반을 뒤흔들뿐더러 통일원의 기능과 역할을 또 다시 『실무級』으로 잡아두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작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붓물이 터진 소련 중국 東歐圈과의 북방교류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는 포괄적 전략하에 정부가 보다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오늘날 국가간의 교섭이나 외교에 있어서는 한 두 명의

천재나 영웅이 필요없는 것이다. 더욱이 공산국가중에서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폐쇄된 단일체제와의 접촉과 관계개선 문제일수록 모든 일은 중지를 모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鄭周永씨의 訪北,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韓時海 등과의 비밀접촉 등을 다른곳에서 주도했다는 항간의 說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사실이라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밀작업을 되풀이 하지 말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통일문제처럼 민족제1의 중대사일수록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한이 걸리더라도 공개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통일원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관계 연구-정책수립-대화추진등 모든것을 통일원이 주관하고 안기부 등은 북한 및 해외통일관계 정보를 수집, 지원토록 해야한다. 또 1개 대학의 연간 예산보다 크게 밑도는 통일원의 예산을 대폭 늘려 전문인력 확보와 각종자료수집 그리고 연구활동을 병행케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정부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모든 대화, 교류추진을 조정·주도케 하고 현재의 남북대화사무국을 차관급을 長으로하는 대화추진본부등으로 확장, 보강해야 한다는 지난번 행정개혁위의 토론내용은 참고할만하다 하겠다.

통일정책과 모든 방략은 국민이 알도록 해야하며 또 남득할때만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년을 맞은 통일원은 앞으로 펼쳐질 고위당국자, 국회, 체육, 적십자등 각급회담을 효과적으로 대응, 이끌기 위해 새로운 자세로 자체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統一政策의 一元化

— 統一院의 役割 강화해야 한다—

中央日報 社說('89.3.4.)

제6共和政 들어 특히 눈에 띄는 정책적 변화는 南北關係와 統一問題에서 나타났다.

우선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이에 대한 政府의 대응도 신축성있게 나타나 北韓資料의 공개, 統一論議의 개방이 폭넓게 이뤄졌다. 실제로 南北관계와 통일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政策事項의 하나다. 그것은 우리사회 내부의 秩序와 發展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民族史의 전개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北方政策은 착오나 오류없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확한 現實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課程을 통해 결정되어 국민적 승인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南北 政策은 靑瓦臺·安企部 등 정부 기관의 소수담당자에 의해 느닷없이 결정되고 집행돼 왔다. 70년대초의 7·4공동성명이나 80년대 중반의 남북 대화가 모두 그런 절차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런 慣行은 제6공화정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鄭周永씨의 北韓 방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批判이 따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政府 안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한 自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통일문제와 南北관계의 공식적 주무부처인 國土統一院이 창설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統一院의 역할과 통일정책의 主導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統一院의 연구기관 강화다. 경제기획원·외무부·문교부·국방부 등 중요 정부 부서들은 각기 전속 研究院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전문가를

두고 광범히 자료도 모아놓고 있다. 北韓政策이 정확한 현실을 토대로 입안되기 위해서 어느 연구기관보다 광범하고 착실한 연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는 國民的 합의의 導出이다. 南北정책은 그 중요성 때문에 국민적 同意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여론조사·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광범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內部的인 혼란을 면키 어렵게 된다.

셋째는 政策決定과정이 一元化돼야 한다. 우선 密室決定을 없애고 관계된 모든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돼야할 것은 統一院이 주무부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外務·國防·安企部 등 관계부처와의 횡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諮問委員會를 활성화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요문제는 野黨과의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한다.

南北問題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지금의 南北관계변화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여론이 갈려 있다.

정치·경제·문화의 교류외에 人道的 측면에서도 풀어나가야할 문제가 허다하다. 南北관계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국민적 合意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統一院의 위치를 再點檢해 一元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時流에 좌우대선 안된다

世界日報 社說('89.3.26.)

정부는 『南北작가회의 예비회담』을 불허키로 한데 이어 당초방침을 바꿔 全大協 소속 대학생들의 平壤청년학생축전 참가도 인정치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여 정부가 北方정책의 전반적인 제도수정을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 결정으로 이해된다.

北韓의 조선학생위원회가 全大協앞으로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反帝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긴 명칭의 평양대회에 참가를 초청하고 이에 全大協이 수락의사를 전달한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이 대회의 성격은 이미 보도된대로 세계민주청년동맹과 국제학생동맹이 공동주최하는 세계 사회주의국가들의 청년학생 모임이다. 지난 47년 프라하에서 발족한 이래 이 대회는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권과 서방국가 내의 극좌혁명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돼 왔고, 그들의 공동투쟁 목표는 反帝(反봉건)—反戰—反核이었다. 말하자면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나 문화페스티벌이 아닌 反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집회인 것이다.

특히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평양대회에선 남한정부를 상대로한 『모의재판』을 열고 남한학생들의 反美투쟁을 성원하는 결의가 계획돼 있다는 점이었다.

이같은 성격의 대회에 北측이 全大協 하나를 찍어 초청한 속셈은 뻔하다. 평양대회의 정치슬로건을 全大協 투쟁목표에 접목시켜 주한미군과 핵 철수주장을 가속화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남한내 학생권의 반정부—반체제운동에 연대성을 댄어놓자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평양대회의 성격과 北측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당초 정부가 全大協의 평양행을 허용키로 『內定』했던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애초부터 이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됐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북방정책추진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너나 할것없이 남북교류에 열을 올린 시류에 휩싸여 허가방침을 정했던 것은 정부의 失策이었다. 특히 평양대회를 남북학생 교류의 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한 盧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발언은 석달뒤의 불허방침에서 볼 때 정부의 對北정책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할 것이다.

비록 최근 북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대화창구를 닫아진 상황변화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평양대회에 관한한 정부방침은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감수해서라도 金大協의 평양방문을 불허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라 하겠다.

차제에 우리는 정부당국에 對北정책에 있어 국내정치나 시류에 영향받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꺾대없는 자세를 지양하고 일관성과 자신감있는 태도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중구난방식 남북교류를 방치해선 안되며 남북접촉 창구는 반드시 當局者로 일원화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같은 혼선을 참고로하여 對北정책에 관한 중-단기정책을 담은 『統一白書』를 공포, 명백한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統一論』을 統一할때

— 衆口難防이 몰고올 사태 우려한다 —

京鄉新聞 社說('89.3.28.)

休日의 政街를 강타한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訪北은 단순한 突發事件만은 아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원인도 없는 돌발사건이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그동안 조건의 성숙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채 결과만 접하는 사람들에게겐 그것이 돌발사건으로 보일 뿐이다.

文목사의 平壤行은 그동안 昏迷를 거듭해온 統一論議와 금강산개발 뉴스를 계기로 統一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듯이 들뜨면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海外여행 자유화에다 너도나도 中國여행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 마당에 在野人士의 訪北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汶山통로만 지키고 앉아서 각계의 衆口難防식 對北 교류움직임을 그때그때 對症의으로만 대처해 오고 있었다.

南北統一이 우리만 서두른다고해서 될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뭔가 統一에 대한 可視的인 結實을 보여주기위해 너무 서둘렀던것이 오늘날과 같은 『돌발사건』까지 빚어낸 것이다. 게다가 외무부나 통일원등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를 제쳐놓고 密室에서 추진한 한 件主義식 對北정책추진이 더욱 더 混線을 부채질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간에서 統一論議는 자유롭게 하더라도 對北交涉창구는 정부로 一元化한다는 정부와 각 정당의 합의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지도자들대로 『金日成主席과의 面談』을 경쟁적으로 들고 나오는가 하면 농민단체, 노동단체, 예술단체들도 다투어 對北交流를 제의하고 있다. 그리고 全大協의 평양祝典 참가문제에서 보듯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對應도 對北交流의 限界를 모호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朝野의 對北韓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北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人形劇이라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도대체 北의 實體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들떠서 너도나도 짝사랑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하다.

마치 類似宗教集團처럼 北의 體制는 날이갈수록 굳어져가고 있는데 우리만 미리 衆口難防式으로 北에다 統一메시지를 보내다보면 그들의 전술전략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統一이 『아, 그러운 金剛山』이나 『天池의 품안에』식 感傷主義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우리 겨레의 한맺힌 悲願이긴 하지만 어떤 方式으로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統一至上論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통일문제야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할 민족적 숙제인 것이다.

北韓이 우리의 敵對集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할 民族共同體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金日成의 赤化統一 방식이나 이른바 『主體思想』까지 용납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다.

이번 文益煥목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與野黨은 統一論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한계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對北交涉이나 統一論議를 국내정치의 갈등을 잠재우는 手段으로 이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함은 물론 야당도 이 기회에 北韓과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文목사사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일요일과 월요일이 서로 다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을 票와 연결시켜 在野쪽의 눈치나 살피는 야당의 줏대없는 태도는 결국 국민들의 失望만 더해줄 뿐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꼬투리로 삼아서 민간의 統一論議를 무조건 탄압하고 억누르는 愚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對北韓政策에 自信感을

— 政策基調 흔들려서는 안된다 —

中央日報 社說('89.3.30.)

文益煥목사 일행의 訪北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보면 좀 더 의연하고 무게있는 對應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文목사 일행이 지금처럼 南北관계가 민감한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金日成을 찾아간 것은 지극히 분별없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그의 일행이 돌아오는대로 實定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사는 이해가 간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對北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7·7선언과 盧泰愚대통령의 유엔연설에 담긴 對北정책의 基調를 후퇴시키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은 事案의 비중으로 볼 때 지나친 반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이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一貫性이 있어야 권위와 實効性이 뒤따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南北관계와 같은 全民族의 관심과 이해가 걸린 大事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정부는 文목사 일행의 訪北이란 하나의 사건을 놓고 金剛山 공동개발 계획을 보류하고 南北작가회의에 참석하려던 5명의 文人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취소하고 심지어 保安法 내용을 완화하려던 방침까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6共정부가 『큰뎌』의 입장에서 北韓을 국제 사회로 불러들이고 『한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조하는 同伴者로서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對北韓 정책 골격을 바꾸려는 뜻을 담고 있는 듯하다. 文목사 일행의 訪北을 것처럼 엄청난 위기로 보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과잉반응이 아닌가.

지금까지 현정부가 임해온 對北韓 정책의 기초는 올바른 것이고 이 정책은 아직 첫걸음을 내디딘 탐색의 단계에 있다. 이 정책은 南韓이 갖고 있는 정치체제와 국력, 그리고 韓半島주변에서 일고 있는 脫理念·和解 분위기로 봐서 韓國의 立地가 北韓의 그것보다 優位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추진되어온 것이다. 人的·物的 교류와 金剛山개발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극도로 폐쇄된 北韓의 教條主義체제의 완화를 유도하고 그 바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긴장완화 조치를 우선 디딤돌로 쌓아 궁극적으로는 統一에의 길로 접근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北韓은 逆으로 韓國의 宥和策을 자신들이 추구해 온 혁명 노선을 위해 우리 사회를 분열할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런 北측의 의도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우리 정부의 정책도 그런 北의 의도가 허황된 망상임을 일깨워 주는데도 목적을 둔 것이다.

金剛山 개발계획이 당초에 너무 성급했고, 그 진행과정에 비판받을 점이 많았으나 그 基調는 南北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北韓이 西方자본과 기술을 얻도록 해주자는 것이었고, 이같은 우리의 성실한 노력은 계속 北측에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기조에 정부와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文幕사의 訪北을 보고 對北정책 자체를 후퇴시킨다면 결국 北의 첫 탐색에 우리측 정책이 자신감없이 右往左往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 점을 省察해서 北韓이 행동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오지 않는 한 회유책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않아야겠지만 회유책 자체를 후퇴시키는 愚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統一논의, 理性的으로 대처해야

國民日報 社說('89.4.1.)

문익환씨의 입북문제를 둘러싼 찬반여론이 국론의 분열로 치달게 되는것을 우려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방침을 세운반면 재야세력은 문씨의 환영보고대회를 예고하는등 사회분위기가 일촉즉발의 태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문씨가 돌아오면 이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 예상되어 국민은 긴장하면서 불안해 한다.

이제 우리는 문씨의 입북문제에 대해 차분히 따져보는 이성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즉 6共이 추진해왔던 남북교류와 대화등 통일문제에 관하여 우리모두가 폭넓게 정리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볼 때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통일문제는 우리겨레의 공통적 여망임에 틀림없고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남북대화과 교류의 당위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 대화와 교류의 창구는 정부라야 한다는 사실도 明若觀火하다.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국가로서 복잡다양한 주장들을 해 왔고 또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당연한 원리로 인정해 왔다.

문씨의 입북은 정부와의 협의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정부의 존재를 무시한 행위였다. 또한 문씨가 평양도착성명에서 남한의 체제를 비판했으나 40년공산독재와 사회주의국가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권력세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더욱 문씨가 개인의 주장으로서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개인적으로 김일성과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씨의 입북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너무 과민하고 졸속에 치우친 점이 없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성을 절감한다. 남북 교류·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극도로 키운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현정부였다. 우리국민은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

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전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자 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천명한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남북화해, 평화정책은 盧대통령자신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재확인되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바 있었다.

우리는 당시 이러한 6共정부의 개방·화해·평화정책에 아낌없이 또 당연히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유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으며 한국이 그때까지의 반공적 폐쇄국가라는 오해를 떨쳐버리고 평화애호국으로 세계무대에 부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中·蘇를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이 취한 이 북방정책은 초법적인 선언이었으나 국가원수의 통치권행사로써 우리국민 모두가 이의없이 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가원수의 통치권행사는 법적근거가 없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7·7선언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개정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盧대통령의 선언에 맞도록 법체계를 일찍이 정비했어야 옳았다.

남북교류와 대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먼저 교역과 왕래등에 관한 협약이나 문서에 의한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정부의 북방정책이 구체화되는 조건은 안으로는 법제정비요, 북과는 기본협약 체결이다. 이 두가지 조건을 정부가 조속히 갖추는 조치들에 성의를 보여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서의 입북에 정부가 따질 것은 모두 따지되 조용한 대응을 바라며 보다 확고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지혜를 모아가길 당부한다.

‘7·7선언’ 9개월과 통일정책의 혼란

— 창구 다원화·악법 개폐로 화해의 길 터야 —

한겨레신문 사설(’89.4.2.)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7·7 특별선언’의 한 구절이다.

이 선언은 『정치인·경제인·언론인·종교인·문화예술인·학자·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적대에서 신뢰로, 대결에서 협조로, 경쟁에서 동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을 불러들이겠다는 ‘민족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그 ‘선언’이 발표된 뒤 겨우 9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남북 교류에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역설해 온 대표적인 사회 악법들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3월 30일자).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적죄 적용대상의 축소범위를 재조정하여 북한쪽과의 개별 접촉 행위는 계속 금지하기로 하고 안기부법은 대공수사와 ‘좌경’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내란죄 수사와 국내 보안 정보수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 재방문과 금강산 공동개발의 추진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한때 금강산 개발 합의가 회심의 ‘작품’인 듯이 선전하면서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의 기대에 부풀게 했다.

한마디로 ‘7·7선언’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통일정책은 혼돈 그 자체이다.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 혼란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

첫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련·중국·동유럽 여러나라들을 ‘반국가 단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북방정책의 공식적 추진을 합법화하면서도, 북한에만은 ‘반국가 단체’의 멍에를 계속 씌움으로써 냉전시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민족공동체’인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모순되는 존재로 나타난다. 정부의 주장처럼 북방정책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편이라면 통일의 직접적 대상인 북한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정부는 특정 언론인이나 기업인의 북한 방문은 허용하고 지원하면서도, 남북학생 체육대회, 남북 작가회의, 청년학생축전, 윤이상 음악제는 막고 있다. 심지어 학술교류 분야 가운데 남북한의 이념적 견해차가 가장 작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던 고고학·민속학계의 교류조차 정부의 이른바 ‘창구일원화’에 걸려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셋째, 정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북한 관련 서적들에 대한 탄압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부의 의도대로만 알리고 알아야 하는 폐쇄적 통제사회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닌가?

이런 모순과 혼란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과연 통일의지가 확고하다고 공인할 수 있겠는가? 특히 문익환 목사의 북한방문은 정부의 ‘창구 일원화가 민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인가에 관한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일원적’ 특성이 접촉과 교류의 다원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라는 정부쪽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창구의 일원화’가 또다른 일원적 획일주의를 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가? 이런 현상이야말로 정부가 ‘우려’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는 다원성의 원칙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으로 양보해도 ‘창구 일원화’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의 형식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형식과 ‘절차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민족 문제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방식은 말초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전진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 개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민족 문제는 결코 정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북한 당국도 마찬가지로 명심해야 할 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은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어떤 행동이 과연 민족적 대의에 더 충실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통일은 결국 냉철한 의지와 판단과 관용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統一』논의와 與野의 책임

東亞日報 社說('89.4.6.)

『文益煥쇼크』로 더욱 가열되고 있는 統一논쟁과 관련된 국민적 갈등 마찰 혼란에 대처해야 할 처방은 실로 긴급한 과제이다.

民主化 自由化의 물결과 함께 우리 社會에 분출하기 시작한 統一열망과 그 논의는 分斷 40여년의 『억제』가 一舉에 무너진 듯한 상황이기에 그 흐름을 올바로 잡지 않으면 되돌릴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폭발력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7·7 선언』을 계기로 양성화되고 증폭된 統一논의는 이번 文益煥쇼크로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분명한 방향과 한계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만약 오늘과 같은 國論 표류현상이 더 방치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線을 넘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일고 있다. 金日成을 現人神처럼 받들고 있는 地上의 최악의 공산독재체제에 경도된 듯한 일부 인사나 집단들의 목소리가 正當性을 얻고 평상적인 공권력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같은 사태에서 自由 民主 人權을 至上의 가치로 존중하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위난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파국이 초래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與黨은 『7·7선언』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지않을 수 없다. 당국이 새로운 統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것도 지난해 후반이었고 국회에 南北관계법안을 제출해놓고도 보다 성실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密使외교에만 의지하려 했던 과오에 대해 어떤 자성을 하고 있는가. 文씨 쇼크이후 빚어지고 있는 국민적 혼선과 불안을 與圈에서는 오히려 『他目的』에 이용해 보려는 듯한 기미마저 있다는 관측들이 무성한 현실성에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가.

정부와 與黨은 실로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현명하지도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與小野大의 정치상황에서 일부 野圈이 보이고 있는 黨略的인 불협화와 저열한 舊態가 지탄받아 마땅한 것으로 본다. 긴요하지 않을 때도 회담을 가졌던 세 金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설사 개인적인 감정이나 黨利의 마찰이 있다손 치더라도 統一논의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같이 國論이 분분함에도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國論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者회담을 갖는것이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나 비중에 합당하지 않았을까.

특히 金大中 평민당총재의 言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 平民黨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불협화 현상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언제나 일사불란한 지도력을 발휘해오던 金大中총재가 무엇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무기력해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듣고 싶다.

國會의 統一특위가 전개해야할 보다 신속하고 성실한 統一論 수렴 노력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같은 위기에서 政治圈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면 정치권으로 물리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권과 정당지도자들의 각성과 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

危機克服의 根本對策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社說('89.4.7.)

정부는 文益煥쇼크 이후 表出하고 있는 左傾세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公安기관을 통한 司法的 처리와 함께 근본적 저지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회의를 여는 등 부심하고 있는듯 하다. 6일에도 盧泰愚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는 학원 노동계 문화권 등 분야별 좌익저지 대책을 검토했다. 民主化를 추진하면서 각계 각층의 利害관계 마찰로 시작된 사회적 분열현상은 理想的 갈등으로 발전하여 이제 體制攻防으로까지 넘어가려 하는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서둘러 회의를 열고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文쇼크와 蔚山 現代重工 노사분규사태등 일이 벌어지자 對症療法식 응급처치를 하던 끝에 그 원인이 보다 깊은데 있음을 느끼고 부랴부랴 근본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지난날 臨機應變식 대응의 결과로 생긴 것이며 그때마다 무슨 근본대책을 세워놓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주장했었지만 한차례 지나고 나서 다시 일어날 때는 보다 악화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擴大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오늘의 갈등과 마찰은 體制存立이 걸린 天下大亂상태인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을만큼 중요한 위기 상황이다. 冷戰시대의 용어인 『左翼』이나 『左傾』이란 용어로 일반화 하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갈등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議會주의못지 않게 民衆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體制전복세력들의 논리가 공공연하게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무질서와 혼란, 위협과 파괴에 對症療法 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관리· 體制守護의 방안을 광범하게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臨機應變만으로는 안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臨機應變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본다. 司法처리와 啓導, 대국민 홍보와 설득 등도 방안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단기적 처방이다. 국가가 택할 수 있는 수단이란 그런 것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을 포함한 公教育체제변화, 政黨정치 의 효율화, 사회의 人力充員방법개혁, 公共투자의 운용목표와 방법개선에서부터 지도층 인사들의 윤리적 몸가짐, 생활태도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保衛와 체제의 守護를 위한 것이라면 근원적인 방법들은 많다.

우리가 資本주의 經濟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도 이제 4半世紀를 넘어섰고 어느 정도 성취도 이뤘다. 성장과 축적을 외치며 뛰고 있는 동안 성장이 가져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충격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충격을 흡수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야 했다. 성장과 축적은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어 놓았고 오늘 그 갈등이 表出하여 확대하니까 왜 일찍부터 대비하지 못했는가고 후회한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다. 내 것과 남의 것, 가져야 할 것과 가져서는 안될 것을 의무교육에서부터 가르치고 公共의 倫理를 확립하며 가진 자들이 지녀야 할 先驗者적 淸富의 도덕의식 등을 규범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自生的 共產주의 사상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념이나 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예견하여 그 세력이 작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며 커졌을 때는 어떤 형태로 體制내에 受容해 나갈지 등의 『마스터 프로그램』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주의 정당 혹은 金日成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정당까지도 허용해야할지에 대한 검토까지 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발전을 受容하는 體制이며 국가의 기본이 흔들림 없이 역량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된다.

文益煥쇼크의 경우도 北方정책의 추구에 앞선 확고한 우리의 統一方案수립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효율적 기구를 운용하여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衆智를 모은 合意의 모색

오늘의 문제는 국민의 自由와 平等을 보장하고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體制가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라도 이를 뒤엎고 새로운 民衆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과격한 暴力革命論者들로부터 비롯된다. 산술적으로 드러난 숫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公權力에 의해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速斷하기 쉽다.

그러나 나라가 없었던 때, 가난했던 시절을 알고 있어 지난날과 오늘을 비교해 가며 우리 體制의 우월성을 만들면서 알게된 세대와 우리 體制가 모양을 갖춘 뒤 태어난 세대가 오늘의 국민을 형성하고 있다는데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 예컨대 左傾 또는 左翼을 당연히 반대할 사람과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한 오히려 左翼을 지지할 수도 있는 세대로 우리의 『침묵하는 多數』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의 대규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논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갈등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이 매질만으로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體驗한 지식의 아버지 세대와 그 體驗에 논리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아들의 세대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본적 계획에 입각한 교육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兩者의 접근밖에 없다.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기본운영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 衆智를 모으고 국민적 合意를 이룩하며 이를 확고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당면한 혼란 무질서 파괴등에 대해서는 對症療法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응도 근본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臨機應變과 應急조치만으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保革論爭과 統一論議

— 규칙과 限界는 지켜져야 한다—

中央日報 社說('89.4.10.)

保守와 革新의 대립은 어디에나 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理念은 사회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保革論爭은 규칙과 한계만 지켜 진행된다면 사회발전에 유익한 힘이 된다. 規則이란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限界란 共同體의 안전과 발전이 보장되는 테두리 안에서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理念논쟁이 我執에 빠지거나 폭력에 호소하면 오히려 사회발전에 유해하다. 그것이 共同體의 이익을 저버리고 獨善으로 흐른다면 사회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南北문제를 둘러싸고 保守와 革新의 대립이 토론의 常軌를 벗어나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통일의 主體와 方式의 문제다.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방북은 保革論爭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 대립은 文목사의 처리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누가 統一의 주체인가. 國民主權論을 채택하고 잇는 우리나라에서 統一主體는 전체로서의 國民이다. 따라서 통일주체 문제는 곧 國民代表性的의 문제다. 말할 것도 없이 그 代表性은 政府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곧 統一主體다. 그러나 일부 革新쪽에선 현 정부를 정통성 없는 軍事政權의 연장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少數派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한다.

이같은 논리는 소위 民衆政權을 理想으로하는 體制否定論과 軌를 같이하기 때문에 革新的의 논리라기 보다는 非民主主義的의 발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革新의 논리가 民主主義원칙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은 건전한 保守논리와 더불어

어 사회 발전의 兩수레바퀴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民主主義원칙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革新이라고 부를 수 없는 異端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부 革新논리가 危險視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統一方式에 관해서도 비슷하다. 北韓은 고려연방제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韓國의 체제붕괴를 계산에 넣은 統一論이다. 우리의 統一方案은 民主主義가 파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점진적이다. 그래서 統一에 앞선 共存과 그 共存을 담보하기 위한 文化·경제의 교류를 선행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시대나 民族統一은 理想主義的인 민간세력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통일을 성취한 것은 現實主義的인 정치인들이었다. 19세기의 이탈리아 統一은 『마치니』영도하의 청년운동에 의해 제기되고 『카부르』라는 사르디니아王國의首相과 군사지도자 『가리발디』에 의해 완성됐다. 獨逸統一도 현실주의적인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완성됐다.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의 統一은 국가 단위의 현실적인 정치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史例다.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保革 통일 논쟁도 이런 원칙 위에서 정리돼 나가야 한다. 民間團體는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의 차원에서 행동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統一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정부 중심의 政治勢力이 말아야 한다.

政府는 統一政策案을 곧 구체화하여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국민 다수의 共感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문제 提起와 政策의 시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統一문제에 관한 保革論爭은 규칙과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統一정책, 확고한 원칙을 밝혀라

國民日報 社說('89.4.13.)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통일문제보다 더 각긴한 과제가 또 있겠는가. 통일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통일문제를 제쳐둘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실에 바탕을 둔 분명한 청사진이 없다.

지난 40여년간 통일은 한결같이 우리민족의 지상과제라고 확인하면서도 南과 北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의 통일론은 시대에 따라 표변해 왔다. 북진통일론이 있었는가 하면 중립통일론과 민족화합민주통일론 그리고 각인각색의 연방통일론까지 나왔다. 문제의 핵심은 反共의 논리가 아니면 容共좌익 논리를 바탕으로 한 상충되는 통일론이 어떻게 통일하느냐보다 체제의 정통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데 있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이상과 목소리만 무성했지 그 실천전략과 현실적 장애요인 제거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거나 제시했다 해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남북관계에 있어 혼란은 바로 이러한 가치기준의 모호성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3일 귀국한 文益煥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공안당국의 구속방침과 재야단체와 학생운동권의 환영대회 강행이라는 양극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수와 혁신 혹은 제도권과 재야 운동권의 이와같은 첨예한 대립도 따지고 보면 北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화해시대』에 대한 수용자세의 상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정부가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그에 적용할 확고한 원칙을 미리 정해 두었거나 국회가 국가보안법등의 개폐수정을 통해 제도적 규범을 정비하였다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념분쟁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과 UN연설등이 전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평가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에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汎與圈 내의 통일된 가치체계마저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동반자관계로 선언함으로써 오늘의 통일논의를 둘러싼 아노미 現象을 필연적으로 몰고오게 되었다고 우리는 진단한다.

7·7선언을 통해 정치 경제 언론 학생등 각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이 정부의 통일문제 접근의 원칙이라면 이를 구체화할 제도적 법적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 그리고 對北접근원칙과 금지사항등 세부지침도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鄭周永씨가 북한을 다녀옴으로써 너도나도 北에 대한 환상적 기대에 부풀게 되었다. 오늘날 현정권의 골치거리로 대두하고 있는 좌경세력의 존립기반은 이러한 앞뒤 사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文씨의 訪北으로 커다란 고비를 맞은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느쪽으로 기울느냐에 있다. 사실 최근 있는 李부영 全民聯의장의 구속을 비롯, 全民聯과 민예총 간부에 대한 잇단 연행·수사등 일련의 공안당국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정부의 對北자세가 7·7선언 이전으로 급선회하지 않는가하는 짐작을 낳게 한다.

정부는 국론이 이 이상 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기 전에 對北韓관계에 있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文씨의 訪北사건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이 흔들리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모두의 바람이다.

統一意志와 정책 흔들릴 수 없다

서울신문 社說('88.4.14.)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犯法행위로서만 問責될 수도 있었을 文益煥목사사건은 결국 최악의 사태를 빚는 결과가 됐다. 南北문제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것이 善일 수는 없으며 그것이 아직은 우리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이념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접근으로서 성취될 수 없다는 엄숙한 사실을 文목사의 구속은 말해주고 있다.

정부의 권위는 물론 엄존하는 實定法을 거침없이 위배하고 몰래 入北했던 文씨가 구속된 마당에 더 이상 그를 容喙함은 불필요하다. 平壤과 北京 그리고 東京에서의 그의 行動舉措는 이미 세상의 理致와 常識과 輿論에 의해 그 잘잘못이 살살이 판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왜 問責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事由는 통일문제 논의의 앞날을 위해서도 거듭 지적돼야 할 줄 안다. 이제 그에 대한 질책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自愧感을 갖고 통일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文씨는 직접적인 教役者로서 또 在野에서의 위치로서 결코 개인일 수 만은 없다. 그런 그가 분별 없는 『統一知』만을 내세워 모든 統一이 善임을 주장한 책임은 결코 면제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접근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연구 노력도 없이 實體가 분명치 않은 3단계 方式 연방제통일 운운한 것도 난센스다. 결국 文씨는 이쪽을 외면하고 저쪽과 악수하여 北韓의 對南통일전략을 부추긴 셈이 됐다. 그 餘波는 적지 않다. 첫째 그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오늘의 통일논의를 위축시키고 국민여론을 兩極化시켰다. 한쪽으로는 急進세력의 환상적인 통일논의를 가속화시켰다. 다른쪽으로 南北 관계개선에 소극적인 계층을 자극시켜 對北 개방정책을 反轉시킨 셈이 됐다. 바로 國論의 분열이며 統一國力의 분산이다. 둘째 北韓으로 하여금 그들 對南혁명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빌미를 주었다. 文씨 사건과 관련한 北韓의 최근 동향이 그러하다. 北韓집단은 板

門店을 통과하겠다는 文씨의 대담한 제의를 거부하고 그가 密入北한 逆코스로서 그를 돌려 보냈다. 또 예정했던 南北 당국자회담 예비접촉을 연기했다. 이는 文씨 사건의 진정을 원해서라기보다 이 쪽의 혼란을 확대시키고 南北문제의 主導權을 잡고자 하는 책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北韓은 벌써부터 文씨 환영대회문제로 빚어진 異見과 갈등은 물론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公安차원의 대처를 對南전략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한 사법적 도의적 책임을 文씨는 면할 도리가 없다.

대개 歷史의 발전이 인간의 창조적 의지와 시대적 추세의 반영이라면 제6공화국은 民主化 추진과 통일개방정책 두 측면에서 發展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추진돼 온 北方정책은 주변정세로 보나 南北韓관계의 바람직한 진로에 비추어 時宜에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요즈음의 정치사회적 혼선과 갈등은 발전에 수반되는 진통이라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文씨 사건은 이제 정리돼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對應이 대내외적으로 더이상의 梗塞과 萎縮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文씨 사건은 一過性이지만 우리의 통일은 확고한 정책과 원칙아래 계속돼야 할 至上의 과제인 것이다.

自信感과 幻想

李馨 논설위원

한국일보 칼럼('89. 1.24.)

南北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北方外交를 추진하는것도 좋고, 南과 北의 사이를 대립적 관계에서 同伴者的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도 평가할 만 하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성은 理念이나 體制, 경제력에 있어서의 南의 優位性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南의 우위성을 믿고 對北협상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나무랄 일이 못 된다. 그럴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위성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종류의 우위성이며 그것이 과연 자신감의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졌다는 우위성이 남들 보기에다 그럴 수 있을만한 근거와 값어치를 가졌는지 따져봐야 하겠다는 얘기이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고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의회민주주의 체제이고 우리로서는 그 체제와 정치이념이 딴 어떤 체제나 정치이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부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물론 우리의 상대방은 딴 정치체제 딴 정치이념을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터이겠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만은 결코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내세우고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실상이다. 명문화된 憲法の 보장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뽕뽕이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를 하게 된다. 해방이 된지 40여년, 그동안 우리들이 겪은 정치의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권위주의였고 독재체제였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독재의 양금은 제6공화국으로 접어든 지금까지 청산이 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민주화 구현은 계속 들먹이면서 舊시대와의 단절작업엔 엉거주춤한 자세를 하고 있거나, 독재정권에

밀착해서 그의 수족으로 일하던 인물들이 아직도 노른자위에 그냥 눌러 앉아있는 것 등이 그 증좌이다.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이 이론대로 되어가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을 앞세운 체제우위론은 별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우기나 南쪽의 체제가 지난날의 親日派나 반민족행위자를 포섭 수용함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정기를 흐려 놓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상대방에게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설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교과서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나치주범과 그 방조자들을 철저히 처단한 西獨과 우리나라가 체제우월성을 두고 입장이 다른 이유가 이런데 있다.

경제력의 우위도 보는 각도에 따라 異論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물론 우리의 경제력이 北韓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성장된 경제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요즘와서 分配정의 문제가 거론되고 복지 증대가 약속되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수층에 편중되어 있는 이상 혜택을 못 받는 계층한테 우리 경제력의 우위성을 강조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권력형 비리행위가 두드러지고 地下경제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강한 경제력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싼 노동력, 부채투성이 농어촌, 햇빛볼 날이 없는 도시영세민들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부정확한 수단으로 번 富라도 돈만 있으면 사람 대접받는 사회의 경제력우위가 남북협상에서 南쪽의 자신감을 뒷받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력의 우위가 갖는 이점이나 영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점을 1백% 발휘하기에 장애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공개사회의 최대 장점이 대담한 개방성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있다. 그러나 이 개방성은 때로 우리의 약점으로도 작용한다. 남북의 교류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알리기 위한 수단이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간에 개재해 있는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쪽 사회의 개방성과 저쪽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이쪽의 치부만 살살이 공개되고 저쪽의 것은 공식통로를 통한 피

상적 선전내용만이 알려진다면 자칫 그릇된 편견과 오류를 낳기 쉽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붓물터지듯 쏟아져나오는 선전용 북한원전출판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딱 西歐자유국가들처럼 분단이 되어있지 않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였다면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모든 이념을 원리원칙대로 수용함이 백 번 마땅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지난사정과 현실은 딱 자유국가들과는 다르다. 北韓의 실체를 잊은 채 민주주의 원리원칙만 찾다가는 그나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바탕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마저 없지않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체제를 도외시한 통일 지상주의가 어떤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무분별하고 과격한 통일논의가 협상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약화시킬 것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지혜가 아쉽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소박한 낭만과 환상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원칙론만에 근거한 對北우월론이나 그것이 안겨다 주는 내실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성급한 대북협상에 나서는 것은 정부나 학생이나 일반국민이나 다 같이 금물이다. 우선 떼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서두르고 왜곡된 경제의 흐름을 바로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부터 이룩하자는 것이다. 안정된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治安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텅없는 우월감이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다. 우리는 40여년간 한결같은 세뇌작업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북한과 북한사람들을 통일협상의 상대로 두고있다. 내실 없는 체제우위론이나 경제력우위론은 한 개 장식용일수는 있어도 강력한 협상무기가 될 수는 없다. 實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의 자신감은 환상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한 질문들

金鎮炫 논설위원실장

東亞日報 칼럼('89. 1.25.)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80년대 말의 변화는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밖의 사정만 변해서 앉아 당했던 韓末이나 40~50년대의 변화와도 다르고 우리는 변하는데 밖의 사정은 큰 변화가 없었던 60~70년대 초까지의 변화와도 다르다.

안팎이 같이 急變하고 있다는 큰 특징이 있다. 우리주변을 싸고 우리 운명을 압도하던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 한 世代의 노력과 힘의 축적을 통해 戰後史를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오직 不變하고 있는 것은 金日成王朝의 北韓정치와 『全朝鮮의 공산주의화』가 목적인 北韓共產黨의 이념이다. 그런 북한도 2~5년의 中期로만 보아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장기적으론 근본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東西洋을 통해 가장 권위있는 金日成연구가로 알려진 분은 최근 필자도 참석한 해외 비공개토론에서 아직도 軍事 外交 對南정책만은 金日成의 손에 있으며 죽기까지 그러할것이고 『美帝』축출 南韓 『解放』의 信念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가 살아 있는 한 南北韓頂上회담은 틀렸고 한국도 盧泰愚-金日成회담이라는 실현되지 못할 꿈을 버리고 지금부터 金正日이나 초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代案을 제시했다. 金正日의 후계는 확실하고 黨과 경제정책은 그의 손에 있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좀 조용하기를 바랄 것이라 했다.

우리가 안에서 과거청산과 世代갈등에 찢찢매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 운명에 결정적 도전이 되는 큰 변화 결정적 國際狀況이 時限폭탄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外債國인 미국의 무역적자와 『하버드』大學의 『BM 프리드먼』

교수가 建國이래의 도덕적 원리위반이라고 지적하는 史上최대의 재정적자는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여전히 영국 일본 서독 대만 한국, 産油國들 돈을 빌어 外上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大恐慌이나 貿易전쟁을 유발할 것인가. 日本은 그 압도적 기술 産業力을 軍國主義부활에 쓸 것인가 아니면 韓 中 美 太平洋 共同體共同大株主로 평화롭게 남을 것인가. 소련의 『고르바초프』혁명은 성공할 것인가. 그리하여 소련에 自由와 民主와 市場의 平和가 오고 軍縮이 실현될 수 있는가. 아니면 失敗의 反動으로 第2의 『스탈린』이나 『브레즈네프』가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半無政府狀態가 지속될 것인가. 中國 鄧老人의 4大近代化노선은 성공할 것인가. 그리하여 經濟大國 軍事大國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長期적으로 對蘇 對美 對日견제의 필요에 있어 한국과 이익을 나눌만한 平和국가로 성숙해 갈 것인지.

이 4대 주변 강대국들의 근본적 변화는 그 어느것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그 어떤 외부변화 충격에도 견딜 힘과 능력을 착실히 쌓아가야 한다. 北韓의 변화가능성, 中期이후의 근본적 변화가능성에 착실히 대비해가야 한다. 정말 中期이후로는 통일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통일이 가능하듯 호들갑 떨면 오히려 파괴가 먼저 온다. 지금 변했다고 錯覺하지 말고 2~5년 뒤의 근본적 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을 축적해야 한다. 지금은 정력과 자원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힘만 축적해가면 밖의 어떤 변화도 모두 우리 飛躍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로서의 목표와 궁극이 무엇인가를 與野, 左와 右, 정부와 민간할것 없이 곰곰 새기고 깊이 합의해가야 한다. 한국의 左도 日本의 左만큼이라도 국가의 主權과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군대유지 규모나 국방비가 지금보다 줄어 들 수 있는가. 그때는 美 蘇 中 日이 모두 잠재적 敵國이 되어 海 空軍을 엄청나게 지금의 수 십배 늘려야하지 않을까. 駐韓美軍문제는 지금 철수만 하면 되는것인가. 우리의 自衛力은 지금 진짜 水準이 어느 程度인가. 主權國家로서 聯合司令部나 外國軍의 존재가 自尊을 상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主權國家로서 우리 獨自로 自衛能力을 갖

추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가. 미국 소련 일본 중국과 접경하고 金日成의 北韓과 休戰線이 있는 나라의 自衛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美軍철수 시키고 국방비 더 부담할 국내 태세가 돼 있는가. 미군이 아주 美本土로 철수했을 때 일본 소련 중국 『아세안』국가들은 한국에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日本 基地로 철수했을 때 美 日의 密着강화는 韓國과 韓半島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中國은 어느쪽으로 갈 것인가. 미군철수후 南北韓 극단세력간의 직접대결이 또 다른 民族相殘을 부를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 이런 질문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소련에서 중국에서 프랑스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무슨 답변이 준비돼 있는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관리가 무어라건 미국의 경제사정으로 진보파는 진보논리의 귀결로 보수파는 보수논리의 결과로 결국 미군철수 감군쪽으로 모아가고 있다. 우리 일부 대학생들의 설익은 短答이나 낭만적 左翼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미국내 사정은 우리가 費用分擔 安保分擔을 해 주지 않는 한 美軍철수의 가능성이 이제 실제화되고 있다. 정말 우리는 비용분담의 용의가 돼 있는가. 더구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가려는 자세보다 『도발』과 『저항』의 자세로 대처하려할 때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는 주권국가로서의 훈련이 매우 짧다. 그것도 군사까지를 포함한 스케일의 완전한 주권국가의 경험은 이제부터 쌓아가야한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군사적 位相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홀로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서 長中短期 관점에서 駐韓美軍 문제를 우리 獨自의 기준에서 제기하고 답을 내야한다. 주권국가로서 安保의 가치와 내용과 타이밍에 대한 의지와 답을 가져야 한다. 오늘의 答과 統一과정의 答과 統一 뒤의 答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째서 폐쇄와 自給을 이념으로 하는 소련공산주의가, 主體를 神格化하는 北韓이 南쪽 그들의 동지인 낭만적 이념적 左翼들이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하는 外勢와 결탁한 매판자본가』라고 매도해마지 않는 韓國의 大企業家들을 선호하여 불러 들이는가. 어째서 그들의 동지는 안 부르고 그들의 동지들을 착취하는 돈을 벌었다는 매판자본가들을 그 곳 노동자를 착취하여 번 돈으로 사들인 고급 『벤츠』車로 칙사 대접하는가. 민중과 노동자 天國의 지도자들은 왜 이쪽 노동자

를 착취한 브르주아계급의 돈을 꾸어 달라고 투자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가.

꿈을 깨라. 주권국가의 국민답게 진실을 實體를 물으라. 分斷이 原罪이니 통일만 되면 民主化도 人間化도 福祉도 安保도 成長도 모두 된다는 黑白논리에서 깨라. 原罪는 分斷以前에는 없었고 統一 이후에는 없을 것인가. 도둑이 많으니 도둑만 없애면 된다는 결과론과 같다. 도둑의 實體를 모르고 그잡는 방법없이 도둑은 잡히지 않는다. 1次元적 反動적 감상적 추상적 판단이 國際關係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6천만동포의 생명과 人權과 평화와 共同體의 삶 속에서 정치와 운동과 이념을 찾아야한다. 지금 4大 강국들이 南韓에서 工作하는 국제관계의 냉혹함과 더러움을 극복할 힘을 갖추는 역사와 정의와 민주와 휴머니즘에 충실해야 한다. 꿈, 낭만, 狂信, 宣言의 偏執은 국민과 민족을 지켜야하는 국제관계에서 절대 금물이다.

‘통일의 방안’과 ‘방안의 통일’

박호성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아침햇살('89. 1.28.)

활발하게 벌어진 그동안의 통일논의를 지켜보면서 내내 가지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8.15 이후 오늘날까지 반 세기 가까운 기간에 적잖은 통일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그 나름의 통일방안을 만들었고 남한에서도 정부는 정부대로, 야당들은 야당들대로 자신들의 ‘형편’에 어울리는 통일방안들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상태를 통일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관해서, 즉 통일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서는 별반 말들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방안’들만 난무하는가? 추구하는 통일의 본질과 기본 원칙이 동일한데도 제시되는 방법만 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각자 서로 다른 통일의 모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방안들이 그토록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리고 통일이란 것이 너무나 아득하고 먼 미래에 속하는 문제라서 그 본질에 대한 논의는 어차피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상한 배려 때문인가?

그러나 우리가 선뜻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선택하는 수단의 차이에 따라 이르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우격다짐은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울은 비행기로 가든 걸어가든 항상 변함없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과 본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현명하고 합리적인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란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과 저러저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것부터 우선 확실히 해놓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이르는 가장 합당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따

저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의 개념을 기정사실화된 것, 누구나 다 양해하고 합의하고 있는 것 썸으로 미리 치부해 놓고서는,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들만 부둥켜 안고 싸우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밤새껏 도깨비와 씨름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 빗자루와의 외로운 싸움이 었다는 식이 되지 않을까 적이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제 통일의 내용과 본질을 따져 보아야 한다. 도대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개념과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통일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여야 할 때이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신중을 요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일단 원칙적인 문제제기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통일이란 먼저 갈라진 영토와 민족의 재통합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차원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단합을 다시 이루고, 휴전선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철책 언저리에 포진하고 있는 적대적 군사력을 철수시키고, 나아가서는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파기함을 뜻한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군과 핵 무기의 철수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통일은 의당 평화를 전제한다. 통일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 없는 통일 또한 불가능하다.

통일은 상실된 민족적 자주성의 회복을 말한다. 분단이란 바로 외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분단사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력간의 갈등에 편승하는 집단의 기득권만을 옹호한다. 따라서 자주성의 탈환 없이 분단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통일은 민주적 변혁을 가리킨다. 분단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단의 논리란 예측의 논리이고, 예측의 논리란 억압과 착취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와 자주성의 토대 위에 구축되는 국토와 민족의 평화적 재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주화와 민주화와 평화를 동시에 그리고 가장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 통일방안만이 모든 민족구성원이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컨대 ‘선민주 후통일론’이나 ‘선통일 후민주론’은 둘 다 자주화와 민주화와 통일간의 불가분의 삼각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통일논리라고 할 수 있다.

병의 원인과 상태가 정확히 밝혀져야 치유의 방법도 결정될 수 있다. 통일의 본질이 명백히 드러나야 방안도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40년이 넘도록 ‘방안’만을 붙들고 옥신각신했다. 방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통일에 대한 열렬한 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을 ‘합법적으로’ 기피하려고 공연히 방법론만 붙잡고 투정을 부린 적은 없었던가?

이제는 ‘통일의 방안’이 아니라 ‘방안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왜냐하면 화려한 방안이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질박한 의지가 통일을 앞당기기 때문이다. ‘방안의 통일’이란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통일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다운 통일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南北문제에 『上智』를 모으자

李温竹 서울대학교수

서울신문 時論('89. 2.11.)

『미연에 밝게 보고 변란이 일기 전에 제어하고 다스리며 위태로움이 있기에 앞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은 上智라 할 것이요, 이미 일어난 뒤에 깨달아 변란임을 알고 다스려 도모하며 위험을 알아 안정을 시도함은 中智라 할 것이며, 무릇 위난을 보고도 다스릴 생각이나 안정을 구하고자 함이 없다면 이는 下智라 할 것입니다』 이는 栗谷先生께서 위란이 다가오는 기미를 알아차리시고 임금을 일깨우고자 올린 상소문에 적힌 글귀이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지도자들의 지혜가 上智에 미치지 못하고 中智조차 갖지 못하여 나라가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어가는 비극을 겪는가 하면 끝내는 국토가 반쪽이 나버리고도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변을 당하는 아픈 경험을 뒤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말씀이 절실히 와 닿는다.

지난 몇 해 사이의 혼란을 겪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舊韓末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형세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고, 그 위기를 모면한 오늘의 상황을 또 광복후의 난맥상에 비겨 우려를 표명하는 이도 있었다. 더구나 남북관계의 변화(?)가 급박하게 진전하는 와중에서 6·25의 전야를 상기시키는 소리마저 들린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요즈음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떤 낙관적인 실마리를 보여주는 듯한 희망마저 안게 해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원래 예외없이 상대방이 있는 상호적인 것이어서 정작 그 상대방의 기본적인 자세나 행위유형에 이 쪽이 보여주는 만큼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일게 하는 소지가 있다면 마땅히 다시한번 과연 우리가 남북관계의 앞날을 제대로 짚고 필요한 上智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省察하

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지금에 와서 전쟁발발時의 지도자중 생존해 있는 한 쪽 지도자에게 굳이 그 책임을 따지고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다시 동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보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코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민족분단의 뼈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통일의 염원을 이룩해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 『통일』이란 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예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길을 닦아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남한에서만 양보하고 개방하고 교류에 적극성을 띤다고 일이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체제가 일종의 유일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선 바로 보아야겠고 갑작스러운 개방과 남북교류로 말미암아 그 체제에 일정한 도전이 온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라는 점도 정확히 예측해 뒤야 한다.

또한 북한이 여느 공산권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틀림없고 그 타개를 위해서는 남한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얽힌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지도체제의 반응 역시 예측을 제대로 잘 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결국 우리가 上智를 발휘해야 할 점은 소극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위험성에 관해서이다.

변란의 개연성을 그대로 안은채 관계개선이나 상호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다. 따라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영구화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북한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민족공동체적 自我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도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방적인 양보나 교류추진에 주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화해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요, 이산가족의 恨도 풀어보려 함이요, 관광·문화·학술·체육 등 각 방면의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서서히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적 자아정체감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된 민족으로서 다가오는 아시아의 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전개에 보다 큰 역할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우리의 젊은 지성들도 21세기의 주역으로서의 준비에 보다 만전을 다하여 열중할 것이며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下智에 눈이 가려 모처럼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호기에 일을 크게 그리치는데 한 몫 하지 않도록 理性的으로 성찰할 것이다. 오늘과 같은 전환기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부면에서 上智가 절실하지만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信賴구축이 統一의 先行조건

安秉俊 延世大교수

世界日報 論壇('89. 3.29.)

새로운 統一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統一을 하나의 過程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韓半島의 양단이라는 現實과 南北韓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감안할 때 統一은 결국 南北當事者間에 合議가 이루어지고 주변국가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統一은 남북협상과 國際理解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일은 平和協力 및 統一을 지향하여 남북한이 민족적 차원에서 협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고 제도화한다면 그것은 『國家聯合』 『體制聯合』 『聯邦』 등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어느 명칭을 사용하든 그 핵심은 남북한이 민족적인 동질성을 되찾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족공동체의 상태이며 다른 말로는 『民族聯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결과로서의 통일은 兩側이 새롭게 統合할 國家의 形態 및 理念등에 대하여 合議를 이룰때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

새 統一方案은 一貫性, 현실가능성, 국민적 합의, 受容性 및 자신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색하는 통일방안은 평화 민주 민족 등의 대원칙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정책과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평화적인 통일,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統一, 그리고 民族自決原則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에 의한 統一, 이러한 원칙은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통일방안의 내용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先除讓步』도 있고 북한과 협상하여 合議해야 할 것도 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타당성을 갖고 주어진 여건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不信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南北韓間에 진실로 민족적인 차원에서 화해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뢰없이 군축과 불가침과 같은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現在 한국에서 일고있는 민주화운동에 즈음하여 새 統一方案은 무엇보다도 國民的 合議에 근거해야 한다. 政府가 統一論議를 독점하지 않고 각계각층이 討論과 참여를 거쳐서 광범하게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統一方案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하여 젊은세대가 표출하고 있는 民族主義感情도 반영하는 동시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새로운 統一方案은 우리측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하겠다. 일단 우리가 政治軍事會談을 수용했고 軍縮과 平和協定도 토의 할 의사를 보인 이상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提案을 하여 和解와 統一을 향한 노력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이 같은 민족으로서 주어진 현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간에 同質性과 共同利益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平和, 協力 및 統一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구도 制度化해야 한다. 이 과정과 기구가 어느정도로 정착할 때 『民族聯合』 또는 共同體가 형성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침내 政治的인 合議에 의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거치지 않고 협력할 수 없으며 협력없이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이 三大 目標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其他 目標을 선행해야 하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도외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사실 『民族聯合』이라 함은 우선 같은 민족을 상대로 무력을 使用하지 않는 平和共同體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경제 문화 및 사회 交流를 보장하는 이익共同體, 또는 협력共同體, 그리고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統合된 민족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共同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평화 또는 안보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 조치나 군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내어야 한다. 협력공동체는 경제 회담을 성사시켜서 무역 投資 및 기술 전수에 대한 실질적인 合議를 이루어야 한다. 정치共同體는 현존하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양 측이 현안문제를 당국자간에 해결할 수 있을 때 그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南北양측은 共同위원회와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현안을 협상하고 구체적으로 平和協力 및 통일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당국간에 어느정도로 신뢰가 회복되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서로 협조할 수 있을때 가족방문 관광 경제 문화 및 체육교류가 민간수준에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이처럼 평화 협력 및 통일을 가속화하여 우선 민족감정과 공동이익의 공동체를 형성한 뒤 마침내 정치共同體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再定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한 統一論』 배격돼야 한다

林元澤 서울대 명예교수

中央日報 論壇('89. 4. 1.)

唯物論者 『마르크스』는 『物質』을 『인간 의지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간 의지로부터의 독립』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스탈린』이었다. 그가 죽기 전에 썼던 『蘇聯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1952)에서 그는 소련에서도 인민들의 의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레닌』 『스탈린』의 문장으로부터 共產黨의 전술을 유도해 낸 『N·라이츠』의 책 『폴리토부로의 作戰綱領』(1951)의 맨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共產黨은 必然이나 不可能이나만을 따져야하고 可能性을 일체 배제해야 된다.』 그리하여 공산당 전술로서 『모험주의』는 일체 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신중하기 짝이없는 스탈린이 단한번의 『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했으니 그것이 바로 6·25동란이었다. 韓國戰爭은 ①武力統一을 목표로 했다는것 ② 『제1차 世界小戰』이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北은 어디까지나 國內戰爭으로 몰고가려 했으나 이 쪽에서는 UN16개국이 동원되었으며, 그 쪽에서는 中共 그리고 蘇聯도 사실상 참전했으므로 韓國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인 아닌 『제1차 世界小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8선이 『인간의지로부터 독립된』 즉 전 자유주의제국의 元首들도, 『스탈린』·毛澤東·金日成도 어찌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스탈린』은 한국전쟁 모험의 실패로 화병이 나서 죽었다고 『말렌코프』는 말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統一論』이 발호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말이다. 35만의 死傷者를 낸 『世界小戰』을 치르고서도 없앨 수 없었던 38선이 누구 손으로 그리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인가. 世界史는 同民族이면서도 평화통일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가르쳐 주고 있다. 希臘의 폴리스, 近世獨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三國(新羅·百濟·高句麗) 鼎立 등. 하등 싸울 필요가 없고 타협 잘 하기로 이름난 美國人이 무엇때문에 5년간이나 南北戰爭을 해서 통일을 했는지 도시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만 민중의 뜻이라고 하고 『이상한 統一論』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민족』 『민중』의 이름을 내 건 感傷主義的 統一論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근자의 일부 통일론자는 우리는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라이츠』의 책에 공산당이 절대로 범해서 안 될 오류로서 『이용 당하는 위험(danger of being used)』 『흡수되는 위험(danger of annihilation)』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산당은 자본주의를 『이용』하고 『흡수』하고 『와해(Liquidation)』 시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당에 『이용』되고 『흡수』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달콤한 『말』을 유포시켜 『이용』하고 『흡수』하려 하고 있다.

특별히 2개의 달콤한 말 『통일지선』 과 『민중론』이라는 말을 유포시킴으로써 그리고 『평화통일』은 7천만 『민중』의 뜻이므로 꼭 이루어진다고 『가능성』을 고취한다. 공산당 자신은 철저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南韓안에 이 『가능성』을 믿고 서두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와해』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지선』과 『민중론』은 지금 한창 우리나라를 내부 붕괴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나는 보고있다.

文益煥씨가 사전에 정부에 아무 통고도 하지않고 平壤에 가서 세상을 발각 뒤 집혀 놓게 하고있다. 그는 北에 의해서 『이용』되고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우리 나라를 조금이라도 『와해』 시킨다고 생각될 때에는 당연히 制裁가 그에게 가해져야 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나도 물론 평화통일을 바란다. 그러나 그 평화통일은 『자유있는 통일』이어야 하

며 『자유없는 통일』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여기에 南韓의 내셔널 컨센서스가 6·25동란후 성립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고르바초프』 집권후 蘇聯이 달라졌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이츠』 책의 『후퇴(retreat)』라는 章에는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네가 수령구덩이에도 들어갈 용의가 없다면, 너는 革命家가 아니고 떠벌이다.』 그리고 공산당은 『체면』 때문에 『편리한 後退』를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르바초프』는 『레닌』의 戰術에 따라 『편리한 後退』를 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 공산당은 『中立』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편이 아닌 것은 모두 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北方政策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 년 전 『고르바초프』가 英國을 방문한 일이 있다. 『고르바초프』와 『대처』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은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두 사람의 입술은 거의 닫고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포옹이 끝난뒤 『대처』는 측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美英을 분리시키려고 하고있다』고.

답례차 『대처』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고르바초프』는 산해진미로 그녀를 대접했다. 『대처』의 입에서 『존경하는 「고르바초프」동지』란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답사에 나선 『대처』는 존경하는 『고르바초프』라는 말 대신 『우리 英國은 절대로 核武器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核무기야말로 2차대전후 세계평화를 40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평화를 위한 담보이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처』는 『이용』도 『흡수』도 되지 않고 또 단호히 『중립적』도 아니라는 것을 표명한 셈이다. 우리도 北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대인의 세계 지배전략서 라고 불리는 『시온의 議政書』라는 책이 있다. 유대인은 그 책을 유대인을 흠 잡기위한 僞書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유대인이 非유대인국

을 망하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非유대인국에 자유와 민주라는 毒藥을 주입시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과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 전취해 낸 자유와 민주가 우리민족을 해치는 『毒藥』이라는 말인가.

그런데 사실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약이 되고있는 몇가지 예를 우리는 보고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자유와 민주가 독약이 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자유와 민주는 전통윤리와 專門化체계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라고해서 전통윤리를 봉건적이라고 배격하면 그 자유와 민주는 독약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 자유와 민주라고해서 군인이 정치를 하려들고 목사가 이상한 통일운동을 하려고 든다면 그 자유와 민주도 독약이 되는 것이다. 통일문제만 가지고 40년간 연구하고있는 전문가가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단숨에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말인가.

정당이나 개인이나 앞으로는 일체 『이상한 통일』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自由 있는 統一』만을 주장하라고 외치고 싶다.

이 답답한 民族史의 고통

柳根一 논설위원

朝鮮日報 칼럼('89. 4. 2.)

갈등구조의 代물림

統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말이다. 통일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구한 일들이 벌어져 왔던가. 자유당 말기의 進歩黨의 『평화통일』선언, 제2공화국하의 학생들과 혁신정당들의 폭발적인 통일논의, 그리고 70년대의 남-북 공동선언과 오늘의 정부-재야의 통일갈등 등, 실로 통일이라는 말이 빚어낸 그 숭한 환희와 고통의 사연들을 헤아리자면 머리가 하얗게 셀 지경이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그동안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뽕밭이 바다로 변할 만큼 세상은 크게 변했는데도, 유독 그 통일을 둘러싼 갈등구조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치도 앞으로 나간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때도 정부 당국의 『통일정책』과 정부 밖의 『통일주장』이 서로 맞부딪치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破局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구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갈등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갈등구조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주려 하고 있다. 비극적인 역사의 단순 재생산인 것이다.

분단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었는데, 이쯤되면 이제는 통일논의의 갈등구조도 우리를 아프게하는 또 하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분단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통일논의의 갈등까지도 또하나의 고통을 더해줄 뿐이라면, 이거야말로 무엇을 위한 통일논의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러다가는 통일은 고사하고 통일의 문턱에도 이르기 전에 그 통일 논의의 싸움 때문에 사람이 지쳐 자빠질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건 야당들이건 재야건 학생이건,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우선 통일논의의 통일부터 이룩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反통일 세력』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할 것이냐, 『체제 전복세력』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 黨을 욕하는 저 쪽 黨 사람들과는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싸움이 또 벌어질 법도 하다.

내부 統一이 급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도대체 통일은 누구하고 어떻게 이룩하겠다는 것인가. 정히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아예 討伐이나 征伐이라는 말을 쓰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 征伐의 개념에 가장 투철한 것이 바로 北의 『남조선 해방』論이요, 자유당 때의 北進統一論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통일논의 역시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 타도하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식의 싸움의 논리들로 百家爭鳴을 이룬다면 그것은 남-북통일은 커녕 南쪽을 다시 여러갈래와 조각으로 더 분단하는 꼴 밖엔 안되는 것이다. 통일을 하자고 통일 논의를 하는 것인데, 통일논의를 하다가 거꾸로 분쟁과 상극을 더욱 격화시킨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내부에서나마 통일논의를 통일할 궁리부터 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統一을 정치 武器化해선 안된다는 점에 합의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일정책』이나 『북방정책』의 독점적인 카드를 가지고서 內政의 헤게모니를 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박정희씨 처럼 통일을 維新의 호도책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항세력도 통일을 그 어떤 『투쟁의 최고형태』로 무기화하지 않았으면 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金泳三총재도 말했듯이 자유와 민주와 人權이 보장되는 통일만을 유일하게 『좋은 통일』로 간주하자는데 합의할 일이다. 결코 『모든 통일은 善』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詩的 표현일지는 몰라도, 정말로 그렇다면 維新체제로 남북을 통일한다해도 그것을 善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을진대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민주화-인간화와 함께, 北쪽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人權의 억압과 民主의 함몰에도 동시적인 항의를 발해야 한

다.

말만 앞세우지 말자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과잉된 管理의 억압이 있었으며, 그런 억압으로 국민은 고통을 받았다. …… 개인숭배 시대에 나타난 사상의 득점화가 가져온 폐해를 일소하기 위해 사회와 사상의 경직화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페레스트로이카가 北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의 민주화이며 全 韓半島의 민주화를 동반하는 통일만을 유일하게 옹호한 통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논의의 통일을 이룩해내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稼動이다. 국회도 있고 통일원도 있는데 왜 여태까지 통일논의들이 제각기 따로 놀고 저마다 독불장군인가. 말만 했다하면 『각계각층의 중지를 수렴하여……』 어찌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衆智 수렴작업을 언제 어떻게 해 보았단 말인가. 최소한 院內 4黨의 통일정책이라도 하나로 수렴해 보려고 피차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文목사가 돌아오면 또 한 차례 싸움이 벌어지겠지… 죽여라, 왜 죽이느냐, 잡아라, 왜 잡느냐…… 이래서 우리의 통일논의는 또 한번 非통일적인 갈등의 늪으로 깊이 빠져버릴 모양이다. 아, 이 답답한 민족사의 고통이여.

2

南北韓關係

北韓은 眞實과 誠意를 보여야 한다.

서울신문 社說('88.11.18.)

戰爭을 하고자하지 않는다면 南北韓을 통튼 우리들의 平和統一 논의의 첫 단계는 두말 할 것도 없이 南北對話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논의도 이 대화의 중요성을 根幹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南北접촉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이 現實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北韓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南北 대화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측의 진지하고 성실한 對北韓 대화 자세와 노력이 지금까지 그다지 돋보이지 못한 것도 대화에 임하는 北韓의 자세에 진실성과 성의가 담겨있지 않은 탓이다.

北韓측이 16일 그들의 정무원총리 李根模 명의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보면 南北韓의 대화와 접촉이 항상 끊일 듯 이어지는데도 왜 한 치의 진전도 없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들의 『포괄적 평화방안』은 얼핏보아 軍事的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해 평소 北韓측이 주장하는 美國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南北불가침 선언채택을 실현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지난 2년간 줄곧 주장해왔던 駐韓美軍철수·3者회담·軍縮 등에 『단계적』이라는 修辭를 붙여 잘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겨져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軍縮제의와는 달리 軍備확장에 골몰하고 있는 北韓의 二重性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軍事力을 유지 확장하다 보니 軍縮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정은 짐작이 가나 平和를 내세운 僞裝공세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로는 비교적 손쉬운 합의가 가능한 赤十字·경제회담 등은 접어두고 민감한 軍事문제만 들고 나오는 의도가 석연치 않다. 北韓이 정말로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軍縮 이전 『不可侵』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라도 논의해 보자는 우리측의 頂上회담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南北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은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人的·物的 교류는 물론 頂上회담·국회회담 등 실현가능한 문제를 짐짓 제쳐 놓고 대화상대의 『武裝해제』를 강요하는 것은 대화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그 『포괄적 평화방안』이 南北국회회담 준비접촉 전 날에 전해진 데에도 문제는 있다. 국회회담의 형식과 議題조차 정해지지 않은 터에 불쑥 그런 제의를 다시 하는 것은 국회회담을 成事시킬 뜻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결국 이 제의는 대통령의 7·7선언과 국정연설·유엔연설등에서 일관되게 선명히 드러난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한 견제와 逆선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경우든 軍縮에는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軍備를 확장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對南도발책동을 거두지 않는 현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軍縮협의를 가능하지 않다. 또한 침략전쟁을 당한 우리로서는 불가침협정 체결 등 전쟁재발 억제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 자체를 위한 최소한의 自救策이다. 平壤측이 우리의 이같은 3단계 軍縮案을 수락한다면 駐韓美軍의 존재에도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北韓은 南北대화와 접촉의 본질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변함없이 되풀이 되는 僞裝평화공세나 우리 內政의 갈등과 혼선을 틈탄 기만적 술책 따위는 이제 止揚해야 할 줄 안다.

北韓은 變化하는가

- 體制內 同質變化에 불과할 듯 -

朝鮮日報 社說('88.12.13.)

北韓의 내부에 과연 무슨 變化의 징후라도 있는가. 미국의 존 루이스 教授는 北의 이데올로기는 표면상 변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면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변화란 구체적으로 日本등과의 合營에 의한 경제발전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北에도 이제는 經濟 合理性을 추구하는 세대가 등장하여 조심스러운 개방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따라서 北도 앞으로는 對話가능한 상대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 같다.

우리도 물론 北韓도 영구히 思想의 優位性만을 體制유지의 방편으로 삼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北韓 내부에도 革命보다는 生活의 윤택을 더 바라는 戰後세대가 성장할 것이며, 그러한 세대들을 영구히 바깥 세계의 情報로부터 차단시켜놓을 도리도 없을 것이다.

北韓 역시 고도의 産業化를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革命戰爭의 꿈을 버리거나 修正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北의 점차적인 變化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일부 관측자들의 말은 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속단과 낙관은 금물이다. 우선 北에는 下部構造로서의 경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데 부응한 上部構造의 이데올로기의 -制度的 개혁의 징후가 아직은 전혀 없다. 主體思想이란 이름의 北韓의 唯一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聖典처럼 군림해 있고, 그것은 여전히 『首領論』을 비롯하여, 물질세계의 객관적-과학적 合法則性을 무시하는 恣意的 주관주의에 빠져있다.

경제적인 개방을 위해서는 정치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情報의 차

단없는 개방과 유통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위한 글라스노스트(개방)의 필요성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여전히 그런 上部構造의 개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냥 경제-외교정책만 조금 바꾸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회-문화의 획일주의와 통제-억압-폐쇄성은 고스란히 놓아둔 채, 오직 交易의 문호만 넓히겠다 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탱할 수도 없는 법이다.

北韓으로서는 물론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上部構造의 자유화 같은 것을 감내할 자신이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풀어놓을 때 그 충격은 北韓 권력자들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김일성 정권은 지극히 보수적이고 소심한 『體制內的 同質變化』를 시험해보고, 그 결과여하에 따라 점차 『體制內的 異質變化』로의 진척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한 가지 사항만은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南韓 내부의 혁명세력의 성장을 기다려, 그들이 『인민 민주주의 혁명투쟁』을 고양시킬 전망에 대한 期待인 것이다. 그리하여 北이 그런 期待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될 때까지는 北韓은 제 아무리 경제-외교정책을 軟化한다해도 그들의 對南 교란전략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따라서 北의 정책변화는 적극 유도하면서, 반면에 그들의 對南 교란전략만은 철저히 고립시키는 대책을 써야할 것이다.

北韓은 變하려는가

- 인민회의 소집과 總理更迭의 의미 -

京鄉新聞 社說('88.12.13.)

최근 外信들이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北韓내부의 변모상에 대해 우리가 성급하게 樂觀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사회나 북한권력 구조의 一角에 분명한 변화조짐이 일고있는 현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북한은 12일 갑자기 소집된 최고인민회의의 제 8기 4차 전체회의에서 李根模 정무원 총리를 해임하고 노동당 정치국원겸 비서인 延亨默을 새 총리로 선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북한의 총리경질은 우선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북한이 蘇聯·中國·美國 등 밖으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개방압력에 비추어 볼때 延亨默의 총리기용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과감한 개방이나 아니면 기존체제와 정책의 고수냐로 兩者擇一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어 온 게 사실이다. 체제개혁과 개방화 정책을 밀고 나갔던 신진 엘리트그룹의 핵심인물인 姜城山 총리팀을 후퇴시키고 그 자리에 혁명 1세대의 경제통이던 李根模를 기용, 개혁과 개방보다는 教條的 자력 갱생정책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다시 西方세계를 잘 아는 延亨默으로 총리를 바꾼 것은 어쩌면 앞으로 북한이 개방쪽으로 정책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도 한다. 延亨默은 금속기계전문가로 소련 동구공산권 여러나라를 순방하면서 경제외교에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를 총리로 기용한 金日成의 의중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金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교조적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限界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며 어떤 형태로든 체제개혁과 개방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도가 아닌가 풀이된다.

金日成의 새 총리 기용은 특히 金正日의 失政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일성은 지난 여름에도 김정일의 失政, 실책이 거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일성 스스로 후견인적 영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군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崔光의 군총참모장 重用, 김문섭의 인민무력부 부부장 기용으로 특징되는 군수뇌부 개편은 이번 정무원총리의 경질과 함께 김일성 親政체 구축으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보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보아진다.

우리 정부의 과감한 북방정책과 美·日등의 對北韓 정책전환도 북한의 인사개편과 내부체제의 변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소련은 물론 동구공산국가들이 한국과 잇따라 경제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경제운영에 적지않은 자극제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지금 북한이 겪고있는 여러가지 대내적 갈등과 경제난은 북한에서의 체제개혁과 개방화 압력을 갈수록 加重시켜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개방화대가 정치권력의 안정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말해 개방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서방의 자유화 물결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김일성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 고조; 폭넓게 전개될 주민들의 요구분출 등은 김일성부자의 정권유지 자체를 위협하리라는 것이 그 두려움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폐쇄일변도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지금과 같은 국제개방화 추세에서는 고립화 밖에 얻을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북한의 새 총리기용을 계기로 북한이 보다 개방적이고 화해적인 자세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그 可視的인 변화가 남북간의 대화 진전, 교류의 확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 둔다.

北의 變化를 기대한다

- 最高人民會議 긴급소집을 보고 -

中央日報 社說('88.12.13.)

北韓은 변하고 있는가. 최근 갑작스럽게 소집된 北韓 최고인민회의에 쏠리는 우리의 관심은 이 점에 집중된다. 당장 드러난 사실은 86년 12월에 임명되었던 李根模총리가 경질된 사실뿐이다. 이에 앞서 국가계획위원장이 2년사이 6번이나 바뀐 사실등으로 미루어 北韓 내부에 극히 치열한 경제정책상의 試行錯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소집도 단순한 人事개편을 넘어 기본정책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南北韓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가 內部에서 성숙하고 있는 마당에 北韓에서 일고 있는 그와같은 정책 재평가 작업이 中·蘇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바람과 脈을 같이하는 實用主義방향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北韓으로부터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기대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北韓으로부터 처음으로 취재 비자를 발급받아 平壤에 도착, 취재·송고를 시작한 本社 李燦三 시카고 支社 편집국장의 1信 내용을 보면 적어도 고향방문단 때 본 모습보다는 약간 개방화된 것 같다.

그는 밤늦게 안내원없이 혼자 시가 취재를 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平壤을 방문한 美國 원로기자 『해리슨·솔즈베리』도 北韓의 관료들이 10여년전에 비해 韓國이나 西方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밖에도 北京에서 北韓 유학생을 만난 한 인사는 北韓內에서도 蘇聯의 『고르바초프』黨서기장이 추진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傳言한 바 있다.

그런 단편적 傳言을 北韓 내부의 實相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

한 일이다.

그러나 中蘇 등 北韓의 전통적 지원세력이 政經分離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韓國과의 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이와 대칭해서 우리의 우방인 美日이 北韓에 대한 門戶개방 용의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北韓에도 이에 호응하는 세력이 커 가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개연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듯하다.

北韓도 자체 경제의 침체성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西方세계로부터의 기술·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合營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지난 40여년동안 金日成이 쌓아 올린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엄격한 獨自노선의 기본 바탕이 변화하리라고 기대하는것은 無理다. 그런 변화는 北韓체제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半島 주변에서 불고 있는 實用主義의 바람은 이미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순응하는 길만이 北韓 스스로가 처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南北韓 관계의 오랜 對決相을 共存과 궁극적 統一로 好轉시킬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北韓 최고인민회의의 토의 결과가 앞으로의 南北韓 관계를 순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和解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北韓의 부산한 움직임

한국일보 社說('88.12.14.)

지난 40여년간 전세계에서 북한처럼 밖으로 문을 걸어잠근 채 철저한 주민통제속에 시대착오적인 노선을 걸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저마다 이데올로기를 접어둔 채 경제難 극복을 통한 自救생존을 위해 자본주의 방식을 부분적으로나마 도입,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요즘 북한의 지도부와 자세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소련·중국 및 東歐공산국가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북한도 이번 긴급 최고인민회의소집-정무원총리의 전격교체등을 계기로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더 이상 경제적 落後를 벗어나기 위해 국제정세흐름에 맞춰 과감한 체제 및 내부개혁과 함께 對外개방정책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결같이 異例의이어서 우리측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국회역할을 맡으면서도 1년에 1~2회, 그것도 겨우 수 일간 회의를 열어왔던 최고인민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여기서 정무원총리인 李根模를 延享默으로 바꿨으며 人事이유를 밝히지 않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李의 교체를 『건강상 이유』라면서 黨 정치국원직까지 해임한 것 등은 모두 이례적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북한이 수 년만에 지난달 舍해외공관장들을 평양으로 소환, 수 일간 비밀회의를 가졌고 지난 달 28일부터 3일간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도 궁금하기 짝이없다. 앞으로 정확한 회의결과는 시일이 지난 뒤 판명될 것이지만 각급 회의와 총리교체등이 과연 북한내부 및 對外정책변화와 관련여부는 속단할 수 없을 듯하다.

하나는 이번 움직임이 누적된 失政과 함께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難을 극복하기 위한 引責인사의 성격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무모한 평양시 건설과 내년 세계청소년축전준비를 위한 시설물 투자로 경제難을 가속시킨

金正日대신 李등에게 책임을 지워 결국 金日成 父子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對外개방에 계속 신중한 자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대로 비록 소규모이지만 이번 움직임을 북한이 40년만에 내부개혁과 밖으로 개방하는 시발로보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오늘날 북한이 경제면에서나 대외적 신용, 국제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중국이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경제적 침체를 벗기위해 개방과 개혁정책을 적극 펴며 특히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한국과 긴밀한 접근으로 『2개의 한국 인정論』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당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東歐諸國이 다투어 서울과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헝가리의 경우 상주대표부 교환에 이어 외교관계 수립으로 발전할 조짐으로 있어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추진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對韓접근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가능한 것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오는 길에 서울에 들른 美스탠퍼드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존·루이스 소장도 『북한은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북한당국으로서는 선택의 岐路에 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의 落後와 退行, 그리고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金日成 사망때까지 계속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나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공존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다.

南北關係만 뒤쳐지나

- 세계의 『새우등』모두 아물고 있다 -

中央日報 社說('88.12.19.)

고래들이 對決의 소용돌이를 그침에 따라 주변 새우들의 등이 아물기 시작한 시대- 88년의 분주했던 국제정치를 뒤돌아보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 결실은 그런 비유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팔레스타인 민족이 오랜 宿願이었던 독립을 선포하고 유엔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런 변화의 가장 최근의 例다. 이스라엘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선포가 中東 平和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엄청난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次大戰 이래 네 차례의 전쟁과 무수한 국제 테러활동의 원인이 되어왔던 팔레스타인 민족의 원한이 명목상으로나마 국제적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이 오랜 분쟁이 해결될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앞서 美·蘇·中國간의 代理전쟁으로 악화되어가던 아프가니스탄 內亂이 蘇聯軍의 철수 개시로 삭아들기 시작했고, 페르시아灣의 국제水路에 위협스런 전쟁의 불길을 몰고 온 이란-이라크전쟁도 휴전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越南戰의 餘震으로 캄푸치아·라오스에 번져갔던 전쟁의 불길도 越南의 후원 세력인 蘇聯이 지원을 후퇴시킴에 따라 베트남軍의 철수로 꺼져가고 있다.

또 하나의 美蘇 代理戰爭이었던 니카라과의 7년 內戰은 美議會의 끈질긴 전쟁 지원 거부로 사그라질 것이 확실해졌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포기로 생겨난 앙골라의 정치 空白을 메우기 위해 蘇聯과 南阿共이 실시해 온 代理전쟁은 최근 앙골라와 南阿共사이에 끼인 『새우』나미비아의 독립을 통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정치의 主流에서 벗어나 있는 地政學的 소외성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 억울한 희생만 당해 오면서도 국제여론의 온당한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이 小國에 까지 평화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例는 을 한해동안 강대국간의 화해분위기가 주변 분쟁해결에 얼마나 넓고 힘찬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세계 곳곳에 잠재해 있거나 불길을 뿜고 있는 지역 분쟁수는 대충 40여건에 달한다. 따라서 금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분쟁들이 모두 평화로 이어진 다해도 새해가 만족스런 세계 평화의 해로 밝아오리라고 낙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분쟁들이 대개 美蘇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편들기』 때문에 더욱 처참한 형태로 長期化해 왔었다는 先例로 봐서 美·蘇·中國등의 관계개선 결과로 代理전쟁型 분쟁이 해소되고 있는일반적 추세는 평화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오랫동안 국제분쟁 해결 역할을 강대국에 빼앗겼던 유엔이 中東분쟁해결의 주역을 맡으면서 다시 중재자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도 같은 맥락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이런 추세가 韓半島에도 吉兆가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다른 어느분쟁보다도 南北韓 관계는 이제 당사자들이 和解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外的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서로 각축을 벌였던 강대국들 사이에 共存의 균형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야 말로 상처받은 韓半島 『새우』의 등을 민족독자의 힘으로 치유할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행동해야 될 시기다.

南北韓관계에 變化기대

서울신문 社說('88.12.20.)

北韓은 변하고 있는가. 지난번 갑작스레 소집된 北韓최고인민회의는 그 시기와 여건에 비추어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는 최근 北韓사회나 北韓권력구조의 一角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듯한 변화조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무엇인가 변화는 있는 듯하고 또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韓國국적을 가진 在美동포가 정식으로 平壤을 방문하는가 하면 在美 韓國기자가 처음으로 취재비자를 발급받아 平壤에서의 생생한 취재기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모자라다. 北韓은 아직 적어도 南北韓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우리는 이러한 변모 아래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 이쪽 저쪽 눈치만 보며 잔뜩 몸을 도사린다.

통일의 디딤돌을 놓으려는 우리의 여러 제의에 대한 반응도 계속 부정적이다. 南北韓의 교류교역을 주로한 『7·7선언』을 分離의 고착이라는 강변으로 거부했다. 학생교환순례와 체육경기 제의는 이쪽의 서한조차 받지 않았다. 南北韓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차스럽고 교묘한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實體를 인정하고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서 共存·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南韓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될수록 깎아내려 짐짓 대등한 상대로서 대하려 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통일논의나 대화에 앞서 北韓은 먼저 이런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

통일 또는 南北韓관계의 개선은 南北韓 중 어느 한 쪽의 체제변화나 그에 수반하는 정책전환으로 급진전을 이룬다기 보다 동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상호존중의 자세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국력이 약화되고 국방태세에 허점이

있을 때 北韓이 과거처럼 내려오리라는 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보에는 철저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駐韓美軍은 더 머물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통일은 해야 한다. 민족의 염원이요, 우리 민족 지상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로 더 뭉쳐야 하고 北韓측이 주장하는 정치군사회담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들의 통일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민 여론조사). 南北韓통일이 되었을 경우 바람직한 국가체제로는 과반수 이상이 『우리나라 式』을 지지했고 『양쪽을 합한 새로운 체제』가 좋다는 의견도 41.4%나 되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통일염원이요 의지이지만 또한 투철한 안보의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대부분 건전한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에는 保守的이지만 통일에는 진보적이다. 그만큼 전쟁을 싫어하고 통일을 바란다.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다. 40여년전의 동요가 이제 전 국민의 愛唱歌이 되고 있다. 曲이 쉬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노랫말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越北作家의 문학도 음악도 모두 풀고 모든 자료·原典도 다 풀어 이해하는데 北韓은 왜 꾸물거리나, 이제 北韓도 변해야 한다. 동포와 주변 국가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흥연 귀 기울이고 폐쇄와 통제를 벗고 和解와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

北의 제안과 우리의 대응

— 金日成을 開放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

東亞日報 社說('88.12.22.)

金日成과 그 추종집단들은 과연 언제까지 北韓을 폐쇄사회로 억류시킬 수 있을까.

中國과 소련이 개방과 개혁의 기치를 든 지도 이미 오래다. 東歐공산국가들이 大韓民國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은밀한』접촉을 시도한 것은 이전 먼 옛이야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을 결정적 전환의 계기로 하여 韓半島와 그 주변에 휘몰아 치고 있는 和解와 共榮의 물결은 어떤 형태, 어떤 속도로든 北韓에 流入될 수 밖에 없다.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美國 日本 등 전통적인 우리 友邦들과도 人的 物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최근 北韓을 방문한 바 있는 『스탠퍼드』대학의 『존 루이스』교수가 『北韓지도부는 오늘의 전환기에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北韓진단에 유의한다. 이와 아울러 日本에 체류 중인 『세바르드나제』소련 외무장관이 20일 곧 방문하게 될 平壤에서 『北韓의 對外 개방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며 내년으로 예정되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北韓방문을 성공시키는 조건임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北韓의 변화와 韓半島에서의 新데탕트 분위기 조성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밖의 상황변화와 관련, 우리는 최근 北韓이 보이고 있는 多樣한 對南제스처를 주시하게 된다. 北韓은 21일 90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할 南北韓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으며 20일에는 駐韓美軍철수와 減軍을 위한 南北韓과 美國간의 3자회담을 제의했다.

北韓은 지난 11월16일 南北韓 고위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으며 이어 17일에는

南北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 우리의 제안을 의외로 『선선히』 받아들였다. 이같은 北韓의 南北대화공세를 주시하면서 우리는 85년의 경우를 되새겨본다. 南北은 85년에도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이산가족고향방문, 체육회담등 다양한 對話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86년초에 들면서 北韓측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모든 南北대화를 一方的으로 중단해 버렸다.

이같은 北韓의 불합리한 태도에 불신과 환멸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꾸준히 새로운 대화를 모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오늘 『실질적 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同時多發的인 여러 제안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모든 대화의 핵심은 하나같이 駐韓美軍철수와 軍隊감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對北 경계심을 풀 수가 없다. 우리는 또 北韓은 그들의 헌법에 韓半島의 赤化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金日成의 主體사상을 체제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金日成과 그 추종세력들은 당면하고 있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려는 도전을 위해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對南공작의 1人者인 金仲麟을 당서기로 복귀시키고 12월12일에는 긴급소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정무원총리로 경제전문가인 延亨默을 임명한 조치에서도 우리는 北의 이같은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

이같은 金日成의 곡예가 開放을 지향하는 국제적 여건과 福祉를 갈망하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金日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립과 파멸이 아니면 개방과 공존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對北대화에도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北韓을 고립에서 개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對北대화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自由와 民主의 원칙과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신념과 능력은 언제나 필수적 전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靈的 救援과 南北和合

- 教皇의 平壤방문 계획에의 期待 -

中央日報 社說('88.12.24.)

平壤에 새 교회와 聖堂이 건립된 데 뒤이어 로마 교황 『요한·바오로』 2世와 어찌면 서울 教區長 金壽煥 추기경이 내년 10월 平壤을 방문하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소식은 종교의 정신적 救援의 역할을 지금까지 이념상의 이유로 억제해 온 北韓이 그런 입장을 되돌림으로써 西方세계에 대한 門戶開放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식이 갖는 1차적인 의미는 唯物史觀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現世的 삶에서 오는 영혼의 고통과 갈등을 종교생활을 통해 위안받을 수 있는 길을 박탈 당해 온 北韓 동포들에게 靈的 歸依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 있다. 성탄절을 맞은 이 시기에 있어서 그런 의미는 더욱 강조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수의 신앙인들이 느낄 그러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이 소식을 北韓사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한 변화의 분명한 징표로 평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南北韓은 다같이 韓國戰爭을 겪으면서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에 대한 獨善的인 不信과 상호 공포심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비정상적 상태는 南北韓이 다같이 日常的 喜怒哀樂의 순박한 동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같은 동포들의 집단이라는 自명한 상식을 잊게 하고, 마치 두 사회가 서로 상대방의 몰락만을 추구하는 기계적 조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기도 했다.

종교적 교류를 포함한 南北韓 상호간의 개방은 이러한 非正常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제 너무 오래 南北韓관계를 압도해 온 『시

저의 것』은 뒤로 물리치고 民族的 同質性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남아있는 국민 對 國民의 관계가 前面으로 나와 兩者間에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된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北韓사회의 『沈默의 教會』가 실질적 형태로 되살아나고 그것을 계기로 南北韓간에 人的·文化的 교류가 확대될 경우 지금까지 탐색단계에 있는 정치·군사적 共存體制로의 노력도 큰 활력을 얻게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 기대에서 우리는 北韓이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폭넓고 확실한 종교 자유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北韓은 46년 토지개혁 정책에 따라 각종 종교 기관 및 단체가 소유한 땅 1만4천4백ha를 몰수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또 종교 자유의 法的 보장은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신앙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이 우리의 기대대로 교회와 聖堂의 건립을 통해 상징 아닌 실질적 종교의 자유의 길을 열려 한다면 그런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표시해야 될 것이다. 北韓의 모든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교황의 平壤방문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南北韓 종교인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가말로 南北韓 관계를 대결 아닌 共存과 和合의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도를 가장 설득력있게 입증할 수 있는 손쉬운 길임을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의 계절인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다.

南北關係의 實體

- 힘이 있어야 北의 和解와 開放 이끌어 낸다 -

東亞日報 社說('89. 1. 4.)

北韓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제의한 南北政治협상회의 등 對南관계발언은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平和정착을 희구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안을 던져주고 있다.

金日成은 南韓의 4대 정당총재와 金壽煥추기경 文益煥목사 白基玩씨를 『가까운 장래에 平壤에서 열릴』이 회의에 초청한다면서 회의의 전제로 『팀스피리트』 韓美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金의 제의는 盧泰愚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바대로 『새해는 南北韓을 차단하는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통일의 轉機를 이룩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金의 제의는 盧대통령의 중간평가 등 우리측의 정치일정과 체제저항세력들의 『春鬪』까지를 겨냥한 고도의 전술로 분석된다.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南北문제를 다루었던 과거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南北대화의 전면적 거부』요, 『一蹴』으로 끝내버릴 제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결 아닌 화해, 전쟁 아닌 공존, 分斷 아닌 統一을 추구하는 오늘의 우리로서는 보다 신중한 대처가 요청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협상』이란 이름의 北측 제의를 접하면서 1948년 4월 金日成등의 요청으로 平壤에서 열렸던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일당은 당시 南韓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 金九 金奎植선생 등 南韓의 정당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해 놓고는 저들의 각본대로 회의를 진행시킴으로써 南韓에서 간 지도자들을 격분케 했다.

이 南北연석회의는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에 內戰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라는 등의 성명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駐韓美軍이 철수하자마자 金日成집단은 『6·25』南侵을 감행했던 역사적 사실을 잊을 수 없다.

관계 당국자들은 40년전 그때의 金日成과 오늘의 金日成이 본질적으로 다른바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늘의 金은 더욱 唯我獨尊의이며 神格化되었다는 현실을 되새기면서 對北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또 盧대통령을 民正黨 총재 자격으로 정치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한다. 盧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南北 『정상』 회담을 통한 南北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대통령을 다른 정당 총재들과 같이 民正黨 총재 자격으로 『정치협상』에 초청한 金日成의 저의는 무엇일까. 이는 盧대통령의 자격과 권위를 외면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실존과 정당성을 부인하려는 악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金日成제안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중지 요구와 관련된 北측의 계략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北측은 『팀스피리트』가 공격아닌 방어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對話결렬의 구실로 이용해 왔다. 이미 지난 12월29일 南北국회회담예비접촉에서 이 문제를 제기, 국회회담의 전도에 암영을 던졌던 사실과 이번 제의를 결부시켜 본다면 北측은 南北대화의 진전이나 긴장완화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이해를 달리하는 정당대표들과 在野인사들을 함께 초청함으로써 南韓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해 보려는 저들의 기도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北韓방문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北의 계략에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金壽煥추기경은 本報와의 송년대담에서 『나는 종교인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힌 점을 미루어보아서도 北韓이 南韓의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무엇을 기도하려는지 짐작할만 하다.

北韓은 지난 해 말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회회담 예비접촉 이외에 南北고위급 정치군사회담, 南北韓 및 美國 3자회담, 범민족회의 체육회담 등 각종 형태의 대

화를 제의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제의들의 핵심은 대부분 駐韓美軍의 철수와 軍縮이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선전적인 제스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정책에서 비롯된 新데탕트의 국제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짐짓 이에 어울려 위장표현을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金日成 現人神에 의한 南朝鮮해방혁명전략을 고수하는 二重공작을 구사하고 있는 北韓의 실체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北韓이 아무리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체제적 폐쇄와 맹목적 唯我獨尊의 反人權 反民族의 金日成주체사상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위장이요 전략일 뿐이다. 또한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南韓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신앙과 목표의 포기는 『現人神』金日成의 사멸이요 北韓정권의 와해를 뜻하지 않는다. 그같은 상황의 전개를 기대할 수 없는 현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길은 화해와 교류의 확대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동포요 민족이며 이들의 同質性과 北韓政權의 反人間性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統一을 지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약과 목표를 스스로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둘거나 선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시각에서 對北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北쪽 주민과 동포들의 정치적 변화를 도와주고 경제적 고난을 풀어주는 『베푸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치의 민주화와 정권의 정통성에서 도출되는 道德的인 힘과 균형있는 경제적 성장에 바탕한 物理的인 힘의 축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平和와 統一의 첩경이다.

北도 바깥 變化를 읽어라

- 정부는 더욱 包容力 발휘해야 -

京鄉新聞 社說('89. 1. 5.)

세계적 新데탕트의 물결 속에서 올해 南北對話는 과연 얼마만큼 진전될 것인가, 또 일련의 대화로 남북관계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새해벽두에 던지는 이같은 물음은 결코 남북한 어느 한 쪽 만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일 수 없다.

경제·문화·학술교류와 나아가 통일실천까지 이어져야할 남북관계 개선은 어느 일방의 의욕이나 노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고자 애를 써도 북한이 계속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으로 나온다면 남북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انَ을 보는 우리의 視野확대와 함께 북한의 시각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동향을 보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의 實體를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人的·物的交流의 확대를 추구하고 나아가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까지 내다보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實體를 부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징후는 金日成의 올해 신년사 속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다. 金은 신년사에서 남북한 지도급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盧泰愚대통령을 한국의 통수권자로서가 아니라 民正黨총재자격으로 평양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정부의 정통성과 권능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盧泰愚대통령을 국가원수가 아닌 일개 정당의 총재자격으로 초청한 金日成의 唯我獨尊의 사고는 한마디로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우리측 4개 정당을

한국의 대표적인 정당으로 간주한 것은 그런대로 北의 새로운 변화로 볼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협상』만을 되풀이 고집하고 있는것은 종래의 북한측 입장에서 한 차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김일성의 몸짓이 北韓주민을 의식하면서 서서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안팎으로부터 밀어닥치는 開放化의 압력에 적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라면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動向이 남북관계 개선의 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金의 제의가 다분히 정략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는 않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의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동서독 관계를 돌이켜 볼 때도 브란트 西獨수상의 파격적인 결단은 南과 北의 경직된 자세에 다 같이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놀라울만큼 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연합 형태의 統一방안까지 모색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여러가지 政策전환도 놀라운 변화의 징포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굴절없이 사진을 통해 보고 북의 공식국가칭호를 원산지로한 모시조개와 명태를 수입할 정도로 開放的인 것도 예상밖의 변화의 물결이다. 이같은 우리의 변화를 바로 읽어야 할 상대는 이제 북한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졌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를 북한이 외면하고 계속 폐쇄의 굴레 속에 얽매인다면 남북관계는 모처럼 맞이한 好機를 놓치는 결과밖에 안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일방의 손해가 아니라 民族전체의 손실일 뿐이다. 북한이 고립과 질곡의 악순환으로부터 헤어나려면 먼저 남쪽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人共것발 하나로 남한을 赤化하겠다는 무모한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두 개의 실체를 애써 부정하고 낱아빠진 주체사상으로 주민들을 무한정 기만할 수 있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발상이다. 그런 발상과 시각의 교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냉철히 깨달아 주기 바란다.

金日成의 幻想과 北의 政治的 限界

서울신문 社說('89. 1. 6.)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나라 땅과 상처받은 민족감정을 하나로 잇고 다듬는 일이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또 아무리 같은 민족이지만 통일을 하자는 마당에는 상호 존중의 예의와 양보의 논리가 따라야 한다. 이 민족 최대의 과제이며 가장 예민한 민족적감정의 문제이면서도 그것을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해결해야 하는데에 통일문제의 험난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와 순서를 외면하고서는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올 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南北관계로 보고 큰 기대에 차 있다. 그러나 최근 北韓당국자들이 南北관계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면 기대는 커녕 실망감만 갖게 된다. 北韓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제의한 南北정치협상회의 등 對南관계 발언은 40년 전과 오늘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폐쇄적 사고와 경직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우리측이 진작부터 제의하고 있는 南北 頂上회담은 그런 것이 아니다. 南北의 두 頂上이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통일이 성큼 다가서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다만 南과 北이 40여년간 대립과 反目的 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생각한다면 南北 頂上이 아무런 조건없이 서로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여는 데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수 있으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南北대화 경험에서 보아 온 바와같이 南北간에는 기본적으로 양쪽 당국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대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양쪽 頂上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이러한 미묘하고도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외교·국방문제에 관한한 최고 통치권자의 양해와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

北韓 金日成은 이같은 이치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盧泰愚대통령을 民正黨총재 자격으로 정치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한 저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통일문제의 한 쪽 당사자인 大韓民國의 實體와 정당성을 인정치 않고 그 나라 대통령의 권위와 자격을 악의적으로 묵살하려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물염치한 태도이다.

우리의 7·7선언이나 南北頂上회담의 취지는 명확하다. 南北韓이 모두 지금까지 상호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삼았던 인식에서 탈피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공존·번영하자는 다짐이다. 민족 전체가 함께 잘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대국적 차원에서 협의하며 北韓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한 취지와 약속을 可視化해 나갈 여러 후속 조치들도 마련했다. 심지어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의 끈질긴 주장인 팀스피리트 韓美합동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아시안 게임 단일팀구성 협의에도 흔쾌히 동의했다. 우리 쪽이 실현 가능한 일을 成事되도록 밀고 나가려하는 반면 北韓쪽은 무슨 일이 될 듯 싶으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슬쩍 피하거나 안될 일만 고집한다.

盧대통령과 金日成이 아무런 조건없이 平壤과 서울을 오가며 만난다면 통일은 반쯤 이뤄진 것이나 진배 없다. 그러기 위해 참으로 중요한 일은 金日成이 낡은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일이다.

南의 잣대, 北의 잣대

- 逆매카시즘도 문제다 -

朝鮮日報 社說('89. 1.17.)

자본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의 좋고 나쁨을 재서는 안되고, 南韓의 잣대를 가지고 北韓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北韓을 매카시의 反共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회주의적 기준에서 바로 알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 말속에 담긴 편견의 배경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그 나라의 평가기준의 重視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동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北韓을 빨간 사람들이 만든 地上地獄쯤으로 배워온 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부르좌자유주의의 평가기준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생활방식이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文明社會인 한에는 이 세상에는 北極에서건 南極에서건 공통되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평가 기준이 전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北韓에서의 어떤 나쁜점과 결핍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무조건 『南의 잣대로 北을 재지 말라』는 말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요, 독단이며, 주관주의적 오류일 수가 있다.

例컨대 人權문제를 두고 따져 보자. 人權을 억압하는 것은 南에서 보아도 나쁜 일이요, 北에서 보아도 나쁜 일이다. 그런데 만약 南에서의 인권유린은 비판하면서 北에서의 인권유린은 『南의 잣대로 北을 재지 말라』는 말로 막는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論法이다.

최근에 美國의 진보적인 인권 감시 단체이며 南韓의 인권탄압을 항상 규탄해 온 『아시아워치』가 펴낸 바에 의하면 北韓의 인권억압은 분명히 심하고 과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잣대로 北을 재서는 안된다』

는 말로 묵과해야 한단 말인가.

北을 여행한 바 있는 어떤 女性學 학자도 그런 질문을 南韓의 『진보주의자』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기준으론 北을 보면 안되지요? 北의 여성들이 南의 여성들보다 더 낮게 살지요?』하는- 그런데 그 학자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北의 여성들이 확실히 더 힘겹게 살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질문자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러가지 술한 모순과 불공정과 격차 등, 비판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부조리를 지적하는 것이 다름아닌 批判精神이요 예리한 객관적 知性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批判정신의 객관적 분석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술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적용돼야만 진정으로 정직한 知性이 될 것이다.

매카시즘도 나쁘지만 逆매카시즘도 나쁜 것이다. 南도 民主化돼야 하지만 北도 民主化돼야 한다. 南의 非民主를 매도하는 것은 백 번 좋은 일이지만, 南의 非民主를 지극히 미워하는 나머지, 北의 인권 억압과 非民主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채 『南의 잣대로 北을 재지 말라』는 편법 논리로 진실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정직한 태도일 수가 없다.

經濟人 첫 訪北

- 南北交流의 디딤돌이 되기를 -

한국일보 社說('89. 1.22.)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1일 국토분단 이후 경제인으로서 처음으로 북녘땅을 밟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이 북한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례적으로 발표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鄭회장의 訪北이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북한도 이를 계기로 굳게 닫은 문을 활짝 열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공산국가 중에서도 바닥을 밀돌고 주민생활 역시 매우 어려운 형편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세계가 모두 알고있다. 북한의 경제파탄은 김일성체제의 장기독재,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철저한 폐쇄와 주민통제, 그리고 공산형제 국가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비현실적인 무모한 계획경제의 잇단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이 작년부터 서서히 개방정책을 펴 재미 등 해외동포들과 합작은행설립과 해외수출교역 및 금강산개발을 위한 관광개발사업등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작년말 이래 우리측 기업에 대해 합작과造船발주 등을 타진하고 또 일부물자의 수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7·7선언으로 민족공영의 남북교역 의지를 밝힌 이래 북한상품의 직간접 수입허용 등과 경제인들의 초청·방문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고 특히 작년 10월 7일 對북한 교역개방조치이래 당국에 3천9백만달러 상당의 북한물자의 반입신청이 들어오고 그 중 6개품목 99만 달러의 반입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표적 기업인인 鄭회장의 평양 나들이는 본격적인 상호경제협력과 교류의 시발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측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는 鄭회장의 訪北은 어디까지나 남북이 서로가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 협력한다는 순수한 경제교류의 차원에 입각해야 하며 이를 결코 만의 하나 정치적 목적과 선전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역과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鄭회장에게 북한경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세째 鄭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소련, 중국 등과 같이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펼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한편 鄭회장도 개인적으로는 58년 만에 고향을 찾고 친족·친지들을 만난다는 벅찬 감회를 갖겠지만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사실상 남쪽 경제계의 대표라는 인식아래 북의 경제실상과 합작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관찰, 진단하여 장래 경제교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역과 사업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거창한 계획 추진보다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근대적인 산업기술교육과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공장등의 합작, 그리고 남한의 관광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白頭山 金剛山 妙香山 및 史蹟地등 관광명소의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1百萬의 和戰法

朝鮮日報 社說('89. 1.28.)

南北韓간의 人的-物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병력이 1백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 의 군사력이 지나치게 過大 評價되고 있다든가, 군사력의 質보다 남북한 군사력의 量的 비교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한 論難과 함께 남북한간의 解氷 무드마저 무르익는 듯한 분위기 속에, 미국신문이 CIA 등의 조사분석을 근거로 『북한병력 1백만돌파』를 알린 것은 확실히 충격적이다. 美워싱턴 포스트紙가 전한 『북한병력 1백만 돌파』의 근거는 CIA 와 DIA(군사정보국) 및 다른 有關기관들로 되어있다. 그 眞僞나 정확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 의 병력이나 총체적인 군사력이 可恐할 위협임을 다시한번 想起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40년전 의 6·25 前夜나 지금이나 똑 같은 정치적 信條와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는 동일한 인물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즉 金日成이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방에 대해 웃으면서 뺨을 치고, 어르면서 뒤통수를 치는 명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결코 북한 군사력의 量的 優勢만을 겁내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비둘기 날개속에 匕首를 감추 듯, 협상할 때면 銃劍을 다 잡아쥐고 평화를 소리높여 외칠 때마다 우리를 해코지해 왔다. 6·25 남침준비를 完備한 북한은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민족지도자 曹晩植선생과 남한 당국이 체포구금 중이던 거물간첩 李舟河-金三龍을 교환하자고 제의해 왔었다. 약속 날 약속 장소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2백40여대의 탱크를 일요일인 6·25새벽에 몰고 내려왔다. 1972년 여름에도 그랬다. 그들은 평양에서 우리쪽 대표들과 함께 평화통일 3원칙을 작성하면서 休戰線 땅 밑에서는 수십개의 남침

용 땅굴을 뚫다. 지금 평양에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 鄭周永씨가 그쪽의 실력자들과 공개되지 않은 회담을 벌이고 있다. 그가 돌아오면 아마도 남북교류와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로 연결될 장미빛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 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量的으로 우세하다 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할만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컨대 38선 西部지역 高浪浦 일대의 개활지는우리가 뻔히 아는 군사적 脆弱 지역이다. 首都 서울까지는 50km미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1950년의 6·25와 51년의 1·4후퇴 그리고 51년 4월의 이른바 春季공세 때 어이없게 밀려 세번씩이나 수도를 빼앗긴 쓴 경험이 있다. 뻔히 알고도 뚫리는 것은 그들의 압도적인 병력배치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평양~元山 이남에 1백46개 사단과 여단중 3분의 2를 휴전선에 접근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은 병력-장비 등의 재배치 없이 즉각 공격태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선정한 어떤 지점에서든 능히 돌파할 수가 있다.

그 병력이 워낙 압도적일 때는 방어하는 측의 質-기술수준은 문제가 안된다. 1957년 3월 월맹 공산군이 총공격을 할 때도 그랬다. 兵員의 質, 장비수준에 있어 越等했던 월남군은 공산군의 압도적인 勢에 밀려, 전투에 이기면서도 전쟁에 져 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가 지난 40여년간 전혀 변치않는 인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南과 北의 合作

— 民族力量 과시해야 —

朝鮮日報 社說('89.2. 3.)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풀어보인 가장 큰 선물꾸러미는 『合意』였다. 南과 北이 이루어 낸 몇 안되는 合意 가운데서도 유독 우리가 이번 合意를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마도 사상 최초로 한 가지 사업을 南과 北이 함께 해보자는 실질적 合意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단순한 합의가 南北間에 겹겹이 쌓인 본질적 장벽의 높이에 비해 얼마나 왜소하고 미미한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미미한 합의조차 앞으로 어떤 난관과 장애에 직면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鄭周永씨의 訪北에서 합의한 金剛山共同開發이 장구한 세월의 分斷構造와 硬直된 대결구조를 뛰어넘은 실질적-구체적 진전의 한 徵表로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이 소중한 徵表가 民族의 여망과 기대대로 순조롭고 성공적인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그 결실을 위해서는 南과 北이 모두 이 어렵게 이루어낸 작은 合意를 소중하게 가꾸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만은 기어코 열매를 이루어내야 한다. 理念과 體制가 民族共同體의 명분앞에서는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세계에 立證해내야 한다. 그래서 社會主義경제와 市場經濟가 훌륭하게 合作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民族力量의 과시이자, 民族自尊의 발현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小乘의 利害打算이나 政治的 計略은 엄중히 배제되어야 한다.

南과 北은 모두가 政治-軍事 기타 여러 부문에서 해결해야될 더 많은, 더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제들이 모처럼 이룩한 共同事業의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 모두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성숙되며 보다 일관성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금강산 공동개발 참여가 資本家的 投資市場 이상의 중요한 숨췌을 갖기 때문에 개별 그룹차원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어서는 안되며, 남쪽경제의 총체적 잠재력으로 국토개발에 참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와 성의만 갖춘다면 共同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기술적 난관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北쪽으로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 역사적 합작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가장 실현가능하고 南北경제의 共同利益이 될수 있는 이들 合作사업이 궁극적으로는 民族經濟의 統一性을 지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보다 진지하게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이들 사업을 완수해가야 할 것이다. 남쪽의 合作사업 참여노력이 金城湯池의 시장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쪽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실질적이고 互惠的인 다양한 합작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조건, 군사적 모험주의, 경직적인 根本主義的 사고가 이 공동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南北 모두 이 소중한 合作合意가 성공적으로 결실맺어 나라 안팎에 民族的 自矜을 펼칠 수 있도록, 예견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金剛山개발, 너무 흥분말아야

國民日報 社說('89. 2. 3.)

南과 北이 금강산을 공동개발하고 시베리아 진출과 元山조선수리소 철도차량 공장 건설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휴전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길도 연내에 트일 것이라는 소식이다.

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열흘간 고향방문차 북한에 다녀와서 내놓은 교섭 성과다. 몇 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분단 44년간 어느 정권도 못했던 일을 적어도 의견상 한 원로경제인이 해낸 것이다. 鄭회장의 표현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남북간의 실질교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달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鄭회장의 이번 북한방문은 경제분야 및 경제인들 앞세운 남북간 본격 교류의 시작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북방정책상 필요성과 북한의 개방 및 경제개발의 불가피성이 상호부합된 결과라고 할 이번 합의는 남북한이 관계진전을 경제분야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새로운 시도로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지금까지 터부시해 온 그들의 경제개발에 우리의 자금과 기술제공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큰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렇게 변해가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최근 우리의 어선을 납치할 만큼 도발적인 면도 없지않아 남북관계는 냉난 기류가 불연속선을 이루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남북관계의 앞날이 낙관만을 허용치 않는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를 앞으로의 對北접근과 경제교류의 好機로 만들기 위해 경제계와 남북한의 정부당국에 몇 가지 주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먼저 남북 양 당국은 실질협력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교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갑작스런 접촉으로 일의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불신만 남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한산의 명태 맥주 미술품이 들어오고 직항로가 열렸는가 하면 남북교역 특례법제정 검토 등 급변하는 상황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케 하는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對北韓정책을 펴 나가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鄭회장을 포함한 경제계는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성급한 과잉기대나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 우선 對北거래는 지난 1년간 마구잡이로 진출했던 北方교류와 다르고 투자위험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위험의 분산과 특정기업의 자가홍보 억제란 측면에서 기업들의 공동투자를 권하고 싶다. 지금 北韓에는 체제상 민간기업이 없고 당원과 관리만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문제는 남북 정부간의 경제협력원칙에 관한 어떤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그 시발점을 찾은 경제교류를 전반적 남북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가 남북 분단 극복이란 민족적 과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쌍방의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협력체제가 선행조건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해 둔다.

가까워진 金剛山

- 창구 單純化로 南北韓에 얽힌 壁을 넘어야 -

東亞日報 社說('89. 2. 3.)

지척이면서 멀기만 하던 금강산이 성큼 우리 옆으로 다가왔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열기가 그냥 계속된다면 조만간 1만2천봉 가운데 하나에 올라보는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방문 성과는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이처럼 可視圈에 들어왔다. 금강산 개발뿐이 아니라 북한의 舍營法에 의거. 합작투자 형태로 『시베리아』에 진출한다거나 수리조선소, 철도 차량 공장에서 南北이 함께 일할 기회도 멀지 않은 느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40여년에 걸친 한반도의 南北분단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데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대화이든 그것은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된다. 가족 친구 민간 사이에서는 물론 국가간 관계에서도 대화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특히 같은 핏줄의 南北韓이 철옹성같은 휴전선을 사이로 침묵을 계속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비극이었다.

그 비극을 깰 묘안을 양쪽이 단기간에 마련한다는 것은 『難中之難』이다. 살을 에는 北風 한자락도 끝내 보일 듯 말 듯한 훈풍 한 모서리에 녹아나고 말 듯 대화야말로 얼어붙은 南北관계 완화의 제일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鄭회장이 물고 온 남북완화 바람의 전후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물꼬가 터지긴 했으되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는 소지와 또는 물꼬가 넘쳐나다 못해 논두렁 자체를 망그러뜨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北韓의 체제현실을 보자. 생산수단의 私的소유와 시장기능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들은 40여년을 줄곧 自力更生과 중앙집권식 운영에 몰두해 왔다. 그런

체제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바 협조체제로 바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단 민간기업들이 선두에 서지만 이들을 상대하는 파트너가 북한에서는 黨과 관료들 뿐이다. 이들과 어떤 신뢰의 선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갈 지 미지수다.

또 북한은 남한 정부의 實體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그 단면은 이번 鄭 회장을 지칭하는 호칭을 보아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이들이 경제적 필요를 넘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번 금강산 개발 등의 대화에 나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다. 가령 對南 赤化 전략의 하나로 남한 정부와의 대화는 기피하면서 기업인 학생 재야세력 근로자들과의 접근을 가장, 남한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언젠 『팀스피리트』 등과 관련, 대화 도중 일방적으로 막을 내리자고 할지 예측불허인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기술이전, 투자유치 전략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기업인간의 경쟁을 유발, 뜻밖의 경제사회적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短視眼的 수지계산을 넘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대화의 적극화에 동감한다. 얼마나 기다려 왔던 순간인가. 다만 진정한 南北 유대관계의 강화를 위해 첫 출발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 양측의 신뢰감을 손상치 않는다고 본다.

아울러 현존하는 복잡다기한 국내사정을 감안, 北韓 창구도 단순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南北의 基本構圖는 變하고 있는가

서울신문 社說('89. 2. 4.)

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이 9박10일간의 訪北에서 北韓측과 金剛山공동개발, 元山水리조선 및 철도차량합작, 휴전선 넘어 관광통행허용, 시베리아개발 공동참여 등에 관해 합의의정서를 교환하고 돌아온 사실은 분단 44년만에 南北교류의 장벽을 허물어 뜨리는 듯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鄭회장의 平壤방문이 그동안 정치권이 해내지 못한 南北관계 개선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 새로운 南北경제교류의 章을 예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南北이 경제적 합작단계로 건너뛰어 실질적인 和解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하루속히 南北교류의 길이 뚫려 공동의 번영과 통일에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金剛山공동개발이 곧 착수되고 휴전선 넘어 금강산 관광길에 나설 수 있는 날이 눈앞에 다가온 듯이 가슴설레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과 국민의 기대에 앞서 우리는 모처럼 얻어낸 南北간 합의가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좌절과 위험, 그리고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냉정하게 우리의 力量과 노력을 총집결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金剛山개발로 상징되는 南北간 교류·합작에는 아직도 극복되어야 할 장애와 숱한 고비가 있으며 문제가 山積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실현 여부조차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南北관계史에서 우리가 터득한 역사의 교훈은 幻想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南北관계를 열어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南北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다르며, 對決구조속의 北쪽의 對南적화전략에 아직도 근본

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北韓은 기본적으로 정치군사 優先의 체제이며 경제는 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비록 自力更生을 원칙으로 한 폐쇄경제의 한계로 약간의 제도 수정이 있고 대외개방에 재조정의 기미가 보이는 등 고무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先정치 군사 後경제라는 기본적인 대남전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이번 北쪽의 合作카드는 외채 식량 위기 등 그들의 악화된 경제사정을 벗어나려는 일시적 방편일 수도 있고 나아가 對南경제접근을 통해 그들의 정치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政經분리를 가장하는 듯 하면서 우리 정부와는 상대하지 않고, 학생 재야 정치지도자 초청과 기업인들과의 경제교류 합작을 내세워 南韓내의 국론분열 및 정치사회 혼란을 부추김으로써 美軍철수 등을 겨냥한 통일전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념해야 할 것은 南北간 기본적인 관계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北韓체제를 상대로 민간레벨의 경제교류나 합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위험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쌍방에 더 큰 불신과 상처만 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정부차원의 일관성있는 對北 접근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人的 物的교류와 투자에 대한 南北 정부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제력의 확고한 우위를 최대한 활용, 남북간 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이란 원대한 미래를 내다보며 남북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슬기로운 민족교류를 이룩해내기 바란다.

금강산 개발과 정주영씨

한겨레신문 사설('89. 2. 4.)

그리운 금강산에 가게 된다.

남한의 최북단이라는 강원도 대진의 '통일전망대'에서 북녘을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그리움이 사무친다. 운 좋게도 구름이 걷혀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면 외금강의 옥녀봉이 그 신비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 겨레의 명산이 동해로 내린 꼬리인 해금강이 흉측한 철조망과 지뢰밭 저편에서 남쪽의 물이나 다름없이 질푸른 파도 위에 한가롭게 떠 있다. 달려서 두 시간이면 갈 저곳을 우리는 왜 40년이 넘도록 못가고 이렇게 애를 태우는가? 통일전망대에 오른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런 탄식을 할 것이다.

코 앞에 있으면서도 지구의 반대편인 칠레보다도 더 멀던 금강산이 우리의 가슴을 향해 성큼 다가왔다.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씨가 이 큼직하고 푸짐한 선물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사람들은 정부당국의 심사증을 받은 뒤에 북한쪽의 심사를 거쳐 동부지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금강산 관광을 하기로 북한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의 조국통일위원회 허담 위원장의 공식 초청을 받은 장본인이 발표한 것이므로 금강산 구경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돈벌이인가 교류촉진인가

정주영씨는 북한과 공동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기로 한 것 말고도 중대한 합의를 여러가지 얻어냈다. 남과 북이 시베리아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북한의 합영법에 따라 원산의 조선소 및 철도차량공장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생산한 제품을 소련에 수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4월 20일께 20여명의 조사·기술단과 함께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갈 예정이라고 한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높고도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던 분단의 장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갈라진 국토의 이쪽 저쪽을 이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되다니,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다. 정씨의 기자회견을 보고 북의 고향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 북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백두산과 금강산과 개마고원을 사진으로 보며 그리움을 안으로만 삭이던 사람들은 북녘에 갈 수 있다는 기대에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있을까?

정주영씨가 거둔 성과는 그래서 7천만 겨레의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감동의 박수를 치기 전에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 정씨는 왜 남과 북을 화해시키고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그는 이제부터 통일운동가로 변신할 작정인가? 아니면 몇 십대 후손까지 쓰고도 남을 그 거대한 재산에 북녘 동포들의 돈을 보태어 ‘남북 통일재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가?

현대테러는 어떻게 되나

정주영씨가 평양을 향해 떠나던 바로 그날 현대그룹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하다가 해고당하고 옥살이까지 한 권용목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회장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무 말도 없이 북으로 가십니까?』라고 항변했다. 정씨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5월6일 현대건설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던 준비위원장 서정의씨가 그 회사 간부들의 청부를 받은 자들에게 납치당했던 사건을, 그리고 울산의 현대 계열 기업체들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또한 그가 평양으로 떠나기 보름 전에 울산에서 현대그룹 연쇄 테러가 일어나 현대엔진의 전무와 경찰서의 정보과장이 구속되었고, 기관원이라는 의심을 사는 노조파괴 ‘전문가’가 치밀한 모의를 거쳐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테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대그룹의 경영진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심증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씨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만약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현대그룹의 실질적 책임자인 그가 국민에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금강산 구경과 고향 방문만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통일은 최고의 인간화 운동

우리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72년에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가 헌법을 휴지처럼 여기고 북한에 잠입해서 '7·4공동성명'을 성사시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신쿠데타로 온 겨레의 부푼 가슴에 얼음물을 끼얹은 그 범죄를.

통일은 둘로 갈라짐으로써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겨레를 온전한 공동체 속에 결합시키는 최고의 인간화 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정주영씨는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들에서 해고와 테러를 당한 노동자들이 병상에서 거리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금강산에 다리를 놓고 원산에서 배를 만드는 일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정씨는 다음에 평양으로 가기 전까지 현대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테러를 말끔히 해결하기 바란다. 그래야 그는 민족통일운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남과 북이 저작권 협정을 맺어야

- 한 출판인의 '임꺼정'양도 제안을 보고 -

한겨레신문 사설('89. 2. 4.)

지난해 여름에 학생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남북회담운동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뜨거워졌다. 최근에는 여러 부문에서 북을 향한 제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남북의 교류는 반드시 정부당국의 창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요즈음에는 정부의 부처들이 대북 교류와 제의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온갖 움직임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거래의 재결합을 이루기 위한 시도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런 시점에서 도서출판 사계절의 대표 김영종씨가 월북작가 홍명희의 <임꺼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해달라고 제안한 것(<한겨레신문> 1일자)은 의미심장하다. 그동안 남북·월북문인·예술가들의 가족과 그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출판업자들 사이에는 판권을 둘러싸고 심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다. 남북·월북작가 중에는 남한에 가족을 두고 북녘에서 새로이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도 많다. 도대체 유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 그들이 혹시 북한의 작가단체나 타인에게 저작권을 양보해 버린 것은 아닐까? 저작권 사용료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북한의 유족들이 남한의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출판인들의 고민이었다. 오죽하면 영세한 출판사가 대북 제의를 하고 나섰겠는가?

이런 문제는 지난해 9월2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최한 '월북 문인의 저작권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지적되었다. 실종선고나 부재선고 등 현재의 법 제도만으로는 실타래 같이 얽힌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상호간의 저작권 상황, 저작권 사용의 승낙과 사용료의 지급방법 등을 논

의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저작권 정보센터 설립이 제의되었다.

저작권은 한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는 송유관과 마찬가지로이다. 남북한 간에 저작권에 관한 협정을 맺고 저작권 교류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남북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부당국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離散의 만남』도 急하다

— 鄭周永씨의 家族재회 소식을 듣고 —

한국일보 社說('89. 2. 4.)

피는 역시 진하다. 민족의 분단이 비록 핏줄은 갈라 놓았어도 핏줄을 끊을 수는 없었다. 며칠 전 북녘 땅 강원도 어는 산골 마을에선 이산가족인 鄭周永씨 일가의 재회가 현실로 이뤄졌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 장면을 상상만하여도 금방 눈물이 흘날릴것만 같다. 그리운 가족과 정다운 산하를 두고 온 월남동포들은 또 한번 斷腸의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을 것이다. 생전에 그 땅을 다시 밟아 볼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이 몇번이고 엇갈렸음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금강산 1만2천봉이 와락 눈에 다가선다. 휴전선을 넘어 가볼 날이 있을 것 같다니 가슴이 먼저 설렌다. 금강산도 좋고 원산의 명사십리도 좋다. 갈수만 있다면 백두산인들 그 누가 멀다하랴.

명승도 절경도 좋지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은 실개천이 흐르는 나의 고향 바로 그 땅이다. 거기서 우리는 핏줄을 만나야 한다. 주름이 깊이 잡히고 허리가 굽었을 그 혈연들을 얼싸 안고 살과 살을 비비고 싶은 것이다.

땅은 열자면서 사람의 열림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민족의 동질성부터 확인하자는 소리가 남북에서 들리건만, 정작 이산가족의 생사여부를 알고 알리는 일이나 재회하자는 목적은 오히려 잦아 드는 듯 안타깝기만 하다.

금강산 개발계획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교류의 실마리로 그 평가는 얼마든지 높이 할 수 있다. 까다로운 정치 문제를 일단 미뤄놓고 관광자원의 개방에서 남북한의 만남은 의미심장 하다고 하겠다. 쌍방의 실리를 바탕으로한 만남이 남북의 문호를 넓히는 구실을 하리라 믿어지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잖게 시급한 과제는 남북간의 신뢰회복이라 할 것이다. 동질성의 확인과 신뢰회복의 기반이 곧 이산가족의 만남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의 고통을 다루는 남북접십자간의 접촉은 좀체 재개될 기미마저 안보인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산의 재회』는 정치문제와 달리 까다롭지도 않고 경제적 실리처럼 무거운 부담이 없이 실현 가능한 일이다. 이산보다 더 아픈 민족의 고통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땅은 보고 상품은 살수 있으면서 오직 『사람』만은 보고 만날수 없고서야 어찌 통일의 열정과 노력이 이 땅에 있다고 자위할 수 있겠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금강산 바람에 지나치게 들뜨거나 흥분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이야말로 인내가 요구되고 자중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 남이여, 북이여, 먼저 가족을 부르고 대답하자. 이산의 통곡이 터지고 한껏 울음이 물결친 후에야 남북이 합치는 길이 열린다. 그날이 오면, 남북의 산하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출것이다. 북한은 이산가족부터 만나게 하라.

北風은 아직 차다

- 남북문제에 걸려있는 『덧』들 -

京鄉新聞 社說('89. 2. 8.)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붓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남북관계다.

鄭周永씨의 북한방문에서 합의된 금강산 개발계획은 그 상징적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견되는 활발한 민간교역차원의 물자교류를 계기로 南北間에 和解의 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는 국민도 많으리라 짐작된다. 물자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게되면 결국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시간문제다.

8일의 남북간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접촉과 10일의 남북국회회담 8차준비접촉을 계기로 남북회담은 또 한차례의 중요한 고비를 맞는다. 뿐만아니라 우리측은 기존의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경제회담의 재개와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어 북한측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가 同時多發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될 수도 있다. 비록 외형적으로나마 다양한 채널의 공식·비공식 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좀더 냉정하게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의 뜨거운 북한바람에 비해 北은 지나치게 냉랭하다는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북한측이 남북대화의 진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내부에서 일고 있는 활발한 통일논의나 공산권 자료의 개방, 적극적인 북방정책등에 대해 이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특히 金剛山공동개발합의를 전후해서 돌연 對南비방 선전공세를 강화한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훈련』으로 왜곡 비방하고 한국군함 4척이 북한수역을 침범했다는 등 악의적인 대남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것이 그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남북어선 송환요구를 反共캠페인 운운으로 왜곡하고 무연탄의 직수송과 합작모피회사 설립사실 등을 완강히 부인한 채 남쪽의 허위모략보도 운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동향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아직도 북한은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습觘의 필요성 때문에 마지못해 民間교역이나 合作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공식 거래보다는 개별 거래에 더 열을 올리는 그 底意는 무엇일까. 이는 분명 우리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환상적 통일

무드를 고조시켜 주한미군 철수등의 불순한 목표를 관철시켜 보자는 전술·전략이 아닌가 본다.

우리는 그런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에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理性과 節制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무분별한 경쟁도 문제려니와 너무나도 북한바람에 들뜨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각계각층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을 무시한채 소박한 낭만이나 환상만을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혼란없는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빈틈없는 지원과 창구일원화가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금강산 개발은 물론 어떤 남북교역이나 합작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중구난방식 접근보다는 사업추진에 따른 남북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나 협정이 先決과제라 하겠다.

국내기업의 참여방법과 투자배분 문제등 대내적으로 合意를 거쳐야 할 사항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원화한 접촉과 교류를 조화있게 유도하고 국가적합의를 바탕으로한 實質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인 모두의 현명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北韓은 變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社說('89. 2.10.)

南北韓의 대화와 교류는 크게 政治·軍事的 측면과 經濟·社會的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양쪽의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전자에 속한다면 福祉·분배·문화·체육·離散가족의 재회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런데 北韓은 전자에 관한한 요지부동,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구태여 지적하자면 對南교류를 통해 얻는 경제·사회적 實果를 토대로 정치·군사적 이익에 까지 확대 원용해 보자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南北韓 합영사업이니 금강산합작개발이니 하여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만 어차피 그 한계는 드러난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가 대화와 교류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도 北韓은 최소한의 신뢰감마저 보이지 않는다. 엇그제 南北고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틀어진 것도 10일로 예정된 국회회담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도 이 쪽을 시험해 보면서 책임만을 떠넘기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네들의 전략·전술만을 상대방에 강요하고 여의치 않다고 박차고 일어서면 애당초 그들은 타협을 통해 회담을 성사시킬 기본태도가 돼 있지 않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

南北韓관계의 본질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데 우리쪽은 어떠한가. 금강산이 조만간 열린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당장 고향에 갈 수도 있겠다는 환상에 들떠 있다. 우리의 통일문제와 南北관계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헤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저들이 대화조건으로 전면 중지를 요구한 팀스피리트는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休戰線에 세계 最強의 火力이 집결해 있는 마당에 우리가 그나마 방어적 개념의 韓美합동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 따져 볼 일이다. 팀스피리트 중지를 이 쪽에 대놓고 강변하던 그 시간에 모스트바 放送은

『蘇朝해군』이 東海에서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蘇聯정찰기가 北韓상공을 거쳐 西海 우리 상공에서 떼지어 정찰비행을 한 것이 바로 엇그제 였다. 1백만이 넘는 저들 병력 대부분을 休戰線 바깥 전진배치시켜 놓은 사실에는 눈가리고 팀스피리트 주장만 내세우는 건은 년센스다.

유수한 경제인 한 분이 平壤을 다녀왔다해서 하루 아침에 휴전선이 뚫리고 금강산 觀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핏줄 동포지만 分斷 41년을 뛰어 넘을 만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로 가고오고 오고가는 가운데 예절을 갖추고 잃었던 신뢰를 되찾아야 가능하다. 그러기에는 아직 현실의 장벽은 높고 北韓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염치도 없고 사리에도 안 맞는 주장을 내세워 2시간15분만에 자리를 박찬 쪽은 역시 北韓이다. 팀스피리트를 아무리 트집 잡는다고 해서 反美감정이 확산되고 駐韓美軍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北韓측의 최근 일련의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그들은 對南공작적 차원에서 南北관계를 보고 있는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對應해야 한다. 이번의 北韓측 태도를 우리가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켜보고자 했을 따름이다. 이제 곰곰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치 따로 경제 따로 해서 대화가 잘 발전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긴 안목에서 착실한 발전을 가져오도록 현명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北韓 百萬軍 무슨 뜻인가

한국일보 社說('89. 2.11.)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줄은 몰랐다』고 역겹게 여겨지는 것이 그동안의 북한측 동태였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72년 7·4공동성명 이후 한동안 남북 대화가 진행되던 때 북한측은 땅굴을 팠다. 그보다 훨씬 앞서 북에 있던 조만식선생과 남측에서 간첩으로 체포한 이주하 김삼룡과 교환하자는 협의를 남북간에 진행하던 끝에 북한은 느닷없이 6·25기습 남침을 저질렀다. 이런 배신적 행적이 남북간의 불신을 낳았다.

한동안 북측의 병력이 87만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최근 외지가 1백만으로 추산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보도한 데 뒤이어 9일 국방부가 이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現代戰이 『머릿수』로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상식과는 별도로 그동안 북한측이 그토록 병력수를 늘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힘으로 말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모르게 진전시켰다는 데서 우리가 對北관계에서 적지않이 허술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새삼 반추하게 된다.

남북한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의 회오리를 되풀이 해야 하는지 분노 갖는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비공식 형태로나마 우리측에 도입되고 금강산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논의가 표면화되어 우리는 밝은 전망도 하고 있는게 사실이었다.

본질적 국면에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무가지 한 두 가닥 붙잡고 우리가 너무 들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우리가 對北관계에서 얼마나 여러번 환상에 젖었으며 그때마다 북측의 느닷없는 변덕으로 남북 교류가 몇 번이나 실망의 수렁을 겪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동안 해빙의 걸물결 밑에서 진행된 북측의 병력 증강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도리어 북측의 은밀한 군사력 강화에 분노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위태세가 조

금이라도 해이되었는지를 되돌아 보는 자체 점검을 이 기회에 해야 할 것이다.

軍운영과 작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統合지휘체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북측의 戰力강화가 확인된만큼 우리의 상응하는 전략 대응도 불가피 하게 된 것이다.

한때 경비 절감등의 이유로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불필요한 조치로 행정 코스트를 지출했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의 자위 태세를 병력수로 대응하기보다는 병사 개개인 및 단위부대의 화력증강 및 기동성 提高로 북측의 머릿수 개념을 깨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측에게 알려 줘야 한다. 그들이 어떤 오산에서 제아무리 병력을 늘려 백만 군대를 보유하더라도 기술적이고 효율높은 투자로 전기에 뛰어난 정병들이 우월하다는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統合軍개념을 보다 유효하게 구체화 하면서 편제, 火力的 고도화로 자위태세를 다져야 할 것이다.

對北 試行錯誤는 안된다

— 北韓의 政經分離정책 警戒해야 —

中央日報 社說('89. 2.11.)

對北 관계의 전술적 측면이 며칠 사이를 두고 심한 기복을 드러내고 있다.

鄭周永 現代그룹명예회장의 訪北으로 年內에 金剛山 구경길이 트이는 듯 들뜬 분위기가 일더니 趙淳부총리의 10일기자 간담회 발언이 그런 분위기를 反轉시키고 있다.

趙부총리는 『南北간의 경제교류가 政治나 군사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에 깊은 회의를 표명함으로써 鄭명예회장과 北韓사이에 『合意』된 金剛山 개발과 같은 政經分離型 南北교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政府의 이같은 갑작스러운 입장변화가 南北韓 관계의 극적 진전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 北韓에 대해 混線을 드러내 보이는 信號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政府의 보다 신중하고 통일된 對北정책이 천명돼야 한다고 믿는다.

善意로 해석하면 政府의 입장 변화는 예측 不許한 北韓 당국자들과의 교류 협상이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어 있는 辨證法的 전술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北方외교의 첫 결실이라고 할 헝가리와의 관계에서 처음 저쪽 요구대로 政經分離원칙을 받아들이다가 결국 國交관계로 진전시킨 성과를 北韓에도 적용해 보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단 金剛山 개발을 政府가 형식상 뒤로 물러앉은 상태에서 민간 경제인에 의해 추진되도록 허용해 보고 北韓의 반응을 본 후에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외교상 당연한 전술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政府의 입장은 北韓이 金剛山 개발 합의를 전후해서 보인

對政府 고립화 움직임과 南韓에 대한 체제분열 획책등을 볼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政府입장의 급변은 政府안의 정책추진과정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鄭명예회장의 訪北이후 그 자신의 여러 갈래 발언은 물론이고 정부내 각 해당 부처의 반응을 보면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특정기구의 독주로 성급히 추진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趙부총리의 10일 발언은 政府 자체의 중대한 政策결정과정의 잘못을 다시 시정한 것으로 비친다.

뒤늦게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對北韓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南北교류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 그와 같은 인상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試行錯誤는 南北관계의 앞날을 위해 결코 이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점은 그런 試行錯誤나 허점이 우리 정부의 통합된 능력과 우리사회의 튼튼한 저력에 대해 北韓이 誤判을 해서 韓國을 만만한 교섭상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다.

그런 誤判을 政府가 허용하면 南北관계의 앞날은 南과 北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점을 정책 담당자는 때가 늦기 전에 省察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統一外交의 장애는 무엇인가

世界日報 社說('89. 2.17.)

統一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國會本회의 對政府질의에서는 政府의 北方정책과 南北韓 문제에 관한 攻防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관계개선을 위한 政府의 노력만큼 과연 北韓 中國 蘇聯의 태도에도 변화는 오고 있는가. 北韓과의 한 차례 접촉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곧 金剛山 구경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 것은 아닌가. 또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對共產圈 접촉에 관한 보도 때문에 국가의 理念的 기조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공산권과 차단돼 있었고, 그들과의 접촉에 관한 보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또한 사태가 그와같이 발전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우선 南北韓관계만 보더라도 쌍방 당국자들간의 접촉은 일체 중단된 채 비공식적인 人的-物資 교류만이 극히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北측은 韓國과 政治-軍事的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식회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그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국회회담 실무접촉, 그리고 15일에는 赤十字회담까지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당국자들간의 공식적 접촉을 제쳐놓고 金剛山공동개발이나 民間차원의 교역이 과연 가능할까. 그들은 中國이나 蘇聯이 韓國에 대해 적용하려하고 있는 이른바 政經分離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民間차원의 합작이나 교역도 거기에는 政府의 승인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南北韓의 접촉교류는 政治-軍事문제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의 테두리에서만 비로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姜英勳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南北경제교류는 政治的 테두리에서 추진돼야한다고 답변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南北교류는 이들 南北韓 당사자만의 문제로 보아서도 안 된다. 中國은 韓國전쟁에 참전했었고 蘇聯은 北韓과 오랜 同盟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美軍은 아직도 韓國에 주둔해 있으며 日本은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韓半島문제에 관심이 깊다. 뿐만 아니라 東아시아에는 冷戰시대에 구축된 美-蘇의 軍事的인 대립구조가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존속해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나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西太平洋에서 美海軍力이 물러간 후 蘇聯의 막강한 極東함대가 東아시아 해역에서 위세를 부리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는 없다. 姜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北韓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成員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韓半島 유관국가들로 하여금 南北韓교차승인에 동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統一외교나 北方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문제의 논의는 이를 개방하되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이를 超黨的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統一정책에 분열의 기미가 보이면 상대방은 곧 이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 좋은 例로 北韓은 당국과의 실질대화는 거부하면서도 在野의 반정부세력인 全民聯에 15일 서한을 보내 오는 3월1일 板門店에서 汎民族대회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들이 이 제의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는 뻔하지 않은가.

보안법 · 남북교류 특별법 공청회를

- 국회는 국민 여론 따라 처리해야 -

한겨레신문 사설('89. 2.17.)

무릇 법률이란 사회의 현실과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률은 무력화되거나 국민의 저항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악만 된 국가보안법은 그 부작용과 역기능 때문에 악법의 상징적 존재로 낙인 찍혔다. 더구나 최근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이 국가보안법을 생존이 불가능한 거대한 공룡으로 만들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은 태어날 때부터 갈라진 민족 상호간의 증오와 대립과 분열을 숙명으로 안고 있는 법률이다. 특히 이 법률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대화와 협상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은 국가보안법의 기본성격과 존재의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동서간의 냉전은 평화의 구조로 바뀌었고 남북한 사이에도 화해와 교류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찌들어 있던 국내의 모든 사회세력들이 진보적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그 속마음이야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도 정권의 운명을 걸고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을 향해 여러 부문의 교류에 관한 제의를 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제의와 방안은 어제까지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 관계로 나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들로 가득차 있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남북 교류 ·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도 바로 이런 국내외의 정세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요즈음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무마하려

는 것으로 국내외의 현실을 외면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두 법안은 상호 모순되고 전체 법체계와도 어긋나므로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국가이름도 아니고 국제법상의 호칭도 아닌 애매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국가로, 그 지역을 합법적인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보안법의 골격인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 상반된 이 두 법률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가? 남북교역에 종사하는 국민이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은 정부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세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사회단체들도 국가보안법의 부분적 개정과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의 일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의 방안에 대하여 전국에 중계방송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열기를 제의한다.

왕조시대의 법률은 왕의 일방적인 명령에 불과했지만 민주사회의 법률은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할 권리가 있다.

은 국민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텔레비전이다. 지금보다 방송사정이 훨씬 좋지 않았던 1958년에 이승만 독재정권조차 보안법 개정안에 관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국에 라디오 중계방송을 한적이 있었다. 과거에 야당의원들을 감금하고 날치기 통과시켰거나 구테타 입법기관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공개적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對北韓觀의 正照準

中央日報 社說('89. 3.24.)

우리는 北韓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北韓이 中蘇의 손에서 노는 傀儡로 아는 것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른바 주체사상이 개인숭배의 유일체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수단이 아니라 보편성있는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北韓체제와 그 질서의 그릇됨을 그대로 보아야하고, 歪曲되게 알고 있던 부분은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세계는 理念의 벽을 헐어 새 질서를 모색하고, 6共和國들이 統一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고조되고 있어 對北韓 視角의 正照準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바로 이런 때에 北韓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2개의 계기가 마련됐다. KBS-TV가 매주 화요일 방영하고 있는 『南北의 창』프로와 체코에서 망명해 온 두 北韓유학생의 기자회견이다.

『南北의 창』은 北韓당국이 제작한 動寫眞과 제3국 방송사가 제작한 자료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北韓제작물의 경우 선동적인 北韓 아나운서의 멘트가 포함돼 있어 平壤放送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마저 준다.

지난 화요일 방영된 오스트리아 TV제작물은 南韓과 북한의 실정을 성격별로 대비시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의 창』프로를 통해 본 北韓은 金日成 부자를 중심으로 한 唯一體制가 엄격히 사회를 통제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미국놈 때리기』경기에선 4~5세 어린이들이 모의권총을 들고 뛰어가 美國人 얼굴모양의 표적을 때리고 돌아오는 릴레이 경기였다. 각급 학생들은 웅변대회·수련대회·실내학습을 통해 金日成·金正日부자를 우상화하는 구호를 외쳐댄다.

南北을 비교하는 오스트리아 TV 프로는 南韓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北韓의 획일적 질서를 묘사하고 있다.

北韓 망명 학생들은 東歐에서 다른 공산국가들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고, 잡지와 TV를 통해 南韓의 모습을 확인한 후 北韓체제와 金日成 주체사상, 그리고 金父子 우상화에 회의를 느껴 南韓으로의 망명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들은 共産陣營에서도 궁핍한 생활 속에서 자유마저 통제당하는 곳은 北韓 뿐임을 알고 『北韓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실토했다.

같은 공산국가인 체코에서 西方世界의 잡지·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반해 北韓에서는 유년기부터 소년단·청년 근위대·사로청·교도대·각종연맹 등 조직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노력동원에 징발되거나 金日成 우상화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의 창』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프로라면 유학생 기자 회견은 현장감을 갖춘 경험담이다. 이 두가지 北韓 소개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北韓이 다른 共産主義국가에서 조차 異端으로 보는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특이한 反美·革命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소개된 北韓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體制安保를 위해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점이 강조되고 지나쳐, 또 다른 방향으로의 歪曲은 경계해야 한다.

사실의 올바른 인식 없이는 건전한 南北관계의 발전이나 통일에의 접근은 어려운 일이다.

統一을 外面한 건 어느쪽인가

世界日報 社說('89. 4. 1.)

文益煥씨와 黃皙暎씨는 統一을 실천하려는 일념에서 北韓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文씨는 平壤도착성명에서 온 겨레의 불타는 統一염원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했고, 黃씨는 北韓으로 떠나면서 日人친구에게 맡긴 성명에서 南北韓간에 깊이 팬 불신의 深淵에 하나의 징검다리라도 놓고 싶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의 達辯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통일에의 염원이 그들 못지않게 간절할 것이다. 그들의 이번 행동에서 특히 批判의 초점이 되는 것은 國法을 어겼다는 사실 말고도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중운동과 문필활동을 통해 反政府성향을 보여온 文-黃 양씨는 오늘날 統一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의 존재와 獨裁정치 of 장기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黃씨는 帝國主義와 植民主義는 베트남에서는 예언적으로, 韓半島에서는 현실적으로 종지부를 찍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계속 이어져 온 獨裁정권은 진정한 정치권력을 주체적으로 행사한 때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黃씨가 南北韓의 두 현실을 공정하게 비판할 눈과 용기를 가졌다면 그는 마땅히 지난 40여년간 北韓사회를 지배해온 體制의 성격, 그 체제하에서의 동포들의 생활과 人權, 그리고 그 지배자들이 6·25를 비롯하여 韓國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했다. 그는 또 평화와 통일의 선행조건으로 美軍철수를 주장하기에 앞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전쟁의 위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했다.

黃皙暎씨는 40여년 동안이나 헤어져서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離散가족들의 편에 서 있다고 했다. 다 아는대로 72년에 시작된 赤十字회담을 통해 이산

가족 재결합의 꿈은 한때 실현될 듯이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다음해 金大中씨 납치사건을 이유로 이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바로 北韓측이었다. 아웅산참살, KAL機폭파가 北측에 의해 저질러진 후에도 우리측은 赤十字회담의 재개를 포기하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北측은 그들 社會를 우리들에게 개방할 자신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對話제의를 외면했던 것이다.

文-黃 양씨의 성명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南北韓관계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의 南北韓 현실에 대해 빛나간 인식을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제2차 대전 후의 冷戰상황 속에서, 그리고 6·25전쟁 후의 군사적 대결 속에서 南北韓 사이에 깊은 골이 팬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는 南北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힘으로 병탄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해 왔다. 뿐더러 自由사회에서 살아온 우리가 自由民主主義를 포기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서로가 상대편 體制를 존중하면서 문제 해결이 용이한 분야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文-黃 양씨는 統一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感傷에 젖거나 左傾的 시각으로 흘러 『모든 統一은 善』이라느니, 『美國에 반대하는 아시아 대중의 편에 선다』느니 하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北韓에 체류하는 동안 그곳의 實相에 대해 얼마나 눈을 뜨게 될지 참으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이 필요없다면

- 혁명전략 포기없이 개방경제 안된다 -

朝鮮日報 社說('89. 4. 5.)

북한은 소련식의 개방이나 중국식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북한의 당국자가 3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외창구인 대외문화연락협회의 강종일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우리는 우리방식대로 한다』면서 『계속 金日成주석의 교시대로 자립경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한다.

북한당국자의 그러한 입장 천명은 우리에게 『그러면 그렇지』 하는 수공과 함께 한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케 한다. 첫째로 북한처럼 40여년간 미동조차 않는 철저한 自閉체제를 견지해 온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하에서 경제만을 개방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1983년에 외부로 부터의 기술과 자본도입을 겨냥한 合營法을 만들고 개방경제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몇몇 在日朝總聯系 열성분자들이 평양에 불고기집과 다방 슈퍼마켓 등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 프랑스나 스웨덴 등 西歐로부터의 기술-자본도입은 처음부터 좌절되거나 중도에 중단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자본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맞출 수 없는 보편적-일반적 원리-원칙에 따라 작용하고 운용되어야 하는데, 북한당국은 굳이 『金日成주석의 교시』대로만 기술과 자본을 움직이려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경제를 개방하려면 기술과 자본의 도입에 그치는게 아니라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자유분방한 시장경제를 진흥시켜야 할텐데, 북한은 지금까지의 혁명전략을 뿌리부터 변경하지 않는 한 개방경제는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혁명전략이나 對南과외정책을 그대로 견지한 채로 일본

이나 그 밖의 자본주의 국가의 재력과 기술이 북한을 지배하게 된다면 북한사회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체성과 개방경제간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매우 고심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로서는 북한의 개방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려던 合營法은 실패로 돌아갔다. 주체사상과 개방경제는 서로 아귀가 맞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전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당국자들을 고무하고 있는 듯 해 보인다. 주체사상과 개방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한 것 같다.

그 하나는 한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다. 한국은 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을 위해 내셔널리즘을 상당히 억제해 왔다. 美-日을 비롯한 西歐의 기술-자본 도입은 매관자본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경제-기술발전의 그늘에 가려져 왔다. 이에 대한 반발이 지금 붓물 터지듯 범람하고 있다. 기간산업, 주요기업 등 한국의 기성체제는 전에 없던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근간의 하나가 내셔널리즘, 또는 『민중의 주체적 역량』인데 이것이 북한의 주체사상과도 합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내셔널리즘을 억제하면서 축적한 민족적 역량과 경제적 富가 잘하면 북한의 對南공작과 합치할수도 있다는 판단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보인 對北 접근정책에의 기대이다. 노동당 실력자 許鎔도 日-北韓의 『집권당상호간』의 접촉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것은 북한당국이 우리와의 1대1의 제휴-협력보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한 입에 삼키려는 악의적 의도이다. 『中-蘇식 개혁이 필요없다』는 북한당국자의 발언에서 그러한 음모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開放거부하는 北韓

東亞日報 社說('89. 4. 5.)

오늘날 공산주의국가에서 일고있는 世紀的인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유독 예외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나라가 北韓 『알바니아』 『쿠바』 3개국이다. 蘇聯 中國 東歐圈 여러나라는 물론, 최근에는 『베트남』까지 앞을 다투어 자유화 개방화정책을 채택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느라 떠들썩한데도 이들 세 나라만은 여전히 폐쇄적인 教條主義체제를 지키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겉으로는 정통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個人숭배에 기초한 形편없는 獨裁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北韓은 金日成의 이른바 『主體思想』의 기치아래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일종의 王朝的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主體思想』이란 우리의 일부 좌경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唯心論的 세계관에 배치되고 있으며 自力更生의 경제라는 것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어긋나는 異端的 슬로건에 불과하다. 金日成主義가 공산세계에서도 白眼視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 平壤에서 일어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제 준비위원회 환영연의 해프닝도 시대착오적인 北韓사회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平壤 비밀방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文益煥씨가 北韓을 떠난 바로 그 날(3일) 北韓당국은 세계 1백25개국에서 모인 3백38명의 대표들을 환영하기 위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20가지의 요리로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댄스파티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30여명의 北韓여성들을 외국대표들의 댄스파트너로 나오게 해서 외국대표들의 빈축을 샀다. 『프랑스』공산당원인 한사람은 이같은 광경이 믿어지지 않는 듯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北韓당국이 이같은 寸劇을 벌인 것은 작년의 서울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현재 北韓의 經濟力으로는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면서도 南韓에 대한 대결의식에

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초호화판으로 치르려 하고 있다.

北韓의 경제는 현재 완전한 혼란에 빠져있다. 75년에 6개년계획을 조기달성하여 그 부작용 때문에 2년간의 조정기간을 설정했었는데 85년에도 제2차 7개년계획을 무리하게 끝내 또 다시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87년에야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시에 들어갔다. 올해는 그 3차 연도인 셈이다.

金日成이 80세가 되는 92년까지 이를 또 조기달성한다는 명목으로 곁핍하면 『2백일전투』이름의 인민동원을 감행한다. 수도 대건설 2개년계획이니 50만ha의 水利體系달성이니 해서 과대투자와 무리한 대규모 생산설비에 인력과 자재와 기계류를 집중적으로 동원한다. 이같은 무계획적인 시책으로 다른 생산부문에 차질을 빚어 생필품 부족현상이 만성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해마다 떨어진다.

이 때문에 北韓당국은 7월의 청년축전개최에 필요한 경비 일부도 전례에 따라 蘇聯으로부터 지원받으려 하고 있으나 蘇聯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反帝國主義연대평화와우정』이라는 축전슬로건을 부드럽게 고치도록 바라고 있다고 平壤 발 외신이 전하고 있다.

여기다가 행사준비위의 西『유럽』대표들은 北韓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축제의 의제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北韓의 행사준비위 대변인은 『金日成주석의 철학아래서는 人權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北韓은 소련식 개방정책이나 중국식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金日成이 설정한대로 獨自的인 국가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北韓은 아직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金日成이 물러나기 이전에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北韓사회의 前進的 변화도, 對南관계의 진실한 변화도 요원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北韓은 먼저 자유화 민주화 개방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北도 페레스트로이카를

- 中國 · 동구권의 民主化 요구의 波長 -

朝鮮日報 社說('89. 4.22.)

중국 폴란드 헝가리 소련 등 오늘날의 사회주의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민주화』요구와 『위로부터의 개혁』조치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民主와 人權을 뺀 사회주의는 이제 進歩가 아닌 守舊的 억압자의 위치에서 민중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 저항은 물론 자본주의化나 復古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에도 民主와 人權을 접목해서 사회주의를 보다 人間化하고 활성화시키자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스탈린 이래의 기존 공산당 독재모델의 신성불가침性은 격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사실이며, 이것은 하나의 大勢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과거에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이 기존 공산주의 독재모델에 심대한 충격파를 던졌으나, 그것은 소련의 보수파와 毛澤東, 울브리히트같은 다른 공산圈 거물들의 완강한 반발로 大勢化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고르바초프가 추구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에는 사정이 한결 다르다.

페레스트로이카 역시 소련내 수구파의 반발을 받는 점이 있고, 그 여파로 민족문제가 폭발하는 등 만만찮은 시련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페레스트로이카가 함축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 요구는 이제 중국에서도 東歐에서도 결코 쉽게 외면해버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보편적 타당성과 가치를 갖는 새로운 大勢로 인정해야 할 일이지, 결코 예외적인 특수현상이라고 밀어붙일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점은 민주와 인권의 원칙이 歐美 선진국에 뿐 아니라 韓國등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宅의 사정』이지 北韓에는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구실로 『우리는 우리 式대로 산다』는 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東·西를 막론하고 독재자들이 언제나 自由 民權開放의 보편적 압력에 직면할 때는 그런 사이비 민족주의의 방패를 들이미는 것은 너무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들은 항용 『민족적』 『주체적』 『교도적』 『총화』 『단결』 『위기』 云云하는 말들을 써 가면서, 보편적인 民主 人權 自由 開放의 요구를 『사대적』이라고 비방한다. 이 점은 후진적 파시스트 독재자와 후진적 공산당 독재자가 다같이 써먹는 수법이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北韓의 페레스트로이카 배경은 일종의 국수주의적 공산주의요, 『維新的 공산주의』라고나 부를 만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고집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의 民主化 요구 압력에 저항하고, 金日成-金正日 세습독재와 폐쇄적 전체주의 압제체제의 흔들림을 한사코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분단이 되었다고 해서 민주와 인권을 안보의 구실로 억압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분단상황이라 해서 그 『위기』를 빙자하여 北韓이 사회주의의 민주화란 명제를 거역하는 것은 더욱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단상황에서 南韓의 민주화만 요구하되 北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요구하지 말자고 한다면 그것은 더한층 우스운 논리가 될 것이다. 北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는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야 옳다.

北韓이 변하려면

京鄉新聞 社說('89. 4.26.)

북한은 과연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交流할 마음이 있는가. 그들의 최근 敵愾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북한은 지금 겉으로는 對南유화정책을 쓰는 체 하지만 內心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온갖 매체를 동원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열되고 있는 左傾폭력시위·노사분규·나아가서 민중봉기를 부채질하는데 血眼이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表裏不同한 저의를 읽을수 있다. 마치 남쪽 심장부에 『연공세력』이 있어 민중혁명에 의한 체제전복이 실현되어 금방이라도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그처럼 밤낮없이 대남 비방에 열을 올려 어찌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의 이러한 동향에서 그들의 대남전략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는 애써 외면한 채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在野人士들의 개별적 초청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것도 對南戰略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북한측의 이같은 전술은 얼핏 대화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對南정치공작의 테두리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듯 대남공세에 여념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변함없는 2重의 속성과 그들이 처한 구조적 갈등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먼저 북한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들의 대남전략이 『남조선 혁명전략』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조선혁명노선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한 남북사이의 신뢰와 동질성의 회복은 요원한 이야기이다.

자기들 내부는 反韓적개심으로 불타 오르게 하면서 우리사회는 통일전선전략으로 뒤엎겠다는 것이니 남북대화는 한낱 대외전시용에 불과하다. 金日成이 종신군주격으로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의 開放은 지극히 한정된것일 수 밖에 없다. 체제유지상 인도주의나 경제적 실리를 앞세우기에는 북한 나름대로 넘을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기간 외부와 밀폐된 사회가 갑자기 열릴 때 일어날 충격을 흡수할 안장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金日成인들 모를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나깨나 주체성과 개방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겉으로는 유화적인 것 같아도 실질개방에는 인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늘 지니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런 폐쇄일변도적인 사고와 전략이 무한정 통할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북한이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 해도 거센 개방화의 물결을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평양축전』이 그들의 개방압력을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행사를 계기로 밀려들 서방의 文物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자극할 소지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배계층이나 민중들도 언제까지나 광신적인 金日成일가의 노예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金日成이 제아무리 세습체제를 다진다해도 그의 死後가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前轍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북한도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국제개방화 시대에 북한도 눈을 떠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혁명전략으로 南韓을 赤化하겠다는 망상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그런 착각이 통할 만큼 우리가 어리석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놔 두지도 않을 것이다.

폐쇄와 억압은 金父子를 일시적으로 지탱해줄지는 몰라도 북한주민들을 경제적 침체에서 구해줄 최선의 선택은 되지 못한다. 변함없이 휴전선 북쪽의 對南赤化망상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對南시각을 교정해 나가게 하는 國民力량의 결집에도 빈틈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北韓은 『달힌 문』을 열라

金文煥 서울大교수

서울신문 時論('88.11.5.)

서울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다각도적으로 검토되겠지만 필자가 관심하는 예술분야, 특히 연극의 경우를 살펴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자못 다채롭다.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연극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방적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공연준비가 진행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극들의 세련도에 주눅이 들어 의기 소침해진 가운데 연극의 쇠퇴가 거론되기도 한다. 연극을 통한 현실 야유가 열을 올리는가 하면, 자성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연극협회이사장 선거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반응은 주어진 여건을 십분 활용하면서 의미있는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꾸준한 작업일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그러한 공연 중 하나를 접하고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였다. 그 공연은『애니깽』(김상렬작·연출)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목을 달고 있다.

『애니여! 총을 잡아라』는 뮤지컬도 있고해서 뭐 그런 종류겠거니 했는데, 이 공연은 멕시코에 끌려간 韓國노동자들의 노예상태를 그린 것이었다.

1904년5월 멕시코 국적을 가진 英國人 메이어즈가 멕시코농장의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日本대륙식민회사의 조선지부장 오바를 찾아와 불법이민 송출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이 연극은 시작한다. 1년여 동안에 멕시코가 지상낙원이며 기후나 인심, 그리고 대우가 월등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선전에 속아 1천 33명이 모여들어 인천항을 떠났다. 한 달 반의 항해끝에 그들이 닿은 곳은 그러나 지상낙원이 아니라 가시와 독소가 많은 애니깽 농장으로서, 거기에는 독사가 들끓는 한편 선인장의 일종으로 밧줄과 카페트의 원료가 되는 애니깽을 하루 천 개를 따지 못하면 옷을 벗긴 채 가죽채찍을 맞아야 했다. 결국 이들 중 4명이 이 비

참한 사실을 임금님께 알려야 한다고 도망쳤으나, 둘은 중간에서 희생되고 둘은 30년에 걸쳐 때로는 쿠바에서 밀입국자로 체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美國에서 정신병자로 인정되어 병동에 갇히기도 하면서, 인천항에 되돌아 온다. 그러나 그들의 국적은 이미 멕시코인지라 밀입국자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물론 고종임금님도 이 일이 발단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와 국제정세에 어두운 관리의 무능으로 이 문제가 잊혀져가는 중, 고종황제는 폐위되고 이윽고 목련꽃 그늘 아래서 숨을 거둔다. 멕시코를 탈출한 두 형제가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라도, 임금도, 조선백성도 없어진 상태이다.

호흡이 잘 맞는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기도 했거니와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처음으로 마치 나라 없는 백성이 겪어야 했던 노예생활을 압축해서 보여준 듯 하기에 그 감회가 컸던 것이다. 그러면서 과연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 주권있는 나라답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새삼스레 둘러보게 된다. 아침 신문들에서 우리는 외교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서로 다른 칼럼을 읽는다.

하나는 『남북한 교차승인』이라는 제목아래 그러한 발상을 맨 처음 제기한 것은 1974년 11월 미국의 포드대통령이라는 설명에 이어, 북한이 최근들어 『교차접촉·교차승인·유엔동시가입』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부쩍 높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고 씩어 있다.

그 원인은 한-미-일의 기본적인 한반도정책 구도 가운데 첫번째 단계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교차승인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여러군데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규탄 캠페인은 겉으로는 한·미·일 정부당국이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중-소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 곁들여 있다. 이 글은 남북관계를 뒤흔들지도 모를 태풍의 눈이 역사적으로 인연이 먼 헝가리에서 싹트고 있는 현실은 교차승인 추진세력들의 집요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비슷한 사실을 열거한 후, 그러나 『영구분단음모』등의 『악담』은 후일 한국에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바뀌어도, 김일성의 그 어리석은 남한흡수식 통일방안에 장단을 맞춰 춤추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라

고 단정한다. 이는 북한의 내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스탈린주의적 모택동의 『대약진』식 사회주의 건설의 실패가 몰고온 심각한 경제위기, 놀랄만한 김일성숭배, 세계공산당에서 전례가 없는 부자세습제는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어 북한사회가 개방되는 날이면 전면적 파국에 봉착한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풀이가 그 내용을 이룬다. 이 글은 김일성의 공산권의 대한교류에 대한 저항에 공명할 나라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북한은 근 40년전 사고와 정책, 환상같은 『남조선혁명』의 전술을 포기하고 남북문제에 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끝맺음을 한다.

외교에 문외한인 필자가 이 두 가지 주장중 어느쪽에 더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정세에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버릴 수가 없다. 이른바 북방외교니 환태평양시대를 위한 준비니 하는 새로운 기운에 자칫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또 애니깽농장의 노예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서로의 진의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도록 남북이 서로를 개방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이곳의 우리들 사이에서만이라도 감춤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드러냄에 기여한 공연에 공명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품위까지 잃고 있지 않기에 말이다.

北韓도 해빙에 同參하라

梁好民 정치평론가

朝鮮日報 時論('88.12.27.)

圖式的 선전공세

최근 40일 동안에 平壤은 맹렬한 욕설 속에서 연발적인 對南정치공세를 시도하고 있다. 즉 부총리를 단장으로하는 南北고위급 政治-軍事회담(11·16), 汎民族대회 실무대표회담(12·9), 美軍철수 및 군축을 위한 3者회담(12·10), 90년 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南北단일팀구성회담(12·21), 平壤의 제13차 세계청년축전에의 金大協초청(12·26) 제의 등이 그것이다. 내일 또는 모레 또 어떤 제의가 있을는지 알 수 없다. 정치공세 자체를 위한 제의라면 우리측도 한 달에 열 가지 스무 가지 제의를 보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南北間에 긴장만을 격화시킬 따름이다.

北韓의 이상 일련의 제의들이 北의 어떤 단체, 기관, 누구의 명의로 되었든 그것이 노동당의 對南공작당국의 선전전이란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그것들의 내용은 표현을 어떻게 달리하고, 수신자들을 어떻게 바꾸었든간에 낡은 주장에다 새옷을 입힌 도식적인 선전공세라는 점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平壤은 무엇때문에 갑작스레 연일 그런 선전전에 골몰해야하는 것일까.

첫째는 요즘 民主化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와 농성 등 우리내부의 소란을 『反美투쟁』, 『통일』의 이름으로 선동하면서, 연발적인 제안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자는 심리적 교란전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그들은 우리 국회청문회에 나타난 각 당간의 異見과 대립에 큰 격려를 받으면서 그들의 연속적 제안으로 여당과 야당, 한 야당과 다른야당을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이자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金日成의 40년 對南정책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韓國의 北方外交에 초조한 때문이다. 北韓측의 격렬한 반발과 비방 욕설에도 불구하고 韓-헝가리간에는 명년 1월을 기해 대사급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韓-中間의 교역은 작년의 15억 달러에서 금년 말에는 그 2배인 30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호간의 무역 사무소 설치는 물론, 韓國측의 투자, 合併회사의 설립, 釜山과 中國 여러항구간의 직항로가 바야흐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韓-蘇간에도 명년 1월중에 서울-모스크바간에 두나라 무역사무소가 개설되며, 쌍방의 무역은 84년도 총 5천만달러에서 87년도에는 1억5천만달러로 늘어났던 것이며, 금년말까지는 3억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 蘇聯은 그나라 木材생산의 99%, 석탄매장량의 75%,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의 60%를 차지하는 시베리아開發에 韓國기업을 초청하는 데 熱을 올리고 있다.

大勢를 모르는가

韓國기업의 시베리아 橫斷철도의 이용은 물론, 釜山~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도 이제는 시간문제로 되어있다. 東歐諸國도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를 뒤따라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등이 서울에다 곧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다.

이 엄청난 국제관계의 변화는 『南朝鮮혁명』을 위해 국제적 혁명유대를 강화, 韓國을 고립시켜 뒤집어 엎는다는 金日成의 공산주의 통일정책의 파탄이 아닐 수 없다. 北韓이 아무리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을 규탄하고, 우리 北方정책의 『반동적본질』을 떠들면서 中-蘇-東歐제국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고, 『프롤레타리아 國際주의』를 외쳐도 이제 그것을 들어줄 형제당도 형제국도 없다. 국제관계는 金日成이 완강하게 고수하려 드는 냉전 정책과는 반대로 화해에로 대세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北韓은 공산권내에서 조차 잃어버린 자기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평화』와 『統一』을 빙자한 새로운 對南냉전공세에서 거두는 성과에서 과시하려하고 있다. 그런 책략이 바로 최근 그들이 시도하는 일련의 연발적 對南제 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제안들은 한마디로 상투적인 냉전공세다. 냉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만인이 애호하는 평화의 이념을 무기로 하여 상대방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고,

가능하면 전쟁 안 하고도 승리하겠다는 정치투쟁의 형태이다. 그 방법은 군사적 긴장의 격화, 모략적 선전전, 내부침투, 각 정파간의 반목 조성, 내란선동, 외교적 포위, 경제적 고립화 등 다양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모략 선전이다.

우리는 北韓측이 제의하는 바가 진실로 南北간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전제적 조치가 된다면 그것을 수락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들이 제의하는 입장과 언론매체의 언사를 보면 화해하자는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언필칭 大韓民國은 『美帝의 완전한 식민지』요, 대통령은 『역도』요, 정부는 『괴뢰파쇼군사독재정권』이다. 이것이 대화를 하자는 언사요 태도인가. 88 서울올림픽은 물론이요,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北方外交, 헝가리와의 修交, 우리 政府가 제의하고 있는 東北아시아 平和협의회(6者會談), 南北의 물자 교류 등 그 어느하나도 그들에 의하면 『두개 朝鮮의 조작책동』, 『분열의 고정화-영구화』아닌 것이 없다. 그들은 얼마전 『포괄적 平和保障案』이란것을 내놓고 3단계 美軍철수안을 일방적으로 결정, 91년말까지 즉 金日成의 80회 생일까지 미국의 육-해-공군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南北의 단계적 군사력 감축안도 제멋대로 3단계로 발표했다. 49년에 철수했던 美軍을 그들 자신이 불러들이고 이제와서는 자기들이 책정한 날자대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南쪽의 정치가와 국민들은 어디 천치들만 모여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리인가.

孤立은 언제까지

그들의 소아병적 냉전정책이 지속되는 한 駐韓美軍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 이들을 붙들어 두고 있는 것은 바로 北韓 자신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제 金日成一派의 對美-對南냉전정책은 共產圈안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中國신문들은 서울올림픽을 『공전의 성황, 위대한 성공』으로 격찬했고, 정부는 韓國과의 경제교류에 지나치게 적극적이며, 釜山~上海, 仁川~新港의 해상민간항로의 개설에 합의를 보고있다. 蘇聯정부는 盧대통령의 東北아시아 平和협의회제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소련인은 공공연히 韓半島에는 두개의 독립한 主權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美-蘇-中-日은 南北韓에 대한 교차승인을 하도록 해야하고 南北은 동시에 UN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사건이란 전제에서 공공연히 발언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공산당은 反韓的인데도 불구하고 南에 대한 北의 『國家테러』와 『金日成主義 絶對化에 의한 지배』가 朝鮮의 평화통일에 있어서 『다른 한편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작년의 KAL機폭파와 같은 국가테러행위까지 감행하는 현실은 南측의 反共선전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생각케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北韓을 준엄하게 문책한다.

흐루시초프 시대까지만 해도 蘇聯은 평화공존을 『국제적 계급투쟁의 한 형태』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全인류적 價値』를 계급적 이익이나 계급투쟁에 우선시키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共產圈 내의 정세가 이렇게 변천하고 있는데 北韓은 언제까지 낡은 教條의 껍질속에 고립무원의 對南냉전을 고수하려 하는가. 모든 제의에 앞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北에서 던져오는 『不和의 사과』

宋貞淑 論說委員

서울신문 칼럼('89. 1.14.)

金日成의 『新年辭』라는 것이 던진 과문을 보며 문득 『不和의 女神』에리스의 사과를 생각해 보았다.

邪惡하고 不吉한 女神을, 諸神들이 초대된 펠레우스왕과 바다의 요정 테티스의 결혼식장에 함께 초대할 수는 없었으므로 女神 에리스는 따돌림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에리스는 음모를 꾸민다. 諸神들이 모여 흐드러지게 즐기는 연회장으로 黃金의 사과 한 알을 던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가지라고 새겨넣은 이 사과 한알은 보기 좋게 『不和』를 創出한다. 그것은 地中海 동쪽끝에 위치한 富裕하고 강력한 都市 트로이가 멸망할 때까지 멈출 줄 모르는 『不和』가 된다.

소갈머리없고 시샘많은 女神들이 그까짓 사과 한 알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임을 保證받으려고 안달을 한 것 부터가 우습다. 곡절끝에 3사람의 최종후보 女神이 압축되었다.

사랑과 美의 女神 아프로디테, 지혜와 理性과 純潔의 女神 파라스 아테네, 그리고 諸神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의 부인이며 神들 가운데 가장 빛나고 권위있는 女神 헤라. 이 아름답고 드센 3명의 女神들 중 심술스런 에리스의 사과를 가질 資格者를 判定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神들의 우두머리 제우스조차도 이런 난처한 일에는 말려들고 싶지 않았으므로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 한 判정관을 추천한다. 이다山 근처서 양치기를 하는 아름다운 靑年 파리스였다.

『나는 그대를 유럽과 아시아의 帝王으로 만들겠노라』고 약속한 헤라도, 『그대로하여금 그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본래 트로이왕의 아들인 그대에게 명예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한 아테네도 파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이 세

상에서 가장 빼어난 美人을 주겠노라는 아프로디테의 유혹에 넘어가버린 파리스에 의해 황금의 사과를 아프로니테의 차지가 된다. 그것이 트로이전쟁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다.

金日成의 신년사는 『北南政治協商會議』라는 것을 제의하면서 올해 따라 좀 이상한 짓을 했다. 實名은 명기하지 않은채 民正黨 平民黨 民主黨 共和黨의 4당총재들과 金壽煥 추기경 文益煥 목사 白基玩 씨를 平壤에 『초청』한 것이다. 이런 人選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떤 속셈을 가진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盧泰愚대통령을 한 개 정당의 총재로 깎아내려 고만고만한 키로 줄이려는 것이 주된 저의같아도 보이고, 재야인사의 資格을 格上시키는 인심쓰기로 색다른 『不和』를 꾸미려는 것으로 보인다. 宗教指導者 한 사람을 정치협상의 『7人대표』속에 끼운 것도 색다른 不和를 책동하려는 혐의가 짙어보인다. 이리저리 돌려 볼수록 장난이거나 심술이거나 허튼소리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년사』가 남쪽의 여러 사람을 단방에 우습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데는 기여했다. 특히 전부터 『金日成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장담하던 政黨代表들에게 좀 짧은 입맛을 맛보게 했다. 왜냐하면 『맛상대』를 부른 그들을 7분의 1의 자격으로 切下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金日成은 『不和의 神』이다. 그가 던진 그 의도적인 사과를 냉큼 받아들이고 이러쿵저러쿵하는 일은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형국이 된다. 휘하에 술한 당원과 지지자를 거느린 정당대표들이 의연하고 성숙하게 행동하면 그 不和의 음모에는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金日成의 불화의 사과는 『신년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그리고 신문과 放送까지도 제각기 北方症候群에 들떠있는 이런 때를 그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효과있게 이용할 것이다. 정당 당수가 학생들과 똑같이 덩벙거리다가 우스운 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싶지 않다.

한 마리 새는 懷妊을 하면 비로소 땅위의 지푸라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을 입부리로 물어서 나무 위 높은 곳에다가 둥우리를 틀기 시작한다. 이 神秘的 生理的 連鎖反應은 과정의 省略을 허락치 않는다. 창공을 높이 날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理想에 취해 있는 처녀새에게, 구질구질한 지푸라기 따위가 눈에 들어

올 턱이 없다. 그 한 오라기가 모여, 모여서 생명을 부화해내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내 나는 젊음이 어찌 알겠는가. 잉태된 생명의 씨앗이 몸속 깊이에서 보내는 오묘한 信號를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알긴 무엇을 알겠는가.

그러면서도 삶의 고달픔에 절어서 蒼空의 理想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가는 어른에게 젊은이들은 신선하고 아름다운 충격을 끊임없이 주기도 한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보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일만 하면 된다. 땅 위에 흩어진 한 뼉짜리 지푸라기를 보고 집을 지어 식구를 거느려야 하는 현실의 절박함을 감당해야 하는 정치집단의 首長이 아이들과 한데 쏠려 덩벙대는 일은 할 일이 아니다.

金日成의 정치협상제의는 그것을 『불화』의 사과로 삼으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왜곡되어 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여러번 거듭하는 한 정당총재의 논평은 사과의 주인이기를 주장하는 여신들의 시샘을 연상시킨다.

蘇聯의 총리라도 日本과의 정치협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自民黨을 대표하는 집권정부의 수반을 상대로 삼는다. 일본사회당 당수를 그 역할로 지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름도 분별하기 어려운 유령정치단체의 대표나 인사들을 거론하던 것이 金日成의 지난날 방식인 『만청부리기』였다. 그러므로 『北南政治協商』제의는 『4黨정국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편이 온당한 천착인 것 같다.

이같은 정치협상의 테두리 안에서 南北의 지도급 인사들이 『多務的인 회담』뿐 아니라 『雙務的인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대단히 거드름을 피우는 대목으로 보인다. 『뵈기』를 청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전을 내리겠다는 투다. 『여신 에리스가 벌이는 음모이므로 번연히 「불화」가 목적인지 알면서도 시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여신들의 좁은 소견머리만 아니었으면, 트로이전쟁은 명예로운 평화로 끝났을 것이다』라고 古代의 시인들은 읊었다.

완전히 덩벙거리기 증세의 만연상태로 들어선 北方交流의 짝사랑 증세의 擴散氣流를 보며, 金日成은 새록새록 불화의 사과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웅졸하고 질투심 강한 그리스의 女神에 비하면 훨씬 더 『神』다운 자격이 있는 우리의 정당 黨首들은 의연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南北간의 먼길 가까운 길

姜在倫 東國大 교수

中央日報 寄稿('89. 1.19.)

다방면에 걸친 교섭과 교류의 새 국면이 전개되어 남북관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고 있다.

그 새 국면은 한마디로 남북당국간에 정치적 대화는 회피 또는 담보를 면치 못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민간 레벨의 商談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2중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北韓産 명태와 무연탄이 직반입되고 심지어 白頭山 天池물까지 맛보게 되는가 하면 南韓産 가전제품과 의류가 北韓에 선보이게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잠시 냉정을 되찾아 이 예기치 못했던 南北관계의 대전환의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北韓측은 南韓측이 제의해 온 경제교류 보다도 소위 南北간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이 제안은 韓國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관계되는 민간단체와 교섭하며, 범위에 있어서도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각분야에 걸쳐 동시에 교류를 벌이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만약 북한당국이 아직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사태를 보고 내심 흡족해 하고 있을 것이다.

구랍 北韓對南工作베테랑 金仲麟이 對南사업담당 비서로 복귀한 것은 이러한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對南工作의 면에서 대응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한편 북한은 경제적 南北交流가 진정으로 필요케 되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85년 合營法을 만들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북한은 계속 악화되는 국제수지에 쫓겨 최근에는 출혈적인 수출증대로 外貨획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87~93년)에 대외무역량을 무려 3·2배로 늘려 잡은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南韓과의 교역은 필연적으로 개방체제에로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일부 제3세계와 공산권 국가와의 국한된 교역으로는 현재의 경제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면이 있어 南北 경제교류 결정에 무척 고심했을 것 같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신국면은 北韓이 대남공작적 차원에서 이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아마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소위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북한측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수 없게 대비하는 데에는 政府의 지도와 대책도 필요하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와의 對北方교역도 효과적인 제어수단이 된다.

對北方 교역의 확대는 남북교류에 대하여 이를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 이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효과적 압력이 된다는 것을 東西獨의 경우는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압력의 강도는 서독과의 교역이나 관계개선에 방해 또는 반대했던 『올브리히트』가 소련측에 의해 실각되는 사태를 빚을 정도였다.

어떻게해서든 南北韓이 경제교류에서 성과를 쌓아 올릴 수 있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의 生活空間이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남북으로 차츰 트이게 되리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정치적 대화에도 작용하여 대화를 가로막는 비생산적인 정치선전이나 심리전의 양상을 청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선전은 그동안 남북대화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다. 현안이 되고 있는 국회회담이나 학생회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말 국회본회담을 위한 제7차 예비접촉은 北韓측이 돌연 팀스피리트 증기를 본회담의 제1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平和攻勢를 펴는 바람에 좌초되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에 全大協이 초청된 것도

마찬가지다. 즉 北韓당국은 『남조선인민에게 북반부의 경제적 위력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정치선전의 목적으로 학생들을 초청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화에 임하기 전에 事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고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회피하는 쪽이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대화자세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양체제의 근본신념에 저촉되지 않고 양체제의 우열이나 손익에 관계없는 문제, 상대방을 인정하여 양측의 공동관심사가 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北韓측은 체제의 우열이나 현실불인정의 제안들을 많이 해 왔다. 최근에는 南韓측이 北韓의 그런 제의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들면 南韓당국은 틴스피리트 군사훈련,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등 안보문제에서 변동을 모색하는 것 같으나, 이런 문제들은 남북협상의 과정에서 제기된 만큼 상대방에게도 응분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에서만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툼한 防衛白書에서 북한 군사력에 비해 65%열세를 강조하면서, 반면 한미 방위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문제들을 제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합의에 도달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북돋우며 민족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안은 학술·문화분야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테면 국사학계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류에 속한다. 분단 후 남북은 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여 古代史의 공백을 적지않게 메울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연구를 위해 사적지의 공동답사나 문화재의 교환전시 등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진적 남북교류가 될 것이다..

유사한 문제로서 국어학계의 교류문제를 들 수 있다. 北韓측은 해방후 줄곧 한글전용을 하며 한자어를 줄이고 『민족어』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南北간에는 언어의 異質化문제도 제기되었지만, 반면 北韓은 우리말 찾기와 다듬기에서 한 걸음 앞 선 점도 있다. 南北간의 국어공동연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기본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南과 北을 잇는 길은...

白璇基 論說委員

京鄉新聞 글마당('89. 1.28.)

1주일 후면 大同江물도 녹는다는 立春에 이어 설날을 맞는다. 강원도 通川사람 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은 정말 福많은 老人이다.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 남녘땅 대한민국에서 재벌총수가 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청으로 북녘땅에 錦衣還鄉했으니 부러워 하지않는 離散가족이 어디 있겠는가. 鄭회장은 平壤에서 許鎔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北韓노동당 간부들을 만나고 헤어졌던 가족, 친지들과도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胡馬는 언제나 북쪽바람을 향해 서고 남쪽 땅 越나라에서 날아온 새는 나무가지에 앉아도 남쪽으로 향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이야 오죽하랴.

그래도 올해는 北녘의 명태, 술, 인삼차가 들어와 그런대로 제사상을 차려올린 뒤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손을 이끌고 臨津閣을 찾아가 고향땅을 바라보며 『望鄉의 儀禮』를 올리는 사람이 작년보다 많을 것 같다.

하지만 헤어진 부모의 生死를 알 길 없어 제사조차 올리지 못하고 또 한해, 회한의 눈물을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不孝子』가 더 많다는 사실을 盧泰愚대통령과 金日成주석은 자기일처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南의 離散가족도, 北의 離散가족도 높은 산에 올라 『어머니, 아버지』를 소리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分斷 40여년. 요즘 한반도 전역에 넘쳐흐르는 『해빙의 봄바람』을 느끼면서도 부모 형제 자매의 生死조차 알 길 없으니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님이다.

우리는 정녕 한 핏줄 한 민족인가. 유태교의 聖典 『탈무드』에 이런 삽화가 있다. 『만일 갓난애가 두 개의 머리를 갖고 났으면 이 갓난애는 두 사람으로 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셀 것인가』. 얼핏 똥똥지같은 질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南과 北』의 현상풀이에는 알맞은 事例이다.

『탈무드』의 해답은 명확하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부어라. 그때 다른 한쪽의 머리가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 만일 다른 한쪽이 시원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다는지, 소련에 있는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아픔을 느끼고 소리지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소리지르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1989년 오늘의 時點에서 南과 北의 사람들은 어디쯤 와 있는가. 反共과 唯一사상의 대립속에 살아온 敵對관계 40여년. 지금은 물건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지만 진정한 서로의 속마음은 아직 읽을 길 없다. 최근 北韓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쪽 머리가 아픔을 호소했을 때 다른쪽은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시원한 얼굴을 보일 수도 있는 아리송한 상황이다.

우선 동족의 아픔을 함께 할사람들로 老人세대가 꼽힌다. 平壤정권은 그동안 전통적 세시풍속을 봉건잔재로 몰아붙이고 농토보존을 위해 葬禮절차에 있어 火葬을 적극 유도해 왔다고 들린다. 그러나 북쪽의 老人들은 『두 번 죽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어 전통의 장례식을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통상 장례절차를 보면 3日葬에 탈상기간은 1~3년. 부의금은 3~10원(北韓貨)이며 直系尊卑屬의 휴가기간은 1주일정도.

『태산이 若礪하며 / 碧海가 如帶토록 / 삼강오륜 배를 모고 / 인의예지 뜻을 세워 / 부자유친 군신유의 / 부부유별 장유유서 / 효제충신 가득신고 / 孔孟顔會 찾아갈제 / 유덕춘 좋은 원기 / 사해에 周遊한다』이런 <道德歌>를 부르며 살아온 老人세대가 남아있는 한 민족의 동질성은 어디서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전 TV다큐멘터리 <붉은 王>이나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해 본 6·25以後세대는 너무도 『먼 이웃』이었다. 뿐만아니라 北韓국어사전에 수록된 表題語가운데 38%가 南녘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新造語라고 한다. 平壤사람들이 『점심은 단고기로 조직합시다』라고 말했을때 『보신탕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알아들을 서울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소설 <火山島>의 재일동포작가 金石範씨가 『나의조국은 南도 北도 아닌 통일된 조선(한국)』이라고 부르짖은 말 뜻을 이해할 것 같다.

그러나 『마른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美·蘇주도의 『新데탕트』의 大勢를 잘만 타면 韓民族화합은 생각처럼 어렵지만은 않으리라 믿어도 본다. 북당은 通川사람 鄭周永회장이 金日成주석과도 만나 금강산 공동개발 京義線복구등을 협의한다니 정말 반갑고 바람직한 소식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당면과제는 悲劇의 離散세대가 좀 더 많이 살아있을 때 南과 北으로 조각난 한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편지 왕래길 부터 열어야 부모의 生死를확인하여 제사라도 떼땀이 지내고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盧泰愚대통령, 金日成주석은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세계속의 韓民族』위치를 생각할 때다.

『너 라고 불러보는 조국아 / 落照보다 더 쓸쓸한 조국아 / 긴긴밤 가얏고 소리 마냥 / 가슴을 파고드는 네 이름아 / 새 봄날 桃李花같이 / 활짝 한 번 피어주렴』

鷲山 李殷相의 時調 <너라고 불러보는 조국아>의 마지막 聯이다. 새봄날 桃李花같이 활짝 핀 한 핏줄의 어울림이 보고싶구나. 80년대를 마무리하는 89년 설날을 앞두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雀墓를 끝낸 뒤 鄭周永회장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 까.

시계 錘는 갈 곳이 없다

金大中 논설주간

朝鮮日報 칼럼('89. 1.29.)

鄭희장 訪北을 보고

우리가 5북청산에 집중하면서 어제의 낡은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갈아끼우고 있는 동안, 세계는 89년의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가고 있을까? 물론 그런 변화와 생각들을 한 눈에 살필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조감을 하려는 사람의 글을 통해 총체적인상은 얻을 수 있다.

얼마전 한국을 다녀간 英國 옥스퍼드대학의 현대사 교수이며 전략연구소의 이사장인 마이클 하워드卿은 최근 『1989년의 세계』라는 잡지에서 조심스런 낙관론을 폈다.

『시계의 추(錘)는 지금까지 세계를 장악해 온 우익 自由資本主義를 떠날 때가 지났는데도 떠날 것 같지가 않다. 시계의 錘는 자유자본주의가 실패하고 레이건-대처式 기적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때 옮겨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錘가 갈 곳이 없다. 영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곳에서 좌익은 혼돈에 빠져 있다. 공산주의만 실패한 神이 아니라 사회주의도 실패한 神이다. 그렇다고 다른 분명한 代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좌파의 再活을 위한 새로운 사상적 연구나 기초작업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현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때 그런 새로운 사상가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모든 취약점과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右익 자유자본주의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자유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격심한 사회의 엄청난 많은 기층민중에게도 기능하고 있다.』

마이클 하워드교수는 단순히 영국 名門大의 학자가 아니다. 그의 학자로서의 명망과 명성은 그가 비교적 개관적 시각으로 세계를 보며 진단해오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마이클 하워드교수가 공산주의사회의 神들을 『실패』로 규정했

을 뿐 아니라 그 神들을 부활시킬 어떤 여건이나 사상적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계의 代父격이며 실력자인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北韓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중이다. 또 북한的高위관계자들은 27일 세계경제지도자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에서 우리측에게 남북한 合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뿐만아니라 북한당국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이외에도 세계 여러나라, 특히 자본주의 국가로부터도 어떤 형태의 경제교류를 모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鄭周永씨는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半봉건 식민주의의 매판세력』의 총수임에 틀림없다. 어떤 자(尺)로 재건 鄭회장은 노동자를 착취한 『인민의 敵』이며 타도되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런 인물을 불러다 환대하며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의 현실은 마이클 하워드교수가 말한 『神의 붕괴』의 한 본보기인지도 모른다. 한국과 合作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기도도 이제 이른바 북한의 동조세력이 자주 말하는 『北의 잣대』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安住할 때 아니다

여기서 구태여 北의 경제적 실태와 상황의 어려움을 『南의 잣대』로 빼져보자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너무 거드름 피우며 잘난체하는 거만함이 南쪽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것이 한반도에 적대적 대립과 충돌을 완화하고 北쪽의 동포에게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끼게 해 준다면 그 이상 값진 댓가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南쪽에 있는 北의 동조세력이며 체제를 거부하는 『민중혁명노선』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현 우리의 체제를 민중수탈의 反自主, 反民主, 反통일세력이라고 못박고 半봉건-식민지사회를 탈피하는 민중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北韓의 金日成이 鄭회장을 불러가고 우리와 合作회사를 할 뜻을 비치는 일 등은 바로 그들이 『민중의 의사』에 反하는 反민중세력을 용인하려는 것이 되고만다는 圖式이 가능하다.

한국의 현 시스템은 결코 문제가 없지 않다. 또 현 자본주의 체제가 보다 자유

적이기 위해 우리가 개혁하고 수정해야 할 것은 많다.

어쩌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사이 우리의 체제는 내부로 부터 많은 부패요인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곧 소련과 중국이 손짓하고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손 벌리게끔 된, 우리의 현위치를 파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제, 적어도 이제는, 어제의 이른바 『反체제』가 우리사회에서 지녔던 位相을 오늘의 反체제가 계속해서 향유할수 있으리라는 논리적 바탕은 크게 상실됐다. 오늘의 反체제가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어제까지의 『文化혁명시대적 논리』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들의 논리를 새롭게 체계화하는, 마이클 타워드가 말한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연구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칠것은 과감히

과거의 독재정권은 그들의 정권장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아래 세계에 근거가 없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개발독재이론의 돌연변이였었다.

그런 아픈 역사적 체험을 가진 우리를 이제는 세계의 여러공산주의-사회주의가 쓰다 버린, 보편적 마르크스주의도 포용할 수 없는 『한국적 공산주의』가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그렇게도 교조적인 北의 주체사상주의자들까지도 이제는 벗어버리지 않을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걸음을 남쪽의 反체제들이 아직도 입고 있어서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 사상의 경향에 시달려왔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左건, 右건, 그런 극단적 경향에 이끌리는 心性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저 극심한 독재-권위주의체제에 시달리면서 가까스로 이룩한 경제적 성장을 지나치다 싶을만큼 享有하고 있는 사회에, 공산주의의 종주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이미 몇 10년전에 써먹고 버린 한 낡은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우리는 분명 고쳐야할 것이 많다. 고칠 것은 고쳐야한다. 정부건 정치인이건, 기업인이건, 사용자건, 이제는 그들도 어제의 낡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도, 농민도, 진보적 지식인들도 세계의 흐름에서 이미 철 지난지 오래인 『실패한 神』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노력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데 기울인다면 세계 錘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生活』에 눈 뜨는 北韓

李長熙 外大교수

國民日報 時論('89. 2. 2)

요즈음 나라안이 온통 北方政策으로 술렁이고 있다. 現代그룹의 鄭周永회장은 금강산 공동개발을 논의키위한 平壤방문을 마쳤고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배는 北의 南浦항을 떠나 仁川항에 도착했다. 몇 년 전만해도 가히 꿈도 못 꿨을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이다.

국제정세의 신데탕트, 경제력의 우위, 政權의 정통성회복에 힘입어 정부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은 20세기에 들어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식민지 분단비극의 역사에서 통일의 희망찬 역사의 巨步에 새로운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은 1960년대말 西獨의 빌리브란트 총리가 東方政策으로 동·서독관계를 敵對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정립시켰던 때와 유사하다. 최근 북한은 무엇인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경제교류의 가능성을 비치는가 하면, 對美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對南政策에서도 총리급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진정 그들의 對南方政策의 속셈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적인 면에서 北韓은 自立經濟政策에 한계를 느끼고 국민복지생활의 향상을 위해 西方의 자본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다. 궁여지책으로 西方의 외화를 끌어들이기위해 罽營法을 만들었으나 자본과 이윤의 안전한 환수를 염려하는 서방국들은 예상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금 정치·군사면의 대화에는 시큰둥한 태도지만 경제교류에 비교적 적극적인 관심을보이는 것을 보면, 南韓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으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

둘째, 北韓은 가까운 동맹국들인 중국 소련 헝가리 등이 남한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을 보고 남한을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삼고 싶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전의 남조선혁명론과 같은 경직된 대남정책을 추구하다가는 외교적 고립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동맹국 利害關係를 고려하여 더 유화된 對南政策을 쓸 필요가 있다. 북한은 東獨총리 울브리히트가 1970년에 실각한 이유를 잘 알 알고 있다. 경직된 대남정책은 金日成의 실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中·蘇분쟁까지 해소하면서 경제개발을 서두르는 中·소에게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줄타기 외교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中·소의 태도는 對南유화정책을 바라는 이중의 압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내부적으로 북한은 남한이 정권의 정통성 회복으로 민주화 작업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駐韓美軍의 감축 내지 철수 가능성까지 보이자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그 동안 남한의 군사독재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40여년이나 유지시켜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화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거부할 만한 명분을 빼앗아 버렸다.

이와같이 국내경제, 국제정치,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는 北韓을 맞아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政略的이며, 전시적인 對北政策은 북한을 자극하여 모처럼 풀리고 있는 절호의 대화 분위기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北韓은 아직도 남조선해방전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의 목표를 赤化統一에 두도록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남조선적화統一政策을 포기하라는 것은 곧 金日成政權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은 세계에서 40여년동안 獨裁政權을 유지하고, 또 정권을 그 아들 金正日에게 세습하려는 유일무이한 공산정권이다. 우리는 北韓에 하나의 朝鮮政策을 무조건 포기하라고 재촉하기 보다는 政權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까지 인내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왔듯이 새로운 지배층의 부상은 분명 새 이념과 모습을 가지고 출발한다. 北韓은 지금까지 적화통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쏠노동력을 동원

하고, 또 GNP의 4분의 1이상을 군사비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의 소비생활을 극도로 억제했다. 金日成이후의 세대는 統一을 명분으로 더이상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군수산업보다는 국민의 소비생활을 위한 경공업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北韓 스스로도 종전의 경직된 대남적화 統一政策의 내용을 슬그머니 바꿀것이다. 그러므로 北方政策은 이러한 北韓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 北韓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릴줄 아는, 그리고 성숙한 말뚝처럼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지혜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北韓의 개혁없는 경제교류엔 限界

— 南北韓 접촉에 대한 北韓의 기본시각 —

延河清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朝鮮日報 칼럼('89. 2. 8.)

對內外 개방압력 거세

최근 금강산공동개발을 위한 기업인의 북한방문 및 연일 들려오는 北韓상품의 수입소식은 南-北韓 경제교류에 대한 국민의 期待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 경제교류는 北韓이 여전히 대외개방을 위한 정치-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고 기존의 정책基調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데에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의 경제교류가 과연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결코 南-北 어느 한 쪽 만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될 수 없다. 여기서는 대내외적으로 밀어닥치는 개방화의 압력속에서 北韓이 취하고 있는 기본 視角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 보기로 한다.

北韓은 현재 대내외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對內的으로 北韓은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구조의 개선과 주민소비생활의 향상, 경제관리체제의 개혁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北韓은 소련 중국 동구 등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經濟開放化와 함께 韓國과 무역사무소 교환설치 이상의 교류관계를 갖는 등 南-北韓에 대한 태도 변화속에서 경제개방화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물질적 유인 폭 넓혀

현재 北韓경제는 지금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정책들이 이제는 거꾸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있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北韓의 폐쇄적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의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 거의 전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의 낙후와 산업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北韓도 이를 인식,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의 대외경제협력부문에서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활발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극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자세전환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고수하여 왔던 自己完結의인 아우타르키체제(자급자족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우선해 온 북한이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질적 誘因의 폭을 소극적이거나 넓혀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北韓은 구조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체제의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로서 農民시장을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도시지역에 확대하여 常設自由市場으로 일부 허용한 것을 비롯하여 소비재생산 부문에 능력별 임금제 실시, 工場企業所경영의 독자성부여, 물질적 誘因제도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정책 政治와 마찰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이 실제로 확대된다면 北韓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정치목적에 대한 경제의 예속화 등 북한의 정치적 방침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조치들의 시행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1984년 合營法발표이후 북한이 추진해 왔던 경제정책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조용한 革命』 『實務革命』이라 하여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그 단정에 상당한 留保가 필요하다. 제3차 7개년계획에 있어서 北韓경제운용의 새로운 체제는 아직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 과거 경제와 정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北韓의 體制 및 路線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틀』내에서 경제活性化를 위한 제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것은 北韓경제가 『자기식대로 살자』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경제로 돌아

간다는 것이 아니며, 경제정책의 새로운 움직임이 장래에도 현재와 같은 위치에 머물것이라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진행시킬 것인가는 北韓내부에서도 강-온건파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지도층 가치관 살펴야

그러나 北韓의 이와같은 자세변화가 기초적으로 중국이나 소련과 같이 實用主義로서의 수정이나 開放化가 결코 아니라 경직된 경제체제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데에 우리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본질 및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경제정책결정의 토대가 되는 北韓지도집단의 기본가치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北韓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北韓지도층의 認識(Perception)과 性向(inclination)으로, 前者는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을 말하고 後者는 정치적인 선택을 돕고 있는 지배지도층의 性向을 말하다. 이들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 및 경제운영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끼친다.

근자에 쏟아져 나오는 北韓의 일련의 대남공세와 제의들은 이와같은 지도집단의 기본가치관에 따르는 對南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北韓과의 경제교류의 진행속도와 준비상황을 지켜볼 때, 對北韓 경제교류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하면 차질없이 개척하여 상호이익이 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對北 교역 질서있게

우리의 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끼칠 효과나 경제교류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北韓의 어떤 상품이라도 수입하고, 기술이전 및 어떤 부분이라도 습득하겠다고 달려 들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를 통괄하고 조감할 수 있는 중추적 기구를 중심으로 北韓의 實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그 기초를 두고 남북 경제교류를 단계적-체계적으로 질서있게 진행시켜 南-北韓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北風에 흔들리는 『보통사람들』

池龍雨 논설위원 실장
京鄉新聞 時評('89. 2. 8.)

요즘 우리의 對北정책은 흡사 장비도 없이 險山에 올랐다가 악천후를 만나 허둥거리는 아마추어 등산가 꼴이다.

鄭周永현대그룹총수가 北韓에서 물고온 『金剛山 바람』에 남녘 사회전체가 춤을 추며 술렁거린다. 하기가 북한과 손잡고 금강산을 공동개발하고, 시베리아에 함께 진출하며, 造船·철도차량합작에도 합의를 보았다니 그게 어디 보통 뉴스인가.

모두들 들뜨고 흥분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신문과 방송엔 연일 새롭고 놀라운 南北관계기사와 특집물로 넘쳐흐른다. 冷戰구조 아래 꼭 막혔던 북한정보가 붓물 터지듯 범람하고 있다. 장안의 화제도 온통 『북한이야기』뿐이다.

요즘같이서는 44년동안 굳어진 分斷의 장벽이 북한측의 자진철회로 당장에라도 허물어져 그곳으로 남쪽의 이산가족과 관광물결이 海溢처럼 역류해 들어갈것만 같다. 統一도 코 앞에 다가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한데 길 닦아놓으니 뭇부터 지나간다던가. 길도 닦기전에 금강산으로 통하는 鐵原·高城 등 지역에 투기꾼이 설치면서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금강산관광 문의를 하는 성급한 시민들도 더러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突然變異』를 보는 각계의 시각도 群盲撫象격으로 구구각색이다.

與圈은 鄭회장의 방북성과를 『6공화국의 북방정책이 可視化된 첫 작품』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守舊세력과 右派는 정부와 업계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위험한 幻想만 심어준다고 못마땅해 한다. 그런가 하면 在野쪽에선 金日成주석이 연초에 제의한 『남북정치협상』을 공식 수락한다는 성명까지 내며 한술 더 뜬다. 이건 마치 지휘자없는 오케스트라요, 멋대로 연

주되는 不協和카프리초다.

남쪽에서 들려오는 이같은 중구난방식 『금강산 소동』을 듣는 북한지도층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 한 번 짚 생각해 보았는가. 『정주영이』 한사람 불러 어깨를 두드려 보냈더니만 온통 『남조선』전체가 미친 듯 들썩이더라며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겠는가.

냉정히 생각해 보자. 목이 마른 쪽은 북한이다.

그러니 우물 파자고 조르는쪽도 북한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북한측은 거드름을 피우고 우리는 돈을 들여가며 우물을 파주지 못해 안달하는 형국이 되었으니 主客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셈이다.

북한은 거둬들인 경제실패와 군사비 과다지출로 외채와 외화결핍의 2重苦를 겪고 있다. 수 십년간의 폐쇄적인 경제전략과 내부지향적 공업화 정책으로 국제화 시대에의 적응력을 상실한 채 발전의 한계점에 부닥쳐 있다. 게다가 中國의 실용주의 노선과 蘇聯의 『글라스노스트』(개방)가 북한에게 언제까지 『강건너 불』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소위 『主體사상』의 이념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해 온 북한은 마침내 『금강산도 食後景』이라는 현실에 뒤늦게나마 눈을 뜬 것이다. 그들이 것처럼 헐뜯던 부르주아 자본주의로 비대해진 『남조선』의 대표적 기업가 『정주영이』를 초청해 협력을 부탁하기에 이른것은 결국 苦肉之策이다. 그들의 상투적 표현마따나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는 매관자본의 우두머리를 불러 도와달라자니 내심 자존심 깨나 상했을 법하다. 그래서 표면상의 초청 명분은 『北의 가족친지들과 상면차』라는 인도주의의 허울을 씌웠다.

다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南과 北이 극적인 국면전환으로 대결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나아가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우리쪽이 이용 좀 당한 들, 손해 좀 본들 별 문제가 아니다. 異民族도 도와주는데 향차 같은 뿌리의 동포를 돕는 일이야말로 큰형다운 도량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北의 자세와 北을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고 본다. 우리가 『北의 엄청난 變身』을 보고 놀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북

한의 무연탄을 실은 배가 南浦에서 직접 仁川항으로 들어와 짐을 부렸는데도 平壤방송은 남북간에 어떤 형태의 무역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으며 상담에 관한 보도는 의도적인 모략이라고 잡아뭄다.

金剛山공동개발이 합의된 마당에도 北의 대남 비방선전은 여전히 거칠고 거세다. 북한은 『남반부』의 동포기업인과 『합작』을 논했을지언정 당국간에는 아직 거래를 틀 의사가 없다는 자세다. 그렇다면 우리 쪽의 호들갑은 무엇을 뜻하는가?

답답한 것은 같은 輿圈안에서도 손발이 맞지않는 불협화음이다. 鄭회장의 訪北 문제만 해도 총리실과 외무부, 국토통일원등 주무부서가 겹돌림을 당했다는 쑥덕 공론이다. 幕後접촉설이 떠도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방문결과에 대해서도 民正黨내의 強·穩派의 목소리가 다르고 安企部의 소리가 또 다르다. 하물며 재야·학생·지식인의 목소리가 같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더 더욱 한심한 작태는 이른바 公黨을 거느린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金日成과 면담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그를 만나는 것이 畢生의 정치적 목표라도 되는양 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지리멸렬의 남쪽 사람들을 상대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쉽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옛날 중국 天子가 조선 사신을 접견이라도하듯 대기중인 남쪽 인사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선심(?)을 베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는 북한측이 오히려 高姿勢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체 이런 경망스런 물골을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노출시킬 것인가.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는 민주사회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나무랄 일이 못된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 사활이 걸려있는 남북문제에 관한한 그 잡다한 목소리들은 최종단계에서 여과되어 한 목소리로 다듬어져야 하지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대좌에서 북한의 『誘水정책』에 말려들어 손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 그 幻想과 現實의 차이

張斗星 논설위원

中央日報 칼럼('89. 2.10.)

『키신저』는 實利外交의 명수로서 지나치게 냉혹한 국제정치 놀음을 能事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대한 비난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의 實利外交가 바탕으로 삼은 원칙 하나만은 南北韓관계의 민감한 단계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그것은 혁명세력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정상적 국제관계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혁명의 수출과 같은 과격한 현상타파 정책보다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원칙이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그와 같은 원칙을 中國에 적용했다. 그 결과 美國은 베트남에서 敗戰의 쓰린 맛을 겪었지만 대신 中國을 美國의 친구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키신저』는 베트남과 캄푸치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지만 하노이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속에서 北京으로 날아가 毛澤東과 축배를 드는 하나의 기적을 낳았다.

韓國국민들을 온통 들뜨게 만든 金剛山 공동개발 합의와 어제 깨어진 南北정 부간 협상의 좌절을 보면서 우리는 『키신저』가 구사했던 實利外交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음미해야 할 것 같다.

盧泰愚대통령은 선거 유세중에 『큰형의 입장』에서 北韓을 南北和解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 공약은 그 후에 나온 여러갈래의 對北제의로 구체화되었다.

7·7선언으로 집약된 그런 입장은 종전까지와 같은 1對1의 사소한 경쟁을 초월해서 좀 밀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모른체하고 北韓측 요구에 응하겠다는 자세

를 어느정도 보여준 게 사실이다.

그것은 인구면에서나 國力면에서나 국제적 흐름의 측면에서 南韓이 큰형노릇을 할 만한 자신감을 前提로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자세는 北韓을 정상적 국제관계의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것 같았다.

정부 차원의 南北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상태에서 느닷없이 전해진 金剛山과 시베리아 共同개발 및 元山 기관차·조선소 합자건설 합의는 그와같은 전략이 마침내 굳게 닫혀져 온 北韓의 문을 열게하는 계기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부풀게 했다. 정부차원의 합의가 아닌 기업자와의 합의이긴 하지만 70年代初 美中관계를 극적으로 열어준 핑퐁 外交와 비슷한 돌파구가 열리는 것일까.

『큰형 전략』, 『키신저 전략』은 과연 결실을 가져온 것일까. 中國과 蘇聯 및 東歐圈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西方자본과 기술을 갈망하고, 中央집권적 계획경제를 탈피하려 몸부림치면서 西方과의 평화공존 관계를 수립하려는 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平壤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런 변화의 前兆로서만 金剛山개발은 타당성을 가질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기 전에 올해 안에 金剛山구경을 할수 있다는 鄭周永회장의 傳言에 온 국민의 마음이 들뜨고 있는 것은 위험스런 환상에 홀리는 꼴이다.

그와같은 환상은 南北관계라는 거대한 흐름의 조그만 支流일수 밖에 없는 이 가능성에 정부와 국민과 기업들이 자칫 매달리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큰형』이 쥐고 흔들려던 고삐를 오히려 동생 손에 들려주어 平壤이 그 고삐를 늦췄다가 당겼다 하는데 따라 큰형이 一喜一悲하는 꼴이 된다면 그것은 『큰형 전략』의 主客顛倒며 장기적인 南北관계를 또 한번 不信의 늪 속으로 후퇴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스런 함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한 전진을 하기전에 金剛山 구경이란 本末顛倒의 北쪽 제의가 과연 총체적 南北관계의 전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측 태도중에서 가장 不可思議한 점은 南北관계의 본질인 高位당국자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 왜 金剛山 개발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느냐는 점이다.

개발 합의를 먼저 서명케하고 실무팀의 타당성 조사를 뒤로 미룬 조급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또 南北관계에 새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남쪽국민들의 기대를 북돋워놓고 곧 이어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구실로 정부간 대화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행동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적어도 지금까지의 北韓측 태도로 보면 『큰형 전략』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이 自明하다. 北韓은 그들이 굳혀온 唯一체제의 利點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정부와의 관계는 일관되게 기피하면서 남쪽 민간단체와의 교류는 자유자재로 유도함으로써 南北관계에서 우리정부를 소외시키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金剛山 개발 합의는 그런 면에서 사태진전의 고삐를 北韓이 잡으려는 극적인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시도는 民主化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개혁이 곧 南韓체제의 강화를 뜻한다는 점을 모르거나 그 과정의 진통을 혁명전략이 파고들 틈으로 誤判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誤判은 南北관계의 앞날을 위해 위험스러운 잠재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對北접근 방식이 너무 조급하고 방만했던 점을 당국자는 깊이 省察하고 이 단계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키신저 전략』은 혁명세력의 혁명수출이 정상적 관계개선 보다 훨씬 값 비싼 代價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설득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한 軍事力

梁性喆 경희大대학원 교수

國民日報 時論('89. 2.21.)

최근 美國보도는 美CIA를 인용, 북한의 병력이 1백만이 된다고 발표했고, 지난 9일 국방부는 이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創軍 40년만에 처음 출간된 國防白書(1988)가 북한 병력을 87만, 남한 병력수를 65만으로 추정하는데 이어 불과 두달 사이에 북한병력수를 上向조정한 것이다. 미국은 카터정부 당시에도 북한병력을 상향조정한 때가 있으므로 크게 놀랄 것은 없으나 그 발표시기등이 함축성을 지닌다. 영국의 전략연구소(IISS)는 1960년대 초부터 세계각국의 군사상황을 담은 연감(The Military Balance)을 발행하고 있다. 이 연감의 1988~89년 판에 의하면 남북한 兵力은 각각 62만9천명, 84만2천명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한의 예비군 병력수를 육군50만, 해군4만으로 추정하고 이들은 12시간 내에 그 동원이 가능하며 또 5백만 예비군이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는 예비병력을 4백5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 병력수를 추정하는데 상향 또는 하향조정이 빈번히 있는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正規兵力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히 북한의 경우 그 숫자가 공식으로 공개되지 않아 처음부터 추산만이 가능하며 그 추산의 기준 변동 또는 은폐부분의 새로운 발견 등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력수의 정확도의 한계를 유념하면서 지난 근 30년동안 해마다 남북한 병력수를 추적하여 발표해 온 IISS자료를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관찰을 해보자.

첫째로 남북한 병력수를 합치면 1백43만1천명으로 소련의 5백9만6천명, 중국의 3백20만명, 미국의 2백16만3천2백명에 이어 世界 4위가 된다. 북한병력을 84

만으로만 보아도 이는 蘇, 中, 美, 베트남(1백25만2천명), 이라크(1백만명)에 이어 세계 제6위이고, 한국은 북한, 터기(63만5천명)에 이어 8위가 된다. 병력수에서 남북한을 앞서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인구, 영토, 경제규모에서 세계 최강국들이거나 이라크, 베트남처럼 전쟁상태 또는 準전쟁상태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오늘의 군사력 비대화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인구비례로 보면 북한병력은 1천 명당 39명꼴(84만2천 對 2천1백68만8천)이고 남한은 14명꼴(62만9천 對 4천2백91만2천)이 된다.

둘째로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한국군 수는 10만에서 16만 정도였으나 전쟁중 급격히 60만명 선으로 늘어났고 전쟁후로는 50만명~60만명 선으로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쟁직후 30만명 선에서 계속 늘어나 1970년에는 40만명 선, 1977년 50만명 선, 1979년엔 60만명 선, 1985년에는 80만명 선, 1989년에 이르러 1백만명 이라는 엄청난 추계까지 나오고 있다.

셋째로 북한병력수의 증강을 남북한 경제성장과 對比해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를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성장개념(GNP)으로 추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북한자료의 결여, 신빙성 등이 감안되어야겠지만 이러한 현실적 방법론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충 6·25이후 6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다가 60년대 중반부터 남한이 따라잡기 시작,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크게 앞서게 됐고 그후 격차의 폭이 계속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북한의 성장률은 계속둔화, 이제는 남북한 경제규모가 5對1내지는 6對1정도로까지 큰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은 兵力수에 있어서 남한을 능가하기 시작한 때에,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상회했음이 주목된다. 이 현상을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경제성장에서 남한에 뒤떨어진 不利를 병력우위로 배우려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북한의 병력수의 급격한 증강이 북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보편적으로는 이 두 원인 결과의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도 풀이된다. 즉 북한은 남북한 경제경쟁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객관적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군사경쟁에서 군병력을 늘림으로써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不安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군사비 측면에서 남한은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큰 증가의 폭이 없이 거의 현상유지를 해오다가 70년대초를 계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70년대초 미국의 월남戰 패배의 기미, 닉슨독트린에 의한 駐韓미군감축, 美무상군사원조의 단계적 감축(1977년 종료),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군창설, 한국군현대화 계획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남한의 군사비 증가가 북한의 월맹식 남침의도에 대처하려는 것이 그 主動因이었다면 이 기간동안 북한의 군사비 지출에는 그러한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군사비 증강뒤에 북한의 군사비와 병력수가 증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不信하고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불신과 오판은 남북한 군사경쟁 악순환의 큰 고리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괴적이고 非生産的인 군사경쟁의 상호상승적 악순환에서 남북한이 벗어나려면 맨먼저 思考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군비증강 일변도 사고방식을 止揚하고 남북한 군사균형이 현상유지나 감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신뢰구축방안(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이나 상호위험감소 체제(RRR · Risk Reduction Regimes)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바로 이 시점에서는 統一이라는 열띤 감정의 호소나 열망보다는 분단극복의 장애요인의 제거라는 냉엄한 현실에의 냉철한 접근이 더 긴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南北韓교류 教會가 앞장을

李三悅 숭실대교수

東亞日報 時論('89. 4. 1.)

남북한의 여러가지 교류 가운데서도 교회의 교류는 독특한 의미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특별한 문제를 갖게 된다.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교류보다도 더 同質的인 교류가 될수 있는 것이 교회의 교류며 종교인의 교류다.

사상과 이념의 벽을 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증거한다는 신앙 고백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렇게 진한 공통분모가 다른 교류에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작금에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남북한 교회교류의 논의와 제안들을 보면서 이것이 교류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실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미 개신교의 여러 교단에서 북한교회대표자들을 총회나 대회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띄워놓고 있고 성탄절 예배나 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제안해 왔다. 북한교회의 교회당 건축을 위한 기금모금이나 피아노 종을 선물하겠다고 모금을 하는 단체도 여럿이다.

천주교에서는 금년 성체대회에 오시는 교황의 북한방문과 平壤의 장충동 성당의 미사집전 등으로 실질적인 교회교류의 길이 앞당겨 열리게 될 것 같다.

남북한 교회의 직접교류가 아직은 구상이나 제안으로서만 있고 평화회담이나 군사문제 해결의 우선을 내세워 교류일반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진척된다면 곧 활발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그 이유는 우선 남한측에서 종교인 교류는 무엇보다 유리한 교류라고 판단하고 있고, 북한측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과시함으로써 남한의 반공의식의 변화로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교회의 교류는 남한의 1천만 기독교인과 북한의 1천만 이상의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화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 극복의 면에서도 어떤 다른 교류나 대화보다도 평화와 통일에 중대한 의미를 갖게된다.

그러나 교회의 교류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고 교회의 선교적 차원에서 의미로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신중히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한은 열세의 교회지만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비해 남한은 수 십개의 개신교단과 여러개의 연합기구로 분열되어 있다.

이 점에선 단일조직과 기구를 가진 천주교가 남북교회 교류를 훨씬 용이,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한의 개신교회들이 제각기 교류와 합동예배 초청방문들을 제안하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왕에 한국교회협의회(KNCC)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조선기독교도연맹』과 교류의 길을 터 놓았으니만큼, 이창구를 살리면서 조심스럽게 협의와 유대를 통해서 교류나 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KNCC에서는 남북교회교류를 추진하는 범교단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비가맹교단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다른 한편 북한의 교회는 아직 교도연맹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역교회의 연합체나 교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에큐메니컬운동이나 국제교회관계, 남북교회교류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 같다. 언젠가는 교회기구나 교단을 만들수 밖에 없겠는데 북한의 교회는 이때 남한에서처럼 수십 개의 교파적 교회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로 남북교회 교류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문제인데, 아직 남한의 교회들은 대부분 『북한선교』를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북한선교위원회들을 조직하며 강화해가고 있다.

교회의 교류가 선교를 목적으로함은 당연하지만 『북한선교』란 말은 기독교선

진국들이 후진국 미개국에 선교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따라서 선교위원회의 명칭도 『평화선교위원회』나 『평화통일선교회』 혹은 『남북선교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교회의 교류나, 교류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선교의 내용도 교파적 교회의 설립이나 확장이 아니라 『평화선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原罪와 같은 분단이라는 惡의 구조를 청산하고 민족이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平和宣敎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선교적 과제는 없기 때문에 남북한에 대한 선교의 방향과 교회교류의 목표는 평화선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理念問題

북한의 책들도 ‘수입개방’해야

— 출판인 구속은 화해정책과 모순 —

한겨레신문 사설('88.11. 5.)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과 유엔총회 연설의 연운이 컷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현정권의 ‘통일’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북한의 실상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관점에서 찬양했다』는 이유로 <미완의 귀향일기>라는 북한 방문기를 압수하고 출판인을 구속하는 한편 『좌익편향적 시각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해방조선>을 낸 출판사의 대표 역시 구속했다. 한마디로 북한관계 서적 출판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정부의 ‘개방’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미교포 홍동근 목사가 쓴 <미완의 귀향일기>는 지금까지 출판된 여러 종류의 북한 방문기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검찰은 왜 하필 이 책만을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불법서적’으로 낙인찍는가? 더구나 이런 일을 보고 국민은 ‘목사와 폭력적 공산혁명’이라는 비논리적 주장, 즉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과 같은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구나 <해방조선>은 8.15 직후의 역사 연구에서 ‘첫 손에 꼽히는’ 중요한 자료집으로서 한국의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책이다. 도대체 당국은 어떤 ‘과학적’ 선별기준으로 탄압할 책과 출판사를 가려내는가?

일부 언론은 이런 서적들이 ‘학문적 연구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책들을 펴낸 출판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상업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공인된’ 이론이나 이념만을 허용하는 것은 입장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세계의 기본원칙과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짓밟는 것이다. 그뿐 아

나라 이른바 ‘상업주의’란 것도 사실은 당국이 부추기고 장려한 셈이다. 판금도서가 왜 어김없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를 곰곰이 되새겨 보라.

정부가 반 세기 가까이 북한의 문화와 학문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출판의 자유를 탄압하기만 하니 국민대중이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도 이런 책들을 많이 찾을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왜 외국의 문물과 상품은 철저히 ‘수입개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만은 폐쇄적 태도를 보이는가? 왜 출판계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거부당하고 억압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북한관계자료를 일방적 편향적으로 개방할 때,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대한 기존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정부는 소련이나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 까지 개방을 확대한 뒤 모든 것은 국민의 이성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사회주의보다 자유가

朝鮮日報 社說('88.12.18.)

사회주의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제도 또는 자본가의 착취를 止揚하고 노동자-농민 등 無産계급이 권력을 장악, 체제를 지배해야 한다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가 지금 도처에서 脫穀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16일 소련의 티타렌코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장이 일본 기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한반도 관련 발언도 그 진통과정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그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한 쪽이 행동을 취하면 다른 쪽은 이를 나쁘게 받아들이고, 이 편이 승리는 저 편이 패배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런 힘의 논리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다.

티타렌코가 말하는 『힘의 논리』는, 韓半島에 관한 한,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신해 마지않는 북한의 권력자들이 의존하는 바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이라는 神話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생산력의 급속한 하락과 함께 유럽에서는 70년대 중반 유러코뮤니즘이 현실 문제로 등장하면서 부터였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란, 자본주의의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56년의 헝가리자유화투쟁을 시초로 68년의 『프라하의 봄』까지, 東유럽에 燎原의 불길 처럼 번진 자유화 투쟁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인하는 상징적 사건들이었다. 유러코뮤니즘이 이에 눈을 뜬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무자비한 레닌식 혁명이나 스탈린식 숙청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르바초프 등장이후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그와 비슷한 開眼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티타렌코의 일련의 발언은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는 북한측이 소련의 對韓접근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북한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한다.

너무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북한당국자들이 지나치게 그들의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이 劣等하다고만 인식해 온 남한의 체제와 도저히 손을 잡고 共存할수없는 硬直된 입장을 말함이다.

북한당국자들은 이 경직된 자세를 풀어야 한다. 티타렌코의 기자회견이 있는 같은날 서울에서는 바로 4년전까지 平壤주재대사를 역임한 헝가리의 에트레 산도르대사가 寬勳클럽초청 오찬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의 여러가지 우호적인 발언가운데서도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민주화가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오히려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헝가리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이 채택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고 대답한 대목이었다.

요컨대, 자유와 민주주의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관계개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또는 자본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체제 또는 체제를 지탱해 주는 이데올로기지만 구체적으로는 생활의 방식이라고도 할수있다. 지금 세계는 그 생활방식보다,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보다 민주적일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 거센 흐름에 逆行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北韓』出版과 良識

한국일보 社說('89. 1.20)

국내외로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급하다. 급변에 적응할 사고의 회전과 조절이 어려울 정도이다. 북방정책의 개방화는 이념의 장벽이 무색할만큼 급진전을 이루는 양상인 반면, 국내에선 보수와 혁신의 묵은 논쟁이 예견되기도 하는 까다로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서울 올림픽 이후, 중국은 물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나라와 정식 국교관계가 없이도 활발한 『通交』가 예상을 뛰어 넘어 전개되고 있다. 人的·物的 교류는 새삼스럽지 않게 상대를 서로 인정하며 그 수위를 높여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도 겉으로는 경색상태를 탈피 못 한 듯 하면서 개방의 흐름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게 숨길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라 하겠다.

민주화 전환기에서 그동안 권위주의에 억압 당한 표현과 연구의 자유도 용수철 튀듯 분출함은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너그러이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출판계도 오랜 시련을 겪었다. 특 하면 불온의 낙인이 찍히고 판매금지·강제 회수라는 강압적 수단이 동원되어 출판의 자유를 숨통부터 틀어 막았다.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마치 반작용처럼 이념 서적이 줄을 이어 간행되고, 심지어 북한의 간행물이 아무런 여과작용없이 서가에 꽂히게 되었다. 그 중엔 김일성의 연설문 따위도 들어있고 북한의 전형적 선전예술 작품까지 포함하여 2백여종이 마구잡이로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공개사회의 최대 이점은 대담한 개방성이다. 불씨를 덮어두기보다 아주 태워없애 버리는게 문제해결의 첩경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별것도 아닌데 숨기면 호기심만 촉발할 뿐이다. 차라리 터놓는게 옳은 자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법의 선택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출판의 양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혼미하다. 북한의 정책과 정략은 이념과 선전을 언제나 일치시킨다. 이념은 선전을 통해 달성하고 선전은 이념의 무기로 활용한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북한의 선전 책자를 그대로 배껴 옮겨 발간한다는 것은 출판인의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할 뿐이다. 더군다나 일시적 장사속으로 그랬다면 그것은 반문화적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바다』라는 선전작품을 『血의 海』나 『민중의 바다』나 하는 제목을 달아 출간함은 독자의 눈을 현혹케 하는 작태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가 궁색하지 않은가. 그 저의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명태와 광산물을 수입하는 마당에 책을 내면 어떠냐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단순한 물자교류와 활자에 의한 사고의 移人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TV를 통한 영상매체의 북한소개와도 그 성격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영상의 기록은 표피적이거나 활자의 기록은 판단을 오도할 수 있을만큼 인상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통일을 염원하면 남북이 서로 알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질감의 해소는 그 실체의 다름을 확인하는데서 시작된다. 이 과정은 시간을 두고 견뎌내야 할 것이다. 쌍방이 비판적 안목을 키우고 동질성을 찾을때 진정한 화해가 성립된다. 지금은 남북한이 서로를 선입관 없이 배워야 할 시기다. 우리가 덤빌 까닭이 하나도 없다.

북한을 알기 위해서라면 북한서적을 직수입하여 전문서적상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떳떳하게 하면 법적인 하자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줄 안다. 대북문제에 관한 한 어느분야이고 경쟁적으로 나서는 일은 삼가야 옳다. 국민의 경각심이 따르고 합의가 뒷받침할때 바른길이 열린다.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슬기가 아쉽다.

北韓서적 出版문제

— 原則과 균형이 있어야 한다 —

中央日報 社說('89. 2.10.)

第6共和政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는 對北歐政策이다. 그것은 南北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몇 차례의 政策宣言을 통해 北韓에 대해 開放化·自律化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통일 논의가 자유화되고 北韓과의 경제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로동신문 등 北韓의 대표적인 체제 대변지들도 공개되고 있다. 선전용으로 제작된 『청년학생축전』動寫眞이 TV로 전국에 반영됐다.

이런 정책 변화에 병행하여 民間에서는 北韓 저작물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치·경제·사상·역사·문학등 각 분야 80여종의 北韓 原典들이 시중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 原典들 가운데 北韓에 대한 무절제한 찬양·선전 서적들이 들어있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은 37종의 北韓 原典에 대해 판금령을 내리고 출판인 3명을 구속했다. 北韓의 對南선전용 FM방송에 대해선 전파방해로 대응키로 했다.

당국의 단속대상 서적은 ① 北韓의 對南선전과 폭력민중혁명에 적극 동조한 것 ② 좌익시각의 歷史書 ③ 主體思想 찬양서 ④ 北韓體制的 우월성을 강조한 서적 ⑤ 北의 선전자료를 묶어 편집한 책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基準이 기존의 開放化·自律化정책과 어긋나고 그 한계가 모호하여 혼란을 빚고 있다. 北韓 原典의 단속에 있어 정부는 보다 명쾌하고 합리적인 原則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朝鮮의 민속놀이』 『北韓사람들이 즐겨읽는 옛날 이야기』등 非이데올로기 서적들이 금서목록에 들게 됐다.

規制의 한계를 설정할 때 우선 『공산주의』 일반과 『북한체제』의 항목으로 구

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사실 소개, 체계적인 평가, 적극적인 찬양을 구분하여 그 중 어디에 線을 그을 것인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그 原則은 어떤 前提에서 세워져야하는 것일까. 우리가 開放化로 나가는 이상 일단 前進的 자세에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출판물이나 이념적 출판물을 무조건 위협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국민의 知的 비판력에 자신을 가질 때가 됐다고 보아야 한다.

體制선전이나 金日成우상화를 위해 만든 책을 原典 그대로 출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해설이나 비평을 곁들인다면 北韓의 체제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出版人들도 보다 건전한 選擇기준을 가지고 출판에 임해야한다. 北을 理解하고 交流에 도움을 주어 결국 統一에 기여하자면 宣傳的 出版物이 우선될 이유가 없다. 학술·문화적 저작물, 非이데올로기 출판물이 우선돼야 마땅할 것이다.

理解와 交流는 相互的인 것이다. 開放의 물결이 오고 있다해서 과연 南의 출판물이 北에서 출판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開放과 自律化에 停滯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원칙과 균형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大學街의 思想汚染

— 共產主義를 아는것과 선전은 다르다 —

京鄉新聞 社說('89. 2.25)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확산된 우리사회의 理想的 아노미현상은 이제 金日成 주체사상과 金正日의 지도력을 공공연히 찬양·미화한 책자가 대학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 教材로 배포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 내용도 金日成을 8시간 노동제와 남녀평등을 실현시킨 사회주의 지도자로 추켜세웠고 金正日이 후계자가 된것도 金日成의 아들이라는 이유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그의 역할이 당과 인민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美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당국이 住民세뇌용으로나 만들었음직한 내용의 책자가 대학가에 공공연히 배포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學問의 自由도 좋고 북한of 실상을 바로 알자는 운동도 좋다. 그러나 北韓의 體制를 美化하고 북한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代辯하는 것이 과연 학문의 자유이고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접근방식인지 묻고싶다.

대학시절은 어느 특정 이데올로기의 성급한 선택보다는 다양한 사상 체계와 교양을 끌고루 섭렵하고 올바른 濾過과정을 거쳐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세우는 가장소중한 기간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의 첫 출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呪縛에 묶여 허우적거리거나 극히 偏向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斜視的知性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개인을 위해서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나 불행하기 짝이없는 일이다.

우리는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知彼』의 노력이 있어야한다. 즉 공산주의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굳건히 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理解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말이다. 그것은 학문을하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님은 더 말할것도 없다.

다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사상 이상의 것이며 世界赤化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있는 일종의 類似宗教的 이데올로기이다. 北韓의 실상만해도 그렇다. 40년이 넘는 1인독재체제로도 부족해서 세습체제까지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철저한 사상통제를 하고있는 실상은 외면한 채 8시간 노동제를 내세우고 남녀평등을 들먹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지극히 편협한 시각이 아닐수 없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책자가 總學生會에 의해 제작되고 배포되었다는 사실이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在野운동권의 前衛組織化하고 대학신문이 民衆이데올로기의 선전수단화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의 공식기구가 북한의 선전·선동주장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것은 오늘날 우리대학가의 『思想的 汚染』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검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한것은 오히려 때늦은 느낌마저 없지않지만 적어도 이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내리는 일만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와 아울러 이제야말로 대학당국과 教授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때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大勢라는 미명아래 수수방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偏向된 思想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학당국의 保身主義的인 放任과 일부 진보적 교수들의 부추김이 오늘과 같은 理念的 아노미현상을 더욱 深化시킨 것이다. 대학생들의 사상 오염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學問의 自由는 물론 중국엔 대학의 숨통마저 끊는 결과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절규의 북한학생 亡命

東亞日報 社說('89. 2.27.)

북한 대학생 두 명의 망명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해준다. 北方政策에 대한 과잉기대가 어느새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일부 극렬운동권 학생들의 북한찬양이 번지고 있는 이즈음 이들 두 북한대학생의 망명은 北韓實相에 새로운 각성제 구실을 해준다. 북한주민이 아무리 민족공동체로서의 동반자이고 그들과 끝내는 통일국가를 이룩해야할 상대지만 金日成一黨의 독재폐쇄체제는 여전히 북한주민을 桎梏의 굴레로써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하는 것이다.

50년대 이래 북한주민으로서 한국에 망명 귀순한 사람은 60여명에 달한다. 최근의 기억만 되살려봐도 83년 李雄平씨의 귀순을 비롯하여 87년 1월에는 金萬鐵씨 일가가 극적탈출에 성공하여 우리 품에 귀순해 왔고 88년 3월에는 金昌貨 魚成日 두 청년이 中國을 거쳐 망명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사회안전부 간부를 지낸 金正敏씨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망명해왔다. 이번 두 대학생의 망명은 이같은 북한주민의 잇따른 귀순이라 보아넘길 수도 있지만 대학생, 그것도 북한사회에서는 장래가 보장된 외국유학생으로서는 처음이며 요즘처럼 남북교류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들 학생들이 말하는 망명동기는 북한사회가 『초보적인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정치가들이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오며 복종과 억압을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보적 자유의 제한이나 기만과 邪術에 의한 억압통치가 세계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극악의 상태임은 세계가 다 알고있는 바이지만 북한 주민들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같은 진실의 開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특히 『체코』에 유학중인 1백50여명 북한유학생중 95%가 북한체제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말은 북한정권 자체가 얼마나 허

위와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를 실감케 해준다.

우리는 한사람의 북한주민이라도 金日成 金正日체습체제의 허구성을 看破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히 이번 두 학생의 결단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들은 북한사회가 말하는 『토대』도 좋고 외국유학이라는 북한사회에서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特典을 입은 사람들인데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환상이나 金日成 金正日체제의 허구성은 이들 두 어린 학생들의 결단의 거울 앞에 그 實體를 드러낼 것이다.

이들 두 학생들의 망명을 교훈삼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자유 개성 평화 통일을 바라는 2천만 주민과 이들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울가미를 씌우고 채찍을 가하는 김일성집단의 폭압정치가 並存하는 북한의 실상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民族史的 시야에서 바라볼때 김일성집단의 실체가 어떻게 개념지워지고 어떻게 位置지워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論證이 있어야 한다. 진실을 접어둔 허구적인 논리나 환상으로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한다. 20세를 갓 넘긴 두 북한학생들의 양심의 눈으로 보고 느낀 진실을 거울삼아 2천만 북한주민들의 고난과 이들앞에 채찍을 들고 선 김일성집단의 정체를 바로 살피야 한다.

北韓속의 北韓

- 목숨 건 두 留學生의 『亡命證言』 -

한국일보 社說('89. 2.28.)

『북한 속의 북한』이 있음을 다시 알았다. 겉으로의 북과 속으로의 북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완전무장한 북한의 외관은 일사불란하고 요지부동인 것만 같다. 그러나 안으로 기본자유가 박탈되고 제한받는 불만과 갈등의 체제임이 드러났다.

체코에 유학중인 두 북한학생의 목숨을 건 서울망명은 북한속의 북한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을 던져 실증함으로써, 분단시대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번민과 우울의 무게를 가중케 해 준다. 두 대학생이 토로한 망명동기는 언뜻 듣기에 단순한 듯 하나, 인간 본연의 절규가 가슴을 뒤흔든다. 그들이 북한에서 살기 싫은 이유는 『초보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밖에서 1년이상 살아보면 이북생활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북한의 실상이 바로 그런 것임을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을 줄 안다.

민족분단의 고통은 이념과 체제가 갈라 놓았다고 할수있다. 그 갈등의 심화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르고 반세기에 가까운 대립과 긴장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은 남북한이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폐쇄와 개방의 대결은 이미 구시대의 유산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완고한 사회주의 체제도 개방과 개혁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것은 이념의 우위만을 고수하던 경색된 사고가 사람다운 삶의 가치에 개안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념투쟁을 최선으로 여긴 혁명시대가 종지부를 찍었음은 확실하다. 개방사회는 갈등을 흡수할 능력이 있으나 폐쇄사회는 오히려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다. 시대의 분명한 흐름이다.

북한만이 유독 이념과 체제의 폐쇄를 고집하고 있다. 획일적 평등의 구현을 내

세워 지상천국의 도래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속 사정은 기본권의 보장마저 거부하는 반자유의 역류를 타고 있는 것이다.

두 유학생의 망명소식에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생활을 누리려는 쓸개 빠진 건달꾼』이라고 상투적인 매도를 가하고 있다. 경황중의 대응이라 하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두 학생은 북한사회의 엘리트 층임이 분명하다. 주체사상으로 길러 낸 엘리트계층이 건달꾼이라면 그 속은 뻔히 들여다 보인다.

우리가 직시할것은 북한의 외형적 변화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혁명전략의 불변성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인간개발에 주목하는듯 하면서 자유의 신장은 거꾸로 억압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열의를 뿜으며 추진하는 남북대화와 북방정책 그리고 통일운동은 이런 실정을 꿰뚫어보고 냉철하지 않을수 없다. 앞장서 나가겠다고 덤벼대기만 하면 큰 코를 다칠 염려가 농후하다. 우리가 열정으로 대하면 북한은 냉정한 술수의 덫을 깔고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체제에 저항할 여지가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경직사회의 차이를 깊이 인식해 뒤야 한다.

지금 서두를 일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동포애의 감상적 접근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껍데기만 보고 당기고 밀고 할 남북관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북한속의 또 다른 북한이 있다. 두 유학생의 증언은 아무런 가감없이 들을만 하다.

그들의 망명을 진심으로 반긴다. 아울러 이번 일이 북한측의 경색을 유발하여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教條主義의 退潮

- 최근 共產圈의 知的 동향 -

朝鮮日報 社說('89. 3. 4.)

요즘 소련과 중국의 일부 이론가와 문화인들이 제기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소련의 경우는 그러한 논의들이 버젓한 公式媒體를 통해 開陳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순한 反體制派의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政權지도층의 意中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은 냄새도 풍긴다. 史學者인 니콜라이 포포프와 로이 메드베데프, 그리고 黨 중앙위원이자 철학자인 알렉산드르 티프코 및 中國의 작가 王若望등 일련의 이론가들이 제기한 論點들은 기존의 공산권 권력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聖句와 教理들에 대해 과감한 『우상 허물기』의 메스를 들이댄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民主主義와 人間的 가치로부터 이탈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1929년 이래의 스탈린主義에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는 批判의 화살을 스탈린에만 한정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논설과 역사비평 및 문학-회곡 작품을 통해 레닌-마르크스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公式들이 그가 살았던 當時의 상황에는 맞았을지 모르나, 그가 죽은 이후의 세계에도 무조건 그대로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의문한다. 그들은 또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은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이었다기 보다는 대단히 우연적인 事件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민주적 代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그들은 스탈린主義는 이미 레닌主義에서 그 씨앗이 찾아지기 때문에, 레닌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스탈린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示唆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계급투쟁論이나 공산당 1黨독재, 民主집중제란 이름의 黨內

독재, 명령식 경제관리, 소비에트와 勞組의 허용화를 비롯한 민중참여의 배제, 사회주의적 法治主義에 대한 난폭한 유린등 기본적 인권의 탄압, 그리고 복수후보들간의 경쟁을 不許하는 정치적 독재주의등, 지금까지의 마르크스-레닌-브레즈네프 時代의 非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는 것만이 사회주의 체제의 쇠퇴를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神聖不可侵犯하던 명령식, 폐쇄적 통제경제와 억압적 통치방식이 결코 聖句나 聖典의 말씀이 아니며, 정치-사회-경제에 있어서의 自由와 民主와 開放과 自律의 도입은 결코 교조주의자들이 말하는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나 『개량주의자들』의 반동적 망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圈내부의 知的 동향은 그러한 나라들 자체를 위해서도 여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非공산권 발전도상국들 내부의 知的 동향에 대해서도 하나의 귀중한 참고가 돼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부패한 지배세력의 억압과 富의 불공정한 배분에 저항하는 變革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變革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더라도 제발 바깥 세계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된 마르크스-레닌-스탈린-모택동-김일성의 낡은 教條만은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다.

굳이 사회주의 사상을 추구하려거든 民主 社會主義로 視線을 돌리기 바라며, 마르크스主義를 읽더라도 『프라하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적이고 人間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에의 열망도 아울러 함께 소화-흡수할 것을 學生-운동권에 당부한다. 中國 본고장에서는 이미 매장된 모택동 문화혁명을 한국에서 연연해하는 事例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反共은 안된다』는 주장의 虛構

서울신문 社說('89. 3.11.)

지금 우리 社會의 精確한 座標는 무엇인가. 한때 분출하는 통일논의에 밀려 左舷으로 기우는 듯 하더니 그에 대한 反動인지 極右의 論理마저 대두된 적이 있다. 作用에는 反作用이 따르게 된다. 기존의 질서가 변화될 때는 그 질서를 뒷받침하던 정치이념 체제 또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요즘 우리사회는 40여년전 建國 당시나 있었을 터인 左右의 갈등과 그것이 부딪치는 소리가 크다.

民主化의 길목에서 겪고 있는 여러가지 갈등 중의 하나가 反共을 거부하고 罵倒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지난해 6.10 또는 8·15학생회담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한 이념논쟁이 표면화 됐다. 左와 右의 극단적 어휘와 행동이 구사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反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 대학가의 과격선동 구호들 대부분이 金日成의 이른바 主體思想이었다. 그 시점에서 정부의 北韓 및 공산권 자료개방 방침이 발표되었고 反共은 더욱 뒷전에 밀렸다.

그런데 확실히 얘기하자. 왜 反共이 안되는가. 北韓 공산주의자들과 민족공동체로 共存하자는 마당에 反共은 잘못이고 안되지 않겠느냐는 단순논리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反共과 反共교육에 대한 논의는 물론 제기된지 오래다. 金日成이 도깨비 화상이고 이북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빨간 사람들과는 虛像도 시정됐다. 그것은 다시 말해 『6·25체협』만 강조하던 관제 이념교육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한다. 초·중·고교의 교과서가 개정되고 反共聯盟이 自由聯盟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反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큰 착각이요 모순이다. 반공이념교육을 수정한다는 참뜻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비시켜 공산주의를 滅共 또는 討共의 대상으로 도식화· 획일화한 硬直性에서 벗어나자는데 있다.

아무리 北韓과 共存한다지만 민족사에 유례없는 상처를 남긴 6·25전쟁의 경험과 거기서 흘린 자유의 피의 소중함을 교훈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또한 6·25전쟁이 통일혁명전쟁이며 南韓해방전쟁이라는 왜곡된 주장이나 시각이 6·25미체험 세대들을 현혹시키는 한 反共은 거부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停滯아닌 발전이며 완결 아닌 未完成이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념은 절대적 이상이라기보다 상대적 가치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 이래 인간이 창안한 제도 가운데 최선의 것이라는 명언은 아직도 진부하지 않은 표현으로 살아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진통도 그런데서 나온다. 학원내의 學事분쟁·산업현장의 勞使대립·정치권내 攻防등을 폭력적 체제전복과 좌경계급 혁명논리로 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反共을 거부하고 매도함으로써 해결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反共은 공산주의와 공산화를 거부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전혀 잘못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접근하려 민주화를 추진하는 우리에게 反共은 하나의 신념이어야 한다. 반공이 거부되고 그 신념이 흔들린 것은 그동안 권위주의적 체제가 반공을 악용하고 민주화 의지를 억압하는 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반공은 여전히 축적된 경험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

主體사상, 金日成종교

- 그 盲信徒들로부터 學生들 보호해야 -

朝鮮日報 社說('89. 3.14.)

문교부는 이른바 『主體思想』 비판책자를 제작해 中-高校와 대학에 배포할 것이라 했다. 이것을 계기로 그 사이비 『이론』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金日成이라는 특정 개인을 神格化하는 『이론』이다. 객관적 合法則性 따위는 무시한 채 오직 『首領』의 意志와 판단만이 眞理의 척도라고 맹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에서는 『首領論』이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理性을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선 우선 이 狂的인 개인숭배가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통적인 마르크스主義者들 역시 北의 『주체사상』은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다. 스탈린과 毛澤東까지 허물어지는 大明天地에서 『金日成=진리 그자체』라니, 이 정도면 『이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이비 宗教라 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주체사상』은 南韓을 『식민지 半崩건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민중에 의한 민족해방』을 호언한다. 이에 대해선 지금의 運動圈 내부의 다른 類派에서도 反論을 제기한다. 한국은 自律性을 보유한 국가 독점자본주의 사회일지언정 『식민지』나 『半崩건사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중국적으로 『베트남化』를 뜻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민족-민주 전선』이란 것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다른 계급들과 다른 政派들을 허수아비 동조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밖엔 아무것도 아니다.

金日成은 소련과 중국이 스탈린-모택동을 비판하면서 實用主義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며, 그런 걱정 끝에 보편적 마르크스-레닌

主義와도 무관한 그 자신만의 『教壇』을 만들어서 그 敎主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마르크스主義 이론에서 볼 때 金日成의 이런 類似宗教와 그의 敎主선언은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한 과대망상가의 아첨꾼들과 어용 이론가들이 急造해낸 北韓版 『龍飛어천가』요, 北韓版 『天皇숭배』의 敎說일뿐이다.

그들은 소련-중국-東歐에서 대인숭배가 비판되고, 民主化와 改革과 開放의 욕구가 분출되는데 대해, 그것을 닮을 생각은 감히 못하면서 『외국이야 여하튼 우리는 우리식대로 나가겠다』고 뱉댄다. 그러면서 그것을 『自主性』인양 강변한다. 그러나 세계의 보편적 民主化 지향을 외면하는 것이 『민족자주』는 아니다. 그것은 봉건적 金日成-金正日 세습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고집불통의 억지요, 주관주의적 오류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迷信과 유사종교가 우리 운동권 일각에 버젓이 『主思派』란 通稱으로 들어와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파시스트 독재가 하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 별것이 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했던가 보다.

본래 아무리 엉터리 같은 유사종교라도 일단 맹신도들이 몇 명이라도 생기고 보면 골치아픈 일이다. 法으로 대처할 것은 法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유사종교의 광신도들이 『미친 사람들』취급을 받게끔 만드는 『全社會的 良知』의 확립을 서두를 일이다. 일반 지식인-교사-교수-학부모-언론매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자녀들을 김일성敎 광신도들의 유괴로부터 보호해야 하겠다.

『左傾』수사 限界分明해야

京鄉新聞 社說('89. 3.25.)

『左傾폭력세력』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5천여 전국대공경찰에 무기한 비상령이 내려지고 좌경세력의 거점과 은신처를 찾기위해 특별호구조사도 실시되리라는 소식이다. 민주화에 편승한 좌경폭력세력의 체제전복기도가 확산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봄철 勞學 연계투쟁과 5월 총파업설을 앞두고 강경선회한 것으로 보아진다.

엇그제있었던 공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좌익폭력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는 한계점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있는 모양이다. 갖가지 명분의 집단행동과 폭력시위·농성이 단순한 民主化의 길목에서 있을수 있는 욕구분출의 한계를 넘어 폭력혁명노선으로 기울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한편에선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公權力은 무엇을 했느냐는 右翼보수세력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제전복 세력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건재하며 조직이 강화될수 있었는지 먼저 그 배경부터 따져 보아야할 줄 안다.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당국의 무사안일과 정치권의 방만한 대응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최근 몇 달동안 남북교류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들뜬 분위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술함을 있는대로 노출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맹목적인 北方러시는 도리어 공산주의에대해 환상을 갖게하고 북쪽의 집요한 대남전략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한 부정적 결과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상무장도 자연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심지어 金日成주체사상을 공공연히 찬양하거나 자구하나 다르지 않은 북의 선전선동 구호들을 공공연히 외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좌익세력의 체제전복

과 폭력 파괴 활동을 公權力으로 다스리겠다는 정부당국의 결연한 의지는 당연한 결단으로 받아들여 진다.

따지고보면 정부당국이 우려하는 좌익폭력세력의 준동은 어제 오늘 갑자기 문제된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의 속성이나 생태로 볼때도 언제 어디서나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 것이 좌익사상의 위장책동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치 이것은 폐결핵균처럼 病弱한 체질을 노리며 일단 기생하면 끈질긴 재발의 속성을 갖고있다. 때문에 제 때에 약을 쓰고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치유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公權力의 대응은 지나치게 방관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제는 강경일변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作心三日식으로 대처하는 등 단속의 일관성도 기준도 모두 애매했고 단순폭력사범과 좌익세력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채 『관제용공분자』들만 양산했던 것도 지난날 파행적 법운영이 빚은 폐단이다. 이번 좌경단속에도 그러한 매카시의 전철은 절대로 답습돼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당부다. 반정부시위나 민주화시위나 민주화운동이 다소 과격하다 해서 그것을 무조건 『체제전복』이라고 매도하거나 容共視 돼서도 안된다.

또 좌경세력의 척결은 치안차원의 대처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고려가 더 중시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좌경단속이 모처럼 확산된 民主化열기와 북방기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심도있고 정확한 실체분석과 공정한 법집행을 전제로한 公權力발동이 되기를 아울러 당부해 둔다.

民主主義를 ‘意識化教育’하도록

國民日報 社說('89. 4. 1.)

근자 우리 사회 일각 특히 학원가에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이변들이 속출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작금에 이르러 소위 일부 재야정치인과 운동권학생 또는 민중·민주교사라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이 어린 초·중등학교 생도들에게까지 이른바 『의식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필칭 『교육민주화』의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 작태들은 그것이 문명사회의 보편적 사고의 기준이라할 수 있는 常識律을 부인하는 逸脫行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결국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는 인륜공동체를 이룸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3~4세의 유아들에게까지 개인숭배를 강요하고 『원수 미제국주의자들을 까부셔라!』하고 가르치는 金日成독재체제하의 北韓을 제외하고서는 오늘날 세계의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증오심을 부추기고 민족성원을 友·敵관계로 대립시켜 특정계층이나 개인을 매도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나 민주교사들이 일부 재야정치세력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스승을 야유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행동, 대학총장실을 강점하고 교육시설물들을 마구 파괴하는 행위, 동족상잔의 전쟁을 도발, 수 백만 동족의 살상과 천문학적인 전쟁피해를 내게했던 민족의 원수 金日成을 『위대한 지도자』로 추켜세우면서 우리의 정통적 정부수반과 우방은 타도해야 할 『敵』으로 증오하도록 의식화하는 행위 등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작태들은 분명히 문명사회공통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탈행동의 전형이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들의 행동은 어떤 명분을 牽強附會한

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체제에 사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문교부가 31일 새삼스럽게 이들 반체제 세력의 편향된 의식화교육의 차단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統一安保교육』의 강화지침을 시달한 모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극적인 지침만을 가지고는 이미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움직임을 근원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같은 반사회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비리를 조속히 척결하고 모든 부문에 걸친 민주화조치를 가속화해야 함은 물론 당국이 바라는 통일안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도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종전의 『국민윤리』과목이나 낡아빠진 『反共統一교육』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현실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높은 통합교과방식의 운영이 절실하다. 소위 『의식화교육』의 사상적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파우로 프레리의 말 그대로 의식화란 인간주의적 가치론을 중심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각성된 민주시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상기할 때 우리의 통일안보교육은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생동적인 의식화 활동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생각하는 教育』 필요하다

— 좌경의식화에 대한 根源的 對處 —

中央日報 社說('89. 4. 1.)

교육이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훈련이다. 大學이 일반적 생각의 틀을 전제로 해서 전문적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면 初·中等교육은 일반적·보편적 사고의 틀을 정립해주는 교육과정이다.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에서부터 한 사회가 이뤄지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회와의 얽히고 설킴, 나아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보고 들으며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살아갈 德目과 理性을 깨우쳐 가는 이성적 『意識化』의 과정이 곧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교육은 유치원 입학과 동시에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으로 치닫고만 있다. 생각의 틀, 생각할 겨를마저 없이 대뜸 시작되는 외우기 방식은 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적어도 12년간 계속된다. 의식의 진공상태, 생각하는 방식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학입학과 동시에 맞게 되는 反外勢 자주 민중 革命論이라는 편향된 의식화 교육 앞에서 이들은 형편없이 무력화된다.

아무런 비판없이, 아무런 대항논리 없이 그것이 곧 사물을 보는 눈이고 사고의 틀이라고 확정해 버리고 자신의 눈, 자신의 머리로 고정화시켜 버린다. 의식의 白痴가 일순간 의식의 戰士로 변신해버릴 수 있다.

이 사회를 위협하고 이 사회를 폭력과 혁명의 소용돌이로 몰고가려는 급진 좌경혁명론자의 量産은 결국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은 우리 사회의 교육 풍토에 있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질서의 개념,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인 理性의 논리를 가정과 학교에서 부단히 日常的으로 깨우쳐 줬다면 그들이 대학에서 아무리 신기

하고 새로운 진보적 이론을 접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그토록 지나치게 일순간 傾倒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급진적 좌경논리가 高校生들에게까지 확산될 조짐이 일자 문교부는 초·중·고에 통일안보교육강화를 긴급 지시했다고 한다.

때늦고 임시방편일수밖에 없는 이런 미봉책으로서는 앞으로 예상될 중등교육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北韓을 비판하고 적화통일에 대한 경계심을 가르치면서 통일에의 열망과 염원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번에 하달된 통일안보교육 3대 지침이다. 구호와 명분의 인상을 풍기는 이러한 對症的 반공교육은 우선 교사의 가르침 의욕을 상실케 하고 성가신 雜務가 하나 더 늘었다는 푸념만 안겨줄 뿐이다. 학생으로서는 대학입시 예상출제문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단순히 흘러넘길 뿐일 터이다.

민중교육론의 기본 전제는 사회를 변혁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이 사회의 지배계급은 교육을 독점하고 교육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킴으로써 민중을 지배하는 국가기구로 사용한다고 본다. 노동자·농민으로 대표되는 민중은 반외세=反美, 자주 민족=주체적 통일 대열에 서서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대학생의 入住課外가 허용되고 한 해에 30세 이하의 젊은 교사가 3만명씩 늘어나는 오늘의 형편에서 좌경 의식화의 偏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의 틀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임을 가정과 학교와 정부가 공통으로 인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암기식 교육에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교육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교사·학생간의 대화식·토론식의 이성적 사고의 훈련과정이 정규과목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좌경의식화교육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성적 의식화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이뤄지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高校牲『意識化』를 막는 길

世界日報 社說('89. 4. 2.)

최근 문교부는 고교생의 意識化교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교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최근 文益煥목사의 平壤行과 좌경폭력세력의 확산으로 인해 高校生의 체제관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운동권의 意識化교육대상은 일반대학생에서 新入生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고교생으로 점차 변화해 왔다. 이같은 교육대상의 변화는 체제비판에 있어 백지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식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과거 獨裁權力에서 자신들의 政權維持를 위해 행했던 방식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運動圈학생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자세라고 본다.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보면 사회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진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 그들의 意識化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않다. 가령 北韓을 소개하는 글만 하더라도 好戰性만을 부각하여 北韓에 대한 불신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가 하면 自由민주주의 체제를 소개하는 내용도 천편일률 무조건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미 『意識化』되어 있는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說得力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教師의 수업이 효과적일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문교부가 뒤늦게나마 현행교과서 내용을 전면수정하여 과거의 『反共』일변도에서 『知共』교육으로 전환함은 학생들의 올바른 의식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부교사들의 그릇된 體制觀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의식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제의 모순점만을 부각하여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결코 아니다. 물론 현체제의 모순점을 授業시간에 굳이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 적절히 지적해 주는 것은 학생들의 건전한 體制觀형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모순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체제의 장점소개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問題提起』차원을 넘어 어느 한 측면으로의 『問題解決』까지를 유도하려 한다면 이를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올바른 체제관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教育環境의 개선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教育의 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과서와 훌륭한 교사의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설득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서 左傾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교부는 教科書 개편이나 지침서의 배포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학교의 非理와 不條理를 과감히 척결하고, 나아가서 教師의 『이유있는』비판을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 左傾서적 단속

京鄉新聞 社說('89. 4.11.)

公安합동수사본부가 『金日成選集』등 左傾理念서적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1만 여권의 불온서적을 압수한 것은 최근 우리사회에 확산되고있는 左傾이데올로기의 根源부터 다스리자는 강경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自由民主主義국가에서 출판물에 대한 압수 수색이 실시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헌법으로 보장된 출판의 자유라 할지라도 體制를 부정하고 國法까지도 뛰어넘으려는 無限大의 自由까지 나라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絶對無制限의 것이 아니고 公共福祉에 反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1957년 日本 最高裁判所의 判例도 출판의 자유가 制限의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公安당국의 압수수색에 앞서 출판인 스스로의 均衡感覺과 출판문화계의 自律機能이 좀더 일찍 발휘될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뒤따른다. 이른바 北韓原典이라고 해서 金日成을 찬양하고 金父子에게 대를 이어 충성할것을 강조하는 서적이나 南韓을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자가 공공연하게 市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分斷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이 아닐수 없다.

우리가 비록 北韓을 對決相對로 보다는 같이 살아가야할 民族共同體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이 공산주의나 金日成主體思想까지 수용할수 있는 단계가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北韓原典의 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同族간의 異質感을 해소하고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북한을

바로 안다는 것과 北韓의 이데올로기를 無批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단속대상이 된 대부분의 北韓原典이라는 것은 거의가 金日成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무산계급에 의한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미 법원에 의해 利敵表現物로 확정되었거나 公訴제기되어 그 利敵性이 명백하게 드러난 책들이라고 한다.

그동안 당국의 간헐적인 단속이 있긴 했지만 이러한 도서들이 大學街등에서 공공연히 팔릴수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脆弱性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北韓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복사한 도서들은 미리 批判能力을 갖추지 못한 젊은世代들에게 자칫 北에대한 막연한 幻想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出版文化 그자체의 價値보다는 출판을 특정 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으로 삼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국의 販禁리스트에 오르면 오히려 大學街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歪曲된 현상에 편승한 左派商業主義的 출판도 한 몫을 하고있는 셈이다.

이미 법원에 의해 利敵表現物로 확정된 도서들이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市販될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슨 계기때마다 한 번씩 펼치는 投網式 일제단속만으로는 뿌리깊은 左傾출판물의 억제가 힘들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北韓原典을 자유롭게 접할수있게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남북의 냉전기류가 終熄되고 우리사회가 그러한 原典을 批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번의 左傾이념도서 단속은 어찌면 출판문화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사회가 겪고있는 이데올로기적 葛藤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左傾』출판에 源泉대처를

— 시급한 좌경사상 克服理論의 普及 —

東亞日報 社說('89. 4.11.)

좌경 및 敵性출판물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도 해당 출판물의 저자 역자 발행인 심지어 이들 책을 팔아온 서점 주인들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한다.

1년 전 정부의 북한출판물과 예술작품의 선별적 解禁이후 이 바람을 타고 공산주의 선전물이나 金日成찬양 책들마저 마구잡이로 출판되어 이쪽 문화현실에 호기심을 가진 일반독서인들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같은 敵性出版物의 범람현상이 왜 일어났고 또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이유를 이제는 신중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다. 건국이후 40년간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반공이념을 앞세운 철저한 공산주의 봉쇄정책으로 일관되었다. 북한과의 적대관계 아래서 이같은 봉쇄정책은 국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국력을 결집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공산주의 내지 金日成體制에 대한 無知나 비판능력의 저하현상을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민주화 개방화에 따른 공산권출판물의 해금조치와 7·7宣言 이래 공산국가와의 화해 및 공존정책에 따라 북한의 敵性出版物이 범람하고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적지않은 관심을 보여온 것은 이제까지 차단됐던 未知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無菌상태에서 자라 이에대한 비판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들이 金日成主義에 입각한 북한의 선전 선동을 목표로 한 출판물에 몰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素地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문화정책은 우리사회가 사상적으로 성숙되어 적성국가의 이데

올로기를 선별적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中心이 잡힌 후에 북한출판물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독한 북한출판물이라도 우리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독자라면 오히려 그들의 억지춘향의 개인숭배사상이나 反歷史的 反人間的 체제의 맹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출판물에 현혹되어 도리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의의를 제기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환상을 갖는 독서수준에서는 공산주의 내지 북한체제홍보용 출판물의 개방은 時期尙早라는 비판도 근거가 있는것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부가 앞장서 해야할 것은 우선 우리 학계나 지식인 사회가 좌경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의 보급을 적극 돕는 일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들의 새로운 이론을 우리 독서층과 대학생들에게 교육시켜 저들 체제의 맹점을 스스로 알아차릴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 비록 金日成主體思想의 책이라도 능히 비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 학기부터 서울大에서 개설한 徐大肅교수의 북한학강좌는 우리사회의 사상교육의 좌표를 상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바는 출판계의 지도역량이다. 솔직히 말해 이번 단속 대상의 책이나 출판사들중에는 적성출판물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좌경상업주의가 엿보이는 경우가 있다. 출판도 이윤추구가 있어야겠지만 좌경상업주의는 國基를 흔드는 반국가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 出協을 비롯한 각 출판단체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 좌경출판의 자제방안만은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사상을 향도하는 출판인들의 이 시대의 召命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民主市民교육』

世界日報 社說('89. 4.14.)

『美軍은 점령군, 蘇聯은 해방군』— 얼핏보면 北韓에서나 들을수 있는 표현이 우리의 교실에서 수업이라는 이름아래 선생님에 의해 이야기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나 가치체계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國敎學生들이 상대였다니 납득차원을 넘어 충격적인 일이기까지 하다. 최근 運動圈대학생들의 의식화 敎育대상이 下向化하는 추세에 따라 中高校학생에게까지 左傾사상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사임을 생각할 때 일부 國敎敎師의 이러한 행동은 『敎育民主化』의 본질마저 희석시키는 행위라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敎育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意識化』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敎育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환경 및 체제이해를 통한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함양을 그 목표로 하며, 정부는 이에따라 敎育내용의 결정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처럼 敎師가 敎育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가르치는 행위는 民主市民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敎育의 正統性을 부인하는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敎과서의 내용을 찬찬히 검토하면 敎育의 正統性을 부인하는 원인이 비단 敎師의 왜곡된 행동뿐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예를들어 敎과서 곳곳에서 金斗煥전대통령과 같은 특정정치인 및 특정정권을 美化하는 내용과 北韓을 천편일률 굶주리고 혈벗은 곳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는 상황에서 현행 敎과서가 이미 시민敎育의 효과적인 指針書로서의 구실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다. 敎育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무리 정부의 소관이라 해도 敎과서가 이처럼 그릇된 내용투성이라면 정부의 敎과서 編修責任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행教科書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이 교사의 왜곡된 교육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처럼 교사가 사실과 정반대되게 가르치거나 社會科學的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일부교사들에 의한 이같은 『왜곡교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 方案으로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독점되어 있는 교육내용의 決定權을 학부모에게도 일부 위임했으면 어떨까 싶다. 왜냐하면 교육의 주요당사자인 교사 정부 학부모 가운데 학부모는 교육 당사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학교마다 育成會가 있긴 하지만 이는 教育的역할보다는 財政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육성회와 같은 기관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교육 방향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 교사 학부모의 교육당사자 사이에 교과방향을 둘러싼 강한 連帶感이 형성되고, 나아가서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교육 가능성으로부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문교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歪曲教育』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6·25가 『해방전쟁』이라니

— 反통일—反민족, 分斷固着의 원흉—

朝鮮日報 社說('89. 4.15.)

朝鮮大學校교지 『민주조선』에는 6·25가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실렸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주시한다. 첫째는, 남-북의 左翼이 이제는 6·25를 北侵이었다고 우기기보다는 아예 터놓고 『南侵이었지만 그건 민족해방 투쟁이었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다.

6·25를 北侵이었다고 어거지를 쓰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左翼의 입장에서는 그 점이 매우 곤혹스럽던 차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主思派란 이름의 親北세력까지 공공연히 등장하게 된 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런 곤혹스러운 억지주장의 꺼풀을 벗어버리고 아예 『6·25는 민족해방투쟁이었다』며 南侵행위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思想戰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할 때란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는 우리現代史의 정통성의 脈을 東學농민전쟁—좌익의 항일운동—8·15후의 여러 폭동들—빨치산—6·25후의 각종 투쟁들로 설정하려는 視角이 공공연히 대두하고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드디어 6·25南侵도 그런 脈의 하나로 끼워넣으려는 기도가 비록 일부지만 목격된 셈이다.

이런 역사해석은 極左가 민족 현대사의 정통성을 쥐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의 意識을 뒤집어 놓으려는 하나의 思想戰이요 文化戰인 것이다.

이 공세에 대해 우리는 抗日期의 민족운동에서의 非共產系 민족주의 세력의 혁혁한 투쟁사실을 선양하고, 8·15후 박헌영系의 좌익 모험주의와 맹동주의를 비판하고, 아울러 김일성派의 北韓獨占이라는 그들 나름의 분단 기정사실화의 책

임을 묻는 동시에, 더욱이 6·25남침은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는 분단 고착화의 반민족적 범죄였음을 당당히 천명해야 하겠다.

아울러 또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말도 되지않는 글이 어떤 경로로 버젓이 학교공식매체에 실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요즘 대학의 校誌는 대체 누가 책임지고 만들고 있는지, 교수나 학교당국도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인지, 이런 알 수 없는 작금의 세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한다. 極右 매카시즘의 편견과 고정관념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極左 교조주의의 사실왜곡과 逆매카시즘의 고정관념도 똑같이 경계해야만 옳은 것이다. 그 어떤 어데올로기의 이름으로써도 6·25南侵의 부도덕성-反통일성-반민족성을 호도할 수는 없다. 분단 고착화의 원흉은 바로 6·25 남침이었다.

『革命정부』 수립이라니?

東亞日報 社說('89. 4.21.)

대학이 좌경혁명의 基地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임시혁명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공공연히 무장투쟁을 선언하는 폭력혁명세력을 용인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좌경세력들은 지하서클이나 유인물을 통해 혁명을 부추겨왔으나 20일 서울시내 모대학에서처럼 공공연히 집회를 열어 무장봉기를 선언하고 그 장면이 버젓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쳐지기는 과거에 없던 일이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경악과 충격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된 데는 정부 여야 대학 할 것없이 이 나라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자유민주사회의 적이며 공산이데올로기 발생의 요인인 독재 부패 빈부차 해소의 노력에 있어서나, 시대착오적인 극우 극좌의 제어에 있어서나 좌경이데올로기의 비판작업에 있어서나, 우리의 지도층은 태만하고 무력했다. 좌경 용공세력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아무나 보고 여전히 『在野』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풍토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이기적 무책임도 크다.

지난 주 휴교중인 어느 유수한 대학교의 총장은 현재 학생운동의 성격이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대학민주화투쟁이며 당면목표는 대학을 혁명의 기지로 만들려는데 있다고 말하여 주목을 끌었다. 문제는 어느 특정대학의 분쟁이 순수한 학원분규인지, 아니면 이에 편승한 혁명운동인지를 구별하는 일이다.

좌경세력들은 이른바 『민중정부』를 세우기 위해 현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제2의 祖國해방』이라고 한다. 이들은 南韓이 外勢와 이에 의존하는 군사과쇼와 독점재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국내상황은 新植民地과쇼세력과 애국적 민주세력간의 대결 양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등 근로민중이 운동의 중심이 되고 청년학생들이 투쟁의

動力이 되어 양심적인 교사 문인 종교인 언론인 법조인등이 同參하는 이른바 全民衆的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투쟁의 목표는 파쇼 권력의 모든 억압구조와 제도적 장치를 解體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대중은 생활상의 요구투쟁, 법적 제도적 개선투쟁, 5共 光州투쟁, 통일투쟁, 즉 한마디로 현체제의 전면적인 부정과 극복을 꾀하는데 있다.

이같은 다양한 대중투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파쇼정권의 구조의 해체를 위한 제도의 무력화를 노리는 학원민주화투쟁은 이미 순수한 의미의 학원분규는 아니다. 등록금 동결이라는 호응받기 쉬운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원의 끊임없는 爭點을 찾고 개발하여, 요컨대 학원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러한 학원사태를 순수한 학원분규와 구별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兩是論 또는 兩非論에 사로 잡히는 데에 오늘 이 나라의 知的風土의 문제가 있다. 물론 순수한 학원분쟁의 경우에 학교당국 내지 재단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엄격히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덮어놓고 학생들을 容共으로 모는 『매카시』적 반동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용공세력들에 의한 혁명의 수단으로서의 학원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학원을 혁명기지화로부터 보호하는데 교수들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 선량한 학생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思想갈등의 민주적 극복

李相禹 西江大교수

朝鮮日報 時論('88.12.20.)

다양한 思想의 併存

은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의 어느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공장, 학교, 동네, 회사, 연구소... 모든 곳에서 집단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힘과 제도로 갈등의 표출을 억압해오다가 누르고 있던 체제가 깨어지면서 분규가 함께 터져나와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민주화의 흐름속에서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할 과정이라고하나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이 홍역을 무사히 치르고 살아남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 많은 분규, 갈등, 투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갈등의 큰 줄거리가 보인다. 겉으로 다양하게 보이는 이 많은 분규들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가 맞부딪쳐 빚어지는 현상들임을 알게된다. 즉 思想鬭爭이 대부분의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제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사상전에 돌입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같을수 없다. 성장배경, 사회적 지위가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가질수 있다. 개성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다양한 사상이 병존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한 사회가 한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생각을 가지게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즉 한 역사단계에서 한 사회가 풀어가야할 가장 원초적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이 이데올로기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 등이 현실문제에 부딪칠 때 나타나는 믿음, 이론, 행동강령의 집합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질의 확보가 시급한 단계에서는 富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대립

하게 된다. 전제적 압정에 시달리는 시대에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맞서게 된다.

지난 날의 전제정치의 반동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큰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貧益貧 富益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체제안정을 희구하는 보수주의와 체제변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진보주의의 대립마저 첨예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립은 사회주의와 계급집단주의가 결합된 급진적 민주혁명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를 신봉하면서 기존체제를 수호하려는 집단적 보수주의 사이의 대립이다. 이 중간에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체제내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통하여 혼합경제로 富의 정의로운 분배를 모색하려는 중도적 사회민주주의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단순화 한다면 급진적 사회주의세력, 보수적 자본주의세력, 중도적 사회민주세력의 3파전으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 물론 이밖에도 급진적 자유주의세력, 우파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위의 세가지 세력에 흡수될 수 있다고 본다.

民主원칙엔 共感

우리사회에서 정치민주화가 급박하던 시절에는 좌우의 모든 민주주의세력이 함께 나서서 보수전제주의 체제수호 세력과 싸웠었다. 그러나 사회정의 실현문제가 급박해지면서는 다시 사회주의혁명세력, 점진적개량주의, 자본주의수호세력간의 다툼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행히도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 귀족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소수 가진자의 전제적 지배를 앞세우는 사람도 별로 없다. 다만 만민평등의 원리에 따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주권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와 『프롤레타리아 계급내의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反動계급에 대한 독재』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人民民主專政論者들간의 대립이 서서히 부상되고 있을뿐이다. 그리고 富의 고른 분배의 실현을 위하여 생산수단 공공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부간섭을 되도록 줄이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자유경쟁, 자율확대를 강력히 주장

하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 틈 사이에 상당수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분포되어 있어 대립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정치참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그리고 경제영역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에 찬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의 다른 목소리가 뒤섞여 빚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분류라 생각하면 된다.

정치란 현실속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민주사회란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사회다. 따라서 민주정치에서는 다른 사상을 가진 세력들간의 선의의 경쟁, 상호설득, 타협으로 현실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자기 주장만을 비타협적인 폭력수단으로 관철하려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路線을 분명하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 자기 뜻을 펼쳐 나가면서 정당간의 경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때, 비로소 민주정치는 안정된 발전을 기할수 있다.

오늘 우리사회의 혼란은 제대로 된 정당이 없기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사상적으로 선명하게 정치노선을 내세운 정당이 없으므로, 여러 사상을 가진 집단들이 政治場外에서 자기사상의 전개를 위해 투쟁을 벌이게 된다. 즉 政黨이 사상전을 수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정치가 정착 못하고 있다.

民正黨 民主黨 共和黨이 각각 어떤 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平民黨의 이념적 색채를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이러한 정당으로 어떻게 이미 전개되고 있는 사상전을 정당 정치안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들이 이념 정당으로 하루빨리 개편돼야 한다. 좌파사회주의정당, 중도사회민주주의정당, 보수정당등으로 재편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정당을 통하여 자기의 이상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 정치도 공장과 가두에서의 살벌한 투쟁을 지양하고, 의사당에서 논리로 투쟁을 전개하는 성숙성을 보일 때가 왔다. 그리고 정치적 노선이 선명하지

많은 정치인들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때가 왔다.

사상전은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을 민주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투쟁과 혁명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민족의 정치역량은 판가름 날 것이다.

『保·革』兩分은 시대착오

金容述 편집국부국장
京鄉新聞 時評('89. 1.18.)

현재의 국제상황을 두고 국민 국가가 소멸해가는 시대로 규정하는 이론이 있다.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져 국경이 없어져 가고 구주공동체나 아시아·太平洋협력체와 같이 블록경제권이 점차 기능을 확대해감에 따라 국경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경제협력과 상호의존 관계가 날로 깊어짐을 염두에 두고 세운 이론인 성 싶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설득력 있는 새로운 안목임과 동시에 깊이 음미해 봄직한 탁견이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열린사회이며 국경관념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가는 지구적 공동체의 형성기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지구상의 모든나라들은 국경의 문을 닫고서는 살아남을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조차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 국가안에 있는 모든 집단이야 말해 무얼 하겠는가. 폐쇄적인 조직이나 집단은 잠시라도 생존하기 힘든 격변과 流動化의 시대임을 수궁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들어 우리정치사회에는 도서관의 서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保革論爭이 갑자기 뛰쳐나와 국가의 발전진로를 어지럽히고 있어 통탄스럽기 이를데 없다. 이시점에서 保革論爭을 전개하여 우리의 정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결론부터 말해 새로운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적대관계의 확대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혁신정당이 생겨서도 안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있을 여건도 아직 충분히 조성돼 있지 않다. 우선 현재의 국제질서가 그럴 필요성을 부정하여 배제하고 있다. 국제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공산주의식 경제계획에 스스로 파탄을 보여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해나

갈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페레스트로이카(改革) 노선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동구권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공산당 일당독재를 버리고 보수정당질서를 도입하기에 갖은 지혜를 짜고있는 중이다.

중국도 별수없게 됐다. 毛澤東이 내건 노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도시소자산가의 4대계급 연합독재노선을 애시당초 팽개쳐 버리고 자본주의식 경제근대화정책을 착실히 추진해가고 있지않은가.

이데올로기가 빵을 크게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란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주고있는 셈이다.

소련도 스탈린 아류의 사회주의적 민족통합이론을 내동댕이 친 지 이미 오래다. 세계가 그러한데 우리라고 곱팡이 냄새 가득찬 혁신정당의 대망론에 언제까지 향수를 가져야 하겠는가.

또 우리의 지난 날의 정당사를 보아도 혁신정당은 늘 보수정권의 희생양이 되어 와 정치적 격랑기가 올 때마다 정치적 역진현상을 조성하는 요소로 기능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日帝고등계형사들이 혁신세력이라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 고문하던 고약스러운 반문명적 잔재가 국가공권력의 한쪽 구석에 여전히 도사려 버티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공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혁신정당에 대해 완전한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확립할 때까지 우리는 혁신정당의 발전에 기대를 걸 수 없다. 비록 혁신정당이 없더라도 혁신정당이 수행할 기능들을 기성의 국민정당들이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

계급정당이나 계층정당의 시대는 이미 흘러가 버렸으며 여러계층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는 포괄정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정당에게는 경직성보다는 탄력성이 더 필요한 시대상황이다. 포용력이 없는 정당은 퇴화하기 십상인 사회인 것이다.

굳이 우리의 정치적 발전단계에 언젠가 꼭 혁신정당이 생겨야 한다면 그것은 국토통일의 성업이 성취된 다음에야 고려될 문제가 아닐까. 국토가 양분된 상태로 인한 이념적 이질성을 가진 정당끼리는 적대관계를 보일수 밖에 없게돼 있다. 아무리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정교히 고안해 놓는다 하더라도 국토분단 하에서는

지난날의 역사로보아 혁신정당은 늘 희생과 타도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

각도를 바꾸어 유식인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며 또 혁신세력을 용공좌경시하는 풍토가 없어진다면 혁신정당이 생겨나도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경향도 있는듯 하나 이 또한 단견에 지나지 않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시킨다 하더라도 국토의 북쪽에 공산당정권이 있는 한 국토의 남쪽에 있는 혁신정당은 숙명적으로 활동의 제한을 받을수 밖에 없다.

西獨의 정당제도등을 실례로 열거하여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나 西獨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치문화가 다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급선무는 보수연합이 어떻고 保革의 分立이 저렇고하는 탁상공론보다는 기존의 정당들이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탄력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풍토부터 조성해 주는 일이다.

어떤 정당이 급진세력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 들면 색깔이 의심스럽다느니 체제전복세력과 동조한다느니하는 매카시즘적인 자세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그런 풍토하에서의 保革分立論은 적과 동지의 구분 음모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체제수호의 본질은 다양한 욕구의 탄력적 수용능력에 의존한다. 아무리 큰 정당이라도 정치적 탄력성을 상실하면 정치적 化石이 될 운명에 빠진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이익수호를 표방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의 활동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야한다. 그런 속에서 사회와 국가는 건설해지고 번영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

나아가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모든 조직과 집단이 전부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성립돼서도 안된다.

비록 민중혁명론을 내세우는 급진세력이 있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원내의석을 갖고있는 정당들이 기동성있게 그들의 주장을 수렴하여 정치적 충격파를 흡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自由民主主義부터 확립하자

金裕南 단국대학교수

東亞日報 時論('89. 1.26.)

盧泰愚대통령의 年頭기자회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북」을 向한 自由民主主義』라는 대목이다.

나라 안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급진세력 때문에 다소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나 나라밖으로 뺀어나가는 북방정책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줄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현실은 자유민주주의가 현실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를 위한 『4.19』 『5.18』 『6월 항쟁』 그리고 『6.29 선언』 등이 있었다. 그로부터 자유화와 민주화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드디어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시대의 개막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인권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평등주의에 바탕한다.

19세기 이후 西歐와 미국이 경험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준다. 즉 資本主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양식은 자유민주주의 선형요건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현상이란 합리적 다원주의 생활철학을 의미한다. 『칼 마르크스』보다 10년 앞서서 『알렉시 토크빌』은 그의 『美國民主主義論』에서 신홍 『産業貴族』의 등장을 높이 평가했다.

인간의 자유란 행복하게 사는 『生』의 권리다. 그것은 목숨만을 유지하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고 귀하게 살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고급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貴族論』의 대두였다. 이것이 『中産階級論』이다.

19세기 歐美社會가 좌파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않은 까

닭은 건전한 중산층의 대두 때문이었다. 그 사회에서의 중산층이란 『경제적중산층』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문화적 중산층』을 뜻했다.

문화적 중산계급은 다원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사회의 도덕적 기둥이 된다. 다원주의는 『습』에 도달한 『다수의 자유』를 의미한다. 『존 밀』은 그의 『自由論』에서 자유는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절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라고 했다.

우리 사회를 보라. 자본가는 자본가 대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노동자도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사회에 배부른(경제적)중산층은 흔하되 생각하는(문화적) 중산층은 별로없다. 『월터 리프만』이 그의 저서 『公共哲學』에서 지적했듯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둔한 중산층』으로부터 온다.

배부른 중산층이 독주하는 자본가를 견제하지 못할때 자본주의는 부패한다. 배부른 중산층이 노동자의 형평욕구를 외면하면 자본주의가 생산단계에서 무너진다.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시급한 문제 두 가지가 있다. 保守主義와 革新主義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모두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국적 자본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근대적 자본주의를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로 착각하면 자본가의 비리와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를 두고 혁명적 폭력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적 자본주의의 모순은 지금 극복되어야 한다. 즉 非理가 『保守』일수 없으며 계급투쟁이 『革新』일 수 없다.

한국의 보수와 혁신세력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가. 집권하면 영원한 『보수세력』이 되고자 하고 반면 失權하거나 未執權인 경우면 영원한 『혁신세력』이다.

자본주의의 표본인 미국을 보자.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은 복지주의적 민주당(진보세력)과 국가주의적 공화당(보수세력)가운데 하나를 택한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치이데올로기가 분명하다.

한국적 자본주의의 기득세력은 자동적으로 모두가 보수세력이다. 그들은 분명한 통치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보수세력이 지키고자 하는 보

수요인이 없거나 불확실하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통치권을 수호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적 자본주의에 불만을 표시하는 혁신세력은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기존 야당은 정권욕을 지닌 미집권보수세력일 뿐이다. 이제 在野에서 최근 태동하고 있는 혁신세력은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자신의 정치이데올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보수세력은 더 많은 국민의 비판을 들어야 한다. 이른바 원로정치인 가운데는 일제하 『천황에 충성하던 황국신민』들도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수세력이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元祖가 되라. 그리하여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의 모든 『슴』에 바탕하는 多元主義 정치이데올로기를 확립시켜야 한다.

국민은 舊制度가 남긴 反自由 民主主義的 상황과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혁명적 상황을 똑같이 걱정한다. 엉뚱하게 남북한관계 개선을 포함한 북방정책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국민은 불평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불평하지 않는 국민은 독재자를 만든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舊人物과 舊制度를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하는 까닭은 그것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北方政策의 성공은 우리 사회에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달려있다. 구시대의 지속은 자유민주주의의 지연을 의미하며, 이는 곧 불안한 북방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북방시대를 상상해 보자.

大學街 『北韓환상』을 경계한다

許東燦 在日북한문제전문가

東亞日報 論壇('89. 2.27.)

이번에 建國大 총학생회가 배포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소책자 『새로운 시작』을 얻어서 읽어볼 기회를 가졌다. 읽으면서 여러가지를 느끼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몇 마디만 적어 놓는다.

이 소책자에는 『北韓에 대한 새로운 理解를 위하여』란 글이 실려있다. 상당히 북한을 알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글이므로 열 여덟 살 정도의 대학신입생이면 그 경향성을 몰라서 어쩌면 쉽게 받아들일 글귀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찬양 황당

그러나 현재 상당히 민주화된 한국에서도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만은 바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것은 필자가 살고있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본에서는 1955년에 北韓의 해외단체인 在日本朝鮮人總聯會가 성립되었고, 1959년 부터는 재일교포의 北送이 시작되어 현재 10만명의 북송동포가 북한에 살고 있다. 조총련계 동포들은 이 북송동포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북한을 내왕하고 있어서 그들의 北韓 실정 파악은 상당히 정확하다. 필자도 1982년까지 조총련에 속해 있었던 경력이 있다.

그러한 우리의 눈으로 보면 건국대에서 배포된 소책자는 지금으로부터 약30년 전인 1950년대 후반에 조총련계 동포가 가졌던 對北韓인식의 再現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頂點으로 하여 우리는 1972년의 이른바 『조국에로의 자유왕래』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호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후 조총련에게만 주어진 『자유왕래』의 특권으로 북한땅을 밟게되어 비판적인 안목이 서기 시작하였다.

예를들어 소책자에서는 金日成이 마치 北韓이란 나라를 찾은 인물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平壤에 『凱旋門』이 건립되었을 때를 전후하여 과연 金日成이 군대를 이끌고 北韓에 『凱旋』한 인물인가 어떤가가 상당히 논의되었다. 현재 이러한 金日成에 관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인물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책에는 金日成이 농민에게 땅을 주었다고 찬양하고 있다. 1946년에 소련 『民政』의 주도로 土地改革法令이 發布되어 貧雇農이 땅을 얻은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땅은 1958년까지 국가에 도로 빼앗겨 농업협동조합이나 국영농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것도 사실이다. 역사의 어느 한 토막을 가져와서 역사 전체가 그렇다 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남녀평등』 착각

北韓에서는 8시간노동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대목도 보인다. 물론 북한에서는 1946년에 노동법령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자가 8시간밖에 노동하지 않는다는 환상은 바로 작년, 북한정권이 창건 40주년을 맞이한 9월의 행사만 보더라도 산산히 깨진다. 9월9일까지 북한노동자는 『2백일 戰鬪』를 벌였는데 創建日에 金日成은 다시 『2백일 戰鬪』를 계속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맞장구를 치는 討論者는 단상에서 2백일이 아니라 『영원히』전투하자고 목소리를 돋우었다.

이 경우 『戰鬪』란 초과노동의 강요이다. 그런데 북한사전을 보면 『殘業』이나 『殘業手當』에 해당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殘業時間을 金日成은 『無償勞動』으로 돌려서 勞動者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책자는 북한이 남녀평등까지 실현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法令』이 발표되었다 하여 『平等』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착각이다.

북한의 남녀평등은 노동판에서의 노동과 노동시간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성은 이 이외에 청소 세탁 취사 육아등에 시달려야 한다.

북한은 여성노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産後 3개월 지난 갓난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떼내고 탁아소, 즉 『아버이 金日成』의 품 속에서 키운다. 자식에 대한 부모

의 사랑은 온데 간데 없어지는데 그후 어린이는 金日成의 戰士로 자라난다. 부모의 육아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남성과 똑같이 8시간 노동을 치른후, 집에 와서 청소 세탁 취사를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 한것은 두 말할 것도없다.

소책자는 『주민의 대부분은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이을 정도로 생활이 어렵지 않는가』라고 自問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自答하고 있다. 보통사람이면 이러한 自問自答을 하면 북한민중의 고생을 가슴아파할 터인데 소책자는 그렇지 않고 여러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

공부 너무나 부족

우리는 한국사람이니까 북한위정자의 입장에 서서 변명하지는 말고 북한민중의 도탄의 고생에 동정하고 살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正道는 걸지 않는다.

이상 농민의 토지문제 노동문제 남녀평등이나 식생활문제등을 간단히 훑어보았다. 그 결론은 북한은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과 현실은 딴 판인 나라라는 것에 도달한다.

이러한 국가나 사회제도를 만든 것은 다름아닌 金日成 金正日 이다. 소책자는 북한민중이 강냉이죽을 먹으면서 굶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金日成 金正日을 비판은 커녕 적극 옹호하고있다.

그런데 그들이 전개하는 金日成 『진짜』說이라든가, 1931년의 金日成中國遊擊隊最初創建說, 1940年代의 金日成傳說化說 따위는 우리 같은 재일교포의 눈으로 보면 공부가 부족하다고 밖에 할수 없는 망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金正日이 三大革命小組運動으로 浮上하였다든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를 추진하고 있다든가 하는 말은 『三大革命』이나 主體思想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까맣게 모르는 者만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讚揚』이다. 세계의 어느 공산당도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 없는 金正日후계문제도 소책자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기야 자기나라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땅굴까지도 북한이 판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탄광이라고 의심하는 판이니 우리가, 더 할 말이야 있겠는가.

통일열기 찬물 끼었어선 안된다

이삼열 숭실대학교수

한겨레신문 더불어 생각하며('89. 2.28.)

기대에 부풀었던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공동체의 실현이 다시금 한 여름 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강영훈 총리는 21일 『금강산 개발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시베리아 공동개발은 곤란하며 원산 조선소나 철도차량 합작사업도 정치성이 높아 어렵다』고 말해 북행의 단꿈에 젖었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실망을 던져 주었다.

엊그제 정주영 회장을 북으로 보내 온갖 꿈에 부풀 남북 교류·합작의 합의를 만들어 놓게 하고 한달도 채 못돼 힘들어 못하겠다고 철회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조령모개식의 정책이며 외교란 말인가? 그것도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가지고서 말이다. 참으로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방외교를 원망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만 해도 우리는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올 봄 즈음에는 평양에서 국회회담 개최식을 열고 대학생들이 올 여름에는 평양의 청년학생축전에 활기찬 모습으로 참여하고 가을쯤엔 현대건설 노무자와 기술자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즐기며 개발 사업에 한창이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남북국회 예비회담도 중단되어 버리고 금강산 개발이나 시베리아 개발이 채 계획이나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에 의해 찬물을 뒤집어 쓰면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게 되며, 또 속았구나 하는 허탈감만 생기게 된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이나 통일방안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기와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남한 쪽이 비정치적인 교류나 인도적인 방문의 확대를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도모한 뒤 정치적인 통일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겠다는데 대해 북한쪽에서는 우선 적대적인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정치적인 회담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적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다. 남쪽은 교류우선의 원칙이었고 북쪽은 평화우선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7.7선언 이후에 교류우선의 원칙만으로는 남북관계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올림픽 이후의 북방외교가 성공적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남북국회회담 등에서 군사적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병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가침선언이나 협정에 관한 토의도 진행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던 남북회담이 다시금 교착상태로 치닫게 되고 역시 87년의 경우처럼 팀스피리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쪽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평화의 분위기와 긴장완화를 저해한다고 그 중단을 남북국회회담이나 군사정치회담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정당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통해 모처럼 형성된 좋은 분위기속에 기대되는 여러가지 회담들은 그 예비회담 단계에서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중단해 버린다면 옳지 않으며 현명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팀스피리트 중단이나 연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압력도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국회회담 같은 것이 진행이 되는 신뢰의 분위기에서만 지속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쪽은 전략적으로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남한쪽에서는 89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분단 40여년 만의 최선의 기회라는 점을 생각해서 최대의 양보를 해서라도 가능한 한 남북국회회담이나 군사회담 그리고 금강산 개발이나, 평화지대 구축 등을 성사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팀스피리트가 공격이나, 방어냐, 연습이나 실전이나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안보에 결정적 장애가 안된다면 금년 한 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금년은 북한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치르는 해이며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도

발을 할 위협은 전혀 없는 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북한쪽이 『목의 10cm 앞까지 칼을 들이대고 이걸 연습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틱스피리트에 대해 군사적 설명이나 전략적 변명을 하기에 앞서 민족의 삶과 남북한 공동안보의 입장에서 재고해 보아야 하며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방안이 남한쪽에 의해서도 제안되어야 하리라 본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처럼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며 남북교류의 열기를 냉각시켜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쪽 저쪽 大學生들

柳根一 논설위원

朝鮮日報 칼럼('89. 3. 5.)

호기심의 相反性

헝가리 대학생들은 최근 그곳을 다녀온 한국 대학생에 의하면 『북한과 단절하고 남한과 교류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얼마전에 한국을 승인한 헝가리 정부의 조치를 『분단고착 책동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猛攻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런 묘한 相反性은 요즘 도처에서 목격된다. 어떤 남한 대학생들은 『김일성은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8시간 노동제와 남-녀 평등을 도입한 사회주의 지도자며, 김정일은 아키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꽤 괜찮게 묘사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두 체코 유학생들은 『한번 외국에 나와보니 北에는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며... 北의 정치가들은 인민들에게 복종만을 강요한다』면서 이쪽으로 망명해 왔다.

이 쪽의 대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 중국이나 헝가리 대학생들은 반대로 서방세계의 개량 경제학과 경영학을 배우려고 귀를 쫑긋한다는 소식이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근무하는 철학자 티프코는 『스탈린주의의 근원을 따지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도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의 젊은 學術圈에서는 지금 한창 마르크스와 레닌 原典들의 이론 『틀』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미있는 대조성은 지금 하나 둘의 事例가 아니라서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반된 두 경향의 동시적인 併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어떤 참고와 示唆를 받을것이나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앞세워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배움의 과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특정 時點에서 얻은 특정의 지식과 인식을 『마지막 판단』처럼 절대화하고 神聖視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식의 不可知論을 말하느것이 아니다. 특정의 세속적인 知識을 성경구절처럼 공정불변의 것인양 固着시킬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다.

東西이념의 固着

지금의 東-西 두 진영과 세계는 바야흐로 그런 冷戰40년이 고착시켜 온 바 『성경구절처럼 고정불변의 것인 양』 딱딱하게 굳어진 각자의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독단으로부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해방시키자는 열망을 내뿜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고무적이고 기분좋은 현상이다.

冷戰 40년은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의 雙方에 『이쪽은 낙원, 저쪽은 지옥』이란 고정관념을 심어놓았고, 또 많은 『어린백성들』이 그런 교육을 주입 받으면서 그렇게 믿고 자랐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날엔 또 기묘한 逆現象이 발생하여 세상은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의 雙方에서 『이 쪽이 낙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 쪽이 오히려 지옥이고 저 쪽이 낙원인 것 같다』고 하는 거꾸로의 선망의식과 호기심이 양쪽 젊은세대 일각에 대두한 것이다.

왜?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란 세대는 이쪽의 파시스트 독재와 부도덕한 권력과 富의 불공정한 배분에 극도의 증오심과 원한을 갖게 되었고, 반면에 사회주의 세계에서 자란 세대는 저 쪽의 스탈린주의 독재와 생활의 쪼들림과 삶의 무미건조함에 언더리를 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기 자기쪽 권력의 나쁜점에 극도의 증오심과 환멸감을 품다보니, 결과적으로 『이 쪽에 대한 正面의 반대는 저쪽-그러니까 저쪽의 말은 좋은 말 일지도...』하는 逆現象을 빚게 되었으리라 짐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러한 거꾸로의 선망의식이나 호기심 자체가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거꾸로의 선망의식까지도 점차 또하나의 단단한 미

신과 고정관념으로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공산권의 청년 남녀들이 청바지에 대해 단순한 『바지』이상의 어떤 『근사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나, 남한의 어떤 대학생들이 북쪽의 독재자에 대해 『이쪽의 기준말고 저쪽의 기준으로 봐서 무엇이 나쁘다는 것이냐』하고 비판없이 肯定하는 것이, 다 그런 또 하나의 미신이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知的해방의 時代

冷戰시대의 고정관념이든, 그것에 대한 반발의 極端으로서의 또 하나의 新고정관념이든, 사실의 검증이나 現場의 검증을 缺한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을 탈피시키자는 것이 다름아닌 과학정신이요 知性이라 할진대는, 남북한을 비롯한 東-西 세계는 앞으로 과감한 상호개방을 통해 각각의 젊은이들을 在來의 고정관념이나 거꾸로의 新고정관념의 편견으로 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학생들이 최근에 중국과 헝가리를 여행한 것은 펍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한 만남과 대화와 검증을 통해 우리 지구인들은 점차 자본주의를 믿든 사회주의를 믿든 피차 교조주의와 教本式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신봉자들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한걸음 分配의 正義를 중시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사회주의 신봉자들 역시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자유와 민주의 제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수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구는 한결 평화로운 行星이 될 수도 있으련만... 左-右가 문제이기 이전에, 左-右의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들이나, 그것들로 부터의 知的 해방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 요즘 세상이다.

현실과 理想과 幻想사이

李仁浩 서울대학교수

中央日報 時評('89. 4.20.)

統一과 새로운 北方關係에 대한 우리의 열기와 희망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 하던 지난 가을 어느날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은 나는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서관 목록실 한복판에 北韓의 『로동신문』이 활짝 펴진 채로 특별전시되어 있지 않은가. 불과 그 몇 주전까지만 해도 共產圈에서 간행된 전문 연구서적조차도 禁書목록에 묶어 놓아 학생들에게 비교·분석을 위해 읽히려 해도 불가능했고, 다른 신문이나 잡지들을 열람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진열해 두는 관례도 없던 도서관에서 유달리 『로동신문』을 것처럼 우대한다는 것은 너무도 속이 보이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개방도 단속도 無原則

이제는 그것도 옛 이야기다. 北韓간행물과 그것을 복제·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단속이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될 것인가 알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진작 그랬어야 할 일이라고 공안당국의 그러한 처사를 더욱 부채질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5共의 망령들이 되살아남을 걱정한다.

이런 갑작스러운 개방과 갑작스러운 단속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원칙 위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무슨 효과를 거둘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 상황과 反知性的 풍토는 분명 大韓民國의 안녕 뿐아니라 南·北韓 민족 전체의 긴 앞날을 길게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크게 걱정할 만 하다. 『左傾』이라는 현상이 사실이나, 조작이나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左냐 右냐를 따지기에 앞서, 理性으로 감정을 누르고 幻想과 理想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사회 전반에서 극도로 쇠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념논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본 적이 없는 실정

이다.

인간이 쌓아온 역사적 체험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나 깊은 철학적 통찰보다는 개개인의 체험과 직감적 현실 해석에 바탕을 둔 분노와 욕심만이 때로는 적나라하게, 때로는 韓國的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주체사상이니 하는 탈을 쓴 채 서로 오르렁 거러온 것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體制를 否定하려는 세력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 뿌리를 뽑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통제는 북한美化우려

金日成의 主體사상이라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룩해 놓은 독재체제가 蘇聯을 위시하여 北韓에의 접근이 자유로웠던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조소섞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北韓에 관한 외국 언론의 보도, 또는 학술적 연구 결과를 접해 보는 사람이면 다 안다. 北韓방문이나 北韓에서 나오는 자료에의 지속적 공개접근은 北韓에 대한 찬양보다는 오히려 비판, 또는 동정적 우려를 자아내는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젊은이를 닮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세습적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金日成이 혐오의 대상으로 부상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설명은 우리사회 내부의 사정이 낳아 놓는 반발적 심리상태와 同族으로 우리의 애정어린 관심의 대상이 됨이 마땅한, 北韓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오랜 통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쪽이 못마땅하니까 저쪽을 美化해서 볼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여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저쪽은 천국인 듯한 환상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해설물들이 서점들의 서가를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北韓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다시 통제하려 든다는 것은 自由民主主義 체제라는 것을 공허한 낱말로 만드는 이외에 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순수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오히려 경색된 독재체제하에서 발간되는 간행물들을 보고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될 것이며, 반면에 심정적으로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그쪽 간행물을 직접 보기 전에 이미 이쪽 아닌 다른쪽의 것이면 아들에 의한 권력계승까지를 미화해서 보게 되어 있다.

共産圈의 간행물을 통제하는 이유로서 항상 내세워져 온 것은 우리 젊은이들

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들의 고도로 발달된 선전술이 작동하게 되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사태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언론과 정보, 그리고 교육 내용을 정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체제 수호를 도모했던 제3共和國 이래의 우리의 몽매정치에 돌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극성스럽게 이데올로기와 국민윤리 교육을 외치며 左傾세력의 발본색원을 장담했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한가.

비판적 思考力 길러야

1970년대와 80년대에 실시해서 그 역효과가 뚜렷이 증명된 지식인 통제정책을 지금 다시 되풀이할 여유를 우리사회는 이미 가지고 있지 못하다. 허위의식 속에서 한 발짝만 더 헛디뎠다가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떨어질 지를 모르는 절박한 실정이다. 金日成의 주체사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사회 내부에서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야하며 불만스런 현실의 개혁과 비판적 사고능력의 적극적 배양 양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적 사고능력의 배양이란 결코 하루이틀에, 또는 한 두 학년 사이에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능력의 훈련은 기초과학의 육성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며 어느 체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어느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되도록 미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일단 기르게 되면 공통된 척도에 따라 모든 사물을 평가하게 되나, 逆으로 비판적 사고력이 결핍된 사람은 감정에 솔깃한 것이면 현실인지 환상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범하게도 되는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그 이상 자체를 외면하면서 공산주의는 현실 아닌 이론과 선전에 맞추어 평가하는 左측의 잘못도, 공산주의의 현실이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이상이나 神話가 가질수 있는 강한 호소력조차 인정할 줄 모르는 右측의 이해 결핍도 극복되어야 우리사회는 엄청나게 불필요한 희생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主體思想』에 대한 올바른 對應

洪廷善 문학평론가

서울신문 문화時評('89. 4.21.)

북한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에 대한 철폐가 다시 내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산권관계에 관한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6공화국의 능동적 북방정책의 물결을 타고 북한 원전들이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거침없이 출판되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6공화국 이전까지 단단히 틀어막아 왔던 북한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다소간은 신비화된 호기심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면서 만수위의 수문을 조금 들어 올리는 순간 엄청난 수압으로 분출하는 강물처럼 뿔어져 나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위와 댐의 강도를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들어 올렸던 수문을 이제 다시 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고여 있는 지적 욕망과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방류함으로써 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정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댐의 높이와 두께를 더함으로써 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결국 지금까지 자부해 온 것과는 달리 정부가 스스로 축조한 댐의 강도에 대해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필자는 며칠 전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 출판사들의 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 총서』10권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다. 다음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책들에 대한 치밀한 독서에서 얻어진 것들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인상적인 촌평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럼에도 필자가 굳이 이런 촌평을 늘어놓는 것은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넓은 의미에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전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그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는 주체사상은 지금 상당수의 대학들과 사회의 운동권에서 사고와 행위의 이론적 거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곧 문제 그 자체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금방 이 세상이 온통 김일성주의자들로 채워질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것은 주체사상 자체가 안고있는 본질적 취약성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문외한이 언뜻보기도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가장 발전된 실천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장악 종합하고 분석 개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동계급의 수령』이라고 규정한다거나, 『백 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 역사는 노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그것이 구현되어 세계를 변혁시켜온 역사』로 규정한다거나,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이며 올바른 노선과 정책은 수령에 의하여 제시되고 『수령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관철되어 나간다』고 규정하는 것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말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체사상이 변증법의 정지를 뜻하는 것이거나 고도의 엘리트 독재를 방조하기 위한 형이상학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이념이나 사상은 억압과 금지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을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 서적에 대한 압수, 수색과 출판인들에 대한 구금조치에 앞서서 마르크스와 레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만고 불멸의 사상이라고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실제로 어떤 역사와 목적 속에서 형성되었고 또 실제로 지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끈기있게 밝혀주는 것이 주체사상의 파급에 대응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의 수용이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일방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리하여 수용자의 열등감과 취약성만 확인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아니다. 문화의 수용이란 수용하는 사회의 필요성이 골라서 선택한 결과일 따름이다. 북한서적에 대한 출판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우리 출판계가 수용하여 출판하게 된 데에는 우리 사

회가 그 책들을 요구한 어떤 이유들이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항상 이러한 이유의 밑바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밑바탕을 만들어낸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大學生은 강의실로...

梁好民 정치평론가
朝鮮日報 時論('89. 4.25.)

北韓에 대한 맹신

요즘 北京을 비롯한 중국대륙의 대도시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이것은 방화와 폭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란 공산당의 1당독재체제에 대한 반항의식을 집약한 말이다. 그런데 黃海 건너 이쪽 韓國에서는 바로 역풍이 불고있다.

운동권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의 수는 각 대학별로 보면 1%전후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극렬한 극좌모험주의 조직에 의하여 끌려다니고 있다. 이 극렬파들이 외치는 구호와 내붙이는 벽보는 北韓의 대남선전을 복창할 뿐 하등의 독창성도 없다. 中國에서는 49년 공산당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자유와 개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대학생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나라의 극렬파 학생들은 鄧小平의 中國공산주의보다 몇 10배나 더 지독한 독재를 실시하고 민중생활이 절망적으로 가난한 金日成의 전체주의 北韓을 그 무슨 낙원인 것처럼 맹신하고 있다. 韓國사회의 부조리현상, 갖가지 제도적 모순에 눈을 감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에 불타고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생들을 멸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北韓의 부패한 1인독재체제는 결코 우리의 이상과 모델이 될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이념과 방식으로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 대학의 상당수는 무정부적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격렬한 교내시위, 사무실난입, 강의실 점거에서 총-학장실 점령까지 난동사태는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어떤대학에서는 교수의 임명동의권과 파면권까지를 학생회가 요구하고, 총장선출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동결을 강행하기 위하여 학생회가 은행계좌를 만들어 돈을 받아들인 예를 우리는 세계의 어떤 대학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최근에는 민중혁명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대학생들은 무장투쟁에 쫓겨야 한다고 떠드는 집회까지 모대학에서 열렸다. 소위 『해방대학』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평화적 시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투석과 화염병 투척과 파괴-총장실 점령-방화등 폭력 난동의 자유를 민주주의라고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 보고 입을 붙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못하는 일도 있어야지 세상일에 모두다 참견하겠다는 오늘의 학생운동을 도대체 누가 수궁할 것인가.

대학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치문제를 놓고 투쟁의 깃발을 올리는 정치의 장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 대학은 결코 폭력혁명의 근거지일 수는 없다. 대학생들은 아직도 준비시대에 있다. 학원에서 인간을 형성하며 학문을 닦은후 전문직업을 통하여 민족성원과 국가사회에 생애를 바칠 준비단계에 있는 존재다. 현대사회는 전문적 지식없이 전진할 수 없으며, 생산력을 부단히 끌어올려 부강해지지 않고서는 어떤 이상도 부질없는 공상이 되고만다.

모든일 참견하려나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낡아빠진 독재이데올로기에 도취되어 시위와 정치투쟁에 몰두하여 학문을 걷어찬다면, 혁명이 수십번 일어난다해도 결코 행복하고 풍부하며 자유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 또한 대학생들이 혁명적 이데올로기에의 맹종과 환상적 모험주의에 청춘을 소모하고 만다면 우리나라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패배하여 열등한 민족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시위를 하려거든 국가적인 큰 문제를 놓고 몇 년에 한 번쯤 크게 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한 후에는 곧 강의실로 되돌아와야 한다. 민주화로 가는 시대에는 특히 그러하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시위의 구실로 삼고 구실이 없으면 만들어내고 소동속에서 학우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를 새로운 소동에 이

용하려는 투쟁방식은 절대로 국민대중의 호응을 얻을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로서 성장하고 그 임무를 다 할 때만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살 수 있다.

어지러운 이 시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갈 것을 새삼 권유한다. 학사행정의 잘못된 점과 재단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강의를 들으면서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다. 강의실로 가는 다수 학생들을 몽둥이로 위협하고 강의실에 못을 치는 것 같은 행동은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비열한 폭력으로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지금의 학원사태에서 대학당국은 물론 교수들의 고뇌도 자못 클 것이다.

미몽에서 깨어나라

교수는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임무와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자의 임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혼란기에는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망된다. 죽어도 혁명을 하겠다는 몇몇 학생은 어쩔 수 없다쳐도 길을 잘못든 그밖의 선량한 학생들에 대해 교수는 끝까지 선도의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극우』 『보수반동』 『매카시즘』이란 말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말은 의견을 달리하는 민주주의자들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할 때 극좌파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폭력이다. 교수 지식인 정치인들은 이런 전술적 매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오늘의 학원사태는 순수한 학원 내부의 분규라는 선을 넘어 혁명의 수단으로 정치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연히 아니다. 학원의 무정부사태를 조성하고 조종하고 확산하려는 간교한 손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학원의 내부분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하며, 순진한 학생들이 더 이상 난동부대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소위 민중혁명은 이나라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학원이 그런 혁명의 유희장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운동권 학생들은 지난 날의 미몽에서 해방되어 모두 강의실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다.

4 北方政策

韓蘇關係발전의 兩面性

서울신문 社說('88.12.18.)

오랫동안 우리와 담을 쌓고 지내오던 蘇聯이 최근 차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門戶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韓蘇양국이 모스크바와 서울에 서로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蘇聯은 그들이 서두르고 있는 시베리아 개발에 美國 日本 뿐만 아니라 韓國도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그들은 韓國人 관광객들에게 입국비자를 신청당일에 발급할 정도로 그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蘇聯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蘇聯에 대한 우리의 갑작스런 인식의 변화는 이념적인 혼란을 초래하기 쉽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치에 대한 감각에 균형을 잃게 하는 위험성도 있다.

蘇聯은 韓國과의 접촉과 교류를 희망하는 한편 北韓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세에 호응하도록 설득을 벌이고 있다. 최근 中蘇관계가 개선되면서 北韓에 대한 蘇聯의 작용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蘇聯 外相 세바르드나제는 日本과 필리핀을 방문한 후 平壤을 찾아갈 예정이다. 그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北韓을 돕는 대신 韓國과 社會主義圈간의 교류에 대한 平壤당국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주력할 것이 뻔하다. 헝가리가 서울에 상주代表部를 설치하고 멀지않아 韓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인데 대해 거센 반발을 보였던 사실이 蘇聯의 행동에 적지않은 견제가 되고있기 때문이다.

中蘇의 이해가 대립돼 있는 상황속에서는 北韓은 어느 한쪽에 가담함으로써 다른 한 쪽을 견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中蘇사이의 利害의 폭이 좁아질수록 北韓이 그 틈바구니에서 운신할 수 있는 여유는 자꾸만 좁아진다.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와 국제정세의 불리한 진전속에서 北韓은 어느 방향으로든 그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즘 北韓사회에 개방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

는 모두 그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과 蘇聯과의 관계개선으로 韓半島를 둘러싼 정세가 개선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정세를 樂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警戒해야 할 국면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蘇聯은 北韓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사이이며 요즘도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최신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韓國이 蘇聯과 아무리 접촉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그 관계가 蘇聯과 北韓의 동맹관계 보다 깊어질 수는 없다. 韓半島나 아시아의 어느 지점에서 돌발적인 위험사태가 벌어지면 사태는 다시 냉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86년 블라디보스토크宣言에서 蘇聯이 太平洋국가임을 내세운 이래 극동에서 그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해 졌다. 蘇聯은 美國이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틈을 타서 이 지역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동맹국인 美國이 비어주는 공백을 蘇聯이 채우려하고 있는 사태를 우리는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蘇聯의 패권주의는 韓國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경계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蘇聯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 그 兩局面을 다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모스크바行 『急行列車』

-달리는 속도에 調節있어야-

京郷新聞 社說('88.12.24.)

韓·蘇관계가 우리의 北方정책과 소련의 개방정책이 맞물리면서 숨가쁘게 激流를 타기 시작한 느낌이다.

소련이 盧泰愚대통령의 韓半島문제 해결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는가 하면 日本방문후 平壤에 들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金日成과 만나 고르바초프의 『개방압력』親書를 전달한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소련의 국영외환은행과 한국 상업은행간에 換去來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韓·蘇의 공식적인 直交易이 일반의 예상보다도 크게 앞당겨지고 있는 구체적 실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 관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수 년간 또는 수 개월동안 소수의 학술인사교류에서부터 체육인 방문허용 그리고 구상무역실험 또 이어 무역대표부 설치합의 현지공장설치유치와 시베리아 개발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진행되었으며 근자에 이르러서는 소련선박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수리를 위탁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두 나라 관계의 실질화는 물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北方정책추진의 보다 큰 성과와 성취를 위해서, 또 그것에 의한 北韓의 孤立化탈피와 開放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등의 바람에서, 그리고 蘇聯은 소련대로 東北亞지역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강화와 함께 北韓에 대한 『韓國카드』활용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접근을 꾀하고 나아가서 美·日등에 대한 정책·전략적인 견제효과를 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양국간의 급속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시각에서 볼 때 韓·蘇관계의 진전과 발전내용은 소련 측에 매우 의미심

장한 것이다. 특히 北方 4개도서를 둘러싼 蘇·日관계의 이해대립과 美國의 韓·蘇관계발전에 대한 『우려와 注視』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蘇聯의 對韓접근정책은 韓·蘇 두 나라간의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관계국들의 그것들과 직·간접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요소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友邦세력들과 지속되고 있는 안보와 교역 등의 광범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데서 나름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군축선언이 유엔에서 있는 후 서방세계 일각에서는 소련의 實相에 대한 갖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련경제의 약화와 불안정 그리고 고르바초프 改革정책의 전망등에 대한 불투명과 고르바초프 경제로 불리는 『고르바노믹스』의 한계 등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서방세계가 고르바초프가 휘두르는 개혁정책과 또 외교공세에 넋을 잃은듯한 자세와 태도는 앞서 지적한 오늘의 蘇聯이 안고있는 약점과 실질적인 國力の 位相에 대해서 西方인들의 눈을 멀게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볼때 蘇聯은 엄청난 군사력과 일부 첨단공학 기술분야를 제외하곤 西方 선진국들과 비교될 수 없는 國勢를 안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蘇聯의 國勢와 그것이 지닌 잠재력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며 또 그들이 지닌 국제정치적 力量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도 복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하면서 對蘇접근을 포함한 北方정책 추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對蘇접근이나 北韓孤立脫皮를 위한 전략적 고려로 인해서 기존의 안보적인 對友邦관계나 경제적인 市場이익을 손상시키는 어리석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對蘇관계의 急進展에 따라 우리의 對美·日관계에의 영향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外交기조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 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우리속담의 의미를 이 기회에 다시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北方政策을 위한 民官合同기구

서울신문 社說('88.12.28.)

우리의 對共產圈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급신장한 國力の 뒷받침에다 지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특히 경제적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주요기업들이 中國 蘇聯을 위시하여 東歐圈 국가에 합작투자 무역확대등 경제활동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헝가리와는 國交수립이라는 외교적 성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40여년간 理念의 壁에 막혀있던 對共產圈 진출이 1년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너무나 급격한 사태의 변화 앞에 당황할 지경이다. 또 우리의 준비가 미숙한 상태에서 지나친 과열현상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리없고 먼 장래까지 보아 효율적이며 國益전반과도 합치되는 진출을 위해서 도와줄 民官합동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 같다.

우선 對共產圈 진출에서 손쉽게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우리와 國交가 없을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北韓을 지원해 온 共產국가와의 교류가 지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美國 등 우리 우방의 협조로 불충분하나마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해왔을 뿐이다. 심지어 엇그제까지만 해도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들의 신변보호마저 우방국가와 협조해 왔다. 아직도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은 공산국가 없는 실정이나 그들과의 교류는 나날이 확대돼 가고 있으므로 우방국과의 정보협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美國 등 주요우방국과 이같은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過當경쟁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의 공산권 진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요기업들의 과열경쟁이 빚어낸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른바 北方 진출이 현지에서의 據點 확보와 아울러 證市에서의

인기를 통한 이익확보라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경영전략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결국 과열을 빚어 무역에 있어서 덤핑이라든가 투자조건에 있어서의 지나친 양보 등 實益을 도의시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마저 있다. 우리는 中東 건설붐에 편승하여 과당경쟁을 하다가 도산한 업체들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째는 국익전반을 조정하는 기능이 미약한 점이다. 예를 들어 中國은 우리와의 경제교류에 있어 政經분리원칙 아래 우리와의 접촉을 중앙정부에서 취급치 않고 省단위로 미루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省정부와 상대하고 있으나 만약 우리 쪽에서 이것을 거부할 때 中國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가 나서고 아울러 國交의 수립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교가 수립된 상태에서 경제교류를 한다면 지금의 상태보다 더욱 유리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정보의 수집·제공, 과당경쟁의 조정, 전반적이고도 장기적인 國益의 도모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정·통제기능은 民主化추세에 발맞춰 줄어들고 있고 기업의 힘은 우리의 경제발전과 함께 크게 향상되었다. 더우기 이제 막 시작된 공산권 진출은 정부의 힘 만으로도 안되고 기업의 힘 만으로도 안된다. 따라서 民官합동의 유기적인 협조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北方정책은 實利위에

東亞日報 社說('88.12.29.)

88년은 가히 北方지향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 이 해의 『큰일』이었던 서울올림픽이 범세계적이라면 붓물처럼 터진 한국의 對北方접근은 적어도 南方의 각국 우방들에게 썩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北方을 향한 발걸음은 소련과의 直交易, 『헝가리』에 차관제공 합의등에서 보듯 매우 빨랐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갈만한 환경과 여건이 됐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뚝 선 日本이 종래의 對韓觀, 그러니까 한국을 일방적인 이용대상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속하는 한, 또는 中國이 『홍콩』 대만등과 더불어 일종의 域內시장 개념이상의 大中國경제권 구상을 구체화하는한 우리라고 언제까지 미국시장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역사는 변한다. 우리는 그 움직임에 따라 가벼운 行步가 필요함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北方과의 관계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우려의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게는 경제적 日常의 일로 가령 7개 종합상사가 추진, 조만간 도입예정인 北韓産 석탄이 실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低생산성과 不況에 허덕이는 석탄업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 물론 北韓産의 값싸고 質좋은 석탄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北韓의 外貨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로인한 負의 과급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이미 국내업계는 반대의 소리를 내고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명태등 다른 北韓産 제품 수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북한이의 소련 中國 그리고 요즘 우리와 부쩍 가까와지고 있는 『헝가리』등 東歐圈국가들과의 交역에서도 그들의 돈사정 결제사정 수송사정 우리와의 업종별

경합 여부 등 면밀히 따져야 할 분야가 많다.

이는 다시말해 산설고 물선, 거기다 이념까지 다른 돈없는 미지의 나라와의 교역에서 우리가 성급하기보다 신중한 자세를 갖는게 좋다는 것을 뜻한다. 적어도 中期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좋다. 이미 우리의 對共產圈 교역 규모는 87년 18억7천만달러 88년 25억달러 89년에는 35억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성급한 北方접근에 다소 우려를 보이는 까닭은 비단 순수한 거래차익에 따른 경제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다. 예컨대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다투어 그들과의 관계 강화를 서두를 경우 올림픽으로 高揚된 한국 전체의 이미지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不實요인을 안고 있는 企業들이 中東건설이나 重化學때처럼 『北方』을 人質삼아 자기 不實을 호도하려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보다 그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무모하지 않다.

또 미국등 큰 흑자를 우리에게 남기는 友邦들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 아직은 東歐圈 국가에 막대한 차관을 주기보다 그 돈으로 우방국에서 더 많이 사들여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하다.

나아가 국내정치게임에서 北方을 이용하려하거나 또는 企業들이 경제적 不實요인등을 호도하기 위해, 물론 그것이 그런 요인을 전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해도 국민들의 시각전환 동기에 의해 北方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해의 北方정책은 實利위주로 보다 점진적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

정략에 통일이 희생될 수는 없다

-남북문제의 해결과 현정권의 '북방정책'-

한겨레신문 사설('89. 1. 5.)

지나간 1988년에 남북의 갈라진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군사독재를 영구화하고 분단체제를 존속시키려고 역대의 정권들이 독점해 온 통일논의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온 국민의 뜨거운 결의가 용암처럼 솟구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 통일 열기의 폭발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단 45년의 오랜 세월을 걸쳐 민주화와 민족통일운동의 제단에 바쳐진 민중의 희생과 헌신이 빚어낸 성과였다. 특히 87년의 6월항쟁에서 거세게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풍이 통일논의를 해일처럼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민의 승리이며 반민족 세력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의 열망은 평화와 개방을 추구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때를 같이 했다. 85년에 등장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정력적으로 국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개방과 평화의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을 강화해 온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를 궁지에 빠뜨렸다. '세계의 헌병'을 자칭하며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로 치닫던 레이건은 평화공존의 대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화해의 바람은 한반도에도 불어닥쳤다.

국제정세가 따뜻한 봄바람에 감싸임에 따라 남북한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에는 국회회담, 정치·군사회담, 체육회담, 경제인과 학생의 교류 등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대중은 남북의 화해를 저해하는 미묘한 움직임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노태

우 정권의 모호하고 이중적인 자세를 우려한다. 현 정권은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세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려 들고 있으며, 이것은 새해 아침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화해 추구가 국내의 정치적 탄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와 연결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보다는 ‘북방외교’에 더 주력해 왔다. ‘북방정책’은 민족의 통일과 자주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가, 아니면 현 정권의 허약한 정치기반을 강화하고 광주학살과 5공비리를 비롯한 정치문제들로부터 국민의 눈길을 돌리려는 전술의 일환인가? 그것은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교차승인의 전단계적 조치인가, 아니면 단순한 ‘장삿속’인가? 우리는 청와대의 비서진이나 보좌관들이 비밀의 장막 속에서 펼치고 있는 이 북방외교가 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과 합의를 얻어내려는 음모의 방편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득권 세력만의 ‘평화’를 대가로 통일을 희생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책동을 철저히 거부한다.

1989년은 민족사에 화해와 재결합의 기념비를 우뚝 세운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통일을 위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어떻게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높이는 ‘팀스피리트’ 같은 도발적 군사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면서도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사회안전법을 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정부라면 이런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제도와 법과 정책을 즉각 없애야 한다.

화해의 새해, 통일의 1989년이 되도록 정부도 국민도 옷깃을 여밀 때이다.

『蘇聯特急』타기전에 할 일

京鄉新聞 社說('89. 1.16.)

蘇聯과의 경제교류는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급진전 확대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저마다 경쟁적으로 『모스크바行 特別機』나 『시베리아 特急』을 타려고 열들을 올리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 韓·蘇 경제관계는 이미 단순한 상품交易의 차원을 넘어 資本 기술 경영 합작등 매우 구체적 경제협력으로 발전되고 있다.

鄭周永現代그룹 명예회장의 蘇聯방문은 이러한 양국의 경제교류가 可視圈에 들어와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실증이다. 오는 3월을 전후해서 한국의 貿公과 소련商議의 무역대표부가 양국수도에 정식으로 교환 개설되고 韓·蘇 민간경제협력위도 설치된다. 소련무역대표부는 領事기능까지 담당할 準외교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소련은 비록 未修交관계에 있지만 경제교류가 交易차원을 넘어설 때 두 나라는 단순한 무역파트너 이상의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對蘇경제교류의 본격화는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美·日에 편중해 있는 무역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장기적으로 一助가 될 수 있다. 우리기업들이 對蘇교류에 기대를 걸고 있는것은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합작투자와 자원개발에의 참여다. 즉 시베리아개발 참여가 실현되면 그 규모나 자원의 다양성등으로 우리경제 전반에 적지않은 과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과 예측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물론 어려운 고비들이 많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나 기업내 두뇌집단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는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對蘇진출 열기가 지금처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아래서는 경제인들이 좀더 냉정히 생각하고 모든 이해득실을 차분히 따져 볼 줄 아는 현명성이 요구된다. 우선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점은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다.

實益이 보장되지않는 경제진출은 기업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經濟外的인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副次的인 문제다. 이념과 체제가 전혀 다른 특수성과 外貨부족에 허덕이는 소련의 여건도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시베리아개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소련 자신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꺼림칙하고 겨울철의 상상할 수 없는 혹한 등 기후 조건까지도 치밀히 계산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적 可變性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한다. 특히 이제까지 소련에 진출했거나 경제교류를 해 온 美·日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재미를 못 본 경험도 깊이 연구, 분석하여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국내기업들간의 과열경쟁, 가능성이다. 특히 대기업들간에는 어떤형태로든 소련진출 대열에 끼지 못하면 뒤진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시베리아 특급』을 탔다가는 크게 후회할 결과를 빚기 십상이라는 점도 예측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과열경쟁관계에서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다 전체적인 국민경제나 國益에 역행하는 사태와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기업간 비생산적인 과열경쟁을 막고 조정할 민간기구의 구성이 절대로 필요하며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전략수립이 바람직하다.

對蘇경제진출의 확산은 韓·蘇양국간 경제 문제외에도 對外的으로 우리 주변 국가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최대 상대국인 美·日양국과 경제적 마찰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과 정치·외교적으로도 미묘한 波紋을 부르게 될 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우리경제는 美·日 등 서방 선진국가들과 여전히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은 잊지말아야 한다. 새것을 쫓다가 小貪大失하는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對北方 經濟交流의 調整

—中東特需의 경우와 다르다—

中央日報 社說('89. 1.17.)

새해 들어 對共產圈 交易과 南北韓 경제교류가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협력방안을 서둘러 강구하고 있다.

민간경제 차원에서는 종전의 간접교역 틀을 벗어나 상품교역은 물론 투자상담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北韓과는 이미 수산물 등의 직수입이 시작되었으며 蘇聯과는 구체적 상담이 이루어져 우리가 선박건조를 수주한데 이어 개발·합작투자상담이 진행중이다. 東歐圈에서는 서울에 무역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 경제교류가 더 확대될 것 같다. 올해에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對北方 경제교류의 진행속도와 우리의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외 경제교류의 새 地平이기도한 『北方』을 어떻게 차질없이 개척하여 상호 이익되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민간차원 할것 없이 일(事)이 頭序없이 벌어지고 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北方과의 경제교류·협력문제는 질서있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여 혼란과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어느 종합상사가 北韓産 물품을 들여왔다가 통관이 不許되었다. 업체는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당장 계산이 나온다 싶으면 어떤 물자나 상품이라도 수입하겠다고 달려든다.

對北方 경제교류에 적극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대변해주는 단적인 例들이다.

정부는 『南北韓교역 특례법』을 만들 계획이고 南北교역 확대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겠지만 이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다. 이미 全經聯은 蘇聯과 민간경제협력 위원회를 발족시키고자 하는 단계다.

우선 對北方 경제교류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제 1차적 과제라고 본다. 北方 경제가 우리경제에 새로운 活路임이 분명하나 아직 未踏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를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발을 들여놓고 걸어가게 조정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수립하고 있는 對北方 경제교류 방안이 상충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 업계를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많다. 서둘러 발표해 놓고 뒷감당 못하는 기업인의 北韓방문 계획의 例도 있다.

교역은 물론이고 합작투자나 개발참여도 기초적 연구를 토대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北方경제를 中東特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진국들이 광활한 시장을 미개척 상태로 놓아두고 깊이 발을 안 들여놓은 것은 示唆하는 바 많다.

北韓과는 閉鎖的인 사회의 빗장을 풀게하기 위해서 경제적 계산보다 서로의 자존심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北方정책에 拙速은 禁物

東亞日報 社說('89. 1.20.)

우리의 北方정책의 진전은 눈부시다. 蘇聯의 『시베리아』개발 계획에의 참여 검토, 中國과 무역 직거래의 급증과 직접항로 개설, 『헝가리』와 국교수립의 박두를 비롯한 東歐圈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 확대전망등 몇 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同時多發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조차 경제교류를 제의해 오고 있다는 보도다. 對平壤관계도 그에 못지않다. 南北총리회담이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全大協)가 平壤에서 열리는 제13차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겠다는등 정치분야는 그만 둔다고 치자. 金剛山 공동개발안, 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의 訪北, 鮮京의 北韓기업과 『合營』가능성, 南北韓交易특례법 제정검토 등등 초고속으로 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北韓産의 명태 맥주, 심지어 회화작품을 들여왔거나 들여올 전망이다.

이 괄목할 만한 사태의 진전, 北方航路 고속항속에 눈이 아찔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眩氣症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그 치달는 속도감이 멎어지다 보면 北方항로를 타는 배는 자칫 난파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크게 걱정한다. 海圖상에 자기위치가 어디있는지 모르거나 냉철한 계산이 없으면 그 항해선박, 『韓國』이라는 선박은 坐礁한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북방정책의 추진은 우리의 종전의 국제관계, 對美 對日 일변도였으며 그것도 對等이 아닌 從屬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 이제 참 主權국가임을 과시하는거라 해도 무방하다.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東歐諸國(東獨제외)도 對蘇관계의 변화에 터 잡아서만 그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세계의 양대 超強國인 美蘇가 먼저 해빙한 뒤에서야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양대국의 목인 방조 내지 장려가 시발점이 됐거나 최소

한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東歐諸國과 우리와의 접근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장래에 대한 투철한 예측이 없이 무작정 『北方』에 뛰어드는 위험성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경제는 『오타르키』(폐쇄自給) 수출 수입없이 국내 생산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美國쪽에서 우리상품의 수입장벽은 높이고 그들 상품의 수출은 강력히 추진한다. 西歐도 특히 92년부터는 역내거래장벽을 완전히 허물면서도 域外國에 대해서는 수입장벽을 더 높이 칠 전망이다. 우리는 지난번 『몬트리올』회의의 美 西歐간 농산물 분쟁에서 이 점을 실감했다. 이에 대항해서 亞細亞-太平洋경제권을 만들자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말콤 프레이저』前 首相 같은 이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해도 그 主軸이 될 日本을 우리는 무작정 信賴하고 있을수만 없다.

여기에 앞으로의 세계경제안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 타개책의 하나로 등장한것이 북방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처럼 서두르는것도 실은 그런 배경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깊이 유의할게 있다. 무역 경제거래의 파트너로의 공산권이라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단적인 例로 『핀란드』를 들 수 있다. 비공산국으로서는 蘇聯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핀란드』는 말하자면 對蘇去來에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핀란드』의 對蘇무역량이 83년의 전체무역량 26%에서 작년 14%로 떨어졌다. 개혁개방정책으로 蘇聯등 공산권은 對外去來에 활발히 나서고 있으나 막상 거래에 책임을 질 상대방이 그 두꺼운 관료계층 중 누구인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이전에는 實權者와 相談하면 되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애매모호해졌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충고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된다. 북방정책이야말로 『만사불여튼튼』이다. 서둘다가는 좌초하고 만다.

蘇聯의 韓半島정책, 그 表裏

서울신문 社說('89. 1.24.)

오늘날 국제氣流의 大勢는 확실히 韓國과 共產圈간의 和解와 교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밀접해진 韓蘇간 교류는 우리의 北方 외교 전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韓·헝가리간 修交는 그 첫 結實이라 해도 좋다. 이런 추세를 부인할 어떤 情況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개선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다. 헤쳐야 할 難題도, 넘어야 할 고비도 많을 것이다. 韓蘇간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의 몇 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蘇聯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 하나는 韓國과의 새로운 관계진전이다. 멀지 않아 서울과 모스크바, 그리고 아마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각기 무역사무소가 교환 설치될 것이다.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소련 항공기의 빈번한 西海上 비행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위이다.

국방부는 일요일인 그저께 異例의으로 소련AN-26기등 10여대의 정찰기가 하루동안 여섯차례나 北韓 영공을 횡단하여 우리 西海上의 방공식별구역까지 들어와 공중급유를 하면서 정찰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南北韓 군사대치관계와 최근의 韓半島 정세변화에 비추어 우리에게 매우 자극적인 요인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반되는 蘇聯의 움직임이야말로 화해와 교류의 국면 전개과정에서 韓蘇관계가 직면해 있는 현실문제를 잘 표출시킨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두가지 상황을 통해 蘇聯의 정확한 의도와 對韓視角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對蘇관계를 정립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련의 정찰비행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 수 년동안 소련과 北韓은 東海上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적으로 밀착되어 왔다. 北韓에 대한 소련의 최신무기 제공이나 蘇정찰기의 北韓상공 통과허용 및 蘇해군함정의 元山·南浦港 기항권제공 등 일련의 군사협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소련의 西海上 정찰비행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9월의 이른바 고르바초프 亞·太平和案의 實體가 과연 무엇인가를 새삼 가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平和案은 亞·太지역에 核무기를 추가배치 않을 것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완화를 위해 蘇·中·日·南 北韓이 참가하는 多者間협상을 촉구했었다. 소련의 平和제스처는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건대 이 평화안이 당시에 천명됐던 韓蘇관계의 실질적 개선책이기에 앞서 그들의 야심찬 군사적 東進정책의 실천방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韓蘇관계는 지금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급속도로 밀접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韓半島에는 새로운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단계에서 소련이 구태여 정찰비행 같은 군사활동을 과시한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울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국내적인 민주화 발전과 엄청난 국제환경변화등 二重구조에 대응해야 한다. 北方외교에 대해 우리 내부사정을 도외시한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北方 經濟교류의 方略

-國益과 實利 저울질하며 차분하게-

한국일보 社說('89. 1.26.)

건국이후 우리 국민들이 對北方관계·對북방정책에 관해 요즘처럼 곤혹감을 느낀 때는 없을 것이다. 소련 중국 東歐제국과의 각종 합작투자등 경제협력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붓물이 터진 듯한 對북방교류가 국가장래및 國益과 관련해 볼때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을 지도해야할 정부자신이 확고하고 일관된 기본목표와 方略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화해 흐름과 민간기업들의 움직임을 따르고 뒷받침하는 것인지 의문마저 갖게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북방정책추진에 있어 확고한 공지와 자신감을 갖고 중심을 잡을 것을 촉구하며 장래를 내다보는 합당한 방략과 추진상황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납득시켜 주도록 바란다. 국민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떠나 모든나라와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공존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하지만 바로 엇그제까지 경계와 敵對를 해오던 나라들과 관계개선을 하는것인 만큼 국민에게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납득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시작된 북방정책은 불과 5~6개월 만에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이같은 북방정책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개방시키고 남북한 교류와 화해로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함을 당국과 기업인들에게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때마침 소련 商議부회장이 방한, 무역사무소 개설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소련TU 142 정찰기10여대가 西海上방공식별 구역을 6차례나 침범한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변함없는 밀착과 그들 군사력의 과시로 분석되는 이같은 소련기의

침범비행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여전히 화해와 칼을 양 손에 갖고있고 두 얼굴정책이 건재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이다. 『政經분리』라는 편법을 내세운이상 우리도 당당히 그들의 위반을 따지고 공식으로 항의해야 할 것이다. 對중국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을 이유로 무역대표수준을 주장한다면 양국의 국익과 장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소한 외교대표부를 내세워 관찰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제시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결국 북한을 개방과 개혁흐름에 끌어들일수 있는 것이다.

東歐 각국문제에 있어서도 관계개선과 교류를 늘리는 한편 또 그들로부터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겠다며 경험요청을 받는것은 '호뭇한 일이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 歐·美·日 등 22개국 2백30여개 기업이 지난 20여년간 불과 2억여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한국의 1개 대기업이 교류개시 4~5개월만에 1억2천만 달러상당의 자동차조립 합작투자를 결정한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경제, 특히 기업들의 상황을 볼 때 파탄된 그들 경제를 무작정 구제해주는 救世主나 국제적 『봉』이 될 형편이 아닌것이다.

이제 북방정책은 마구잡이로 『너도나도式』을 지양, 머리를 식히고 하나하나 實利와 國益과 장래를 다시 검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北方창구 一元化하라

—全經聯의 자제와 정부의 정책 一貫性을—

東亞日報 社說('89. 1.26.)

資本制경제의 최대 장점의 하나는 적당한 利己主義의 허용이다. 이에 근거한 개개인의 맹렬한 경제활동이 오늘의 세계경제의 기본 흐름을 사회주의 쪽에서 혼합자본주의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北方 교역 붐이 일기 시작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적 脱利己主義 체제가 기능분산적 利己주의 허용체제에 못 견디는데 기인한다. 그렇다면 모든 利己는 만능인가. 어느 시절, 어느 사회에서나 최고인가.

아니다. 도를 지나친 利己주의는 오히려 그 장점을 좀먹어 들어간다. 요즘 민주화 바람, 與小野大의 정국아래 利己를 앞세운 각종 집단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이 바로 그런 면을 드러낸다. 그 중 하나가 北方을 향한 창구 싸움으로도 나타난다.

참으로 보기 역겨운 현상이다. 北方정책의 창구 一元化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가 발족했는데 그 중 가맹단체인 全國經濟人聯合會가 또 따로 나섰다. 全經聯이 나선 정확한 이면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경제관계라면 민간 차원에서 교섭하는게 효율적일 수 있다. 과거 모든 대외관계 국내경제 기업관계 일까지 정부 관료가 틀어쥔 폐단이 참으로 컸다. 지금 그 反動期라 해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몇몇 주도 기업인들의 과시 또는 약점 도피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인한 최근의 소관 다툼은 國益을 크게 다치고 있다. 敵前분열의 현상이다. 한국인 특유의 나쁜 버릇을 이 중차대한 전환기에 꼭 보여야 하는가.

더우기 이런 분열 현상을 소련측이 백분 이용하고 있다. 訪韓중인 『블라디미르

콜라노프』소련상의 부회장은 현대와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으나 3월중 소련에 초청키로한 40여 기업인의 초청장을 全經聯측에 전달, 국내단체간 불화를 조장하는 느낌이다.

물론 한국정부에도 책임은 있다. 민간 경험창구로 만들어 놓은 IPECK에 과연 安企部 상공부등 有關기관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다하게 협조체제가 잘 돼 있는가, 北方경제관계 정보 교류 자료분석 有關국 정책검토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全經聯의 창구역할 주장은 납득키 어렵다. 설혹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섭을 위해서라고 해도 누가 과연 소련 中國 東歐 北韓등 北方어디에 민간인 민간기업인이 있다고 보는가. 오직 黨員과 官吏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北方』에 대해 겸허하게 진실을 생각지 않으면 안된다. 北方의 가능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이념이 다르지만 모처럼 열어놓는 문을 외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문의 열림은 西方의 경우 多元으로 交流하되 北方은 一元으로 대해야 한다. 순수한 경제교류란 北方엔 없다. 이를 알면서 國內企業 약점을 때우려는 기도가 있다. 저들이 필요해서 조금 열린 문 사이를 무엇이 급하다고 우리가 敵前分裂하면서 야단들인가. 특히 不實企業 北方進出은 막아야 한다.

자기 국내기업은 不實로 버려두면서 北方을 미끼로 정책자금, 국민세금을 탐하려는 舊作態를 벌이는 국가人質경영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通商法이 과연 우리의 對美수출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갈지를 보다 화급한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를 이용한 정치목적 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北方창구는 당연히 一元化돼야한다.

왜 이리 방정떠는가

—北方외교의 制度化로 국민적 합의 선도를—

東亞日報 社說('89. 2. 4.)

우리는 政府나 政界나 企業界 지도자들이 外交에 있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흐트러놓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너무 방정을 떨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盧泰愚—金日成會談을 『올해 9~10월 중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현』한다는 방침아래 北측과 여러 경로로 막후접촉을 하고있다 한다. 이미 지난달 盧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안에 「꼭」 실현시키겠다』고 할 때부터 일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이 南北平和정착과 통일로 가는 여러 방법과 수단중 의미있는 것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 나라 外交나 安保의 원리상 한 가지 방법만 그것도 대통령이 『꼭』 실현하겠다고 미리 내걸고 특정시기까지 떠들어 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스스로 外交의 상대에게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격이며 국가전략, 외교정책상 납득할 수 없는 치졸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나 국민들은 5共때서부터의 南北頂上회담의 진짜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北方 北韓외교가 制度化되지 못하고 個人化됨으로써 오는 혼란과 손실은 실로 크다. 그러니 『北方』이 춤을 추고 우리 北方의 대상들은 韓國의 놀아나는 『틈』을 비웃거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對北韓및 對北方접촉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부내 각 기구간의 不協和, 政治圈의 공허한 선전, 정부와 民間사이의 마찰, 民間기업간의 경합 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뿌리칠 수 없다.

정치권에서 빚어지고 있는 경쟁적 양상도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소련의 『아르바토프』美加연구소장이 金大中평민당총재의 訪蘇계획과 관련, 『어떤 한국의 활동가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어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비정치적 초대다』고 논평한 사실에서도 두 당사자가 느끼고 겨냥하는 것이 판이함을 본다. 金泳三민주당 총재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후반 곧 中國방문이 될 것이라고 떠들다 그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번 訪日기간 중에는 소련방문과 金日成면담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兩金씨가 北方外交에서 『왜』 『어떻게』 『무슨일』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깊은 연구 끝에 北方外交에 직접 뛰어들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對北외교를 열성적으로 착수한지 이미 1년이 지났지만 北韓이나 中·蘇등에서 정부레벨의 책임있는 인사가 面前에 나타난 적은 없다. 그들은 언필칭 政經분리원칙을 내세우면서 『民間人』을 앞세우고 있지않는가. 또한 만나고 부르는 사람을 그들의 『계산』에 따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南北物資交流 결실을 떠들고 있는데 평양방송은 지금 이 순간도 『어떤 형태』의 계약 상담도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中國人들은 『外事無小事 外事非民事』라는 기본입장에 따라 모든 外交관계업무를 黨과 정부에서 조정, 통제하고 있다.

黨과 정부만 있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일반적 논리인 것이다. 이같은 그들의 기본전략에 보다 제도적으로 일관성있게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모아가며 차근차근 추진돼야 한다. 한 개인의 英雄化나 人氣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北方政策은 巨視的 안목으로

世界日報 社說('89. 3. 3.)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韓國의 外交도 舊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에 대한 화해정책, 中國 蘇聯등 사회주의권을 상대로 한 北方외교는 세계적인 긴장완화의 추세와 화해의 기류속에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공산국가인 헝가리와 國交를 맺게 됐고, 사회주의국가들과 비록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人的 物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北方정책의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통상면에서 우리의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韓半島에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초기단계의 접촉-교류를 통해 우리 스스로 태세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北方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사회주의 국가간에 制度上의 차이가 있고, 中國 蘇聯등 주요 사회주의국가들이 政經分離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주의국가와 國交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그 곳 法律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우리가 投資를 서두른다면 이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中國의 경우, 그들은 政經 분리방침에 따라 韓國과는 정치적 접촉을 기피하고, 通商교섭에 中央정부 아닌 省정부 대표를 내세우며, 去來도 아직은 간접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國에 비해서는 蘇聯이 韓國과의 경제교류에 보다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기업의 投資를 蘇聯과 공식관계가 없는 정부가 보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北方정책에서는 경제교류나 사람의 내왕 이상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시美대통령 訪韓을 계기로 새삼 강조됐듯이 韓-美양국은 北韓과 蘇聯의 군사적 유대가 韓國에 대해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견해가 일치해 있다. 우리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개인을 떠나서 蘇聯의 체제 자체가 갖는 팽창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출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北方정책은 蘇聯-北韓동맹의 진전과 蘇聯외교의 진의를 살피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의 北方외교 경험을 토대로 政府는 北方정책의 中-長期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北方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영역과 국제통상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2000년대에 民族통일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계획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北方외교가 그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국민들 사이에 未知세계와의 교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국내에 사상적 혼란이 조성되고 일부 좌경세력이 이 사태를 이용하려고 들었다. 또한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관계부처간의 보조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政策에 일관성이 결여된 흠도 있었다.

北方정책의 추진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우리 統一정책과도 합치하는 것이며 國益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現實에서 유리되어 끝내 정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政府는 北方정책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현실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北方政策의 再檢討

世界日報 社說('89. 4. 5.)

文益煥목사의 入北사건으로 북한의 統一정책이 한반도의 赤化統一을 위한 계략의 응고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국민이 바라는 統一은 自由民主體制를 보전-보장하는 統一이며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總和的이고 普遍善의 조건이 붙은 統一이다. 물론 北韓국민도 그들의 共產체제를 보전-보장하는 統一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에 속하겠지만 우리는 北韓동포들도 우리처럼 自由民主社會에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의 先行조건으로서 북한사회의 개방화 자유화 민주화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7·7宣言은 이런 의도와 목적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法的 정책적 후속조치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對北-對北方정책이 추진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켰고 北韓은 이 틈을 타서 그들의 赤化통일책략과 음모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文목사 방북사건도 이런 연유로 해서 발생한 부작용의 한 현상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北方政策의 진행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몇 가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統一정책을 포함한 모든 北方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大統領만이 갖는 國家代表權과 大統領과 정부가 갖는 外交權및 대외교섭권에 속한다는 원칙을 實定法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은 憲法에서뿐만 아니라 國際法上 확립되어 있는 개념임에도 統一문제에 적용하는데 있어 혼란을 느낄만큼 확고하지 못한게 우리의 실정이다.

둘째, 현행 保安法을 개정하여 北韓을 集團이나 團體로만 규정짓지 말고 外交교섭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고 赤化統一策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敵性的 개념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을 지배하는 공산당(노동당) 및 정권을 북한국민과 구별하여 민족공동체의 대상은 북한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北方政策에 관한 정부의 모든 宣言이나 南北정부간의 합의는 실정법의 후속조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法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권법등에 정식 국교가 없는 북한의 동맹국과 기타공산국에 대해 『非友邦國』 혹은 『非友好國』의 개념을 도입해서 국내법 질서를 국제정치현실과 부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북한의 연방제나 우리측의 체제연합체등은 다 같이 장차 南北회담에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나 국민은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平和통일의 길은 협상이며 협상은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도 알아야겠지만 자기자신의 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南北대화에 임하도록 만들려면 우리 힘의 원천인 國內정치에서 民主化가 빨리 정착돼야 하고 우리 軍事力도 북한과 맞설 수 있는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외교는 나라를 위해 거짓말하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북협상도 힘의 뒷받침이 없으면 상대방의 거짓말만 유발시키고 그 기만에 농락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국민은 현상황하에서 南北韓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든 통일은 불과 불의 결합처럼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냉철한 자세로 나가주길 바란다.

北方정책이라는 것

— 軌道수정보다 원칙을 확립해야 —

朝鮮日報 社說('89. 4.11.)

우리 정부가 北方정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83년 6월 故李範錫씨가 외무장관在職時 국방대학원에서 한 特講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당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북방정책의 실현』을 역설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요컨대 中-蘇내지 東歐圈과의 관계개선과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겨냥한 하나의 평화정책을 구상한 것이었다. 그후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는 이 평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거듭되면 될수록 難關에 부딪혔고, 정책자체의 논리적 모순과 현실적 장애들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지는 失態와 추태를 연거푸 보여왔다. 그 전형적인 실태를 우리는 7·7선언에서 수 없이 발견하고 있다. 그 제1항에서 구가된 『각계인사 교류』제의는 文益煥씨의 金日成방문으로 의외의 기습을 받은 셈이며, 中-蘇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자던 생각은 지금 주춤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민족구성원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의 꿈은 저 쪽의 漸高하는 對南공작 태세와, 한꺼번에 집어삼키려는 욕심의 노출로 여지없이 霧散되고 말았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7·7)특별선언』을 만든 盧泰愚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輿望을 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善意의 동기에서 그 처럼 장미빛 꿈과같은 선언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흔한 말로 정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여야 한다.

정부는 작금 中-蘇와의 經協에 새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自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財界의 대표급 인사들로 구성된 對蘇경제협력 조사단의 訪蘇계획

도 갑자기 취소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히 민족적 기대를 걸머지고 『금강산 관광』의 꿈까지 안겨준 鄭周永씨의 북한재방문도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 시작이나 경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견 영락없이 우롱당했거나 배신당한 느낌이다. 우리의 운명을 걸머지겠다고 자칭하며 일한다는 사람들이 어찌면 그다지도 無思慮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방정책을 실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할 점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상기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의 定立과 그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의 실행이다. 원칙없이 남발되는 정책은 상대방이 우습게 여기기가 쉽다. 예컨대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일관되게 『하나의 조선』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진통일→勝共통일→평화공존으로 변화해 왔다. 기본과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서독의 東方정책에서 힌트를 얻은 듯 싶은 우리의 북방정책만 해도 그것은 애당초 정책으로서 뿌리내리기 힘든 것이었다. 東-西獨은 서로가 인정하는 체제였기에 解氷→평화공존이 가능했다. 그리고 동독은 『민족해방』이라는 美名으로 동족相殘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리는 동족에게 씻을수 없는 加害행위를 저지른 장본인과 집단에 대한 어떠한 『청산』도 아니한 채 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늘 말꼬리만 잡히고 만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정책자체가 뒤흔들리는 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딱 부러진 원칙을 세워놓고 의연하게 북방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毅然해야 할 北方政策

中央日報 社說('89. 4.11.)

6共和國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北方政策은 주변 정세로 보나 南北韓관계의 바람직한 進路로 보나 時宜에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 정책은 경제적 交流를 앞세우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相互依存關係를 넓힘으로써 理念의 벽을 허물어 정치적 관계개선으로 質的 변화를 이뤄 보겠다는 意志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巨視的으로는 서울-平壤간의 對話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北韓과 유대관계가 돈독한 주변 공산국과의 관계개선이 결국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하게 되리라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北方외교란 東歐와 北京 및 모스크바를 돌아서 平壤으로 접근하는 迂迴路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계속 平壤의 눈치를 살피면서 政經分離를 고집하는 中國과 蘇聯의 태도로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기는 어려울듯 하다. 그러나 헝가리와 國交수립을 시작으로 東歐에서는 이미 결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北方政策은 방향이 옳고, 계속 추진해 볼 만한 타당성 있는 外交政策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경제계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막판에 가서 무기연기 하도록 중용했다는 보도에 접하면서 아쉬운 감을 금할 길이 없다.

政府의 이와같은 결정에는 文益煥목사의 訪北쇼크와 中蘇의 政經分離에 대한 불만표시의 두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이 중 두번째 요인은 수공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外交의 正道가 相互主義에 있는 이상 저 쪽에서 고집하는 政經分離에 맞서 우리 쪽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그런 입장을 깨기 위한 전술로써 불만을

표시하는 데는 앞뒤 균형만 지켜진다면 온당한 것이다.

그러나 첫째 요인은 政府 의도와는 相値되는 것 같다. 北韓이 韓國정부의 正統性을 도의시하고 자기들의 의도에 맞는 우리 사회의 단체들과 非正常的 關係를 트려고 들면 들수록 우리 政府가 취해야할 외교적 對應은 迂迴路를 통한 對北압력을 加重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北方외교는 北韓 내부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迂迴戰略에 호응할 實用主義 노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假定으로 삼고 있다. 이 세력을 고무해 우리의 北方정책이 원래 뜻했던 南北韓 關係의 전개를 이룩하려면 中·蘇와의 關係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지 지금 움츠러들어서는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게 뻔하다.

우리는 政府가 文목사의 訪北에 對應하면서 우리의 北方정책 基調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政府의 對內外 정책이 국민과 상대방에 다같이 설득력과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一貫性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北方정책을 처음 시도할 때 政府가 잡았던 機先을 흔들림 없이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교란작전에 우리의 기본자세가 동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國內 민주화의 방향 설정이 一貫性을 가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外交基調에도 의연해야 된다고 믿는다. 文목사 訪北에 대한 對應이 對內的인 梗塞과 對外的인 萎縮을 가져오는 결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北方政策은 毅然하게

京鄉新聞 社說('89. 4.12.)

北方政策이 『文목사의 늪』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現場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할 것인지 딱하기만 하다.

文목사의 돌발적 北韓潛行은 물론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의 북방정책의 큰 흐름에서 볼 때 그것은 『茶잔 속의 폭풍』 정도로 간주되어야지 그 때문에 우리북방외교의 進路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수정되는 따위의 소동과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것처럼 중심을 잃은 허둥거림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未熟함과 體制의 허약함을 상대방에게 드러내 보이는 꼴이 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財界인사들의 蘇聯방문계획의 취소, 鄭周永씨의 북한재방문연기,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공안관계법 개정방향의 전면재검토, 재야단체들에 대한 일제수사등 최근 정부가 취한 일련의 강경조치는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외교를 다시 原點으로 되돌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금치 못하게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文목사사건과 북방외교및 對北정책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냉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북한을 방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등 제멋대로 행동한것이 實定法을 어긴 것이라면 法대로 처리하면 그뿐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 하나로 무슨 큰 變亂이라도 일어난 양 온통 나라전체가 시끄럽고 정부의 정책基調까지 흔들린다면 말이 되는가.

실사 文목사의 突出행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작년 盧泰愚대통령이 7·7선언을 통해 정치인·경제인·언론인·종교인·문화예술인·학자·체육인·학생등 남북동포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때는 어느 정도의 後遺症은 각오했어야 했다. 文목사의 訪北은 말하자면 정부가 터놓은 北韓루트를 정식수속을 밟지않은 채 이용한 것 뿐이다. 따라서 그 책임추궁은 어디까지

나 文씨 개인에 국한시켜야지 北方정책과 對北정책자체에 暗影을 던지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컨대 정부는 북방정책을 보다 高次元의이고도 前向的인 외교 기조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문제와 북방정책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 생각하는 發想은 지양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70년초의 6·23선언으로 敵性과 非敵性공산국을 구분해 유연한 외교를 펴왔다.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 對北접촉으로 말썽을 일으켰다고해서 그것이 북방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분이나 구실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북방정책은 中國의 實用主義,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등 주변共産圈의 변화와 우리의 開放意志가 맞아 떨어져 만들어진 산물이지 결코 갑작스런 정책 변화의 산물은 아니다. 中國과 소련이 북한의 눈치를 살펴 政經分離원칙을 고수하며 우리와 계속 간격을 두고 거래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경제인단의 蘇聯방문계획을 취소하는 등의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대범하고 進取的인 외교노선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北韓을 큰형다운 아량에서 同伴者的 관계로 또는 민족공동체의 一方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던 우리가 文목사의 背信행위 때문에 다시 反國家단체로 규정, 신경질적인 반응만을 보인다는 것은 과거로 回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적어도 北方정책에 관한한 『文목사의 늪』에서 하루속히 헤어나 좀더 차가운 머리와 理性的 판단아래서 기존정책을 차분하게 밀고가는 추진력을 계속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北方外交와 北韓의 저항

梁好民 정치평론가

朝鮮日報 時論('88.11. 4.)

하루가 다른 변화

美國무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대폭 완화를 발표했다. 이 제재조치는 北韓의 87년 11월 KAL858기에 대한 테러 폭파사건 후에 취해졌던 것이다. 이 조치의 완화로써 북한과 미국은 민간차원의 人的교류가 자유로워졌고 교역의 길이 트게된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정책전환은 한국의 北方외교와 對北韓개방정책과 맥을 같이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美스탠퍼드大學 국제전략연구소와 북한의 사회과학연구원이 이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내년 2월에는 『한반도에서의 신뢰회복, 긴장완화및 입증할 수 있는 軍縮方案모색』을 주제로 하는 첫 회합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날 소련동양학연구소의 한 상급연구원은 소련공산당 청년동맹기관지에다 韓-蘇간의 경제협력에 관해 주목할 만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들어왔다. 이에 의하면 소련은 극동지방 개발을 한국에다 완전 하도급으로 맡겨, 그곳에서의 공업시설은 물론, 주택 항만 도로등을 건설케하며 노동력도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을 것임은 틀림없지만, 韓-蘇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어가는 증거를 보이고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상 작금의 일련의 현상을 보면 韓半島주변의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한의 관계다. 北韓은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對南비방선전공세에만 박차를 가해왔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한국의 北方외교를 연설이다, 호소문이다, 성명이다, 논평이다, 좌담

희다하는 형식으로 맹렬히 공격하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다.

金日成의 초조감

北韓의 선전원들은 극렬한 비방의 문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언필칭 『노태우역도』, 『군사파쇼 독재』, 『미제의 식민지』, 『매국배족』, 『두 개 조선 조작 책동』, 『영구분열 음모』 등등 최악의 표현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의 회복』을 떠들고 있으니,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악담은 후일 한국에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바뀌어도, 金日成의 그 어리석은 남한흡수식 통일방안에 장단을 맞춰 춤추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다.

그들에겐, 金日成이 제멋대로 책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일의 『3대원칙』과, 고려연방제와, 北韓-美國만이 한국을 제쳐놓고 체결하겠다는 평화협정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불가침선언을 南쪽이 받아들이지 않는한 그것은 곧 『매국』이요, 『분열의 고착』이요, 『배족행위』다. 이러한 판에 박힌 욕설로 무슨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盧대통령이 남북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무조건 平壤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누차 선언했다. 이에 대해 金日成은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南北연방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면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거부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요컨대 北韓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그들은 그 표면적인 선전과는 판이하게 극력 저지하려는 의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내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들의 스탈린주의적, 毛澤東의 『대약진』식 사회주의 건설의 실패가 몰고 온 심각한 경제위기, 놀랄만한 金日成개인숭배, 세계공산당에서 전례가 없는 부자세습제는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어 북한사회가 개방되는 날이면 전면적 파국에 봉착한다는 위기감에 그들이 사로 잡혀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북교류도, 정상회담도 거부하면서 韓半島의 냉전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의 냉전은 2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남북한 간의, 다른 하나는 국제간의 냉전이다. 南北간의 긴장상태는 그들이 뻥뻥 수 있겠지만 국제적 긴장상

태는 그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들이 한국의 北方정책을 두개의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밤낮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긴장완화가 南北간의 긴장완화를 촉발하는 필연적 계기가 될 것에 초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中-蘇-東歐의 이른바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교류-교역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北은 환상버려야

韓國과 이 나라들 사이에는 무역사무소가 속속 개설되고 있으며, 통상협정-합辦기업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지사는 현재 北京 上海 平壤 푸다페스트 東베를린에 설치되어 있지만, 내년 초까지는 모스크바 베오그라드 등에 20여 지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세를 북한은 어떠한 저항으로도 막아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지난 26일 北韓의 외교부당국은 韓-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해 헝가리 정부를 공식비난하면서 상호설치의 중지를 요구하고, 앞으로의 좋지않은 결과에 대해 헝가리가 『책임을 지게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그런 항의를 예측하고, 최악의 경우는 對北韓 『외교단절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미리 표명한 바가 있다.

北韓의 헝가리에 대한 항의는 간접적으로는 中-蘇를 비롯한 공산권 모든 나라에 대한 항의다. 그러나 北韓이 아무리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요, 『현대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포악무도한 군사파쇼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노동계급의 위업과 사회주의를 『배반』하지 말라고 아우성을 쳐도 이에 귀를 기울일 사회주의국가는 없다.

鄧小平-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제국주의-식민지해방-계급투쟁-평화공존에 관한 낡은 교조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현실에 비추어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의 공산권의 對韓교류에 대한 저항에 공명할 나라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北韓은 그 40년전 사고와 정책, 환상같은 『남조선혁명』의 전술을 포기하고 남북문제에 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北方정책에 衆智모으자

安錫教 漢陽大교수

中央日報 世流清論 ('88.11. 8.)

모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듯이 韓半島를 둘러싼 주변의 국제정치적·경제적 상황변화는 숨가쁘다.

이웃 中國에서는 鄧小平의 개혁체제가 등장하면서 韓國에 대한 경제적 개방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東歐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도 상주대표부 및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여 우리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蘇聯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지난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東아시아 연안 국가들과 공군력 및 해군력을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제기하는 일방, 南北韓 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의사가 있음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이웃 日本 역시 對北韓 정책을 유화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있으며 美國 또한 북한과 제한적 범위에서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세계경제의 블록化 현상이 가속될 전망이다.

美國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를 연결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있으며, 西歐 역시 1992년까지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강대국간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각축전이 치열하다.

蘇聯은 極東-시베리아 지역을 개방하여 경제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방 『域內 經濟安保』(regional economic security)라는 전략을 마련하여 美日偏向의 역내 분업에의 동참을 서두르고 있다.

中國역시 특히 근년에 들어서면서 인구 2억의 연안지역을 개방하여 동북아의

성장열차에 동승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미 先占의 利益을 향유하던 日本이나 美國 또한 그러한 中蘇의 도전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리 없다.

나토식으로 계산하면 이미 국민총생산의 1.5% 가량을 국방비에 지출하여 軍事大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日本은 대외 경제원조라는 화해의 제스처를 구사하며 국제경제적 힘을 강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日本의 대외경제협력 기금은 이미 美國의 그것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역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내세우며 안정적 域內진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방형 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을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해 온 우리경제의 장래에 그러한 상황변화가 미칠 영향이 심대할 것 임은 자명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되는 국제정치적·경제적 상황하에서 민족자존의 힘을 키우고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은 무엇인가.

자주 거론되는 北方정책 또는 새로운 통일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外的 도전에 대한 應戰의 방안은 아직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책입안자들이나 일반의 관심은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하다. 정치적으로는 5共非理의 청산문제가, 경제적으로는 분배 몫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속에서 수입개방의 파고가 거세고, 환율이 7백원선을 밀돌면서 수출산업은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하에 처해 있다.

단기적인 현안의 소용돌이속에서 장기적인 방향타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이른바 北方정책의 목표가 성년 한국의 位相을 재정립하고 美日의존적 정치·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넓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좁게는 대북한 관계에서 우리의 정책적 행동반경을 제고시키자는데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보편적 성향을 『反美親蘇化경향』으로 속단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제반 영역에 걸쳐 민족적 자존의 목표를 지향하려는 성향은 몹시도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蘇聯이나 中國이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對韓 경제관계를 강화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국제적 경제관계란 零和-게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상대방의 得이 꼭 우리의 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中蘇와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美日을 포함한 서구세계가 蘇聯의 경제적 개혁·개방을 환영하면서도 蘇聯이 경제적 힘을 축적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국가가 西獨이며, 서독의 對蘇경제협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東西獨간의 긴장완화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中蘇와 韓國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美日의 소극적 자세와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다. 그 다른 하나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中蘇 頂上회담을 전후하여 양국간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北韓의 외교적 행동반경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이다.

내외적 상황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외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의 衆智를 모으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北方진출 속도 늦추자

金龍瑞 梨大교수

京鄉新聞 時論('89. 2.11.)

유능한 기업인이란 생산과 소비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내의 노동·자본·경영의 역할분담과 그 각각의 주장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통합시키는手腕家이며 이를 다시 기업밖의 소비자·정책 당국·利害無關의 비판자(言論·學界)및 타국의 이해에까지 만족스럽게 연계·조정시키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적 複合社會에서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기업인은 경제지식 만으로는 안되고 정치·문화·인간학 등 총체적 의미의 전문가적 수준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성공한 한국기업의 대표적 인물인 鄭周永씨의 訪蘇 그리고 북한과의 金剛山개발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기업인의 특기인 조정과 타협의 전문성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도전과 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과 기술의 결합기법인 경영능력만의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文脈과 국제정치적 구조 및 공동체적 이념에 대한 기업가적 인식능력의 테스트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백여년 전에도 한국은 급격한 근대화외교의 자주성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때 러시아와 같은 소외세력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그것은 고도의 국내외적 관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충격으로 작용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전체적 역량의 한계 즉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뿐만 아니라 민중의 무관심과 무분별로 인하여 격화되는 사회적 정치적 모순과 갈등을 수용,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王朝의 滅亡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韓末의 비극적 경험은 일본의 침략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러시아의 힘을 빌어 세력균형의 구조를 형성시켜 보려던 無力한 정권의 절망적

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부가 北方政策을 지나치다 싶게 앞세우는 것도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極東安保役割을 일본이 교체하여 가는 과정속에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명실상부한 軍事大國化하여 한국의 保護國(韓末狀況과는 다소 다른 類似構造)으로 등장하려는데 대한 절박한 對抗措置구축의 시도처럼 느낄수 있고 이를 다시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무력한 정권이 집권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카드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최근 공산권국가들이 우리기업들의 市場이 된 것처럼 급격히 문호개방을 서두르는 인상이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빈곤하고 낙후되어 있다. 이들이 우리의 기업가를 초청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선진기술과 풍부한 자본의 협력을 얻어 그들의 후진성을 개발, 극복하려는 과대평가된 기대에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휴머니즘에의 호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낙후성 극복의 기술적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 자본가들을 유인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社會主義에서 자본주의에로 이행하는 단계적 과도기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들의 논리는 어디까지나 부르좌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국가의 이익균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본가에게 일정한 한도 내의 利益送金을 보장하지만 착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그들이 자본가에게 허용하는 사회주의적 규범내의 이익의 한도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욕스러운』마르크스적 資本家와 분쟁없이 동거할 수 있느냐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산권으로 진출하려는 기업가는 먼저 자기자신의 윤리의식부터 가다듬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개별적 기업차원에서는 국가의 전략과 별도로 경제적 타산에 의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직·간접의 부담이 전제되며 국가적 원조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중국진출은 경제대국의 능력뿐만 아니라 淸日戰爭이래 정부와 기업이 中國에 관한 길고 깊은 정력적인 연구와 만주지배를 통한 식민지경영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소련진출은 국교가 재개(1956)된 이래 한 세대가 지났어도 크게 진전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일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北方領土 반환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美·蘇關係가 경쟁 및 적대관계라는 점을 항상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 경제대국이 된 연후에도 국내외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소경제 제재에서 이탈한 유럽이 유리하게 對蘇進出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美國의 이해와 전략에 종속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국교 이전의 中國과의 경험에서 공산주의가 政經一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채널을 통하여 정치적·이념적 침투가 간단없이 시도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이나 소련은 미국과 관련되는 국가의 국민과 정부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고 동맹국 사이를 이간시키며 심지어 정부내 部處間(상공부·외무부·국방부 등)까지 분열시키는데 능숙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소련이 체코(프라하의 봄)나 아프간에서 보여준 난폭한 측면은 접근 초기에는 절대로 표출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어진 연후에야 위험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연륜과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늦었지만 사전 조사 연구를 맹렬히 선행시켜가야 할 것이며 또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는 속도이내로 사업진행을 억제시켜갈 줄 아는 금욕적 조심성이 필요하다.

가난하고 낙후된 곳을 개발한다는 상륙수적인 사명의식과 이익 균점의 윤리적 자세를 정립하는 것도 선결문제이다. 차제에 그곳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악조건속에서 역사를 創造하여 가는 인내의 生活態度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도 있다. 여하튼 과거 부유한 中東지역으로 進出했던 것과는 다른 자세가 필요하고 이 기회를 기업가와 노동자가 정신혁명의 새 계기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北方』이라는 이름의 신기루

閔丙文 논설위원

東亞日報 時論('89. 1.13.)

며칠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자칭 농업전문가인 그는 滿洲벌 三江평야에 대한 농업투자에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누구 좋으라고 그 추운 먼 곳까지 가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피폐한 국내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반투자 연구투자에 쓰자. 재래식 농사이외에 우리에게서는 育種개량, 山林개간등 한국적 농업생산성 향상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비분 강개했다.

중국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중국식 장사 방법, 이른바 華商의 상술을 일러주는 이도 있다. 그들은 항상 가장 열악한 조건제시 에서부터 말꼬를 터간다는 것이다. 三江평원은 바로 그 열악한 조건의 첫 번째인데 이를 우리가 덩석 문 격이라고 말한다. 그곳이 소문처럼 기름진 유망한 곳이라면 왜 지금까지 不毛地로 남아 있는지가 이를 웅변한다.

비슷한 또 다른 얘기는 한 日本외교관 입에서 나온다. 70년대말 『시베리아』개발사업에 들떴던 일본기업들이 몇 차례 타당성 검토끝에, 현지답사 끝에 손을 떼사연을 아느냐는 것이다. 그 조건이라면 南方어느 다른 자유세계 국가에 나가도 환영받는다고 단정했다. 덧붙여 『시베리아』개발이후 극동으로 팽창될 소련勢를 누가 감당하느냐는 安保的 위기의식까지 곁들여 지적한다.

그렇다. 이들의 꿀음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의 北方정책은 다분히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지금같은 南北韓의 대치 상태, 언제나 대한민국의 학생 근로자 在野 일부정치인 농민등을 선동 분열시켜 赤化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북한 의 장기 독재 집권세력이 존재하는 한 北方정책은 安保와 경제와 정치가 어우러진 종합적 안목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北方은 누구인가. 이념적으로 그들은 생산수단의 私有를 不許하고 利己보다는

겉치레의 利他的 공동생활에 익숙해 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이를테면 『도브리닌』이 駐美 소련대사를 24년이나 지내고 金日成이 40년이상 집권하다 아들에게 양위를 해도 무방하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만성 生必品 부족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다음의 GNP(국민총생산)를 자랑하던 蘇聯이 마침내 日本에 그 지위를 빼앗기는 차나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시민생활에서 설탕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하물며 南韓 1인당 GNP의 10분의 1수준에도 미달하는 中國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청바지 신발 스타킹에 회를 치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북한의 1인당 GNP는 추계자에 따라 9백달러에서부터 2천달러 선까지 천차만별이나 지독한 생필품 부족시대에 살기는 마찬가지다. 가 본 사람들의 증언이다.

이러한 北方에 한국이 들떠 있다.

투자를 하면 곧 돈이 벌리고 무역을 하면 기업이 잘 일어날 것 같고 차관을 주면 고마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해줄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있다. 마치 1848년 공산주의의 元祖격인 『마르크스』가 저 유명한 공산당선언문을 통해 『「유럽」에 유령이 나타났다. 공산당이라는 한 개의 유령이...』라고 외쳐댄 환상처럼. 그러나 오늘날 그 유령의 실체는 어찌됐는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학자들마저 土地와 주택의 사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판이다. 적당히 개인의 욕심을 인정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자고 한다. 허울좋은 利他心만 갖고 인간사회가 지탱해가지 않는다는 환상아닌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東歐의 우리를 향한 손짓은 어느 의미에서 처절하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비롯,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도시들은 質적으로 확실히 우리를 압도한다. 그들의 선조들이 피땀흘려 오랜 세월애 걸쳐 우리가 당파싸움으로 지새는 동안 건설한 열매들이다.

비록 지금은 그곳에 生必品이 넉넉하지 않아 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이 많다 치자. 돈이 없어 건물 외관들에 밝은 칠을 못해 어둡침침하다 치자. 그래도 그들은 역사 깊은 예술극장, 교회, 잘 설계되고 포장된 거리와 광장, 운하, 하수도등 기간투자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웃음짓는 것은 당장 급한 돈 때문이다. 우리가 작년까지 겨우 3년에 걸쳐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탐내는 것이다. 우리의 근로자들이, 농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몸도 사리지 않고 개미처럼 일해 번 돈을 아주 달라거나 빌려달라거나 투자하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北方에 대해 보다 의젓해져야 한다. 그리고 계산적이어야 한다. 함부로 차관을, 사실은 우리보다 생활조건이 좋은 나라들에게까지 손 크게 뚝뚝 줄 수는 없다. 하물며 우리 종합상사끼리 경쟁해서 북한산 무연탄 값을 치올리는 愚는 피해야 한다.

그나마 國交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보다 낫다. 어떤 보장도 없이 다만 몇몇 密使들의 잠행으로 어떤 수준의 사람을 만나 약속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의 아까운 外貨, 人力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北方이라는 신기루에 너무 빠져들지 말자. 북한의 실상을 알자. 혹시라도 『5共』과 『6共』의 차이를 北方개척 쪽에 둔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다시한번 국가이익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줄 안다. 기업인 학자 언론인 농민 등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對北方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상대국의 반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련 中國은 우리에게 비자발급마저 아직 지극히 선별적이고 북한의 對南분열용 편지공세는 갈수록 치열하다.

北方에 접근하되 國交수립을 전제로 한 무역거래로부터 차분한 추진이 요긴하다.

北方정책과 東方정책

鄭用吉 東國大교수

世界日報 論壇('89. 2.14.)

최근 우리사회에 통일논의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북방정책이다.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그것이 서독의 동방정책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두 정책을 같은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두 정책이 모두 서독과 한국처럼 분단된 나라들의 통일및 외교와 관련된 정책이고, 또 그것은 모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브란트에게 노벨평화상을 받게해 준 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과 북방정책의 주역인 한국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서독과 한국의 국력차이가 크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하자 이웃나라들은 곧 동방정책은 전혀 평화정책이 아니고, 다만 새 옷을 입힌 과거의 東方植民地化 政策의 새로운 표현이라며, 전통적으로 독일이 동쪽으로 팽창하고자 하였던 帝國主義의 根性때문이라고까지 동방정책을 비난하였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이러한 혹평을 받게 된 배경은 무서운 게르만 민족의 저력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다.

주변국들의 이같은 혹평과 경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는 모스크바나 프라하 바르샤바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다. 결국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1970년 8월에 獨-蘇條約이 체결될 수 있었고, 1972년 9월에는 독일-폴란드간에 전면적인 외교관계도 수립될 수 있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들은 이처럼 일찍이 서독과 경제적인 관계는 물론 정치 외교적인 관계까지로 확대하여 나갔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한의 방해를 제외하고는 큰 저항을 받지 않

고 있다. 그 대신 한국의 북방정책 대상국인 소련과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철저하게 政經分離政策을 취함으로써 『鐵의 장막』이나, 『竹의 장막』이 한국에게는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국력을 다만 경제력만으로 평가하지않고 그 국가의 自主性, 외교력, 정치의 質 등 여러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결국 한국과 서독의 국력 차이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이한 일은 한국은 이웃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물론 지리적인 이유를 든다면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소련도 모두 이웃나라들이다. 그러나 이웃나라란 상부상조하며 서로를 감싸고 도울 수 있을때 진정한 이웃나라일 수 있다.

서독의 前총리 슈미트나 현재의 콜총리는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제1서기장 호네커를 비공식적으로도 네번 이나 만났다. 한 번은 헬싱키에서 있었던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였고 나머지 세 번은 유고의 티토장례식, 소련의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의 장례식에서 각각 두 나라 정상들은 자연스럽게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상들은 좀 비유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나라 국가원수 장례식에 조문을 가서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웃나라도 없다. 일본의 히로히토가 아닌 다른 정상의 장례식이라면 혹시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또 서독의 이웃들은 유럽공동체를 목표로 서독과 굳게 결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모임엔 서구는 물론 동구의 정상들까지 한 자리에서 유럽의 안보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서독에게는 좋은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 주변에는 좋은 이웃도 없고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남북한의 정상들이 함께 참가할 多者間會議 같은 것도 없다.

바이츠제커 서독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좋은 이웃들이 있어 독일이 하는 일에 협조적인데 반해, 한국은 이웃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이 없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한 적도 있다.

다음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서독국민과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국민들의

큰 의식의 차이이다. 서독인들은 통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통일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는데 반해, 남북한 국민들은 통일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감상적으로 통일에 집착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어려운 것은 군사-경제적으로 동서 양 진영이 독일 땅 위에 균형있게 맞서 있는데다 소련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통일된 독일의 위협 때문에 통일만은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본조약체결이후 동독이 이제 동서독은 민족의 뿌리부터 달라져 동독에는 사회주의적 민족이, 그리고 서독에는 자본주의적 민족이 새로이 탄생되었다고 강조하는 「2民族 2國家論」을 전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브란트도 이미 1969년에 집권이후 독일 통일의 길은 『지루하고 먼 대화의 길』이라면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의 연설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꾸준히 노력하여 상당한 수준의 人的-物的交流를 시행,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장래 독일 국가건설의 꿈을 키워가고 있듯이 그들은 통일문제에 理性的이고 實利的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북한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는 근로자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일을 논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5共非理問題, 지역감정문제, 노사간의 갈등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44년간 敵對해 온 남북한을 통일시키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이처럼 강렬한 만큼 남북한 국민들은 교류를 통한 共存方式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편대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에의 기대 때문이겠으나 당장은 안정된 공존분위기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우선의 목적이 있었다. 서독보다 모든 여건이 불리한 한국의 북방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꺼번에 경제적 이익과 통일까지 달성하려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국민들의 열정이 계속 활활 타오를 때 비로소 독일인들도 부러워할 통일국가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北方외교 限界性 극복의 길

洪淳鎬 梨大교수

서울신문 時論('89. 2.18.)

우리는 지금 『韓國北方外交史』의 序章을 펼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1년전 부터 추진중인 中·蘇·東歐권에의 경제진출, 정부수립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산국가인 헝가리 人民共和國과의 정식 국교수립등 우리의 북방외교가 활기를 띠고 있다.

북방외교의 이러한 성과는 全方位外交時代에로의 진입을 뜻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외교는 다른 나라들의 외교행위와는 상이한 특수한 여건하에서 전개되는 통일외교인 것이다. 그러나 북방외교의 상대방인 북방국가들이 북한의 동맹국 내지 우방이라는 관계가 우리 북방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變數로 작용함으로써 이것이 북방외교의 1차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요인 외에도 이들 북방국가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들의 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 盧대통령의 『7·7특별선언』 『8·15남북정상회담』제의, 10월 유엔 총회연설에서의 『동북아 6개국회의』제의 등에 대해서 北韓·中·蘇를 비롯한 동구권 등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헝가리와의 수교를 계기로 『도미노』現象의 낙관적 전망, 鄭周永씨의 訪北에 따른 남북 직교역에 대한 부푼 기대감, 우리 학생대표단의 『평양세계축전』참가결정등 이제 통일이 눈 앞에 와 있는 듯한 들뜨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발전은 정부나 경제계 지도자들이 북방외교의 추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北韓이나 북방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보이며 흥미를 거둬하고 있는 『5공비리 척결』 『광주

학살사건 진상규명』『끊임없는 노사분규』『水稅철폐·고추수매요구에 대한 시위』 등 산적해 있는 국내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정치가 제각기 곱돌고 있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

外交란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自國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평화적 수단이다. 또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他國에 대해 주장하고 이를 실현함에 있으므로 외교의 主대상이 국가적 이익이라는 점은 東西古수를 통해 동일한 논리에 있다. 여기에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한국과 접근하거나 접근하려는 북방국가들이 政經分離政策을 내세워 그들의 『속셈』에 따라 민간인을 앞세우면서 非政治的인 경제협력을 주요문제로 거론하고자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국가이익에 착실하게 『得』을 보려는데 反하여 우리는 그들의 정경분리원칙을 政經分離不可論으로 맞서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최근 政界를 비롯한 경제·종교·문화계등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북방진출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또 하나의 제기되는 문제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진정한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가이다. 경우에 따라 민족적 이익, 국민적 이익 또는 국가적 이익으로 번역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rest)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어휘이면서도 그 개념은 명백하지 않다. 추상적인 해석방법으로서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각 민족(Nation)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민족적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이익은 민족적 열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도달해야 하는 『理想的인 미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래의 상태에의 도달은 한꺼번에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인 발전을 요한다. 이때 국가의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 국가목표이며, 국가는 그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終局的으로 국가이익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방외교의 결실로 나타나는 『민족적 미래의 상태』는 『통일』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방외교를 통해 통일없는 현재의 분단상황하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제 겨우 초기단계에 들어선 북방외교의 始發이 점진적인 발전단계를 거쳐

성공하자면, 국내적인 안정과 민주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1차적으로 요청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고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북접촉을 서두른다고 곧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남북어선이 조기송환되었다해서 한반도평화의 청신호로 볼수도 없는 것이며, 財界거물의 2차訪北이 곧 실현되어 구체적인 금강산관광개발이 눈앞에 보인다해도 북방외교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다져야 할 정지작업이 쌓여 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을 포함한 북방국가들과의 외교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꾸준히 성실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 외교의 역사적 철학성(Historism)의 결여이다. 이같은 외교철학의 빈곤 극복을 위해 우리역사에서 북방외교의 연원을 찾고 분단이후의 북한의 북방관계를 규명하는 심오한 연구체제를 확립하면서 우리의 외교철학을 정립하고 북방외교 연구전문가를 양성하여 장기적인 외교정책 수립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에게서 북방지역 전문가가 없으며, 몇몇 연구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지역감각이 결여된 문헌적 연구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북방외교기구의 제도적인 상설화가 시급하다. 최근에 발족한 차출식으로 구성된 『북방외교추진본부』와 같은 단기적인 안목의 기구보다는 북방외교의 최종목표가 달성되는 통일의 그날까지 운영될 상설 전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과 각 정당들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통일하여 남북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인내와 설득으로 북한을 통일외교의場に 끌어낼 차원높은 외교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政府, 어디로 가고 있는가

梁 建 한양대학교수

東亞日報 時論('89. 4.21.)

北方政策 갈팡질팡

공권력이 마구잡이로 발동되고 있다. 다시 5共의 극단적 대결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가 공언해 온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눈 앞에 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래 재야를 『좌경』으로 단죄하는데 서슴지 않던 사람들의 상당수 조차도 결코 오늘의 사태를 편한 마음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것은 아닌데...』하는 염려스런 느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귀가 따갑도록 이런 말을 해왔다. 현 정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불안하다, 공권력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나 거꾸로 가는 듯한 시국의 흐름을 보면서 새삼스럽지만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는 오늘의 시대적 소명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무슨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년여 정부의 자세를 보면 우선 모든 문제들을 정면에서 마주 대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짙다. 무언가 술수로 비껴가려는 공작정치 차원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그것은 곧 신뢰성이 없다는 말도 된다. 정부가 강하냐 약하냐는 문제보다도 정부가 믿을만 하냐 아니냐 하는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이른바 북방정책을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워 왔다. 그러나 안팎의 사정으로 그것이 벽에 부닥치자 이제는 『좌익척결』이라는 逆의 방향으로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북쪽을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7·7선언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적』에게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도무지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혼란스런 태도에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방 정책에 의문이 따르는 그 만큼, 마찬가지로 『좌익척결』이 구호에도 결코 설득력이 뒤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사회에 좌익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공동체 성원 전체의 문제로서 바라보고 이념적 논리와 정책대안의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것이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세는 결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권적 차원에서 확대 이용하려드는 빛나간 속셈이 내보이는 것이다. 북방정책이나 좌익척결이나 그 모두에 기준과 일관성이 없어보이는 것도 바로 진실성 결여 때문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건의 충족에 있다.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무엇인가.

公權力 권위 잃어

첫째, 무엇보다도 공권력행사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권위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권위가 직선제를 통한 당선만으로 주어질 수 없음은 이미 오늘의 상황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만큼의 권위가 충전될 수 있는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光州문제를 포함한 5共청산에 있다. 현 정부의 성격상 결코 만족스런 청산을 기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공동체의 기본적인 윤리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5共청산은 결코 『지난 일』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위회복을 위한 『오늘과 내일의 일』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공권력행사가 정당화 되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선 정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스로 무시하는 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힘을 내 두를 때, 어떻게 여기에 공감 따를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자유의 적이냐 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결코 폭력세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법체제로 충분하기 때문에 악용되어온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까닭은

무엇보다도 일단 이 법이 적용될때 법집행 적용자는 물론 시민들을 포함한 모두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포기하려 하게되는 그 이데올로기적 통제 의 효과때문이다.

셋째, 『좌익척결』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그 규제대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분명히 설정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상은 별할 수 없다는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左든 右든, 폭력이 발생했거나 또는 폭력발생의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규제도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다.

民主化방향 설정을

한편, 수난기를 맞고있는 재야에 대해서 한 마디 고언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이제는 상당수의 지식층까지 재야를 『좌경』으로 몰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곤혹스러운 것은 재야쪽에서의 분명한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방』과 『자주』라는 지극히 추상적 차원의 구호와 매우 구체적인 차원의 전략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을 뿐, 그 사이의 광범한 중간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재야가 정치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선 이상, 국민에게 대안으로서의 청사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은, 근래 중간층의 우경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간층의 향방이 옳든 그르든, 중간층이 우회전할때 자칫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이 점을 무엇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세의 사가들은 이 시대를 혁명의 한 복판으로 규정지을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온갖 생각과 제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非혁명적 권력구조하에서 혁명적 욕구를 수용, 조정해야 하는 것이 이시대의 어려움이자 과제다. 합리적 새 제도의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은 오직 민주화에의 분명한 방향설정에 있다. 결코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北方정책은 온국민 지혜로』

朴哲彦 대통령政策보좌관
한국일보 특별寄稿('89. 4.26.)

한 민족이나 나라의 미래는 결코 예정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성원이 얼마나 확고한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예비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자신감과 넘치는 힘은 민족의 내일을 향한 개척의 길로 용기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역사의 요구이며 필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구어 온 영광과 아픔의 역사 모두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무대로 삼아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세계와 절연된 상태에서 결정지어 질수 없음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격동·변전하는 지구촌의 시대는 전세계, 전인류를 우리의 창조적 활동의 목표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세계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화 되었든 잠재되고 있는 것이든 간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변화하는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해야 하는 역사적·현실적 당위성과 함께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자긍심과 역량이 하나로 합치되는 점점에서 그 동안 문닫아 걸고 걸눈질하며 지내온 세계의 반쪽, 북방을 향해 나아가는 動因을 찾을 수 있다.

북방은 우리가 잃어 버렸던 무대이다. 대륙은 선조들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꿈과 울분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를 향해 나아감은 스스로 역사를 회복하고 개척하는 일이다.

북방을 향한 이 발걸음은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고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소중한 뜻을 담고있다.

우리는 민족 모두가 함께 아파해 온 분단의 질곡으로부터 해제되고 드디어는 통일된 조국의 꿈을 실현하는 일을 앞당기는 길을 찾으려 한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73년의 6·23선언이후 외교과제로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은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과제로서만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당시 우리정부의 역량과 의지의 한계 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북방나라들과의 쓰라린 과거로 인한 피해의식이 지워지지 않았던데도 큰 원인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동서냉전체제가 그림자를 짙게 드리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새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성과가 축적된 가운데 모든분야에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적 자신감이 뒷받침되면서 이로인한 정권적 부담도 감내할수 있게 되었다. 때 맞추어 서울올림픽이라는 촉매제와 함께 東西냉전체제가 서서히 걷히면서 공산권국가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 하는등 국제적 여건이 성숙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살려 민족의 내일을 개척하려는 7·7선언을 밝힌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북방정책은 현실적 과제로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그결과 지난 2월1일에는 동구공산권의 교차로인 헝가리와 국교수립이라는 첫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이 일은 그동안 세계의 반쪽, 서방만을 상대로 하던 반쪽외교를 극복하는 전방위외교 시대의 개막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스스로 새로운 외교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자주외교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함께 동구권 제국과의 관계개선도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다. 유고·폴란드·불가리아 등과는 이미 무역사무소가 개설되었거나 금명간 개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동독·체코등과의 교류도 확대일로에 있다.

그동안 그토록 멀게만 느껴져 왔던 동구 공산권국가가 이제 우리 가까이에 다

가온 것이다.

소련과도 韓末 이후 최초로 그들의 공식외교 채널과의 비공개접촉을 통해 관계 발전 원칙에 합의하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다.

중국과는 연간 31억불에 달하는 교역량이 말해 주듯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행해지고 그들이 북측을 의식하여 정치분야에서 省단위 교류국한등을 고수하던 태도에서 한 걸음 전진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놀랄만한 성과와 더불어 경제인의 북한방문 등이 잇달아 실현되자 급기야는 북방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는 우리가 너무나 멀게만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던 지난시절의 인식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공산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힘든 과업이다. 아무리 개방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존관계 특히 북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등 역사적·현실적인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와의 관계개선에 그렇게 적극적인 것만도 아니다. 이들을 우리의 협력파트너로 만드는 일은 결국 어려운 교섭과 협상과정을 겪게 된다.

외교관계가 없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일종의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이들 나라와의 관계를 열기 위한 교섭이나 협상은 일반 외교교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성과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교섭은 기존관계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들 체제 자체에서 오는 명분론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교섭채널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헝가리와의 교섭대표도 상대방의 희망과 교섭의 성격등 모든문제에 관해 관계 기관간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로서도 교섭의 전략과 숨겨진 카드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합의나 양해가 있기까지에는 비밀유지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교섭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의 교섭을 함에 있어서는 국정최고책임자의 뜻과 의지를 기초로 하여 상황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판단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은 물론 학자등 전문인사들과의 공식·비공식 회합과 협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해 왔다.

특정인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북방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북한을 고립화 시키고 전쟁도발을 억제한다는 안보위주의 소극적 목표보다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북방정책을 과거와는 달리 대북한 정책·통일정책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는 북의 기존노선에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북방정책을 통해 그들이 보이고 있는 조그만 변화의 싹을 키워가도록 도와주고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간의 불신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셋째, 정치관계의 개선을 과감하게 병행 추진해야 한다. 경제등 비정치분야에서의 실질관계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접근을 끈질기게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비정치적 교류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정치관계의 개선 없이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적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물론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치·언론등 각 분야 국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새 공화국의 북방정책·통일정책에 관한 미흡한 대국민 설명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이 결코 우방국의 이익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의 과업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협조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방에의 途程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고 또 현재화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북측의 견제는 지속될 듯하다. 냉혹한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공산권과의 교류를 그들의 이념과 체제의 수용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정권적·정파적·개인적인 비판과 견제의 의도로 북방정책의 수행과정을 도마에 올리고 난도질하려는 경향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무절제한 교류와 진출은 현실적인 불이익을 야기함은 물론 우리의 기본전략에 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갈 경우, 이러한 장애와 난관은 능히 극복될 수 있다.

물론 정치인·경제인·언론인·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스스로 민족의 장래를 함께 개척하기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지원해 줄 때만이 시련의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자주외교의 길이다. 2000년대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면서 통일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느냐의 여부는 북방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의 변화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이 합하여 나아가는 곳에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 용기있는 국민만이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北方정책과 責任윤리

李長熙 外大교수

國民日報 時論('89. 4.27.)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 1년동안의 방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 가치가 민주개혁과 민족통일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민주화와 민족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사회는 이념분쟁, 노사분규, 학원소요, 부동산 투기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6共의 흥망을 거는 듯이 서두르던 북방정책은 금세 금강산관광이라도 가능할 듯이 요란히 떠들어대더니 文益煥목사 入北사건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그렇다면 북방정책은 중간평가용이었던가? 이같은 통일정책은 통일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역대 정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멍에인 분단의 해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방정책은 장기적이고 민족사적인 責任倫理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윤리를 心情倫理와 責任倫理로 구분했다. 심정윤리하에서의 정치행위는 행위자의 절대적인 도덕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편 責任倫理는 행위자가 그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되, 그 행위가 다른 행위자의 상이한 가치관이나 생활철학과 충돌할때 야기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그 행위의 역사적 운명에 관심을 갖는다.

브란트를 비롯한 西獨 정책결정자들의 동방정책은 심정윤리보다는 책임윤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들의 統一論은 『통일은 어떤형태든 좋이다』나 『統一을 하면 좋기때문에 해야한다』는 心情倫理에 입각한 명분론적 통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통일제안의 실현성, 그 파급효과까지 신중히 고려했을 뿐더러 몇 년에 걸쳐 반대당을 설득하고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責任倫理에 입각해 동

방정책을 수행했다. 그래서 西獨은 모든 政治協商에서 원칙문제 논쟁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항상 실질적인 문제들을 풀어갔다. 그 예로 브란트수상은 1969년 10월28일 독일연방의회에서 동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즉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으며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이다』라는 소위 『1민족 2국가』이론을 최초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독은 中歐의 평화와 안전 및 실질적인 생활권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념과 체제가 다른 동독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을 통해 兩獨간 기본관계를 잠정적이거나 설정할 수 있었다.

中短期的 입장에서는 자유왕래, 장기적으로는 자결권에 기초한 독일 재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이 기본관계 설정은 頂上會談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성실한 노력의 결과였다. 대외적으로 西獨은 東西獨頂上會談에 와서 東獨의 종주국인 소련과 獨·蘇 무력포기조약을 체결했고 폴란드·헝가리등 동독동맹국에는 경제원조를 약속함으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西獨은 동맹국인 美·英·佛과도 4개국 협의체를 설치, 공동으로 對동독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협상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또한 동독에 대한 중상과 비방을 삼가는 한편, 동서독 회담 때는 정식으로 동독의 國歌·國旗 및 공식국호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인정하고 또 사용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심도있고 공신력있게 암시했다. 드디어 西獨은 동서독 정치회담의 시험대로서 가장 말쑥 많은 『동서독간의 체신과 교통에 관한 협상』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1972년 12월 21일 『東베를린』에서 東西獨關係를 정상화하는 基本條約이 조인됐다.

이와같이 브란트수상은 야당, 우방국, 東獨, 주변 東歐圈국가들의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 이들을 설득시키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방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북방정책이 국민적합의 도출과정도 없었다. 5共 때는 정권유지용이었고, 6共 때는 어떤 可視的 결과를 보이는 듯 하더니, 다시 흐지부지 되면서 제도수정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의 경우는 북방정책이 밀실 외교로 이루어져 국민적 합의과정, 우방과의 충분한 사전양해는 물론 여권내부의 협의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된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

는 편의주의의 이용물로 전락되어 버린 것 같다.

북방정책이 과연 책임윤리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文목사의 방북도 책임윤리에 입각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여야 지도자들의 북방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태도는 경제력의 우위, 국제정세의 新데탕트, 정권의 정통성 회복으로 모처럼의 남북관계개선 기회를 퇴색시키고 있다.

政府가 북방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어 동맹우방의 협조를 구하면서 中·蘇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의 富의 편재현상을 과감히 개혁,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개혁 없는 북방정책은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작금의 세태는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속의 통일이라는 국민적 합의아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일관된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5 南北會談

學術交流는 南北이 먼저

— 南北文化會談을 빨리 추진하라 —

中央日報 社說('88.11. 3.)

北韓의 사회과학원과 美國의 스탠퍼드大 국제전략연구소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北韓·美國간에 처음으로 공식 교류관계가 성립됐다.

이것은 비록 民間차원의 非政治的인 교류협정이긴 하지만 이념과 체제 차이로 인한 분단 국가의 일방이 한때 交戰관계까지 있었던 상대진영 지도국가와 맺은 협력관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韓半島주변의 諸勢力은 개방과 협력의 국제조류를 외면하고 폐쇄와 고립을 고집하고 있는 北韓을 개방시켜 국제무대로 끌어내는것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韓國의 『7·7 특별선언』이나 최근 美國의 對北 봉쇄정책 완화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

이번 北韓·美國 학술협정은 그같은 韓美 정책변화에 따른 1차적인 효과일 뿐 아니라 북한이 개방되는 효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적성국 또는 비수교국 사이의 교류에서 학문 교류는 특별한 利點을 갖는다.

정치·군사관계는 하나의 파이를 나눠 갖는 흥정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스포츠는 물리적 이익이 따르지는 않지만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경제교류는 서로 이익이 되는 非제로섬 관계지만 體制의 우월성을 평가할 한다는 점에서 주저해 왔다. 예술교류도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체제선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學術交流는 그런 이해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다. 그것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학자들이 하나의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협력하는 과정이다. 파이의 분배도 없고 승패를 가릴수도 없는 순수한 협력관계만 요구되는 영역

이다.

이런 성격때문에 實益과는 거리가 멀다. 바로 그런 점으로해서 南北관계에서도 소외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문공부장관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私見으로 학술교류를 포함한 南北문화 교류회담을 제안한바 있으나 이젠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南北韓처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체제간에는 가장 쉽게 이뤄질수 있는 학술교류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北韓은 美國보다는 우리와 먼저 학술교류에 임했어야 한다.

南北韓 사이에는 학술교류를 서둘러야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특히 급한 분야는 考古學과 우리 古代史다. 이 분야는 南北韓과 中國의 공동연구 없이는 해명되기 어렵다.

분단이후 南北韓에서는 先史時代 유물이 여러곳에서 새로이 발견됐다. 이것을 慶州의 유물과 결합시켜 연구할 때에만 당시의 문화양상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南北交流가 없어 이 분야의 연구는 오히려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日本과 中國이 앞서가는 실정이다.

학술교류가 시급한 또 하나의 분야는 國語學이다. 분단 40년을 경과하는동안 우리 고유의 언어가 점점 異質化하여 생소한 어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同質性 分化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國語學 교류는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선 北韓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다. 분단이후 北韓의 사회주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는 直接交流에 대신될 방법은 없다. 이제 우리는 南北 문화회담을 열어 폭넓은 학술교류를 성취해야 한다. 北韓·美國의 학술교류협정이 이같은 南北대화의 계기가 된다면 더 없이 다행한 일이다.

南北韓學者들이 만나라

- 美·北韓 학술교류협정을 보고 -

朝鮮日報 社說('88.11. 4.)

미국이 對북한관계 개선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인 2일 美-北韓간의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미 7·7선언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들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는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40여년 동안 敵對만 해오던 美-북한간에 학술교류라는 길이 하나 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美-북한 학술교류협정소식을 듣고 충격을 느끼는 것은 북한이 왜 민족 내부간의 교류를 외면한 채, 미국과는 선뜻 협정까지 맺었는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남-북한간에는 지난 40여년 동안 별의 별 일이 다 있어 왔지만 특히 지난 수 개월동안 북한은 한국정부의 매우 호의적인 제의들마저 모조리 걷어찼다. 북한은, 남-북간의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학술 등 교류를 하자는 7·7선언을 외면했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 협의회의 제의는 정면으로 거부했다.

물론 銳角的으로 相衝되는 利害가 얽힌 정치-경제나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언론-종교, 또는 승패나 優劣이 드러날수 밖에 없는 체육이나 예술의 교류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학술교류만은 어떠한 흥정이나 협상도 필요로하지 않으며 利害가 상충될 일도 없다.

그렇다면 같은 역사를 전승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북한이 40여년이나 부자연스럽게 분단-絶緣-異質化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 우열을 가리거나 경쟁할 필요조차 없는 학술교류를 왜 못하고 있는가. 그중에서도 시급한 필요조차 없는 학술교류를 왜 못하고 있는가. 그중에서도 시급한것은 언어와 역

사다.

아무리 권력을 지탱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대단하기로서니 수 천년 繼承되어 온 같은 민족의 말과 역사가 다를 수는 없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려하거나 설득하려하지 않고 異質化 돼가는 언어-관습-문화-역사의 等質的 근원을 찾는다는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한간에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기 위해 가장 절박하면서도 가능한 접근로는 국어와 考古學 또는 자연과학 분야일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학 국제전략연구소장 존 루이스 소장등 수 명의 교수들이 지난 달 平壤을 방문, 조선과학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스탠퍼드대학 국제전략연구소는 바로 지난7월 소련과학원 東아시아연구소와 함께 『韓半島에 대한 안전과 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발표한 기구이기도 하다. 루이스교수 등은 또한 평양에서 북한의교부의 고위관리들을 비롯, 국제관계연구소,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과도 광범위하게 접촉을 가졌다고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우리끼리는 왜 그같은 접촉과 교류가 불가능했는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명분에 매이고 체면을 생각한 나머지 은밀한 접촉보다는 생색이 나는 공개제안의 공허한 왕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優位과시→경쟁→이해상충→선전비방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옛 부터 집안싸움 해결을 위해 동네사람들을 되도록 내편으로 끌어들이려다 결국은 집안 망신만 하고마는 陋習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잘 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남-북한은 우선 만나야 한다. 대학은 다들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통일방안모색에 앞서 남-북한의 학자들은 앞장서 만나 민족문제를 공부해주기 바란다.

南北 國會 회담 性格 分明하게

韓國日報 社說('88.11.18.)

근 한달만에 열린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6차예비접촉에서 회담을 開·閉會式과 본회담으로 나누고 양측의 대표단을 50명 씩으로 합의하는 한편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열고 폐막회의에서 공동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한다. 우리는 그동안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담보를 거듭해 온 국회회담 문제가 비록 부분적이거나 회담순서와 대표단 규모등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담성사의 핵심과제인 회담운영방식과 의제 등에 관해 북한측의 변함없는 완고한 주장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날 북한측이 본회담에 나서는 각50명(총1백명)의 대표가 각기 독자적인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져야하며 회담명칭도 반드시 「대표회담」이 아닌 「대표회의」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논거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결같이 1對1의 雙務회담방식을 채택하고있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50명각자가 독자적인 의견과 발언권, 표결권을 가져야 된다는것은 우선 남북대표의 개념보다는 의견상으로 마치 각자가 민족대표인 듯한 인상을 주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측 대표단의 분열과 교란을 통해 회담을 그들이 목적하는대로 이끌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개별 대표권행사는 우리측이 일찍부터 경계, 반대해 온 이른바 諸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僞裝한 것으로 북한의 획일적인 통제체제를 감안할 때 그 속셈은 분명한 것이다.

의제 중 불가침문제에 있어 북한이 종래와 같이 공동선언을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측이 국회가 조약체결권이 없음을 들어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 선언 문제로 하고 이를 남북당사국에 촉구하기로 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예비접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예비접촉의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전날 정치·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구나 이 제의는 지난86년 金日成의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의와 87년북한 정무원의 이른바 多國籍 軍縮협상제의를 묶은것으로 핵심은 남한으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減軍을 통해 사실상 한국의 武裝을 해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休戰후 지금까지 북한측이 내놓은 정치회담안은 물론 대부분의 남북회담안의 궁극적 의도가 미군철수-미국과의 3者회담-남한적화에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한국측이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 것은 북한측이 미리 계산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의 제의는 盧泰愚대통령의 7·7특별선언을 시발로 국회시정연설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남북 정상회담, 불가침선언논의제, 동북아 6개국평화회의안 등 일련의 對北평화제안과 소련·중국·東歐圈등과의 급속한 접근에 북한도 평화의지가 있음을 천명하려는 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그들의 주장대로 진정 2개의 한국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있다면 이같은 새로운 회담보다 당면한 국회회담을 비롯,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적십자회담과 고향방문단 교환·경제회담이 재개되도록 사심없는 자세로 나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南北회담의 새 可能性

— 『합정』 있지만 積極 對話해야 —

京鄉新聞 社說('88.11. 18.)

어떤 대화든 그것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 성실성, 인식의 일치라는 기본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분단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쌓이고 쌓인 남북간의 장벽과 불신, 상이한 가치체제도 그런 상호신뢰의 회복없이 는 극복되기 어렵다. 그것은 또 서로가 이데올로기적 갈등보다 민족同質性 회복이라는 대국적 안목과 호양정신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17일 열렸던 6차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우리측은 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에 서 대폭적인 양보를 했고 북한측 제안중에서도 수용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였다.

우선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 참석인원의 규모문제에 있어 북한측이 내 놓은 절충안을 받아들여 50명씩으로 하자는데 합의를 본 것은 이번 예비접촉의 괄목 할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開·閉會式에 양측 의원들이 모두 참석, 정당대표 연설과 축하연설을 듣고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은 개막식 이후 서울과 平壤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폐막식에서도 공동합의서를 채택키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이다.

그러나 국회회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의제토의를 위한 회담형식과 관련, 쌍무적 성격의 『대표회담』, 즉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과 참석자 절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치합의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측의 주장도 의견상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속셈은 대표회담이라는 外形을 수용하는 체 하면서 회담을 『연석회의』 방식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드러 낸 것이다.

이번 북한의 주장에 부분적으로는 융통성을 발견할수도 있으나 『불가침에 관한 초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려는 북한의 자세에서 우리는 『군사문제 우선 해결』에 집착하는 그들의 전술적 底意를 읽을 수 있다. 불가침 문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선언』보다 양측 정부당국이 협정으로 맺는 것이 현실적 임은 말할것도 없다.

북한측이 16일 그들의 정무원 총리 李根模의 명의로 보낸 대남서한도 겉으로는 『긴장완화』이고 『교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 軍縮등을 겨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회회담의 형식과 의제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정치·군사 회담을 제의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호신뢰의 전제없이 軍縮만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군사문제 해결은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협력확대를 통한 상호신뢰구축, 그리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한 가지 북한측의 제의에서 주목되는것은 상호비방과 중상증지, 다방면적 합작 교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측 제의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보면 경제교류등 일부 우리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에 주안점을 두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정치 군사회담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어떤 회담이든 만나서 해로울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성숙과 그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회유하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것을 거듭 당부한다.

남북 정치 · 군사 회담에 적극 나서라

한겨레신문 사설('88.11. 19.)

북한의 이근모 정무원총리는 지난 16일 이현재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남북고위급 정치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은 물론 86년 12월30일과 87년 7월23일에도 이러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의 제안은 기존의 주장을 처음으로 공식 서한에 담아 공식회담에서 논의하자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7일 당 · 정 · 의회 연합회의를 열고 통일지향, 주한 미군철수, 남북 군축, 당사자 협상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을 채택하고 특히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결정적 의의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근모 총리의 제의는 '평화보장 4원칙'을 기초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려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기위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왔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통치기술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선수치기와 주도권 쟁탈,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찌르는 수정제의와 역제의, 그리고 끝내는 책임 전가의 설전 끝에 낮 간지러운 구실을 붙여 서로 돌아서버리는 어리석음』을 자주 저질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변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도 나오지 않은 남북한 군사대결 구조의 해소문제가 그 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흥구 통일원 장관은 지난 7월9일 관훈클럽 초청간담회에서 『미군철수, 핵, 평화협정 등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묵살할 것이 아니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남북간 군비통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도 지난 10월 18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불가침과 무력불사용에 합의할 뜻이 있고 군축협상도 별일 용의가 있다고 전 세계에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제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비록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남북간에 의견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회담이 남한 쪽에서도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정상회담의 결정적인 준비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對北교류의 확대

— 北측은 화해노선의 실제 보이라 —

東亞日報 社說('88.11. 19.)

우리는 최근 잇따라 나타난 北韓의 對南 제스처변화를 주목한다.

그 하나는 16일 北韓이 副總理級을 단장으로하는 南北고위정치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몸짓이다.

北측이 제의한 이번 정치군사회담은 86년12월 金日成의 『南北고위정치군사회담』제의와 87년7월 北韓정무원의 『多國의군축협상』제의를 『合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묵은 것들의 새로운 합성인 이번 제의에 포함된 南北간 비방 중상증지 다방면적 합작실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시설 등은 긍정적인 항목들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南北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先行과제들로서 이미 우리측이 오래전부터 제의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北측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北측의 핵심적 과제를 검토해보면 駐韓美軍의 철수와 南北韓군축등 거듭해 온 그들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 時限과 규모를 못박아 제시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駐韓 美地上軍은 90년 말까지 완전철수하고 海空軍도 91년말까지 철수할 것과 南北韓의 병력도 91년 말까지 각각 10만 명 이하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군사문제의 논의는 南北의 대화와 교류의 확대로 상호신뢰가 구축될때만 진전될 수 있는 과제다. 특히 국제적 개방과 화해의 大勢를 역행한 채 아직도 冷戰對決의식과 테러와 선동 그리고 해방전선전략에 집착하고있는 北韓과의 군사문제 해결은 敵對행위가 재발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었을 때에만 가능할 뿐이다.

또 하나 새로운 변화는 17일 南北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 나타난 北측의 제스

처이다. 北측은 이날 회담형식과 관련해, 開閉會式과 본회담을 분리하자는 우리 측 案을 받아들이고 본회담에는 각각 1백명씩 참가하자던 주장을 바꾸어 50명씩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北측이 이날 제의에서 『대표회담』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대표회의』라는 용어를 되풀이 했다는 사실과 『일치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을 제시한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회담은 쌍무적 협의방식으로 전원합의제인 것이며 대표회의는 참석자들이 각자 개별자격으로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한다는것이 北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치합의제라는것은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측의 제의에서 우리는 그들의 불측한 저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개진이 가능한 자유사회의 특징과 4黨간의 異見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北韓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美日등 우방들에 對 北접근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北측의 對南 견제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최근 대한항공의 中國영공통과협정을 취소하도록 中國에 작용했다는 사실이나 韓·『헝가리』修交진전에 대한 非外交的, 노골적 협박에서 그같은 北측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의 對中·蘇접근을 차단, 억제하려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는 여러 경로에서 접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北측은 보다 개방적이고 화해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北측과의 대화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같은 변화를 촉구하면서 신뢰구축작업에 앞서도록 하자.

南北交流는 꿈이 아니다

朝鮮日報 社說('88.12.21.)

중국에 살고있는 북한국적의 교포(韓英淑·45·여)가 한국정부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19일 입국했다. 정부는 올해 고추作況이 크게不振했던 북한에 대해 5천~1만t의 고추수출을 고려중이며, 對북한합작투자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불과 수 일전의 平壤의 모습들이在美교포들의 생생한 리포트로 紙上에 보도되고 있다.

요 얼마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것처럼 가까이 느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을 방문중인 세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사할린에 있는 우리 교포82명에게 귀국을 허가했다고 밝혔고, 그 폭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두 우리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었다. 적어도 수 개월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엄연한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그 派生결과 의 한 현상인지, 최근 통일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는 64%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여권을 가진在美교포들이 줄이어 북한을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증을 소지한 중국교포가 서울을 오게끔 된 것이다.

이쯤되면 이제在美교포나 중국교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 자신이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해도 괜찮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불과 50명씩으로 제한된 인원이었으나 남북으로 흩어졌던 離散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던 3년전의 감격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것일까.

분단 43년동안 제각기 다져진 정치체제와 사회풍습, 그로 말미암아 굳어버린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무작정, 무질서하게 왕래할 것을 권장할순 없다. 다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가는 마당에, 정작 그다지 넓지도 않은 한 울타리안에 흩어

저 살아온 남북의 동포들이 가까운 핏줄을 찾아 최소한 秋夕이나 年末年始같은 때 만이라도 왕래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있다. 체제와 이념의 선택은 다를지라도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는 6·25와같은 못난 骨肉相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 밖에 없다.

66년 이래의 브란트의 東方정책은 72년에 동서 兩獨기본조약을 맺게 했고, 이에따라 人的-物的교류가 실현되었다. 三不원칙을 고집하며 共匪와의 談合(대화), 접촉, 타협을 완강히 거부해 오던 자유중국도 李登輝총통 등장이래 이를 풀고 교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민족의 大團합을 다짐한 것은 1972년 7월 4일이었다. 그후 曲折은 있었을지언정 남북은 그런대로 접촉과 대화와 왕래를 시도해 왔다. 이것은 시대가 한 방향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 방향을 누구도 뒤틀수는 없다.

남은 것은 북쪽의 자세변화 뿐이다. 그쪽은 그쪽 나름의 살길을 찾아 노력해 온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하지만 주체사상의 지나친 강조가 민족전체 발전의 阻害요인이라면 북쪽은 이에대한 修正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지나치게 고집하다가 오히려 민족전체의 앞날에 장애를 만들게 된다면 북한은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제 남북교류는 꿈이아니다.

單一팀 만들때 됐다

- 내년의 南北體育會談에의 기대 -

中央日報 社說('88.12. 22.)

北韓올림픽위원장은 90년 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南北韓 단일팀을 출전시키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北韓의 서신을 받고 『南北韓 단일팀 구성은 우리의 基本立場』이라면서 환영했다. 이로서 南北體育會談이 平壤의 제의대로 내년 2월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은 작년 7월 서울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南北체육회담이 결렬된 지 20개월만의 재회다.

지금까지 南北간에는 63년이래 15차례의 체육 회담을 가졌으나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것은 체육교류나 단일팀 구성에 충분한 『환경』과 『의지』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체육회담은 노상 政治宣傳戰으로 끝나다시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문제는 南北이 모두 체육교류나 단일팀 구성의 意志가 확립돼 있느냐하는 것 뿐이다. 한국은 그럴 用意이 준비돼 있다. 北韓측도 먼저 단일팀 구성을 제의한 만큼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것이 이번 體育會談에 기대를 걸게하는 근거다.

그러나 單一팀 구성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팀의 호칭과 國旗·國歌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선수와 임원의 선발이다.

63년5월 홍콩서 열린 南北體育會談에선 64년의 東京올림픽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하여 국가는 아리랑으로 하고 국기는 IOC당국에 위촉하여 결정키로 했었다. 호칭은 『코리아』로하면 무난할 것 같다.

문제는 선수·임원의 선발이다. 홍콩회담에서는 東西獨방식에 따르기로 했다. 東西獨은 올림픽단일팀 구성을 위해 예선전을 벌여 최우수선수를 뽑는 방식을

취했다.

北韓이 이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아직도 閉鎖路線을 고수하고 南韓과의 발전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北韓이 南北韓의 왕래와 교환경기를 통한 선발방식을 차제에 받아들인다면 단일팀 구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單一팀 구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獨逸에서 입증됐다. 獨逸은 2백여 회의 회합과 예선전을 통해 올림픽선수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56년부터 계속 세 차례의 올림픽 단일팀을 출전시켰었다. 그러나 그 절차와 행사가 너무나 번거롭고 體制差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64년 東京올림픽을 끝으로 東西獨이 개별팀으로 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獨逸은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兩獨관계가 크게 개선됐다. 單一팀이 출전함으로써 獨逸民族의 단결과 화합, 그리고 자긍심도 크게 高揚시켰다. 오늘의 東西獨 협력관계에 이르기까지는 스포츠의 힘이 컸다.

우리는 獨逸의 교훈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기필코 單一팀 출전을 성사시켜야 한다. 만약 체육에서 南北의 단결과 협력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다른 분야로 波及되어 전반적인 南北關係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동시多發提案

朝鮮日報 社說('88.12. 22.)

북한당국은 20일의 三者회담제의에 이어 21일에는 남-북한 체육 단일팀제의를 해왔다. 이보다 앞선 11월16일 북한은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현역 軍책임자를 부단장으로 하는 고위정치-군사회담을 12월 중순 쯤에 갖자고 제의해 온 바 있다.

북한측의 이 일련의 소나기식 제의들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인 움직임 을 보인 한국의 북방정책과 이에 호응하는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활발한 對韓 정책변화와 無關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있는 그들의 최고인민회의와 更迭된 政務院총리가 내보이는 새로운 정책의 일환일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건 간에 우리는 북한측이 새롭지도 않은 제안들을 同時多發的으로 내놓는다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기가 두려워진다.

북한측의 제의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듯 앞뒤의 아귀가 잘 들어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백화점展示品처럼 잔뜩 나열만 했지, 실현가능한 것이 별로 발견 되지 않는다.

예컨대 북측은 『단계적인 미군武力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토의』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의 三者회담을 시급히 열자면서,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 회담을 별도로 올해 안에 서둘자는 것이 그것이다. 얼른보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 문제는 미군의 존재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으로서 긴박한 문제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에 무력을 갖고 존재하게 된 것은 북한의 對南武力 侵攻때문이었음을 북한 당국자들은 철저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안하고는 북한의 對南武力위협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문제를 한국정부가 미국정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요 순서다. 북한이 曰可曰否할 일이 아니다.

여러가지 접촉을 제의하고 있는 북한당국자들은 이런 순리를 순순히 받아들인

다음에 우선 『…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남사이의 군축방안』을 우리끼리 토의하는 군사회담이건 정치회담을 열어야하는 것이다. 利害가 相衝되는 상대끼리 접촉→대화→타협 또는 협상을 할때는 그런 순리를 따라야하는 법이다.

그들의 의도는 뻔하다. 이른바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은 남북대표들간에 어떠한지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상호 군축원칙에 합의해 놓고 三者회담을 열자는 先行節次的성격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7·4공동성명에서 북한측이 『외세의존 排除·외세不干涉』이라는 自主항목을 주한미군철수와 직결시키는 족쇄로 삼고 있는 경우와도 같다.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싶다. 하지만 이 주장이 관철되려면 조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현실이 엄연히 있다. 한국만이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즐겨서 주한미군과 核武器를 붙잡아두고 있는 양 선전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서는 안된다. 주한미군과 核은 오히려 전쟁 抑止力이다. 북한측이 이것을 否認한다면 처음부터 대화는 어렵다. 북한은 이 땅에서 미군과 核무기가 철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한국정부도 이 점을 명심하고 북한측의 동시다발제안들에 단편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정치군사회담을 하려면 三者회담을 당분간 보류 또는 거부해야 한다. 우리 死活이 걸린 문제를 大衆迎合的인 대응으로만 해결하려 든다면 문제는 오히려 더 꼬이게 될 뿐이다.

南北 單一팀 構成 하려면

한국일보 社說('88.12. 22.)

북한올림픽위원회 김유순위원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金宗河위원장에 게 서신을 보내 1990년 제11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南北韓단일팀 구성문제는 1955년 北韓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처음 제기된 이래 남북한 스포츠계에 실로 30여 년간 6차례나 논의되고도 해결되지 못한 현안의 난제이기는 하나 북한측의 이번 남북한단일팀 구성제의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폐막이후 남북한스포츠가 분단극복을 위해 새롭게 펼치는 노력과 시도의 출발로 평가할만 하다.

올림픽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된 제24회 서울 올림픽도 남북간에 공동개최와 분산개최의 공방을 주고 받다가 끝내 남북간의 제휴없이 북한의 불참으로 개최된 것이 玉의 티로 기록되었는데 서울올림픽서 남북간의 스포츠 제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양 측이 너무도 개최문제에만 집착한 때문이었다.

서울올림픽에 관련한 남북한스포츠의 제휴는 ① 공동개최 또는 분산 개최등으로 분류되는 개최의 제휴 ② 단일팀을 구성하는 팀구성의 제휴 ③ 개별팀으로 참가하는 참가의 제휴등 적어도 세 가지 방안이 있었으나 ②③의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①의 방안에만 집착 함으로써 남북한 제휴가 실패로 끝났다.

86년 제10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이 메달순위 2위를 차지했고 서울올림픽서는 아시아국가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만 한다면 90년 北京아시아대회가 비록 外地에서 열리더라도 남북한단일팀이 인구대국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을 압도하고 아시아스포츠의 진정한 霸者로 군림할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

90년 北京아시아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가 더욱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라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한단일팀구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제까지 30여 년간 여러차례 시도되었던 남북한단일팀구성협상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까지 남북 스포츠협상이 번번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북한측이 모두 이를 정치선전과 상대비방의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양측이 모두 정치 이용의 暗數를 떨쳐버리고 순수한 체육의 차원에서 단일팀구성 노력을 펼쳐야만 한다.

분단 당사자의 단일팀구성은 올림픽사상 유일하게 단일팀을 구성했던 동서독이 1956년 멜버른올림픽부터 1964년 東京올림픽까지 세 차례 단일팀을 구성한 뒤 이를 포기하고 단념할 정도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

실무적인 난제가 산적한 터에 정치선전의 속셈으로 임한다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속셈을 버리고 순수한 입장에서 이를 성사시키면 이는 민족분단 극복에 가장 값진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체육인은 역사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이에 임해야 할 것이지만 89년7월 북한이 평양서 개최하는 국제청년체육제전, 그리고 서울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여 89년9월 서울서 열릴 예정인 한민족체육제전서도 남북한체육인이 손에 손잡고 협력하고 제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總理회담으로 南北간의 돌파구를 찾자

서울신문 社說('88.12. 29.)

韓半島문제를 해결하고 南北韓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도, 平壤도 변해야 한다. 서울은 지금 변하는데 평양의 반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평양도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

서울의 姜英勳 국무총리가 어제 北韓 延亨默 정무원총리에게 제의한 南北韓 총리회담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평양이 과연 변하는가, 변한다면 얼마나 변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될것이다.

우리는 평양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믿고 기대한다. 단일 민족 공동운명체로서 통일을 하자는 마당에 여러모로 따지고 주춤거리고 트집잡고 할 이유는 없다.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워 逆제의를 하거나 평양세계 청년대회에 우리 학생들의 全大協을 단체로 초청하겠다는 따위의 부질없는 僞裝평화공세나 對南교란책동도 그만 두어야 한다.

총리회담은 北韓측이 제의한 바 있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우리가 과감히 수용하고 오히려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다. 그들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상호 비방중지, 다방면의 교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도 우리의 뜻과 같고 이미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이나 유엔총회연설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北韓당국의 고집대로라면 駐韓美軍과 3者회담 등은 미해결의 현안으로 남는다. 美軍주둔은 그 존재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北韓으로서는 긴박한 과제일지 모른다. 문제는 美軍이 韓國에 주둔하게된 원인이다. 美軍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北韓의 對南무력침공 가능성과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北韓당국자들은 모른체하지 말아야 한다. 긴 역사의 안목에서 美軍의 장기주둔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北韓의 南侵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 美軍은 주둔할래야 할수도 없을 것이다.

3者회담도 그러하다. 南北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먼저 韓半島의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 전쟁적 대결상태를 벗어나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일들이다. 그것이 바로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韓半島의 군사문제는 현실적인 南北韓대결구조로 보아 미묘한 문제이다. 그것을 부총리급에서 格上시켜 총리급 회담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우리의 충정이다.

이제 88년도 저무는 연말이다. 새해부터 南北韓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그러자면 우선 종래의 접근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굴복시키느냐의 체제적 정치게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南北관계는 冷戰的인 분단구조로부터 평화공존적 구조로, 대외 의존적인 고립폐쇄로부터 상호 보완적 당사자 해결원칙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南北韓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놓고서는 韓半島를 둘러싼 국제기류가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大勢가 무엇인가에 대한 狀況인식에도 철저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기류 변화는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다.

최근 北韓측의 잇단 변화조짐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화해적인 자세로 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 南北의 두 총리가 서울과 平壤에서 만나면서 신뢰를 다지는 길이 바로 南北頂上회담으로 가는 길이다.

통일각의 冷氣流

京鄉新聞 社說('88.12. 30.)

南北國會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예비접촉이 북한측의 『팀스피리트 中止』를 내용으로 한 의제 추가요청으로 인해 3월 본회의 개최전망이 불투명해짐으로써 板門店의 解永분위기가 갑자기 冷氣流로 바뀌고 있다.

南北國會회담예비접촉 제7차회의는 그동안 우리측 대표단의 일부교체로 연기돼 왔으나 29일에 열린 남북접촉에서는 북측 제안의 전진적 受容자세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 조심스런 낙관론이 지배되었던게 사실이다.

더우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기류에 급속한 해빙과 특히 북한측의 孤立化脫皮 노력이 현실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일련의 제의들은 우리측의 수용대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中止』를 요청하면서 그것을 國會회담을 위한 예비접촉회의의 의제로 삼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國會회담 예비접촉회의의 기본적 성격과 맞지 않는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사실 南北國會회담의 예비접촉은 서로의 다른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남북한이 共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과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것은 크게는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同質性회복과 작게는 南北對決의 완화와 종식을 통해 이 땅에도 平和를 정착시키려는 6천만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때문에 우리측은 북측의 『3者 군사회담』 또는 『불가침 선언』등을 수용하면서 『總理級회의』를 제의했다. 남쪽의 이러한 대북자세는 단순한 상황적인 적응을 위한 것 보다는 남북한 쌍방의 本質的인 문제에 대한 접근의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측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군사력의 불균형을 전제하면서도 민족통일의 대원칙이란 가치하에서, 또 南北分斷이 지닌 위기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측의 여러 제의들을 전진적 자세로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남북한간 군사력은 10대7의 비율로 북한이 우세하다.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볼때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된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의 실시에서 보다 북한측의 對韓군사전략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관련, 북한측은 이번 기회에 일방적 減軍조치를 선언하고 나선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와 정책추진이 시사하는 平和의도를 새겨보아야 할 것 같다.

남북한 군사대결의 현황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평화공세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軍備감축을 포함한 평화의도를 실천함으로써 『팀스피리트』등 우리측의 군사행동이나 對北자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더우기 북한측이 우리의 民主化와 관련된 대내적인 정치정세 발전을 악용하려는 이른바 『정치카드』로 삼으려 한다면 남북한 대화의 재개는 난항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단기적이거나 정략적 차원의 『제의를 위한 提議』 또는 『提議에 대한 逆提議』를 내세우는 것보다도 국제적인 현실과 남북한간 상호간의 안정적 관계를 보장하는 현상질서와 그것을 전제로 한 상호존중을 수용한다는 자세이다.

北韓측의 『팀스피리트 中止』를 국회회담 예비접촉회의의 추가의제로 요청한 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의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있다고 보더라도 국회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그 성격상 정치군사회담 등에서 다루도록 하는게 順理이다.

北韓은 진정 對話에 뜻이 있는가

서울신문 社說('88.12. 31.)

여러 갈래로 계류중인 南北對話의 채널중에서 비교적 쉽게 트일 것으로 보였던 國會회담 준비접촉은 北韓측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또 다시 암초에 부딪는 느낌이다. 北韓측은 지금까지의 준비접촉에서 한 번도 거론한 일이 없던 韓美 합동군사훈련 팀스피리트의 중지문제를 國會本회담에의 제1의제로 채택하자고 고집함으로써 교섭을 난관에 몰아 넣었다. 그들은 國會회담을 진정 성사시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 회담을 지연시켜야 할 그들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韓國 국내 정치의 진전을 좀 더 지켜보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 동안의 준비접촉을 통해 쌍방은 本會談의 의제에 관해 견해를 좁혀가고 있었다. 南北韓 대표들이 처음 제시한 의제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동안의 교섭을 통해 대체로 두가지 항목, 즉 南北不可侵을 공동으로 선언하는 문제와 南北韓이 赤十字회담과 經濟회담을 통해 人的·物的교류를 증진시키는 문제로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89년 3~4월께에는 平壤에서 역사적인 南北 國會本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됐다. 그런데 北측은 불쑥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北韓측의 그와 같은 태도 표변을 우리가 불길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도 南北간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때 흔히 팀스피리트문제를 거론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 85년초 이 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회담 절차까지 잡혀 있던 赤十字회담과 經濟회담을 4~5개월이나 중단시켰다. 또한 86년 초에 예정되고 있던 國會회담준비접촉, 경제회담, 그리고 赤十字本회담도 그들이 86년 1월 팀스피리트에 시비를 거는 바람에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76년 이래 해마다 韓美간에 실시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어

적인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은 北韓에 대하여 이 훈련을 직접 와서 참관하도록 초청까지 해 놓고 있다. 北韓이 이 韓美합동훈련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그들이 蘇聯海軍이나 空軍과 더불어 실시하고 있는 合同기동훈련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한때 팀스피리트훈련 중에도 우리와 南北총리 회담 실무접촉과 체육회담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렇던 그들이 이제와서 또 다시 이 훈련을 對話와 관련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들의 의도가 댐 곳에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도 한 것이다.

南北韓 간에는 國會회담 외에도 많은 대화채널이 마련돼 있다. 이미 해묵은 대화 경로로 赤十字회담이 있고 經濟회담이 있다. 최근 北韓측은 우리 학생조직인 全大協을 향하여 89년 여름 平壤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호소해 왔다. 우리는 北측에 대하여 總理級회담을 열어 南北간에 가로놓인 모든 문제를 협의케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大韓올림픽위원회는 90년 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南北韓이 單一팀을 파견하자는 北측 제의를 수용한다는 회답을 그들에게 보냈다. 南北간에 이미 트여 있는 통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對話가 이토록 막혀있는 사실에 절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내다보면서 忍耐를 가지고 끈질기게 대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北南… 연석회의』 제안

- 金日成은 먼저 反對者를 인정하라 -

朝鮮日報 社說('89. 1. 5.)

金日成은 4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라는 것을 新年辭에서 근엄을 가장하여 다시금 내놓았다. 그는 신년사에서 『연방통일 방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다』고 전제, 『이를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들로 北南 정치협상회의를 가질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말했다.

1948년4월에도 그는 똑같은 말을 했다. 그리하여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정부수립에 반대하던 민족진영의 영도자 金九, 金奎植 선생등을 초청했다.

같은 민족진영이면서 그 반대의 입장에 섰던 李承晩은 물론 이를 一笑에 붙였다. 그 결과 양 김씨는 평양에 가, 金日成이 주재하는 『北南… 연석회의』의 들러리만 서고 憤淚를 흘리며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金日成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특정 정치인들만을 지정해서 『초청』했다. 그는 『남조선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들과 金壽煥 추기경, 文益煥목사, 白基琬선생』을 특히 평양에 초청한다고 했다.

朴正熙 전대통령 이래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金日成을 향해 촉구했던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초청장』이다. 金日成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와 맞먹는 『정상』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오만불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남조선의 政界-사회계 속에서도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할데(할것에) 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도 연방제통일방식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도 했다. 40년 독재를 大過없이(?) 수행하고 있는 金日成은 마

치 그 자신이 群峰을 거느린 최고정상으로 착각하고, 통일된 『공화국 연방』의 수령행세를 하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통일보다 앞서 그가 40년간 구축한 체제와 사회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는 『공화국연방』의 수령을 꿈꾸기에 앞서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복수정당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북남이건 남북이건,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면 말이 된다. 또한 그 경우에도 남북의 정부여당의 首長은 어쩔수 없이 각기의 체제를 대표하는 정상으로 會同해야 된다. 東獨의 호네커가 西獨을 찾아가 콜西獨수상과 정치-경제문제를 협의한 것을 金日成은 참고로 해야한다.

그는 아마도 盧泰愚대통령과 그에 반대하는 3야당 영수들이나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평양에 가서 自中之亂이라도 일으켜주길 바랄는지도 모른다. 그는 40년 鐵血독재의 권위로 그들에게 『민족의 태양』이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長者風을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어수룩하지만은 않다. 金日成은 40년 꾸어온 白日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中蘇-東歐까지도 개방→자유→민주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直視하여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얼마 남지 않은 그의 余生은 끝내 白日夢속에 마무리짓게 될 것이다. 金日成이 진정 『하나의 조선』을 보고 싶다면 그만큼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平壤祝典』參加의 條件

한국일보 社說('89. 1.14.)

남북한간의 교류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리는 이른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학생 대표들의 참가여부가 점차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다방면에 걸친 남북학생들의 교류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번 청년학생축전참가에 대해서는 초청받은 전대협(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등 관계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검토,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한 핏줄이면서도 서로 敵對경험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내일의 주인공인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 만나 가슴을 여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통일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류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남북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의보다는 순수한 학술토론과 스포츠경기, 문화행사, 그리고 조국山河의 답사를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다.

그러나 평양학생축전은 순수한 학생교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공산권과 제3세계 및 일부서방국의 좌경학생 및 청년단체들의 사실상 정치축전임을 알아야 한다. 이 축전은 지난 1947년 소련 주관하에 시작된 이래 2~7년에 한 차례씩 정치토론회 예술공연 스포츠경기 전시회등을 펼쳐오다가 73년 10차축전부터는 정치행사를 보다 구체화 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평양축전을 어떤 성격으로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는가는 진작부터 그들 스스로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反帝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정치성 짙은 구호도 문제려니와 폐쇄와 철저한 공산독재로 지탄되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를 쇄신, 김일성 주체사

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김정일의 지도력을 선양·과시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격렬한 對南정치 및 反정부공세로 민주화로 진통 중인 남한의 분열과 정국불안을 촉진하는 한편 전대협이 초청을 계기로 남쪽의 학생 및 재야세력들과의 통일전선을 형성, 장래의 적화를 앞당기려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대협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참가한다해도 수 천·수 만명의 군중 집회식 결의문 채택등을 통해 지난48년 4월 金九·金奎植선생들이 수모를 겪은 학생版 정치연석회의에 이용당할 여지가 다분히 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전대협 등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참가해야 할 경우 정치성 토론을 제외한 스포츠와 예술행사에 국한해야 하며 또 혹시나 정치토론에 참여한다면 남쪽에 대한 공격과 비난과 같은 비중으로 김일성체제의 독재성과 허구성, 주민탄압의 실상도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가성격에 있어서도 전대협만을 초청한 것 역시 저들의 분열기도가 담겨져 있는만큼 정식 대표단보다 참관단 내지 업저버 수준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 정부는 평양축전참가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 학생들이 이 축전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간 단체로 학생교류추진기구를 설치, 전담시키는 것은 정부의 간여인상을 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기구에는 대학교육협의회,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외에도 많은 국민과 학부모,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교련, 여성단체, 종교계등 각계 대표들도 참여시켰으면 한다.

남북의 청년학생들끼리 만나게

- ‘전대협’의 양식과 능력을 믿자 -

한겨레신문 사설('89. 1. 17.)

오는 7월1일 평양에서 막을 올릴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에서 상투적인 ‘우려’의 소리가 높게 울려 나오고 있다.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학생위원회’의 김창룡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의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에게 공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자 전대협은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년학생축전과 전대협의 북한 방문이 새해의 통일운동은 물론이고 국내의 정치에서도 핵심적인 논제가 될 것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최근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한시적인 대표단이나 참관인단을 파견하거나 체육경기에 선수단을 보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협이 평양축전 참가를 공식선언할 경우 이 축전을 준비하는 ‘조선준비위원회’ 산하에 ‘조선학생위원회’와 전대협이 동격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대협이 대한민국의 체제 밖의 존재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친절한 배려의 근거이다.<한겨레신문>11일자).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전대협을 ‘대한민국 체제 안의 존재’로 인정해 왔다는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 국내문제에서 전대협과 공식으로 대화하고 민주화나 민족 자주화를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의 기억에 너무나도 선명한 것은 지난해 6월10일과 8월10일에 북쪽의 동포학생들을 만나러 판문점으로 가려다가 경찰의 최류탄과 몽둥이에 눈물과 피를 흘리던 전대협 학생들의 처참한 모습이다. 정부가 전대협을 현실적 존재로 인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북방정책’이 안은 모순이 여지없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민족모순의 해결과 분단의 극복은 정권 또는 정파의 정략이나 당략과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선다. 우리는 전대협이 학생들이 평양에 가는 목표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제도언론이 걱정하듯 『순수한 학생 교류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공산권과 제3세계 및 일부 서방국의 좌경학생과 청년학생들의 정치축전』에 들러리를 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만나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일이라고 믿고 이해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운동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전대협은 평양의 큰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통일의 물꼬를 트는 데 가장 긴요한 작업인 민간 차원의 교류와 대화를 시작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을 포용하고 있는 전대협이 오는 3월의 남북학생축전 준비회담에 대비하여 대표단의 구성, 사회주의권 청년학생들과 토론할 의제, 대회의 ‘공동선언’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의 학생들만이 독자적으로 ‘민족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연구하기 바란다.

한마디 덧붙일 것은 정부가 전대협의 진보성을 견제하려고 성격이 모호한 학생단체들이나 기성세대를 전대협과 섞어 평양에 보내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최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전대협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축전 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南北學術교류의 必要性

- 分斷후 研究실적 交換하자 -

京鄉新聞 社說('89. 1. 19.)

국토분단이후 4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민족적 불행이라면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적대감 못지않게 文化的 異質化 현상이 深化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는 역사적·정치적 變換期를 맞아 단시일에 극복될 수도 있지만 오랜동안에 걸쳐 굳어진 문화적 이질감은 통일이 된 뒤에도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법이다.

문화·학술교류는 南北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같이해 전문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족동일성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분야보다도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민족이라면서 문화·학술교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 문화·예술인과 학자들이 상호 왕래하면서 역사·考古·민속등 전통문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업적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韓民族의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이란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때마침 고고·역사·민속·인류학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남북한 학술교류를 위해 국내학자 10여명이 이르면 4~5월 중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야말로 듣던중 반가운 소식으로 기필코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들 학자들의 북한방문은 확정된것은 아니고 아직은 비공식적으로 북한학자의 제의를 받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만 동의한다면 당장에라도 실현가능한 문제다. 우리는 과거에도 남북한 古代文物의 교환전시를 북측에 제의한 바 있는 만큼 이같은 학술교류는 우리쪽이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도 북한의 학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사학자 등 국내학자10여명의 북한방문 소식도 분단후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를 잇고 동시에 북한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학술·문화교류의 증대를 통해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해 간다면 그것이 곧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動因이 되리라 확신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각기 학술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분야에만 해도 고대사나 근대사에 대한 북한의 연구축적은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의 고분을 비롯하여 구석기시대 및 신석기 시대의 유적·유물로 우리민족의 뿌리를 찾는 귀중한 자료로서 거의가 해방이후 북한이 연구 축적한 것들이다.

남쪽 역시 신라 백제의 미술품은 말할 것도 없고 도자기와 회화등 고고학 자료를 많이 발굴했고 연구 축적도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같은 考古學자료들을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古代史 연구는 획기적인 진전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가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라는 이유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도 불행한 일이며 우리는 古代史나 考古學연구가 그로 인해 오히려 일본이나 中共 소련 등이 앞서간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양측의 학문적 교류는 상대적인 利害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이며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과는 학술교류협정까지 맺는 북한이 우리와 축적된 연구업적을 교환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폭넓은 학술교류를 위해 남북한 문화회담개최도 고려해봄직 하나 먼저 남북한학자들의 교환방문부터라도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原則있는 南北대화

한국일보 社說('89. 2. 9.)

남북한 당국자간의 정치적 접촉으로서 조절위원회의 이래 10여 년 만에 이뤄진 8일의 고위당국자예비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주장과 자세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방교류 무드와 관련, 『그래도 흑시나』했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한마디로 북한과의 경제교류, 금강산 관광기대로 들떠 있던 우리국민들에게 40년 이상 지속된 저들의 對南赤化전략이 오지부동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하겠다.

여러갈래의 남북대화의 분야중 당국자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미묘한 것은 양측 모두 體制와 정치적利害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자간에 分斷의 장벽을 낮추는 회담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존중과 신뢰구축의 바탕에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본회담 준비를 위한 첫 예비회담에서 의제로 확정되지 않은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내세우고 또 북한 출판물단속의 해제 등 내정간섭적인 주장을 편 것은 국제적 회의관례와 상식을 벗어난 억지로서 북한이 진심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원한다면 하루 빨리 반성, 허심탄회한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작년11월7일 소위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채택,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해 오고 이와 별도로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을 열자고 한 속셈은 너무나 분명하다. 겉으로는 소련, 중국등의 개방과 개혁압력에 호응, 평화이니셔티브를 취한 듯 대화자세를 보이고, 안으로는 남한의 민주화 및 일부의 反美 추세와 관련, 팀스피리트 중지, 미군과 핵무기 철수등으로 한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체혼란을 부채질하여 적화를 기도하자는 속셈일 것이다.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훈련이며 이

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예비회담은 한 발짝도 나갈수 없다고 한 협박에 대해 우리측이 이 훈련이야말로 북측병력의 對南전진배치와 선제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용이므로 북한군사관계자가 참관토록 거듭 제의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 하겠다. 또한 과거 남북조절위 회의와 탁구회담도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에 열린 전례가 있는데다 북한도 해마다 동해상에서 소련과 합동훈련을 해오고 있음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제 세계는 체제와 이념을 넘어 개방과 화해로 치닫고 있음을 감안, 북한은 현실을 인정하고 진실된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6천만 민족의 통일염원을 구현하려 한다면 불신과 敵對로 공공 얼어붙은 장벽을 쉬운문제 즉 비방중지 상호존중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노력에 선뜻 호응해야 한다. 對南정치군사 자세와 요구는 여전하면서 경제교류와 합작을 통해 南으로부터 과실을 얻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도 북한은 敵對가 아닌 同族의 차원에서 인내와 화해와 포용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차원과 전략으로 저들이 赤化망상을 버리도록 꾸준한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남북교류와 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꿈을 갖거나 들뜨지 않도록 분명한 對北자세와 교류방안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南北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國民日報 社說('89. 2. 9.)

지금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신뢰감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뻔한 이치다. 8일 열린 남북고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도 뿌리 깊은 不信만을 노출시켰을뿐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들고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한 일이었다. 실제로 북한측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強度로 팀스피리트훈련의 『무조건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한술 더 떠 10일로 예정된 남북국회회담 실무접촉마저 같은 요구조건을 내세워 일방적인 연기를 선언했다.

북한이 이처럼 팀스피리트훈련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려는 저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反美감정과 연결시킴으로써 새학기를 앞둔 한국사회를 혼란케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조짐은 최근들어 북한이 모든 언론매체를 총동원, 이 훈련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점으로도 짐작이 간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政略적인 선전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한반도의 膠着상태가 남쪽의 호전성 때문이란 상투적인 논리를 국내외에 선전하는 술책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86년에도 한 차례 경험했다. 당시에 남북간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이산가족고향방문 체육회담 등 여러갈래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느닷없이 팀스피리트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高潮시켰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 물론 현재의 국제정세나 한반도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북한측도 더 이상 한반도 주변에 몰아닥친 和解와 共榮의 물결을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처지이다. 鄭周永회장의 平壤방문과 남북경제교류 등 최근의 급변하는 사태로 미루어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의 성실한 자세를 내심 기대했었다.

팀스피리트 문제만을 놓고 볼 때 북한측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은 이미 익히 알려진 일이다. 소련과 북한의 海軍이 1년에 한 번씩 동해안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련해군의 고위당국자가 밝힌 바 있다. 얼마전엔 소련정찰기가 서해 상공에서 대규모 시위비행을 한 일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兵力이 1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판에 유독 팀스피리트훈련만 중지하라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상호불간섭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예비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정부의 북방정책과 민간경제교류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부풀대로 부풀어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鄭회장의 平壤방문 이후 당장 金剛山구경이라도 하게 될 것처럼 들떠 있는게 국민들의 공통된 심리이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며 빠른 시일내에 북한측의 태도변화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착실하게 진척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예비회담에서 전제조건을 놓고 입씨름만 계속할게 아니라 本會談을 우선 열어놓고 그 회담을 통해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양쪽의 고위당국자가 虛心坦懷하게 자리를 같이하게 되면 팀스피리트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에 가로놓인 여타 현안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단계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고 믿는다. 본회담이 열리기전에 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을 구실부터 찾는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어거지에 불과하다.

北韓 억지와 우리의 인내

— 對南赤化전략은 無爲라는 실증을 보이자—

東亞日報 社說('89. 2. 9.)

南北對話는 언제나 北의 제안과 거부에 따라 明暗이 교차되어야 하는가. 대화에 대한 기대도 교류에 대한 설렘도 北의 일방적인 핑계나 고집으로 무산되어온 내력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85년에도 北韓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南北對話를 『타임스피리트』군사훈련중지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작년 후반기에도 그들은 국회회담 고위군사 정치회담 3자회담등을 同時多發로 제의해 놓고는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되돌아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들어 조성되고 있는 韓半島내외의 화해와 교류 분위기 및 金剛山공동개발등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근거로 『이번에는 얘기가 되겠지』하는 기대를 가졌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8일의 南北 고위당국자회담예비회담에서 확인된 北韓측의 경직된 태도와 변함없는 주장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南北사이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北측은 『타임스피리트』훈련을 『核전쟁연습』이라고 공격하면서 훈련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계속하려면 南韓군대만으로 하며 규모를 줄이고 훈련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南韓에서 金日成선집등 北韓도서의 출판보급단속을 중지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타임스피리트』는 새로운 군사훈련도 아니며 순수한 방어개념에 입각한 훈련임은 北측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韓美군사당국은 北측이 훈련을 참관할 것을 거듭 초청하고 있다.

이같이 훈련의 목적을 익히 알고 있는 北측이 또 다시 『타임스피리트』훈련을 구

실로 8일의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을 무산시킨데 이어 10일로 예정되었던 국회회담 준비접촉마저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北측이 집요하게 『타임스피리트』를 들고 나오므로써 그 훈련이 南北대화 의 최대장애물이라는 선전을 우리 내부에 심는 한편 反美감정도 부채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는 『타임스피리트』훈련이 끝나는 4월에 들어서 다시 여러 채널의 南北 대화를 갖자는 그들의 자의적인 일정제안을 보면서 그때 쯤 우리 대학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각종시위에 폭발성을 가미시키려는 저의를 읽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측도 해마다 東海에서 소련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타임스피리트』중지주장이 語不成說임은 물론이다. 또한 北측이 노리고 있는 南韓에서의 反美감정고조와 國論분열조장 획책이라는 상투적인 계략에 넘어갈 정도로 미숙한 우리국민이 아님을 그들은 직시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北측이 구사하고 있는 시대와 公義에 어긋난 對南전략들이 결국 無僞로 끝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內的화합과 국력신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같은 대응자세를 바탕으로 우리는 北韓이 그들의 韓半島 赤化전략을 포기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사 北측의 제안과 거부의 논리가 억지일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포용하는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金日成을 비롯한 北의 통치집단들이 새로운 時代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 만이 가장 현명한 生存의 길임을 깨달도록 우리의 역량을 구사해야 한다.

和解기류 冷却시킨 北의 트집

世界日報 社說('89. 2.10.)

문제해결이 용이한 분야부터 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우리 主張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치-군사문제를 먼저 타결해야 한다는 北韓의 주장이 또다시 맞부딪쳤다. 南北고위당국자회담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8일의 첫 예비접촉에서 北韓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무조건 중지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협상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같은 이유로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國會회담실무접촉도 거부했다. 그들은 86년초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南北간의 예비접촉을 모두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이 있다. 그들이 80년대 중반이래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위해 얼마나 집요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北韓은 韓-美 양국군에 의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北韓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核전쟁의 연습』이라고 규정, 그와 같은 분위기속에서는 南北회담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이 훈련을 문제삼는 진정한 의도가 美軍이 韓國에 주둔하여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韓半島에서의 긴장이 外國군대인 美軍의 존재 때문이라고 널리 선전하려는데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전략이 궁극적으로 美軍철수를 정당화하려는데 있음은 물론이다. 인도적인 문제나 경제교류 등 문제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도 政治-軍事분야의 우선적인 해결을 더 고집하는 그들의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美軍의 존재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있다.

南北간의 군사적 불균형이나 東아시아에서의 美-蘇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둔채 美軍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수용할 수 없는 사태다. 美軍철수를 포함하여 南北간에 軍縮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선행해야 할 몇가지 조건이 있다. 즉 대화를 계속하고 교류를 확대하면서 서로 信賴를 쌓아가야하며, 敵對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制度的인 보장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후 南

北 不可侵협정의 체결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을 막론하고 그들이 보유하는 군사력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릇이다. 蘇聯당국자도 시인했듯이 北韓도 蘇聯과는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北韓이 그들 군대를 休戰線 가까운 곳에 南進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위적인 목적의 훈련을 갖는다고 그들이 시비를 걸 입장이 될 수는 없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방위적인 목적의 것인지 아니면 北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제공격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초청까지 해 놓고 있다.

최근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南北韓간에도 다소 문호가 열려 人的-物的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에 팀스피리트 훈련 때문에 北韓의 자세가 다시 경직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北과의 대화의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규모나 실시방법을 일부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南北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障礙가 北측의 마음속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지워버릴 수가 없다.

아직도 『南朝鮮혁명』인가

- 南北회담 北의 底意 -

朝鮮日報 社說('88. 2.10.)

南-北 당국자회담을 위한 豫備會談이 소득없이 깨어졌다. 왜? 北側이 우리 쪽의 現狀變更을 회담成事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그만되라』 『南側은 왜 金日成선집출간을 禁止하느냐』...하는 등등이 北側의 시비였다.

北쪽이 요구한 것은 결국 南쪽의 일방적 무장해제였던 셈이다. 韓-美안보협력체제와 思想的 防禦태세를 우리더러 자진 허물어버리라는 요구였다.

우리도 물론 완전한 自主防禦와 완전한 思想의 자유신장을 이상으로 삼고서,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理想은 韓半島의 남쪽 뿐만 아니라, 北쪽에서도 똑같이 同時에 존중되고 추구돼야만 말이 된다.

南쪽에서 韓-美안보협력이 없어야 한다면, 北쪽에서도 蘇聯과의 군사협력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實相은 어떤가. 엇그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 北韓과 蘇聯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동 海上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장과장이 아닌가. 피차 상대방을 못 믿어서 有事時의 대응훈련을 하는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그 쪽은 해도 괜찮고 이 쪽은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결국 北의 저의는 뻔하다. 이쪽 內部的 일부 反美 불씨를 들쭉서서, 그것에 기름을 붓겠다는 수작이다. 北쪽은 여전히 南-北회담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회담』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式의 『남조선 혁명촉진의 補助수단』으로서만 대하고 있을 뿐이다.

金日成 선집件을 두고 말하더라도 이치는 같다. 이쪽에서 思想의 自由에 입각해서 金日成책을 解禁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그쪽에서도 마땅히 자유주의 등 非공산주의-親서방적인 책자와 情報物의 解禁을 단행해야 말이 된다. 그런데 實相

은 어떤가. 심지어는 라디오의 경우에도 채널이 고정돼 있다니 더 이상 말을 해 무엇 하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北韓의 金日成 유일체제의 장본인들만은 思想의 자유니 出版의 자유니 하는 말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우리는 물론 北이야 무슨 獨裁를 하든, 우리 體制나마 民主化하고 自由化하고 開放化하려 꾸준히 노력도 하고 분투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北쪽과 對面한 상태에서 우리 쪽의 최소한의 思想的 留保線과 군사적 有事時 훈련만을 『反統一的』이니 『분단고착』이니 하고 매도하면서, 저쪽의 思想的 획일체제와 有事時 군사훈련에는 한사코 눈을 감아버리는 언동은 결단코 온당한 視角이라 할 수가 없다.

南韓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방』시켜야 하겠다는 論理에 집착하는 限, 우리의 平和문제나 통일문제는 절대로 풀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金日成주의자들과 레닌주의자들은 南韓이 『잘만하면』 거덜이 나거나 혁명으로 쓰러지리란 기대에 입각한 戰略戰術로써 南-北 회담에 임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1대1의 정직하고 他意없는 대화와 공존, 그리고 교류와 통일 접근을 바라면서, 北韓側이 말도 안되는 잔꾀와 억지를 부리지 말것을 당부한다.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월 10일

1975년 1월 10일 1976년 1월 10일

1977년 1월 10일 1978년 1월 10일

1979년 1월 10일 1980년 1월 10일

1981년 1월 10일 1982년 1월 10일

1983년 1월 10일 1984년 1월 10일

과열도 냉각도 禁物

— 南北대화 · 교류에 『中心』을 잡자 —

京鄉新聞 社說('88. 2.10.)

북한은 도대체 남북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그 底意가 심히 의심스럽다.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1차예비회담을 무산시키고 국회회담준비접촉까지 일방적으로 연기 통고한 북한측 태도는 한마디로 회담 그 자체보다도 남한내 反美감정에 편승, 國論분열과 대외선전공세를 겨냥한 사전 각본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치 ·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군사문제인 팀스피리트훈련을 공식회담에서 거론도 해보지 않은 채 이를 무조건 비방하고 회담을 일방 연기시킨 것은 처음부터 대화에는 마음이 없었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군사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남한내의 反美감정을 부채질하려는 술수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군사문제라면 美國을 제쳐놓고 다루어질 수 없는 성질이고 보면 이 모두가 북한의 끈질긴 『3자회담』공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休戰협정 당사자인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를 담판짓겠다는 전략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앞서 金日成의 초청범위에서 盧泰愚대통령마저도 대통령자격이 아닌 民正黨총재자격으로 格을 낮춤으로써 우리 정부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했고, 4黨총재를 재야인사들과 동격으로 지명함으로써 대화의 실질적 진전보다 우리의 내부분열 등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북한은 주변정세변화에 맞추어 남북화해에 성의를 보이는 체하면서 반체제 세력과의 연합전선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볼때 최근 우리 내부에서 일고있는 『북한바람』은 너무 순진하고 감상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고 民族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으려는 대국적인 배려만은 그것대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한 접근방식이 그동안 지나치게 安易하고 성급하고 치밀치 못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拂拭하기는 어렵다. 鄭周永씨가 물고 온 金剛山 바람만 해도 의당 사전에 그 波長을 계산하고 침착한 다음 카드를 만들어 두었어야 의식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도 남북간의 어떤 회담이나 교류등간에 지나친 幻想과 낙관은 아직 禁物임을 깨닫고 제발 우왕좌왕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남북 직교역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당장에 그것이 남북화해로 이어질 것으로 속단하기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변수와 제약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남북교역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이 비록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최근 동향으로 보아 엄격한 政·經 분리작전을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대북한 접근태도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생각한 나머지 북한실정이나 그들과의 교역에 대한 치밀한 사전연구와 추진계획을 소홀히 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일원화한 대북창구를 통해 신중히 北門을 두드리는 조심성과,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겠다는 고도의 균형감과 對應戰略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南北교류특별법과 對北韓 협력 調整委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비록 때는 좀 늦었지만 說得力이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서두른다고 해서 好轉되는것은 아니다.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더욱 인내와 슬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 치도 변하지 않은 『凍土의 땅』이 언제 봄눈 녹듯 녹아내릴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지 않은가. 돌연한 北의 對話연기는 모든 것을 우리의 잣대로만 그들을 이해하고 규명하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북한바람은 결코 과열돼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냉각돼서도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平壤가기전 준비부터 차분히

東亞日報 社說('89. 2.13.)

7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 학생대표들도 참가하게 되는 모양이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 2차모임은 비록 金大協측이 불참하긴 했지만 이번 평양축전에 전대협 중심의 대표단을 참가케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대협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앞으로 보내는 참가통지서도 보내고 학생위원 5명도 위촉하여 이달말께 3차회의에서는 교류단 구성 경비참가추진절차등의 실무안건을 토의하겠다고니 정부지원아래 학생대표단의 평양행은 또 평양이 무슨 트집을 부리지 않는한 일단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께 이 평양축전 참가문제가 처음 제기됐을때의 정부입장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를 희망하는 쪽이었다, 원래 세계청년학생축전이란 행사는 공산권이 중심이 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집회여서 우리학생들이 참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평양축전은 북한정권이 88서울올림픽에 의한 정치적 劣勢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강하게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축전의 기본프로그램인 정치토론 문화행사 체육행사중 유독 정치토론에 비중을 두어 저들의 金日成체제 선전은 물론 대남선동에 힘을 기울일 것이 확실하다.

저들은 이 행사를 북한정권 창건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 준비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으로 확대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지금 평양에서 국력을 기울여 벌이고 있는 각종 대형토목건축공사들이 모두 이 축전을 위한 것이고 보면 저들이 세계대학생들을 모아 문화행사 체육행사따위의 축제나 벌이고 끝내자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저들은 어느 역대 축전보다 더 강한 정치행사, 이를테면 현안의 남북문제로 들고나오는 저들의 고려연방제 미군철수 핵무기철거 따위의 주장을 펴는 정치의 場으로 꾸밀 것이다.

기왕에 평양축전에 참가하게 된 마당에서 우리 학생대표들은 이같은 저들의 속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면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학생단체가 우리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임의단체로 구성될 수 있는가, 反政府 정권비판학생단체가 조직가능하고 활동가능한가. 저들의 대학입학이 출신성분이나 사상적 숙련도에 의해 엄격히 선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저들 학생단체의 활동이 어느만큼 金日成억압체제의 동원수단인지도 쉽게 짐작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평양축전은 단순한 학생축제가 아닌 고도로 예비된 정치행사임을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공산체제 아래의, 학생단체가 얼마나 정치화하고 숙련된 상대인가를 함께 헤아려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바꿔 金大協쪽의 주장을적극 수용하게 됐고 세 야당들도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정부로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마당에 참가단 구성이나 참가추진절차등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불가피하다.

국내 정치투쟁이나 학내투쟁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노선이나 방략을 갖는것은 당연하다. 또한 학생들의 국제활동이나 특히 대북관계에서 선배 스승 또는 정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것은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국제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학생들이 대좌해서 조국의 장래를 토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상대가 있을때엔 상대를 옹계 알고 國利民福을 생각해야 한다. 감상적 허영에 말려들어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는 두고두고 民族史에의 大罪가 된다.

北의 實相을 먼저 알자

— 靑年學生축전 參加를 앞두고 —

한국일보 社說('89. 2.14.)

북한은 접촉과 폐쇄를 아주 계획적으로 연출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일염원의 큰 물줄기를 댐 수위를 조절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정상적 대화와 교류엔 무슨 핑계로라도 찬물을 끼얹고 남쪽을 향해 『환상조작』에 골몰하고 있음이 역연하기만 하다.

지난해 여름 국토순례의 명목으로 남의 대학생들을 부추기더니, 고향방문이란 목적을 앞세워 대표적인 실업인을 초청하여 금강산 개발의 꿈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감상을 촉발하면서 정작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은 한 묶음으로 휴지화 시키려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릴 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 허용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분단이후 처음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땅을 밟게되었다. 한편으론 만감이 떠오르나 다른 한편으론 착잡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치민다.

학생들의 북한방문 문제는 통일논의의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여론의 일치를 보지 못한 미결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양분된 견해는, 왜 학생이 먼저 성급하게 나서느냐는 반대론이며 막을 까닭이 무엇이냐는 찬성론이 그것이다.

『평양축전』의 참가방침으로 논쟁은 일단 사그라들었지만 정부와 全大協간에는 파견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류추진위는 2백명 선으로, 全大協은 5백명선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규모를 따지기전에 우리는 먼저 청년학생축전의 성격을 단단히 규명해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축전은 정치토론과 문화·체육행사로 엮어진다. 물론 핵심은 정치토론에 있다. 북한측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크게 의식하며 이 행사로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속셈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문화·체육행사는 장식에 불과하고 정치토론의 마당을 벌여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측은 정치선전장의 무대에서 노골적인 정치공세를 가할 것이 확실하다. 고려연방제니, 미군철수니, 팀스피리트훈련중지같은 반복음이 귀를 때릴 것이다. 보태어 그들은 5공청산으로 흩어진 우리의 정치현실을 간교하게 역용하여 혼란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려 안간힘을 다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뚜렷하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함정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소신의 개진은 좋으나 그것이 곧 남한전체의 의사로 왜곡되는 상투수법을 엄중히 경계함이 마땅한 일이라 믿는다.

평양에 갈 대학생들은 자신이 엉겁결에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이용당함을 긴장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무조건 동포애에 사로잡혀 감상의 만남에 들뜨면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나고 만다. 우리현실에 비판적인 지성이라면 그쪽의 현실에도 날카로운 시각을 보내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줄 안다. 김일성 덕분에 잘산다는 구호만 듣고 오면 그야말로 아니 감만 못하다.

통일을 향한 교류는 마음의 교감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 치의 서투름이 놀라운 낭패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곡예에 현혹당하고 나면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편견을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북한이 무서운 호랑이 굴일수도 없거니와 양떼의 들판도 아님을 똑똑히 알아 두기를 바란다. 엄숙한 민족의 시선이 평양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동포의 통일운동 무력으로 막지 말라

— ‘전민련’의 판문점행과 바리케이드와 연행 —

한겨레신문 사설('89. 3. 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판문점행은 경찰의 무력에 좌절당했다. 지난 1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단과 ‘범민족 대회를 위한 예비회의’를 가지려고 판문점으로 가던 전민련의 대표단 일행은 ‘통일로’의 검문소에서 반통일적인 경찰에 연행되었다.

‘노태우와 함께 민주화에서 통일까지’를 외치고 있는 집권세력은 전민련의 이 평화적 통일운동을 왜 탄압하는가? 정부당국은 민간단체들의 통일논의를 ‘맹목적’이라고 단정하면서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독단과 위협의 논리를 역대의 독재정권은 걸핏하면 ‘정권안보’에 악용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가 정부당국의 자문이나 협조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당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운동의 단계를 높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보와 경험을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조언과 자문을 통해 남북 민간단체들 간의 교섭이나 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 나라의 국민대중과 자주적 민간단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속성이다. 독재자는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밀사를 보내 비밀외교를 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밀사의 외교는 그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하루아침에 성과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 민간인들이 동포애로 만날 때 비로소 남북 상호간의 긴장이 풀리고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전민련의 간부들과 구성원들은 유신독재와 5공화국의 암흑시대에 민주화와 민족자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헌신해 온 사람들이다. 정부의 권력자들과 통일원 당국자들이 이들보다 애국심과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평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당국이 전민련의 이번 회담을 방해한 방식은 국민의 분노를 살 만하다. 경찰은 바리케이드와 전경으로 대표단을 막고 『임진각에서 사전신고 없는 집회를 가지려 하고 군사보호지역에 출입할 의도가 있으므로 통제대상이 된다』면서 대표단을 연행했다. 나라의 법률에, 집회와 출입의 ‘의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공권력의 행사는 폭력일 뿐이다.

전민련은 물론이고 남북의 모든 동포는 판문점에서 만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들이 만난다고 해서 겨레의 앞날이 어두워지겠는가? 현정권은 설득력도 없는 ‘창구일원화론’을 버리고 민중의 통일논의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

南北문제, 쉬운것부터 푸는 智慧

서울신문 社說('89. 3. 9.)

서울과 平壤의 슬기롭고 건강한 젊은이들은 오는 90년 9월 베이징(北京)에서 만날 수 있을까. 南과 北은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보인 민족의 우수성을 다시 과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열리는 南北체육회담에 거는 기대는 크다.

南北은 서울올림픽의 단일팀 구성에는 실패했다. 北韓은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일은 너무 따지는게 아니다. 베이징에서 보여주면 된다. 세계적으로 개방과 협조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인데 南과 北이 나란히 손잡고 국제대회에, 그것도 그야말로 陸續의 지척이라할 수 있는 베이징대회에 참가 못할 일도 없다.

南北韓이 대화하고 和解하는 데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서로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 손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조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차츰 어려운 일을 풀어가게 順理이다. 離散가족의 재회, 예술단 상호방문, 문화학술교류 등은 마음만 먹는다면 쉬운 일이다. 체육교류나 국제대회 단일팀 참가 등도 그에 속할 것이다. 경제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등은 그 다음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政治·軍事관계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39년 전 총을 겨누던 南과 北이 아직 감정이 순화되지 못했다면 체제와 이념문제나 정치 군사회담은 뒤로 돌릴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끊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南北문제현황은 밝지 못하다.

최근 南北간에는 고위당국자예비회담 국회예비회담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접촉이 양쪽의 정치적 이해와 주장이 맞물려 별 진전을 못보고 있다. 이럴 즈음 체제와 이념 감정을 초월한 순수체육교류 차원에서 양쪽 체육인들이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베이징대회 단일팀구성은 한번 成事시켜 볼 만하다. 베이징은 자동

차나 기차로 짧은 시간에 오갈 수 있다. 오늘날 베이징에는 南北韓의 단일팀으로 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참가한다면 민족적 긍지나 체면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이다.

아시안게임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 로잔회담등 과거 여러차례 체육회담이 실패로 끝났으나 바로 그러한 회담결렬의 예를 대화축적의 바탕으로 삼으면 된다. 단일팀 구성에 따른 절차문제도 그렇고 대회 전까지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時限性의 문제도 있다. 국가·호칭문제도 있고 선수선발·임원 구성·선수단장비·재정 등 세부적인 문제도 크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양쪽의 단일팀 구성의지가 확고하고 상호신뢰와 인내력을 갖는다면 어렵잖게 해결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는 결의와 자세로라면 그런 것들은 모두 절차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첫 회담에서 당장에 성과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것이고 서로 입씨름도 오갈 것이며 팽팽한 의견대립도 나올 것이다.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회담을 깨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 체육회담이 팀스피리트훈련이나 아웅산사건 등 비체육문제 거론으로 결렬된 경험도 있다. 이번에는 그런 비체육문제는 아예 내놓지 말고 순수체육회담으로 계속돼야 한다. 양쪽의 대표들은 한번도 실현못한 단일팀 구성을 성사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南北體育會談에의 期待

- 單一팀 構成은 가능한 일이다 -

中央日報 社說('89. 3.10)

침체된 듯한 南北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엿보인다. 9일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체육인들의 접촉은 90년 北京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가능성에 일보 접근한 것이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이 날의 제1차 南北체육회담에서 양측은 선수단 호칭과 團旗·團歌에 관해 인식의 일치 또는 접근을 보였다. 선수와 임원의 選擇方式에서도 타협과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選手團 호칭에서 南韓측이 『남북단일팀』으로 하고 영어로는 KOREA로 하자고 제의한 반면 北韓은 『고려선수단』과 KORYO를 제의, 표현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정도의 차이는 협상의 진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문제다. 高麗의 歐語的 표현은 KORYO로도 하고 있지만 KOREA가 보다 通常的이다. 따라서 韓國語 표기는 北韓측 案, 영어표기는 南韓측 안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團旗는 南北이 다같이 흰색 바탕에 韓半島지도를 넣고 그 밑에 영어로 團名을 넣자고 제의했다. 다만 지도의 색깔을 南韓은 녹색, 北韓은 황토색을 제안했다. 영어표기는 선수단 호칭에서 결정되는대로 하면되고 지도 색깔은 보다 강하고 韓國的인 것이면 좋을 듯 하다.

東京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63년의 南北 체육인회담에선 團旗에 대해 끝내 합의가 안 돼 IOC측에 위임키로 했던 것에 비하면 큰 진진이다.

團歌를 『아리랑』으로 하자는데는 南北이 일치돼 있다. 『아리랑』은 63년도 회담에서도 團歌로 합의된 바 있다.

選手와 任員의 선발방식과 일정에 대해 쌍방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案에 별로 무리가 없고 서로 補完性이 있기 때문에 2개를 결합시키면 쉽게

타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출전선수의 선발 과정 자체가 南北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틀림없다. 南北은 상호 왕래와 교환경기를 갖게 된다. 선발이 끝나면 곧 合同訓練에도 들어간다. 이것은 스포츠를 통해 일시적이거나 南北의 장벽을 여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63년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 우리는 단일팀 구성 원칙과 방식에 합의하고도 끝내 실천에 들어가지 못해 64년 東京 올림픽에 개별적으로 출전했다. 주변환경과 쌍방의 意志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單一팀 출전의 경험이 있는 獨逸의 예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다. 東·西獨은 56년부터 계속 3회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했다. 단일팀구성에 따르는 절차와 행사가 너무나 번거롭고 體制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68년부터는 다시 개별 참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세 번의 單一팀출전 과정에서 兩獨의 협력관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됐다.

이번의 南北韓 단일팀 구성의 成敗는 전반적인 南北관계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試金石이다. 北京大會가 겨레의 결집력과 잠재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單一팀 구성을 위해 서로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體育會談에 政治는 배제해야

世界日報 社說('89. 3.11.)

赤十字회담,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국회회담 실무교섭 등 여러갈래의 南北 회담이 하나같이 停頓상태에 빠져있는데 비해 9일의 南北체육회담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90년 9월 北京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에 南北韓 단일팀을 파견하기 위한 협상의 첫 모임에서 北韓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해 시비도 걸지 않았고 대화태도도 성실해 보였다. 쌍방 대표들은 선수단 團歌로 선뜻 우리 민요 아리랑을 채택했고, 대표선수는 南北韓을 통해 가장 우수한 선수로 하자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견해가 갈린 선수단의 호칭과 團旗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첫 모임의 분위기는 순조로웠으나 지난 날의 南北韓 체육회담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교섭의 전도를 마냥 낙관할 수만도 없다.

單一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은 본래 北韓측에 의해 제의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 회담을 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어느 수준까지든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들 것이다. 86년의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에 불참했던 그들은 南北韓 단일팀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세계에 널리 심으려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北韓의 체육회담 제의는 그들이 韓國에 대해 집중적인 平和공세를 취하던 시기에 나왔다. 그들은 작년 11월말 南北韓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고, 12월초 韓國의 在野단체를 상대로 汎民族대회를 열자고 호소했으며, 12월 중순에는 美軍철수와 군축을 위한 3者會談의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바로 그 뒤를 이어 그들은 北京대회에 단일팀을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우리는 南北韓 단일팀 구성을 생각하면서 과거 東西獨이 완전히 갈라서기 전에 올림픽에 세 번이나 단일팀을 파견했던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56년의 멜버른 대회때 東西獨은 3色旗 복판에 5輪마크를 넣은 심벌을 국기대신 사용했고, 團歌 대신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중 『환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60년의 로마대회와 64년의 東京대회때까지 계속됐었다. 民族的인 단일성이 그들보다 더하고 통일에의 염원이 그들보다 강렬한 우리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민족적 통합을 두려워하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와 그 밖의 국제경기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파견하도록 노력하자는 81년 이래의 우리측 호소를 외면했던 北韓은 84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신청 마감을 불과 2개월 앞두고 南北단일팀 구성을 제의해 왔었다.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美國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데 대한 보복으로 蘇聯과 그 동조세력은 로스앤젤레스 대회에 불참을 결정하고 있던 때였으므로 北韓은 사실상 이 대회에 흥미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단일팀구성 교섭은 입씨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北韓이 서울에서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불참한 것도 모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北韓이 체육문제를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체육회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들이 서울올림픽 때문에 체면이 깎였다고 해서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北京대회에서 韓國을 배제하는데 체육회담을 이용하려 든다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할 것이다. 단일팀 구성의 성패는 오직 北韓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對話 · 交流엔 相對가 있다

— 北韓의 基本構造 파악은 중요하다 —

中央日報 社說('89. 3.29.)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訪北을 계기로 우리의 統一論議가 혼돈에 빠진 듯 하다. 交流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데는 큰 異議가 없으나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온당하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제가 됐다.

交流를 한다면 상대가 있는것이고, 그 交流의 확대가 統一에 접근하는 交流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交流정책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우리의 交流정책을 정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文목사의 訪北을 계기로 北韓의 對南 交流政策을 짚어볼 몇 가지 자료가 제시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우선 北韓의 24개 政黨社會團體대회가 27일 채택한 5개항의 『연합성명』이 그것이다. 이 성명은 『남북대화를 당국간에도 하고 민간급에서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金日成은 이날 文益煥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회담과 함께 남북사이의 교류도 병행해야 한다』고 해 多岐的 대화 방식을 거듭 천명했다. 統一이라는 하나의 의제를 놓고 쌍방의 정부와 민간이 다원적으로 접촉하자는 주장이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 논리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다. 그것은 北韓政權 만이 正統性을 가진 정부이고, 韓國政府는 南韓의 일부 세력이 구성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南北간의 頂上회담을 제의해 왔으나 北韓은 韓國의 대통령을 사회단체 대표와 同列로 함께 만나자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것은 명백하다. 南北간의 政治관계회의가 아무런 진전을보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기본전략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 각분야의 對話와 교류를 상징할 때 南北쌍방의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도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北韓은 온 사회가 金日成의 말 하나에 따라 움직이는 一絲不亂한 唯一體制다. 거기엔 機能分擔이 없으며 모두 官製化되어 있어 사실상 民間部門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南韓은 각계 각층이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는 多元的 개방체제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고 진정한 각 분야의 多元的 대화가 가능할 지 깊이 연구해야 하며 一方의 다양한 統一論의 혼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닐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성명이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민간급의 자율적인 대화제의를 격려하며 남조선과 해외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여성·종교가·자본가 및 단체들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한 데서도 그 眞意를 엿볼 수 있다.

平壤이 주장하는 南北간의 다원적 통일대화가 가능하려면 北韓사회도 唯一體制가 아닌 多元사회여야 한다. 그래서 北韓에서도 文益煥목사와 같은 사람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北韓은 최근 南北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여러가지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戰術의 변화일 뿐이지 對南전략과 목표의 基本構造는 조금도 변치않고 있다.

南北대화와 교류의 폭은 넓혀가야 한다. 그러나 그 상대의 기본구조와 기본전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交流의 노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원칙과 효율적인 전략을 명백히 확립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리 사회의 多元性的의 強點을 살리면서 機能主義的 접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北의 진정한 意圖는 무엇인가

— 北韓의 당국자접촉 一方延期 —

世界日報 社說('89. 4.12.)

北韓이 12일로 예정돼 있던 南北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을 2주간 연기한 것은 文益煥씨에 대한 우리의 司法처리를 정치선전에 이용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12일의 南北접촉에는 우리측으로서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南北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임한다는 기본원칙만은 지키자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비해 北측이 그동안 文씨가 귀국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南北대화와 南北관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위협해 온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 회담 연기도 그와 같은 脈絡에서 해석돼야 할 것 같다. 즉 文씨가 비밀 入北에 대해 책임추궁을 당할 경우 그들은 이를 會談의 중단 내지 연기의 구실로 삼을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모든 責任을 韓國측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대화에 障壁을 쌓고 교섭을 뒤틀리게 하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北韓은 赤十字회담 經濟회담등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당국자간의 접촉은 온갖 구실을 붙여 기피하면서 韓國內의 반정부 내지 반체제 조직하고만 접촉을 꾀하려 하고 있다. 文씨의 이번 入北에 재미를 들인 그들은 최근 정당 사회단체의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앞으로는 南北대화를 쌍방당국 사이에서도 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다방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北韓에 정부와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으며 순수 民間단체의 활동이 허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의 이른바 『다방면적』접촉이란 韓國의 정치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統一전선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서로의 體制를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한 南北 대화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文益煥씨가 이곳에서 司法的 처리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道義的인 책임

을 추궁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統一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金日成을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히 國法을 어긴 행위다. 또 누구로부터도 代表權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許鎔과 더불어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행위였다. 金日成의 統一論에 대한 그의 共鳴이나 文-許 공동성명의 내용은 그동안 韓國정부가 공들여 발전시켜온 統一정책에 먹칠을 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한 文씨에 대한 責任추궁을 北韓이 대화단절이나 연기의 핑계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對話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政府가 작년 北方외교를 왕성하게 추진하고 北韓에 대해서는 對決에서 和解로 정책을 전환한 후 한때 南北관계는 호전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韓國에서 民主化가 진행되면서 急進세력의 소리가 높아지고 保守-革新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北韓은 이를 對南전략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곳 反정부세력과의 접촉을 기도하며 對話석상에서 左傾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內政간섭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폈다.

우리의 和解노력에도 불구하고 北측으로 부터의 反應이 계속 부정적인 것을 보고 요즘 국민들 사이에는 對北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소리가 높다. 北쪽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라는 것이다. 당국자간의 대화를 이토록 기피하는 것을 보면 北韓은 대화의 실질적인 발전보다는 南韓의 혼란을 확대하는데 더 관심을 쏟고 있음이 분명하다.

‘對話연기 통보’가 뜻하는 北의 전략

國民日報 社說('89. 4.19.)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이 北韓측에 의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연기됐다. 그들은 통지문에서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죄목으로 文益煥씨를 구속한다면 同伴者관계를 앞세운 7·7宣言은 이해할 수 없다는 구실을 붙여 회담연기의 책임을 우리쪽에 밀어붙였다.

돌이켜보면 6共和國에 들어와서 우리는 北方문제와 관련하여 몇 단계의 국가적 소용돌이를 치르고 있다. 그 첫번째는 北韓의 존재를 동반자로 규정하고 南北간의 人的·物的 교류를 現實化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7·7선언이다. 이것은 제3共和國이래 소극성으로 일관해 왔던 우리의 통일정책중 가히 첨단의 것이라 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두번째 소용돌이는 鄭周永회장의 방북을 頂點으로 하여 그 전후에 일어났던 해외교포들의 방북과 北韓상품의 국내반입이다. 특히 鄭周永씨의 訪北은 온겨레, 특히 離散의 고통을 안고 있는 失鄉民들로 하여금 넘치는 설레임으로 저마다 밤잠을 설치게 했다.

세번째는 文益煥씨 파문으로 이어진다. 희망찬 불길로 타오르던 국민의 염원은 文씨의 구속, 좌경세력의 색출, 좌경서적의 단속 등 정부의 잇단 강경대응 조치로 일단 된서리를 맞고 또 다시 試鍊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우려를 낳게 한다. 北측으로부터 날아온 고위당국자예비회담 등의 연기통지문은 부풀었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허망되게 하고 지금까지 보여온 對南유화정책이 그들의 통일전략 기본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文씨의 訪北행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 贊反論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否定的이고 拒否的인 視角이 국민간에 합일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가 關心을두고 있

는 점은 北측의 회담 연기통지와 우리 政府의 강경대응 등이 앞으로의 南北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展開시키고 그것이 궁극적 통일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게 豫測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우리는 차제에 北의 對南통일전략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코자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모처럼 타오른 統一논의의 불꽃을 끄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活性化시킴으로써 국민적 의사를 수렴한 확고한 統一原則을 하루속히 定立하여 다음의 사태진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北측은 對話의 올바른 상대인 당국자간의 회담은 기피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특정 개인이나 在野민간단체들을 상대로 統一논의를 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家長을 빼돌리고 아이들과 집안문제를 이야기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들은 學生, 근로자들을 향해 분연히 쫓기하여 體制를 뒤엎으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기본노선인 赤化통일 망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부의 잘못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상대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할 태세정비에 소홀함이 있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의 세월을 反目이상의 관계로 담 쌓아온 北측과 同伴者관계를 모색한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이 바로 그것이다. 文씨파동이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시적 대화의 중단이나 일부인사의 독선적 행동이 우리의 南北對話노력에 逆行的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北韓은 잘못 알고있다.

東亞日報 社說('89.4.19.)

南北회담은 희망과 좌절의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조금은 터널끝의 불빛이 보이는 듯한 희망의 국면을 맞고 있었다. 現代그룹의 鄭周永 명예회장이 北韓을 방문, 금강산개발을 합의한 것은 이를 말하는 최근의 조짐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南北고위당국자회담 개최를 위한 제3차 예비회담과 체육회담을 연기했다. 그들이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라고 말하는 南北韓고위 당국자회담은 정치 군사문제의 우선 타결을 주장해 온 그들 측의 제의였다. 이렇게 스스로 제의한 회담마저 뒤로 미룸으로써 南北회담은 희망에서 좌절로 또 다시 反轉하고 말았다.

우리는 南北분단의 현실을 초월하여 적의 개념을 하루 아침에 동반자의 관계로 비약시키는 기적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南北대화가 언젠가는 南北의 공동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아래 실낱같은 대화통로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지속을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온 연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가느다란 대화통로, 그것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 이유를 北韓은 잘 안다. 北韓이 내세운 회담연기의 이유, 즉 文益煥목사의 구속사건과 『지금과 같은 좋지 못한 회담분위기』를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南北당국자가 주도해야 할 공식적인 대화통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개인초청의 범위를 확대, 우리 사회의 내부혼란을 촉진시키려는 이른바 對南통일전선전략의 결과였다.

北韓의 『南盲症』이었다.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논쟁과 文목사구속으로 빚어진 혼란이 기다릴수록 北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할 것이라는 판단은 없었는가. 그래서 北韓이 南北회담을 연기한 주요원인의 하나가 이같은 오판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한다.

北韓에 묻고 싶다. 高麗民主聯邦制라는 것도 체제의 兩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통일전략의 工作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대화, 한편으로는 工作이라는 『이중전략』은 결코 『이념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南北대화가 南北韓 모두에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北韓은 지금 40억 내지 5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1백90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외자가 소요되는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점진적인 대외 경제개방도 시도하고 있다. 南北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야 이같은 목표가 손쉽게 달성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文목사의 訪北초청같은 일종의 『南盲症』으로 인해 대화분위기가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터널끝의 불빛이 보이는 듯한 금강산개발합의 같은 긍정적인 진전도 깨져가고 있다. 北韓은 鄭회장의 재차 訪北을 기대하면서 그의 고향마을을 새로 단장하고 의료시설까지 갖춰 놓았다고 한다. 北韓내부의 갈등이라고 할까.

그같은 갈등의 모습을 두 개의 南北회담을 연기하면서 날짜를 7월 12일과 18일로 각각 못박아 놓은 사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자세다. 공식적인 대화통로를 무시하고 개별초청으로 高麗聯邦制나 선전하는 工作차원을 포기하지않는 한 北韓의 성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을 모색하고 東西의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료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北韓은 인식해야한다.

6

北入師牧文

文목사의 돌연한 訪北

— 민족적 과업을 小英雄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 —

東亞日報 社說('89. 3.27.)

統一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러 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목이 메도록 統一의 노래를 열창했을 것이다. 사랑의 詩를 읊어 離散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밤을 지새우면서도 사랑의 詩를 썼을 것이 아닌가.

分斷 40여년, 그 동안의 南北대결은 실로 流血의 역사였으며 고통과 시련의 기록이었다. 우리는 그 처절한 民族史에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이처럼 고뇌하고 진통하고 있는 것이다. 文益煥목사가 平壤에서 예배를 보았다는 26일에도 南韓의 각 교회와 성당에서 부활절행사가 봉행되었으며 1천여만 信者들은 統一과 平和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바쳤을 것이다. 이같은 기도는 분단의 비극이 비릇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분단의 상처가 아물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같은 至難한 민족적 과제가 한 개인이나 한 두 단체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환상을 좇는 몽상가이거나 자기도취에 빠진 小英雄主義자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在野운동을 지도해 온 文목사의 『平壤도착성명』에 접한 우리의 충격이 너무도 컸던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自由化 多樣化를 추구하는 우리사회이면서도 統一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를 창구로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北과 접촉할 것을 국민적 합의로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지난해의 『7·7선언』이후 南北교류와 평화모색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여 자칫 사회적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對北기본방향은 與野를 초월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金日成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民主化 自由化의 물결을 그들의 韓

半島赤化전략의 好機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같은 자세는 마땅한 것이다. 심지어 金日成은 우리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盧泰愚대통령을 대통령아닌 한 政黨의 대표로 그가 주도하는 정치회담에 초청하는 등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文목사는 우리정부가 공식으로 반박한 金日成의 南北정상회담을 찬성하고 金의 초청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北韓으로 갔다. 또한 文목사는 도착성명에서 『존경하는 金日成주석』을 만나는 감격을 대견스럽게 밝히고 있다. 文목사가 지난 70년대 초반이후 전개해 온 反政府운동의 폭과 농도가 在野를 대표해 오고 있다는 비중과 그가 성직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우리의 놀라움은 너무도 크다.

우리의 놀라움은 최근 文목사가 보여 온 일련의 反政府활동과 관련, 더욱 회의와 우려를 질게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對北관계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北韓의 제안이나 金日成의 주장에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찬성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같은 사실과 관련, 우리는 金日成의 억압과 통제의 정치와 非民主的 反人民的 체제에서, 존경할 수 있고 찬양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文목사에게 묻고싶다.

아울러 制度圈의 각 정당도 차제에 우리의 自由民主체제와 北의 金日成체제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각 정당이 在野의 논리에 신경을 쓰고 在野의 움직임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해 온 지난날의 정치행태를 정리해야할 시점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자칫하다가 民主化가 되기전에 국론분열로 좌초할 위험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로 접근하기 전에 민족의 파탄과 비극이 물려올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統一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다

國民日報 社說('89.3.28.)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북한방문은 나라 안을 온통 들끓게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통일 문제인식에 큰 혼란을 빚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평가 연기와 5共청산문제 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정국에 부정적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文목사는 우리정부가 공식거부한 金日成제의의 『남북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나 승인도 없이 北韓으로 잠입했다. 그는 도착성명에서 『존경하는 金日成주석』과 조국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권위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통일은 오로지 그를 비롯한 일부재야와 북한당국자와의 만남과 담판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이 전제된 그의 행동과 착각은 한 마디로 환상에 빠진 만용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저돌적인 북한행에 대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실질적인 통일문제의 접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한다.

文목사의 방북을 지지하는 全民聯을 비롯한 재야운동권의 견해처럼 실정법만으로 贖罪하는 것은 反시대적 폭거라든가, 남북대화에 있어 모험주의를 배제시키면 분단극복은 요원하다는 일부의 주장과 논리가 있음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文목사의 이번 북한방문이 통일논의의 물꼬를 트기보다는 더 후퇴시키는 결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통일문제는 그 성격상 어느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나 북측의 변화를 과대평가하는 착각에 빠져 들어서는 혼란만 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남북교류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들뜬 분위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온 우리들의 우려를 낳게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 고도의 정치적 기술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대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對北교류만은 창구일원화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 원칙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文목사의 이번 행동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남쪽 민중들은 독재세력과 막강한 군사력·경제력을 구사하는 외세와 싸워……』라고 하는 그의 도착성명의 일부 대목이다. 어떻게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民主化투쟁으로 일관해 온 그 답지않게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한 한 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文목사의 방북은 따지고 보면 남북관계에서 접촉·교류의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정부·여당을 비롯한 제도정치권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사실 이번 경우도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역의 동반자나 UN동시가입 대상으로 수용하는 정책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鄭周永씨의 訪北때 이미 우리법 체계에서 합당하나의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상기해보면 우선 관련법률의 정비를 서둘러 법률과 정책을 일치시켜야 옳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모처럼 일기 시작한 남북한의 교류무드에 찬물을 끼얹거나 對北창구를 폐쇄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재야가 함께 슬기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分斷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 보다 더 꼭진한 민족적 과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이 간절하면 할수록 선후와 완급을 가려야 하고 감상적 충동은 억제되어야 함을 이번 文목사의 訪北충격을 통해 재인식 해야 할 것이다.

南北統一의 論理와 幻想

— 文益煥목사의 경우—

서울신문 社說('89. 3.28.)

그 해괴한 사태에 접하여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먼저 사람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목사 文益煥의 나이 일흔이다. 예부터 人生七十古來稀라 했고 聖賢 말씀에 사람 나이 일흔이면 하고싶은 대로 행동해도 걸릴 것이 없다 (從心所欲 不踰矩)고 했다. 耳順의 나이에 10여년을 더한 文목사의 행동은 크게 그릇된 것이다. 정부의 사전승인이나 허락을 구한 것은 고사하고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平壤行을 감행한 것은 종교인답지 못하고 지식인답지 않다.

그는 크게 잘못했다.

아침 다시 한번 다져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자하는 마당에 論理가 중요한가 행동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文씨의 자의적인 平壤行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책임은 없지만 목소리만 큰 일단의 사람들은 통일은 당장이라도 가능하고 양쪽 사람이 서로 만나 얘기하고 손잡고 통곡하면 끝날 일이라고 쉽게 주장한다. 아마도 文씨는 자신의 몸을 던져 통일의 조그만 디딤돌이나마 되고자 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은 감성만 앞세워 책임을 저버리고 논리를 무시한 채 행동만을 앞세운 小영웅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내친김에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가 인식하는 北韓은 환상이며 그가 추구하는 통일 접근방식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金日成 主席』의 초청에 따른 平壤行만을 생각했지 초청을 효력있게 할 우리 정부의 협조나 허가를 아예 무시한 결과가 된다. 文씨의 몽상가적 행동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分斷된 韓半島의 합법정부인 韓國의 국민임을 잊어버리고 있다. 아예 그 스스로가 韓國人임을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다. 종교인이요 지식인으로서 칠십 평생을 살아온 文씨가 치밀한 계산 아래 행동했다면 그것 역시 그것대로, 또 그가 在野의 지도적 인물이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앞뒤 돌보지 않고 행동했다면 그것 역시 그것대로 문제는 남는다. 참으로 심각하고 애석한 일이다.

文씨는 그쪽에 가서 이쪽을 비방하고 금방이라도 이쪽이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을 갖도록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자신과 가족이 몸 담아온 韓國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한 것이다. 그 책임 또한 그의 몫이다.

北韓의 對韓視角 바로보아야

文씨가 공공연히 『존경하는 주석』이라고 부르며 평양에서 만나고자 하는 金日成에게 南韓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게 있어 南韓은 『해방 안 된 땅』이다. 이른바 美帝의 強占으로부터 南韓을 해방시키는 것이 40여년을 일관해 오는 北韓 집단의 對韓視角이다. 文씨는 평양도착 성명이라는 것을 통해 『꼭 오래 전부터 한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金日成주석과 만나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해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는 없을까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참으로 큰일 낼 소리다. 40여년 동안이나 南韓을 해방시키려 노리고 있는 金日成과 흥금을 터놓고 얘기할 문제는 『혁명전쟁』밖에 달리 없다. 더구나 최근 일련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金日成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民主化발전의 추세를 그들의 韓半島 赤化전략의 好機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文씨는 누구한테 쫓기듯 평양엘 갔고 金日成과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가 국내에서 在野세력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부의 權能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평양행을 감행한 그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는가. 聖職者인 그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聖書에 나오는 얘기이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南과 北이 分斷된 때가 있었으나 우리에게도 통일될 때가 있을 것이다. 文씨의 경박한 행동이나 私的 교섭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두른다고 될일 아니다

통일을 향한 교류는 마음의 交感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설부른 서두름이 엄청난 낭패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北韓의 곡예에 현혹당하고 나면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한때 순진한 학생들은 板門店에 가서 저쪽 『친구』들과 만나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화염병을 던지고 파출소를 부수며 난리를 쳤다. 요즘엔 反帝연대성투쟁이란 목표를 내건 평양 세계 청소년학생축전에 왜 안보내느냐고 따지고 나선다. 그것을 설득하고 말려야 할 어른들이 한술 더 떠 훌쩍 평양으로 갈 생각들만 한다면 사태는 참으로 복잡해진다.

무절제한 감상주의가 對北교류의 추진력으로 난무할 때 두 사회가 접근함에 있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혼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긴 誤判이 자칫 통일의 길을 오히려 逆轉시킬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우리의 南北관계는 고도의 질서와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통제밖에서 제각기 떠들고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北韓에 접근한다면 혼란만 초래된다. 文씨의 訪北을 계기로 南北대화와 교류의 질서와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번 鄭周永씨의 訪北이 남긴 문제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고 文씨의 平壤行을 사전에 몰랐다면 文씨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관계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文씨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체제와 그 權能을 존중해야 할 정부가 있다. 文씨가 韓國人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그는 우리의 체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 윤리규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는 大韓民國을 무시했다

朝鮮日報 社說('89. 2.28.)

文益煥씨의 행위는 한 마디로 大韓民國과 그 統治權 같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투의 태도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식으로 평양에 가서 『존경하는 金日成주석』을 만나보면 정말로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일종의 도취요, 偏執的인 思考의 소치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런 종류의 突出행위에 대해 『그 충정은 이해하나……』하는 식의 評들을 듣는다. 그러나 오늘의 南北관계에 關한限, 文씨가 한 것 같은 接近方法은 그 忠정조차 긍정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文씨는 그의 평양 도착성명에서 기본적으로 南韓의 國家性에 대해선 손톱 만큼의 애정이나 존중을 표시하지 않고, 통일은 오직 文씨 자신같은 사람들과 金日成사이의 만남으로만 이룩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통일이란 反체제派 와 『존경하는 金日成주석』사이의 일이지, 南韓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아예 빠져있으란 論法인 셈이다.

文씨는 『통일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善이며, 모든 통일은 善』이라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金日成-金正日을 『수령』으로 모시게 되는 통일도 善이란 뜻인지 - 文씨가 정히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긴 하지만 - 우리 국민으로선 목숨을 걸고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도 독재와 불의와 부정에는 否定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統治主權을 文씨처럼 도외시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통일이란 대한민국의 統治主權이 것처럼 무시당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믿으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南韓의 민주화 뿐 아니라, 北韓의 민주화도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文씨는 『독재』와 『군사세력』과 『외세』로 대한민국 이라는 모든 국민의

터전 전체를 代置시키면서, 오직 자신같은 『선택된 義人』들만이 통일을 주도할 자격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통일의 장애요인이 北에는 없고 南에만 있다는 듯이 풍긴 文씨의 전반적인 論法이다. 주민의 자유로운 비판적 언론 집회 결사 거주이전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小스탈린主義的인 北세습專制에 대해 文씨의 그 『저항정신』은 왜 단 한마디의 말도 없는가. 그것이야말로 反 통일적인, 암적 요인임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文씨는 스스로 『4천만 민중들의 뜨거운 시선이 내 등뒤에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고 자처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국민은 미지근한 시선도 보낸 적이 없으며 아무런 권한도 文씨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보내는 것이 있다면 文씨의 그런 행동에 대한 어처구니 없음 뿐이다.

어쨌든 우리는 偏執的이고 독선적인 한 개인의 행동에 의해 돌연히 우롱당하고 뒤흔들린 느낌을 가지고 심한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어떻게 봤길래 그랬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통치주권은 정말 있는가 없는가.

충격과 소모를 줄이자

— 균형감각 잃은 통일논의는 百害無益 —

東亞日報 社說('89. 3.28.)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訪北이 물고온 충격이 온 국민간에 크게 번지고 있다. 정부에 사전통고나 양해없이 그야말로 『潛行』 형식으로 入北한 그의 행적이 이제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나는 강한 의혹과 회의가 있는가 하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통일논의나 통일열기가 이처럼 平地突出의 모양으로 可視化했다는 결과론적인 우려도 크게 일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 보도를 통해 文목사의 入北목적이나 동기를 살펴보면 그의 순진무구하다 할까. 무모한 통일에 대한 환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남쪽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쪽의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남북간의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지요』 혹은 『정치 협상을 통하여 정치인들이 문제를 푸는데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대화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고 했다는 그의 入北전의 말을 헤아려보면 그는 아직도 남북간의 깊게 파인 不信의 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통일론을 둘러싼 남북의 정치적 견해가 얼마나 상충되고 있는가를 看過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6천만 우리 겨레 중에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 남한쪽에서는 최근 수삼년간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 이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제까지 냉전논리에 묶여 있던 남북교류나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역시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키위한 제한적인 개방화를 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있어 현재 갖가지 남북접촉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목은 그들이 아직도 『南朝鮮解放』에 의한 통일전략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연초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우리쪽의 정당사회단체 초청을 거론하며 끝내 남한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치 않으려했던 속셈이 바로 그것이다.

원만한 남북접촉이나 교류 혹은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긴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이다. 우리가 수십년동안 이룩한 민주화 자유화의 열매로 획득한 통일의지의 수준에 걸맞게 북한도 남한해방에 의한 통일전략의 꿈을 버려야하고 주체사상의 울가미로 북한주민의 사상과 양심과 인권을 묶어놓는 억압정치의 근본적인 제도수정을 단행해야한다. 우리는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통일논의를 더욱 성숙화하고 체질화해야 하지만 아울러 북한의 金日成主義에 의한 통일전략과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억압정치의 포기를 심도있고 조직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6천만 국민이 바라는 통일논의는 남북간의 균형있는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文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한번 강조한다. 한 개인이나 정파의 균형감각을 잃은 어떤 통일논의나 주장도 궁극적으로 통일의 長途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정당들도 적어도 통일정책에 관한한 정략이나 自黨利己主義를 버리고 中心있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文목사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나 소모적인 통일논의에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시급한 反共관계법 整備

中央日報 社說('89. 3.28.)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平壤방문이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함께 정부의 文목사 귀국 후의 법적처리 강행이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올 것 같다. 野黨일각은 文목사의 허가없는 訪北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鄭周永회장의 경우와 비교, 정부의 國家保安法 선별 적용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在野에서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南北관계접촉과 교류에서 적용할 확고한 원칙을 정작 정해 주었거나 국회가 국가보안법과 대외무역법등을 개폐작업을 통해 관계법을 정리해 두었던 들 이같은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野黨과 在野측이 鄭회장의 訪北을 예들들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정부는 鄭회장 訪北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이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승인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 경제교류를 위한 협의와 政治的 협의라는 점에서 鄭회장·文목사의 경우가 명백히 다르고 文목사의 경우는 實定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승인이 없는 경제교류협의, 정부승인이 있는 政治협의를 경우와 더욱이 그 구별이 명확치 않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法的으로 설명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게 되는 점이다.

政府정책, 그 중에서도 對北韓 정책을 변화시켰으면 그에 수반되는 실정법 또한 거기에 맞추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7·7宣言에서 北韓을 동반자관계로 못박고 통일논의의 자유화의 개방정책을 천명했으면 이 선언의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고 反共관계법의 재검토와 개폐도 수반되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만해도 北韓 공산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와 연관되는 각

중 행위를 반국가적 범죄로 처벌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가 반국가 단체를 상대로 변화된 정책 수행을 하는 것은 통치권에 속한 정당행위라 할지라도 국민 감정에 혼선을 빚게 마련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근본정신이 北韓의 對南 적화전략을 이롭게 하거나 동조·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행위나 승인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지만 法의 二元的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정부의 유엔 동시가입과 쌍방 최고책임자회담제의는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라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둠으로써 물자교류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와 자진 지원등의 범죄가 되고 왕래·접촉등이 회합·통신죄가 구성될 수 있는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또 이런 모순은 법의 예측 가능성과 法的 안정성을 해치고 법이 지녀야 할 권위와 신뢰까지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여당이 앞서 국가보안법 대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금품수수와 잠입·탈출·찬양·고무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법』만을 처벌토록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치권은 또다른 文목사사건을 사전에 막고 南北화해와 민주주의체제 수호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관계법 재정비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

文益煥씨의 反國家행위

世界日報 社說('89. 3.29.)

北韓을 불법방문한 文益煥 黃皙暎씨 등은 예상했던대로 金日成의 환대를 받았다. 金日成은 특히 연초 南北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의도했던 일에 한 사람의 동조자라도 얻게 되었으니 좋은 선전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金은 그 제안에서 『남조선에도 高麗민주연방공화국案이 統一의 첩경임을 인식하는 民主인사들이 늘고있는 만큼……』云云했던 것이다. 金日成에 의해 『民主인사』로 대접받은 文씨는 北韓측이 미리 짜놓은 脚本에 따라 행동하는 꼴이 되고 있으나 그는 결국 大韓民國과 國民에 대해 法的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증대한 배신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文益煥씨는 金日成과 만나 민족의 장래를 기탄없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지만, 金日成은 27일의 만남에서 南北韓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北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이댔다. 첫째 統一은 高麗연방제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南北간에 정치-군사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하며, 셋째 韓半島 유관국가들에 의한 南北韓교차승인과 교차접촉은 거부돼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는 그동안 南北대화에서 제기된 韓國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자세이다. 北韓이 기존의 대화채널을 일체 거부하고 反政府的인 경향의 단체하고만 개별적인 접촉을 가짐으로써 統一문제에 대한 韓國내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함정에 文씨는 완전히 빠져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文씨의 北韓행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金日成이 48년 南韓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던 金九 金奎植등을 平壤에서의 南北정치협상회의에 초치했던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회의에 참가한 56개 정당-사회단체들로 韓半島를 대표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 南北韓에서 모든 外國군대가 철수한 후 內戰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56개 정당-사회단체중

金九가 영도하던 韓國獨立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共產黨과 외곽 단체들이었으며, 49년 美軍이 南韓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北韓은 다음 해 韓國戰爭을 일으켰다. 南北정치협상회의에 앞서 金日成은 蘇聯軍의 지원아래 이미 憲法제정까지 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나 南北의 異質化가 심화돼버린 오늘날 文益煥씨는 자기의 訪北을 金九의 역할에 비유하는 만용을 부렸다.

『모든 統一은 善』이라고 외쳤던 張俊河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金日成을 만나겠다던 文씨는 金으로부터 統一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받고 어떠한 심정에 빠졌을까. 統一만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라도 善이라고 한다면 韓國戰爭은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自由體制를 지켜왔고, 共產治下의 統一을 배격해왔으며, 戰爭을 통한 統一을 원치않기 때문에 統一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平和的으로 달성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본게 아니던가. 비록 분단의 기간이 좀더 계속되더라도 南北韓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 그 社會를 개방한다면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은 한결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文益煥씨가 北韓에서 저지르고 있는 反國家的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분위기의 조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문목사의 평양행을 ‘통일’의 역사적 계기로

한겨레신문 사설('89. 3.29.)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은 그 방식과 시기와 민주화투쟁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으로 보아 분명히 우리 민족사의 일대 사건이다.

분단 이후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가 파견한 ‘밀사’도 아니고 정부 당국의 권유나 사후 약속을 받은 사절도 아니고 자신의 책임 아래 방문을 ‘결행’한 민족지도자로서는 48년 4월 김구 선생의 평양행 이후 문목사가 처음이다. 김구 선생은 당시 자신의 평양행에 대해 『공산주의나 여하한 주의를 가진 자를 불문하고 외각(外殼)을 베이면, 동일한 피와 언어와 조상과 도덕을 가진 조선민족이지 이색민족이 아니므로……』(〈서울신문〉 48년 4월 17일자) 38선을 넘어간다고 밝혔다. 문 목사는 도쿄를 떠나기전 〈한겨레신문〉기자와 만나 『남도 우리 조국이요 북도 우리 조국인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북쪽땅을 디딤으로써 나 스스로 한쪽의 조국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단독정부 수립 이전인 48년 당시와 지금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결단에 앞선 이 두 사람의 심경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문 목사의 평양방문은 민주화와 통일 운동이 또다시 대탄압의 위협에 부닥쳐 있는 때에 결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6·29선언’에 이어 ‘7·7선언’이 나오고, 현대 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씨의 북한 방문과 ‘금강산 관광’이 현실로 나타난 뒤 국민의 통일염원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자 이때까지 남북교류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던 정부는 갑자기 찬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강행하자 남북 간에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학협)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가 거부됐으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범민족대회 예비회담과 남북작가회의 예비회담은 공권력에 의해 좌절됐다. 뿐

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중간평가’를 사실상 취소하고는 ‘좌경폭력세력의 색출’이라는 명분 아래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찬바람 속에서 문 목사가 평양을 찾아 간 것은 그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표현했듯이 『장벽을 깨고 돌파구를 여는 작업』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을 찾아가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람이 기업인이나 관리가 아니라 ‘문익환 목사’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문목사는 ‘민주화와 통일은 하나’라는 신념을 가지고 철순이 넘도록 나라의 민주화와 거래의 통일을 위해 살고 싸워온 재야운동의 ‘상징’이다. 그는 지난 76년 ‘3·1민주주국선언’ 사건 때 선언문을 기초하여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뒤에도 다시 3차례나 투옥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 그는 이제까지 재야의 도덕적 지주로서, 민주화운동의 축쇄인 ‘남은’ 실정법들을 ‘범하면서 깨뜨려’왔다. 그는 이번에 평양에 가면서 오랜 친구이자 『통일에 대한 염원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는 정경모씨와 동행했다.

따라서 이번 문 목사의 평양방문에 대해 ‘실정법’과 ‘평양도착성명’의 표현 가운데 일부를 거론하여 시비를 거는 일은 그 방문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과 사전협의를 없이 북한에 간 그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그의 행위의 진정한 뜻은 외면한 채, 방식만 두고 온갖 감정적 비난을 퍼붓는 집권세력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할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논리도 없이 문 목사를 공격하기에 앞서 평양방문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평양행이 제기한 쟁점들을 해결하려고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문 목사의 평양방문은 정부의 통일논의와 교류 독점, 즉 ‘창구일원화’론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독점하고는 민족통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정부의 ‘창구일원화’론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문 목사는 자기방

식으로 ‘해답’을 던진 셈이다. 더욱이 ‘창구일원화’는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주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둘째, 몇몇 실정법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이다. 보안법은 이미 붓물처럼 터진 남북교류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현실적 규제력을 잃은 지 오래라는 지적이 지배적 이어서 정부·여당조차 미봉책이긴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 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민은 평양에 갈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주영씨 등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법률에도 없는 ‘통치행위’라는 용어로 그런 방문을 합법화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짜깁기로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따를 수 없다. 문목사의 평양행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라고 볼 수 있다.

문 목사의 북한 방문은 단순한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 통일의 주체인 민중의 뜻을 대변한다는 결의에서 실행된 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에 크고 밝은 빛을 던지기를 바란다.

個別 入北 초청 嚴戒해야

— 北韓은 우리 國論 分裂 노리고 있다 —

한국일보 社說('89. 3.29.)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文益煥목사 일행의 북한밀행이 물고온 파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정부와 각 정당등 정치圈의 당혹감도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 역시 분노속에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아무런 사전협의나 허가없이 멋대로 무모하게 강행한 그들의 행각이 장차 통일논의와 남북대화추진에 많은 부작용과 함께 혼선을 빚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들의 깊은 우려는 예상한대로 文목사등이 訪北한 지 이틀만에 북한이 이들을 對南적화전략의 好材로 이용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金日成은 文씨일행의 방북을 그들의 정치협상회의에 호응한 것으로 규정, 환영한 뒤 소위 고려연방제안이야말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고 남북교차승인과 교차접촉은 2개의 조선책동이라면서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논의하러온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한다.

또 조선노동당등 북한의 24개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은 남북대화는 당국과 병행하여 각급 민간대화도 장려한다는 등 5개항을 결의, 文목사와 같은 개별방북을 부추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분단 이래 지금까지 對南赤化통일이라는 기본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전 단계로서 남한의 국론분열과 혼란의 책동을 기도, 이번 文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한의 정부와 민간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속셈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분명히 충고하고자 한다. 북한이 통일추진과 폭넓은 남북대화라는 미명아래 남한정부를 외면한 채 反정부 및 재야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개별초청하고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성하는 한편 그들의 통일전략을 주입시키는 것이 결코 점진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추진은 물론 장래 통일을 이룩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아울러 북한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 진정 대화촉진과 통일실현을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적화 妄想을 포기하고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회복이란 차원에서 남북당국자간의 중단된 적십자·경제·국회회담등을 즉각 재개시켜야 한다.

文목사 일행은 그들의 무분별한 北行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에서의 갖가지 언동이 진심으로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또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통일노력을 왜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한편 文목사 일행의 북행에 대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내외 정세를 감안한 치밀한 사전준비와 국민적 동의도 없이 密室외교로 內政을 돌리고 또 中·蘇와의 경제교류의 문고리만 잡으면 북한이 쉽게 문을 열고 이끌려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추진한 북방·북한정책이 결국 이같은 혼란임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일로 기세를 잡은 북한이 앞으로 민간인 초청으로 대대적인 對南 및 對外평화공세를 펼칠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뒷받침도 없이 북한에 대해 들뜨게 했던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북한은 물론 소련·중국등 對공산권정책과 자세를 분명히 가다듬는 일이 시급하다. 우와 좌왕식의 흔들리는 內政도 북한으로 하여금 분열기도의 틈을 준 원인의 하나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北의 새로운 平和攻勢

- 對南 「굴복의 게임」을 하고있다 -

京鄉新聞 社說('89. 3.29.)

文益煥목사 일행의 平壤密行과 金日成과의 만남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金日成의 持論인 『고려연방제』와 交叉승인은 『두 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분열주의의 책동이라는 그의 상투적 통일론에 일방적으로 說得당함으로써 결국 北의 대남전략에 말려든 셈이 되었다.

우선 金日成이 文목사 일행에게 강조했다는 『고려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 실현』 『정치군사회담의 필요성』 『교차승인 교차접촉 절대不可論』 등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북한의 일관된 대남전략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측 전략은 최근 그들이 동시다발로 내놓은 회담의 성격과 주체를 각각 달리하는 일련의 대화공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文목사를 초청한 경우만해도 회담 주체를 제정당 사회단체 등으로 잡은 그들의 전략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金日成은 특히 文목사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찾아오겠다면 개별적으로 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역시 우리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가운데 개별초청에 집착함으로써 남한내부의 국론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연석회의』와 『정기협상회의』 소집을 강조해 온 것도 우리정부를 소외시키고 한국내의 反政府세력들과 연합전선을 펴겠다는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사회의 혼란조장과 각계 각층간의 대립 갈등을 심화시켜 소위 『남남투쟁』을 부추기려는데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文목사의 入北을 계기로 북한의 24개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5개항의 결의문

을 발표했다는 일련의 평화공세만해도 이러한 통일전선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말이 좋아 평화와 통일이며 민족공동의 이익에 이바지 운운하는 것이지 하나같이 『민간급 개별접촉』을 강조하고 있는것이 그렇고 노동자 농민 학생등 일부세력을 상대로 『아무때나 공화국 북반부를 방문』케 하여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내부를 교란 분열시키려는 책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文목사일행을 초청하면서 특별기까지 내 줄 정도로 열을 올렸다. 盧泰愚대통령을 일개 정당총재로 자격을 격하시켜 초청하던 그들이 재야인사인 文목사를 그토록 환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북한측이 재야인사의 入北을 실현시켜 그들의 의도대로 통일전선 전략을 최대한으로 구사해 보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文목사 일행이 이같은 북한의 정치협상 전략에 넘어가 金日成을 만났다는 것은 감상적 理想論에만 치우쳤지 理性的 현실론에는 눈이 무척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일정책은 어디까지나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에 의해 차분히 질서있게 추진돼야지 너도나도 중구난방식으로 접촉한다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文목사 일행이 이 점을 망각하고 북한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분별한 통일논의나 제멋대로 북한과 접촉하려는 태도는 對北정책의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도 이런 식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는 전략을 포기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진지하게 『민족의 공동이익』을 모색해 줄 것을 이 기회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文목사가 던진 충격은 일부 계층의 잘못된 對北偏向的 시각을 교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과 그 실체를 직시해야 할 또다른 命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같이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줄 안다.

時針을 뒤로 돌릴순 없다

- 『突出사건』에 나라基調 흔들려서야 -

京鄉新聞 社說('89. 3.30.)

北韓으로 密行, 『존경하는 金日成주석』을 부르며 김일성과 일싸안고 감격해하는 文益煥목사의 모습을 TV로 보니 새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南쪽에 대해서는 侮蔑的인 비판을 가하면서도 40년이상 唯一독재체제로 일관해 온 金日成에게는 어떻게 것처럼 관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을 대부분 국민들은 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사 통일에 대한 그의 염원이 순수하고 또 예의상 다소 찬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文목사의 행동과 언행은 분명 度를 지나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존재와 自由民主체제의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올바른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그 대응이 자칫 감정에 흘러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半世紀에 가까운 분단이 장벽을 허물고 民族통일의 염원을 이루는 문제는 감정을 앞세워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예민한 문제다.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을 특히 경계하는 까닭은 작금의 통일논의와 南北교류문제가 시국상황과 民主化진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일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상황에서는 통일논의의 혼란은 곧 시국의 혼란을 뜻하며 統一정책의 후퇴는 民主정치 後퇴를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작금 文목사 사건에 대한 輿圖의 대책방향이 지나치게 과민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28일의 高위黨政회의에서 文목사가 돌아오는 즉시 구속하기로 확정한 것을 비롯해 鄭周永현대그룹회장의 2차訪北과

金剛山공동개발계획을 보류하고 對共관계법개정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경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번과 같은 통일논의의 혼선과 文목사의 돌출 행동이 정부의 성급하고도 무분별한 對北정책에도 기인했다면 그 정책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또한 그의 入北을 사전에 탐지하여 마지못한 公安당국의 책임자 문책이나 이완된 국정분위기의 쇄신을 위한 개각도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면서도 우려스러운것은 그대응이 順理的이지 못해 역사의 時針을 뒤로 돌리는 愚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감정에 치우치는경우 그것이 통일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북방정책의 기초를 흔들거나 자칫 極右세력에게 復古의 명분을 줄 우려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냉철하게 사태를 보는 理性과 일관성있게 대처하는 신중함이다. 이를 위해 우선 文목사의 平壤잠행은 民族재통합이라는 역사적 大道에서 하나의 『돌출사건』으로 파악해야 함이 옳다. 비록 文목사 사건이 충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大局的으로보면 역시 작은 걸림돌에 불과하다. 어떤 의미에선 긴 통일과정의 일시적인 진통일 수도 있다.

이런 작은 걸림돌에 좌초되어 나라가 우와좌왕하고 정책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分斷해소의 大業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귀중한 가치를 지키기조차 벅찰 것이다.

그런만큼 웬만한 도전과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重心을 잡고 의연하게 우리가 가고있는 統一의 길을 계속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부터 정부의 할 일은 결국 左로도 右로도 쏠리지 않도록 統一정책과 정국운영의 中心에 서는 것이다. 文목사의 귀국후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작금 輿圈내에 팽배한 強性기류에 휘말리지않고 盧대통령의 6·29정신과 7·7선언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文씨 訪北과 우리의 대응

- 北은 분열공작을 포기하고 공식대화에 나서라 -

東亞日報 社說('89. 3.30.)

訪北중인 文益煥씨가 北韓 金日成을 일싸안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TV화면으로 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했다.

北韓行을 『꿈에도 그리던』文씨로서는 감격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어려운 사정으로 번민하고 있던 金日成에게는 文씨가 『행운의 여신』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흉중에는 민족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진솔한 대화보다는 그의 赤化통일이라는 「오랜 꿈」으로 文씨를 최면시켜야겠다는 전략이 꿈틀거리고 있는 듯했다.

金이 文씨에게 『北측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은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며 『팀 스피리트』군사훈련은 『전쟁훈련이기 때문에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 사실에서도 이같은 金의 흉중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金은 또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위해 찾아오겠다면 환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의 對北정책에 혼선을 일으키려는 공작의도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文씨도 그가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을 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北측은 文씨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盧泰愚대통령과의 남북정상대화를 거부하고 盧대통령을 民正黨의 총재자격으로 만나겠다는 金에게는 文씨의 『순진한 호소』가 한낱 『잠꼬대』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文씨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金의 주장만 발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北의 전략전술과 관련, 李洪九 통일원장관이 29일 『北韓의 고위당국자가 공공연하게 우리의 在野인사들을 접촉하여 당국간의 교섭을 우회하려는 것은 南北관계개선을 방해하고 平和통일의 앞 길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李장관이 文씨의 訪北과 관련한 최근의 北韓측 태도

를 『對南 정치공작적 대응』이라고 『적극적인』 비난을 한 것은 6共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주목되는 정책변화의 시사로 보이기도 한다.

金日成과 그 일당들은 오늘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있는 自由化의 진통을 그들이 노리는 共產化를 위한 허점으로 악용하려는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들은 또 우리가 지향하고있는 民主化의 길을 赤化의 계기로, 南北對話노력을 國論분열기회로 삼으려는 전략도 결코 성취 될 수 없을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北韓은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환상을 청산하고 서로의 정치체제와 정권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생산적인 대화와 교류에 응하는 것이 民族통일의 첩경임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각종 공식대화에 먼저 응함으로써 폭넓은 民間차원의 대화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北의 정책전환을 위해 우리는 보다 인내성있고 합리적인 對北접촉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적절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같은 상황에서 金大中平民黨총재의 南北韓자유왕래 허용주장은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같은 주장을 밝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統一에 관한 國論과 정치인의 責務

世界日報 社說('89. 3.31.)

文益煥목사의 訪北을 둘러싸고 國論이 분열되고 있음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政府와 대다수 국민들은 文목사의 北韓방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實定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처음부터 보아왔으나 野圈정당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金泳三총재는 어제 民主黨의 입장을 밝히면서 文목사가 政府와 사전협의 없이 北韓을 방문한 것은 國民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므로 北韓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金大中총재는 文씨가 귀국하여 그의 활동전모가 밝혀질때까지는 平民黨의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가하면 文씨가 속해 있는 全民聯과 그에 동조하는 在野세력은 政府와는 별도로 北韓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정당화하는 입장이다.

文씨 訪北에 관한 國論의 이같은 분열상은 그것이 國益과 南北대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文씨가 金日成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는 이미 명백하게 國法을 어겼으며, 南北대화와 교류가 순조롭게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비판만은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訪北행위 그 자체에 대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작년 7·7선언 이후 統一문제와 北方정책에 관해 국민들 사이에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北韓과의 대화와 교류가 무절제하게 진행돼도 좋을만한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北韓의 주장에 동조하는 韓國內의 세력이 그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統一방안을 지지하고 駐韓美軍의 철수와 韓國정부 타도를 그들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외칠 때 그것이 과연 『統一논의를 한 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文씨의 訪北으로 우리 國論이 갈리고 있는 것을 보고 北韓당국자들은 그들 책

략이 적중했다고 만족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지난 27일 부랴부랴 이른바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소집하여 韓國의 민간단체들과의 『다방면적인 대화』를 호소하는 5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南北대화를 당국사이에서도 열고 민간단체 사이에서도 폭넓게 진행하자는 것인데,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뻔하다. 기존의 대화채널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그들은 韓國내 在野단체들과의 대화를 주장함으로써 南北대화를 對南공작적 차원에서 이용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對話창구의 一元化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가 在野세력의 개별적인 對北접촉을 금지할 때 北韓은 韓國이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곳 國論의 분열을 조장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文씨의 訪北은 그 개인의 황당한 행위에 대한 논의나 그의 범법에 대한 처벌차원의 문제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北韓측에 의해 對南工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利害가 얽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단체는 이런 문제에 黨略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양심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난 2월 日本체류중 北韓을 방문하여 金日成과 면담할 용의가 있다던 金泳三총재가 이번 사태를 깊이 생각한 끝에 여건이 허락하더라도 北韓방문을 유보하겠다고 한 결정은 政治人다운 온당한 처신이라고 본다. 統一문제에 관한 한 國論의 분열로 득을 보는 자가 누구이고 피해를 보는 자가 누구인지는 너무도 명명백백하지 않겠는가.

統一 노력의 理想과 現實

— 共感받지 못할 文목사 환영행사 —

中央日報 社說('89. 3.31.)

全民聯과 全大協등 在野단체들은 訪北중인 文益煥목사가 돌아오면 전국적으로 지지·환영대회와 보고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平民黨을 제외한 모든 政黨및 여러 사회단체들이 文목사의 訪北방식을 비난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판에 在野세력이 그런 행사를계획하는 것은 결국 政局을 또다시 對決국면으로 몰아갈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그와같은 전망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韓國사회 내부에서 벌어질 충돌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金日成에 의해 원격조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의 因果관계를 냉철히 살펴볼 때 그것은 南北관계를 合理的으로 풀어 나가려는 정부당국을 위해서나 統一문제를 현실보다 理想論을 앞세워 조금씩 서두르고 있는 在野세력에 다같이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 在野는 성급하게 환영대회를 추진하기 전에 이 점을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면에서 在野세력은 현실인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것 같다.

첫째, 40여년 동안 굳어져온 南北간의 對決구조는 理想論이나 감상주의로만 풀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조국, 한 민족, 한 핏줄인데 서로 만나 이야기하면 統一은 저절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할뿐 아니라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南과 北에는 엄연히 이념을 달리하는 2개의 權力집단이 자리잡고 있고, 두 世代에 걸쳐 그 속에서 자라온 기득권 세력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統一문제는 우선 이들 사이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한 치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통일논의를 개방하되 對話의 창구는 一元化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둘째, 金日成은 지금 이와같은 權力구조 사이에 對話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빼돌리고 韓國내 체제비판 세력들과 迂廻的으로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韓國內部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金日成이 6·25남침을 자행하게 된 誘因중 하나가 人民軍이 쳐들어오면 南韓 내부에서 지지 붕기가 일어나 赤化통일은 쉽게 이룰 것이라고 본 중대한 誤判이 었음을 알아야 된다. 文목사의 귀환을 환영하는 행위는 金日成에게 또 한번 그런 誤判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民主化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는 守舊 세력에 民主化의 방향을 되돌리려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文목사 환영대회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두 세력사이의 정면대결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 결과는 在野측의 존재이유인 統一과 民主化개혁 노력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세가지 論點들은 모두 理想論보다 현실주의에 휩쓸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南北韓 관계가 서로의 감정과 허점을 탐색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현실 인식이야말로 大事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따져야 할 것들이다.

감상주의 보다는 合理主義, 理想論보다는 現實論이 더 지혜로운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우리는 文목사 환영대회와 같은 행사가 百害無益함을 재삼 강조한다.

文목사 환영대회라니

朝鮮日報 社說('89. 4. 1.)

全民聯과 全大協등 재야단체들이 文益煥목사의 환영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文씨의 訪北자체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이들이지만 막상 이들이 文씨의 환영행사를 베풀기로하고 각계에 초청장을 돌리고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나 이 나라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임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이란 것은 국민여론의 지지기반을 도외시하고는 존립할 수 없으며 국민적 지지는 公正과 大義와 國利民福을 떠나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고 맡긴바도 없는 통일노력의 책임을 혼자서 짊어진 듯이 착각한 文목사와 같은 사람의 행동에 동조의 의견은 가질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영대회를 연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국민의 지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진 조직과 단체라면 스스로 정면대결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땅의 정부와여당은 물론, 야3당중에도 平民黨을 제외한 民主黨과 共和黨이 文목사의 방북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文목사자신이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또 정부는 文목사의 행동이 명백히 實定法위반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법정신에 따라 처벌할 방침임을 거듭 다짐하고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민련등 단체들이 文목사 환영대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法집행 권리행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 이는 정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행위로서 法秩序과괴를 통해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이 이 사회에 엄존한다는 이른바 『극우보수반동』의 논리를 입증해주는 것 밖에 안되는 행동이다.

우리는 理性的이고 합리적인 진보세력도 우리사회의 건강과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非理性的이고 불법적인 집단과 혼동되는 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대학생들이 문목사 환영대회를 계기로 그의 불구속을 주장하면서 정치투쟁판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같은 이유에서 자제하길 바란다.

재야단체들은 흔히 통치자의 행위가 민중의 뜻에 배치될 때는 이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라는 논리를 펴지만, 대다수 국민의 납득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공연히 민중의 뜻을 자신들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통일을 원하지만 결코 독자적이고 노예적인 삶을 원하진 않는다.

金日成 부자만을 이상화하고 떠받드는 체제의 논리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상적 통일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文목사 환영대회를 추진하는 재야인사들이 진정 민족을 생각한다면 냉철한 現實인식아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다.

文목사의 『板門店 귀환』

- 갈 때도 멋대로 올 때도 멋대로인가 -

한국일보 社說('89. 4. 1.)

소위 『문익환쇼크』에 대한 사후처리를 둘러싸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정부당국에게 당장 『선택』을 강요하고있는 것이 문익환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겠다고 나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다.

정부는 지난2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문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상당히 미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히 원칙만을 강조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두 말 할것도 없이 판문점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군이 맡고있다. 어차피 문목사를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그 집행자체는 유엔군이 하게 돼 있다. 그가 판문점 귀환을 강행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집할 경우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빛나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 김일성은 『그거 보라』는 식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를 외치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문씨의 판문점귀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 마련된 판문점이 일방적으로 북한측의 의도대로 뚫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지난해 10월 앤더슨 스웨덴 외상이 서울로 부터 판문점을 거쳐 평양방문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이때 북한의 거절로 스웨덴 외상의 시도는 좌절됐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문씨가 판문점을 거쳐 돌아오겠다고 하면, 저들의 선전목적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는 뜻이 된다.

문씨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는 것 보다는 내버려 두는 쪽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판문점관리 규정을 어긴 채, 양쪽의 사전합의없이 넘어온 뒤 법적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쇼크가 크면 클수록 대책은 보다 높은 위치에서 차분히 앞뒤를 재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맞수를 두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한 수 늦추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제 문씨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울 고비는 지났다. 작가 황석영씨가 평양으로 가면서 남긴 성명서를 포함해서 우리는 『재야』가 생각하는 통일노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재야일부에서 추진한다는 문씨의 귀환 환영 대규모모집회도 자제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제와 명령으로 움직이는 김일성주의 체제보다, 개방적인 자유민주체제가 궁극적으로는 강하다고 믿어왔다. 김일성이 우리의 내부분열을 노린다해도 결국은 착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과 여유를가지고 『문익환쇼크』의 법적·정치적 결말을 생각할 일이다.

그것만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평화』를 거부하고 남북교류를 거절하는 전술이 결국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또 그것만이 『민주화』와 엇갈려 혼선을 빚고있는 우리 자신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정리해 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충격을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마도 그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차피 거쳐야 될 『통과의례』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누구를 환영하겠다는 말인가

서울신문 社說('89. 4. 2.)

全民聯·全大協등 在野 및 학생단체들은 지금 平壤에서 환영받고 있는 文益煥 목사가 돌아오면 크게 지지 환영대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또 곳곳에서 보고대회를 열 작정이고 아울러 그들 스스로가 오는 7일 갖겠다고 한 범민족대회 예비회의를 연기한다고 했다. 환영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기 위한 준비 때문인 듯하다.

우리는 거듭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文목사는 환영받을 수 없다. 그를 지지 환영하는 일은 國法질서를 어기며 平壤에 갔고 그가 『존경하는...』 金日成을 만난 사실보다 더욱 중대한 잘못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고 더욱 더나게 할 것이다. 一波萬波격이다. 대부분의 政黨과 사회단체들이 그의 無思慮한 행위를 나무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在野가 그런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對決국면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全民聯들은 『文목사의 평양방문은 전민족의 통일염원을 대변한 애국적 壯舉』라고 주장한다.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모두가 절실한 통일염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그런 통일방식과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통일이 정부를 우습게 알고 體制를 훼손하며 生存마저 위협받는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그 소중한 통일염원과 접근방식을 文목사가 대변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적도 없다. 平壤에서 발표된 그의 주장은 대개가 허위이며 과장이다. 국민들은 고사하고 그가 몸담은 기독교계에서도 그는 지지 환영되지 않는다. 기독교 계통의 많은 단체들이 『不法的인 平壤行』을 나무랐다. 그것이 마치 韓國기독교 목사 전체의 의사인 양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성명했다. 福音선교에 헌신하는 수많은 教役者와 신도들의 빈축을 사는 행실이라는게 그들의 입장이다.

규모는 작지만 목소리만 큰 일단의 정치·사회단체들이 항용 범하는 잘못이

있다. 그들의 소수의견을 막무가내 관철하려 할때 빌려쓰는 『국민의 지지』와 『역사적 심판』이 그것이다. 그것이 편견이요 獨善임을 그들 자신도 더러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기반은 대개가 虛像이다. 국민의 지지기반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은 그들의 주장과 노선이 理性과 常識에 기초해야 관심을 갖는다. 행동이 공정하고 그 정신이 大義위에 있으며 비폭력적이고 궁극적으로는 國利民福을 지향할 때에 비로소 국민의 여론과 지지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文목사를 환영하고자 하는 在野들은 그들 자신이 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러하다. 우리의 體制는 自由民主主義이고 정부는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통일염원과 의사를 정당하게 수렴하되 對北韓접촉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통제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래야 한다. 文목사는 우리체제와 정부의 正體性을 깡그리 부인하는 집단에 이쪽을 무시하고 뛰어든 것이다. 이는 어떠한 궤변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文씨는 국법을 어기고 民衆을 참칭했다. 그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면 同色일 수밖에 없다. 깊은 사려와 분별력을 갖고 현실을 인식해야 할 줄 안다.

文益煥씨의 記者會見

- 北의 분열책동에 의연히 대처하자 -

東亞日報 社說('89. 4. 3.)

우리는 지난달 25일 文益煥씨가 平壤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그의 거동을 주시하면서 『그래도 설마...』하는 기대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文씨가 2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견을 접하면서 우리는 당혹과 비애를 금할 수 없다. 文씨는 언제부터 金日成의 예찬자가 되었으며 그의 統一전선전략에 대한 신봉자가 되었던가. 그는 진심으로 南韓을 독재와 외세와 군사세력만이 춤추는 지옥으로 단정하고 있는가.

文씨는 金日成이 제의한 『고려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金의 고려연방제는 그가 韓半島의 共產통일을 목적으로한 『合作』전술로 내세운 허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주장해 왔었다. 물론 文씨가 平壤에 도착한 이후 北韓당국이 베풀어준 『환대』에 감복하고 金日成의 노련한 최면술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文씨가 비록 환상적이긴 하나 이른바 在野와 운동권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南韓에서의 位相을 고려할 때 그는 좀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했다.

우리는 또 文씨가 北의 로동당규약과 헌법이 그들의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려연방제는 그것의 실현수단으로 내걸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씨가 金의 이같은 赤化통일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아무리 善意로 살피려 해도 용납이 어려운 사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文씨는 또 『北韓은 전쟁준비를 하지않고 있으며 軍事化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北韓의 韓半島 赤化통일을 위한 군사력강화는 소련 中國을 포함하여 전세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北韓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全人民의 무장화, 全國土의 요새화, 全軍의 간부화, 全軍의 현대화라는 이른바 4대軍事路線은 그들 스스로가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文씨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의 현실파악과 논리에 의하면 北의 誤判을 막기위한 우리의 군사력유지나 對北개방요구, 인도적 교류요구등이 모두 허위, 허수아비놀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文씨의 이같은 인식에 동의할수 없다. 文씨의 지나친 독단에 환멸과 저항을 함께 느껴면서 北韓의 이같은 文씨에 의지하여 펼치고 있는 對南선전공세와 분열책동 등에 가소로움을 금할수 없다.

北韓은 26일부터 그들의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南韓의 左傾세력을 부추기고 大衆을 主體사상으로 의식화시키려는 공세를 폈다.

이른바 『祖統』에서는 全民聯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文씨를 司法처리한다면 南北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온갖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北의 對南공세와 책략이 南北의 화해 및 통일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는 또 北韓이 노리는 분열현상이나 統一 저해현상이 『文씨쇼크』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대처가 있기를 촉구한다.

文씨의 『聯北』 노선

- 北의 장난, 우리의 對應 -

朝鮮日報 社說('89. 4. 4.)

文益煥씨와 北韓 사람들이 벌인 『쇼』와 이른바 共同聲明이란 것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그들의 놀이일 뿐, 우리 大韓民國과 국민 일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動作과 무슨 말을 했건, 그것은 우리에게나 南北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생각 같아서는 文씨의 平壤소동을 한 개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도 여겨지나, 어쨌든 일이 이쯤 벌어졌으니 그냥 지나칠 수 만도 없게 되었다.

文씨는 한 마디로 北에 가서 팀스피리트反對-정치 군사회담 추진 등, 北이 좋아할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해주었고, 그대신 우리가 좋아할 말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우리는 北이 『남조선 혁명』을 고취하는한 韓-美 안보협력은 최소한의 방어要件이라고 생각하는데, 文씨는 北이 전쟁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팀스피리트를 비난했다.

우리는 聯邦制라는 것이 南-北의 『혁명세력』에게는 유리하고 南의 자유주의-자본주의 지지派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경계하는데, 文씨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리고 文씨는 이토록 南쪽의 國家 유지세력에게는 사사건건 등을 돌리면서도 北의 人權문제나 民主化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입도 병긋하지 않았다. 이 모든 言動들은 앞으로 法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길게 논란할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프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北의 저의와 本心을 확인한다. 北은 예나 지금이나 統一을 『北의 공산권력과 南의 民衆혁명 역량의 제휴』로서

추구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北의 사회주의 體制派와 南의 反體制派의 연결과 제휴를 『남조선 해방』전략의 주축으로 삼고서, 南쪽의 體制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北이 文씨등 南韓의 일부 반체제 단체들과 개인들을 자꾸만 끌어들이려는 것은 바로 그런 聯北-聯共 합작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야의 정당대표들도 오라고 한 것은 한 개 부수적인 장난질에 불과하다. 그러니 北의 뻔한 속셈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쪽의 장단에 놀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김일성의 金色 우상에 참배를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점만을 분명히 재확인하면 될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北의 체계모니下의 통일에 이르기 십상인 그 어떤 전략에도 절대로 놀아나선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 될 뿐이다. 이런 요청에서 우리는 文씨의 聯北 해프닝에 과도하게 놀라고 들끓을 필요도 없으며, 차분히 內實을 다지면서 자유주의-자본주의 체제의 지탱능력을 의연하게 지속시키면 그만이다.

문목사 방북 놓고 흑백논리 강요 말라

— ‘보·혁 대결’조장보다 균형있는 논의를 —

한겨레신문 사설('89. 4. 4.)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에 대한 일반적 평가, 특히 ‘제도권’의 ‘평가’는 그가 평양에서 무엇을 했으며 북한당국자들과 무엇을 논의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기도 전에 성급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문 목사의 평양행이 ‘통일’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다. 정주영씨의 북한방문 이후 국민의 통일염원이 더 뜨거워졌는데도 정부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면서 강력히 제동을 걸어, 남북관계에 이미 찬바람을 일으켰으면서도 『문 목사가 일을 망쳐 놓았다』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문 목사의 평양행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문 목사의 북한방문이라는 일회적 행동은 그 자체로 통일을 망쳐놓지도, 눈앞에 당겨놓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조그만 시작일 뿐이다. 그 방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한겨레신문>이 문 목사의 북한행을 ‘우리 민족사의 일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통일의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그 일의 의미가 이러했기 때문이다.

둘째, 문 목사의 북한방문을 ‘돌출행위’로 보는 생각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그는 특히 정치권에 의해 ‘지각없는 인사’로 매도 당했다. 그러나 문 목사의 북한방문을 ‘돌출행위’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문 목사는 이미 지난 연초에 노태우 대통령 등과 함께 북한당국의 초청을 받고 공개적으로 수락했다. 그의 ‘수락’에 대해 정부당국은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7’선언 이후 그의 ‘수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련의 ‘해빙’ 분위기가 있었다. 따라서 그의 북한방문은 이런 ‘해빙’의 연장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지 결코 ‘돌출’한 것은 아니다.

세째, 문 목사의 북한방문에 대한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의견이 그들의 정치적·사상적 성향을 말해주는다는 단정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적 성향은 어느 단일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의 축적을 통해 윤곽이 그려질 수 있다. 더욱이 문 목사의 북한방문이 갖는 복잡성은 이 시간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사용하여 어느 집단이나 개인에게 ‘성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흑백논리인가를 일깨워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부와 여당이 『왜 태도를 밝히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이에 따라 제도권 정당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보기에 딱한 광경이다. 심지어 문 목사가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방식’을 ‘비판’하면 그의 북한행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또는 문 목사의 ‘동기의 순수성’을 ‘지적’하면 그의 북한행 전체를 ‘찬양’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려는 사고의 경직성이야 말로 균형을 잃은 것이다.

네째, 국민 사이의 ‘이견’을 ‘국론분열’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흑백논리이다. 이것은 정부의 ‘창구일원화’론과 맥이 닿아 있다. 교과서에는 국민 사이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다. 국민 사이의 ‘이견’이 처음부터 매도되는 풍토에는 이견의 조정과 통합이라는 민주주의적 과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 목사의 북한방문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몇가지 잘못된 전제는 정부·여당이 지난 연초부터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는 ‘보수·혁신 대결’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이른바 ‘보·혁신대결’론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여유가 없지만 정부가 굳이 이것을 들고 나오는 저의만은 지적하려고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도권을 ‘보수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이루어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대연합이 대항하려는 세력은 재야·노동·학생운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부가 어차피 치러야 할 노동·학생운동과의 ‘투쟁’에 야당을 끌어들이려 앞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되면 야당은 정부가 급조한 ‘보·혁신대결’이라는 ‘허구’에 의해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었던 세력을 상대로 정부의 ‘대리전쟁’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문 목사의 북한방문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가 돌아와 평양에서 한 일을 밝힌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올바른 평가의 장애가 되고 있는 ‘잘못된 전제’ 들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모든 것을 출발점에서부터 새로 따져보는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文益煥씨의 誤判

한국일보 社說('89. 4. 4.)

정부당국과 아무런 사전협의·허가없이 恣意로 북한을 방문하여 국민을 놀라게 했던 文益煥목사는 2일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와 방북을 결산해 발표한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국민에게 또 한 차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文목사는 결과적으로 『赤化』를 감춘 북한의 통일방안과 책략에 동조하고 또 들러리역을 한 셈이 됐다.

우리는 당초 入北에서부터 각종 언동도 그렇지만 특히 성명과 회견내용이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통일노력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文씨는 응분의 책임을 저야하며 당국은 법에의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文씨가 평화통일위와 발표한 9개항 성명은 북한의 종래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팀스피리트훈련반대, 남북교차승인·교차접촉반대, 민간각계와의 대화추진등은 모두 북의주장이요 뜻이 아닌가. 더구나 연방제방식에의한 통일이 우리민족이 선택해야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라고 의견을 같이한 데는 어처구니가 없다. 『고려』등 아무런 명칭을 안붙였기 때문에 저들의 『고려연방제안』과 다르다고 해석한다면 어림없는 소리다. 북한은 지난80년 10월10일 고려연방제안이야말로 최고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한 치도 후퇴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 어떤 연방제를 지칭했는가는 두 말 할 나위도없다. 『고려』란 말을 뺀 것은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의 경계와 반대를 호도하기위한 僞裝인 것이다. 3단계로 추진하는 그들의 고려연방제가 걸으로는 양측제도와 체제를 인정한 공존방식인것 같지만 전제조건인 첫단계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이다. 즉 남한의 현정권퇴진과 聯共정권수립, 반공법과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이 先決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북한內政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한마디로 남한을 무장해제시켜 聯共정권수립—공산통일하겠다는 것이다.

文씨자신은 특히 이번 방북중의 언동이 자신이 평소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이른바 민주화와 민중주체통일論과도 배치·모순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그는 남북의 민중이 교류·이해하는 기초위에서 이룩하는, 민중이 주체되는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그의 불법적인 入北을 백번 이해한다해도 滯北중 단 한사람의 기층민중이라도 만나 가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며 통일을 얘기한적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가 만난것은 『존경하는』 金日成주석을 비롯, 노동당과 정무원의 핵심간부들뿐아닌가. 결국 그들과 감격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이해를 같이한 것이다. 도대체 40년이상 金日成 1人독재로 다져온 철권체제로 단한마디의 비판과 반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거론하기는 커녕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까지 한 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文문사의 통일논의 상대는 마땅히 북한주민이어야하고 성명을 내도 민중의 대표나 민중의 이름으로 뱉어야했다. 그가 서명하고 성명을 낸 조국평화통일위는 되풀이 말하거니와 민간기구로 위장한 노동당의 對南선전기구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북한이 文문사의 방북과 성명을 장래 對南교란 평화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저지, 극소화하기 위해 文문사가 귀국하는 대로 방북의 허구성과 잘못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그와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통일논의에 혼선을 갖지 않도록 시대적 흐름과 내외정세에 걸 맞는 통일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文목사를 證言臺에

— 그의 『平壤행각』 엄정하게 규명돼야 —

京鄉新聞 社說('89. 4. 4.)

정부당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자의로 入北한 文목사의 북한내 행각은 여러모로 당혹과 충격을 금할수 없게 한다.

文목사가 평양을 떠나면서 가졌다는 기자회견과 그 곳 『祖統』과의 공동성명을 보고 우리가 더욱 경악을 금치못하는 것은 그가 金日成의 이른바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한 사실이다. 성명내용만을 보면 文목사의 『연방제방식』이 金日成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文목사도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방제안은 北韓의 고려연방제와 같지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文씨와 金日成의 1차면담을 상기해보면 文목사의 연방제안은 결국 북한의 그것과 大同小異하다는 것을 단 번에 알수가 있다. 文목사는 분명 김일성과의 1차면담에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실현』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代表性도 갖고있지 않은 文목사가 자신의 개인적 통일방안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서명했다는것 부터가 우스운 일이다. 그것이 무슨 효력을 가질수 있는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文목사와같은 통일시각이 국내의 통일논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가 없는것이다.

북한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란 그들이 내건 선결조건에서 보듯이 『우리정부의 퇴진과 聯共정권으로의 대체』 『주한미군철수』등 북한에 무조건 굴복하라는 것 입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우리의 主權과 正統性を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뒤엎으려는 『남조선혁명전략』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런데도 文목사가 북한의 그같은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했다는 것은 자유민

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 모두의 건전한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文목사는 특히 그의 이번 북한방문이 『북의 인민과 남쪽 민중의 통일열망 이거둔 성과』라고 自讚함으로써 北의 개별접촉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金日成의 『정치협상회의』제의에서 나타난대로 이같은 개별접촉기도는 우리정부와 국민사이를 이간·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성하겠다는 계략이 깔려있음은 천하 공지의 사실이다.

文목사의 實定法위반 문제는 그것대로 司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文목사 사건의 파악과 후유증을 극소화 하기위한 努力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國論분열과 국력소모를 더이상 바라지않고 있는 국민대다수의 여망과도 일치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文목사 문제를 의연하고 냉철하게 수습하는 국민적 지혜의 창출이 아쉬운 때다.

文목사 귀국을 환영하겠다는 在野일가의 분별없는 움직임도 그런 점에서 자제해야 할 줄 안다. 이 시점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文목사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평양에갔으며 그가 북한에서 보고 느끼며 얻고자했던 것은 또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규명하는일이 아닐까. 이런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나 검증도 없이 무턱대고 文목사귀환을 환영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을 금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文목사의 이번 돌연한 방북을 철저히 따지고 그가 북한에서 말한것과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국민이 직접 訊問할수 있도록 그를 증언대에 세우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봄직하다. 그래야만 국민의 궁금증을 풀수 있고 文목사쇼크를 理性的으로 극복해가는 고도의 정치역량과 民主市民의식도 고양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나친 흥분이나 단세포적인 반응 모두가 北이 설치한 덫에 걸려드는 어리석은 대응임을 알고 현명하게 『文쇼크』를 수습해야 하겠다.

批判돼야 할 文益煥씨 북한行脚

國民日報 社說('89. 4. 4.)

文益煥씨가 10일간의 北韓 密行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北京에 체재중이다. 그의 귀국에는 어차피 적잖은 소란이 뒤따르게 되었다.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위반 혐의로 구속한다는 정부방침과, 전민련등 재야단체의 환영사준비라는 전혀 상반된 움직임에서 앞으로 일어날 파문이 一過性으로 잠재 위질 성질이 아님도 짐작할 수 있다.

통일논의의 개방이란 원칙의 당위성 만을 따진다면 文씨가 北韓에서 벌인 행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든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건 그것은 선택의 자유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의 不一致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건 합일점이 찾아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상식이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통일문제 접근에 도움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文씨가 평양에 잠입, 『위대한 金日成』을 만났을때만 해도 그 충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언행의 자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北韓방문을 결산하는 記者회견과 許鎔과의 공동성명에서 드러난 發想의 윤곽을 접하면서 그가 지나친 편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은 온 국민의 경악과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재확인시켰다.

그는 金日成이 줄곧 주창해온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하며 엉뚱하게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체류기간 동안 전후 7시간의 對面을 허용해 준 계산된 金日成의 『은전』에 감복한 나머지 『이번 방문이 나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北韓에 대한 견해를 바로 잡도록 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정부가 내건 단계적 통일반안의 일부분인 남북교차승인은 명백히 반대하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은 南北대화 와 양립될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을 지

지하고 나섰다.

정부의 사전승인 없는 북한 잠입자체가 한국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거슬렀음은 물론 北韓의 변함없는 對南적화통일방안을 맹목적으로 동조함으로써 그는 통일의 길을 결코 앞당긴 것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北의 선전전략에 장단을 맞춘 결과를 빚었다. 文씨는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文씨가 지지를 성명한 연방제통일방식이 어떤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 80년 10월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이후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민주연방제』로 보는것이 옳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文씨는 고려연방제안의 내용에 포함된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과 반공통치기구의 폐지, 현정권의 퇴진과 容共정권의 수립, 주한미군 철수등 우리의 主權과 제도 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존립을 뒤흔들려는 북의 음모를 수용했음을 뜻한다.

저들의 안내를 받아 예배를 봤다는 교회와 성당이 종교의 자유를 위장하기 위한 선전용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명색 목사로서 그것만으로 신앙의 자유를 확인했다고 했으니 북을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과 오해를 유도하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정적 통로를 경유하여 입수된 文씨의 北韓행적 보도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한다고 믿고 싶지않다. 또 그렇기를 바라고 싶은 심정이다. 때문에 文씨는 귀국후 이를 사직당국에 규명함으로써 그가 범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 과오의 일부나마 사면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정부는 文씨의 訪北사건을 빌미삼아 통일논의를 경색시키고, 左傾세력의 척결을 빙자한 民主세력의 탄압을 기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적인 統一논의는 가로막을수 없으며 左傾容共주장과 民主化의 목소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聯邦制』란 이름의 함정

中央日報 社說('89. 4. 4.)

하찮은 사건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도 있었던 文益煥목사의 訪北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는 平壤을 방문하고 金日成에게 『존경』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全民聯 고문자격으로 北韓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許談과 함께 공동성명에 서명까지 한 것이다.

이 성명은 지금까지 南北간의 統一방안의 主爭點으로 남아있는 『聯邦制 방식』을 『필연적이고 합리적 통일방도』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 성명은 마무리 부분에서 文목사의 訪北이 南北대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쌍방의 접촉과 교류에 길을 터놓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文목사의 訪北과 연방제 합의가 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北韓이 제시해 온 『高麗聯邦制』통일안은 그 先決조건 속에서 韓國이 지켜온 사회체제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共產主義 활동을 합법화하고 現政府를 퇴진시키며 聯共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까지 들어있다.

文목사는 자신이 주장해 온 연방제는 北韓이 내세워 온 『高麗연방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北韓 공산당의 정치국원이기도한 許談이 서명한 성명 속의 연방제가 어떻게 그들이 장기간 집요하게 주장해 온 방식과 다를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文목사의 訪北과 공동선언문 채택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쌍방 政府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할 統一方案을 私인이 경솔하게 一方的으로 北측 方案에 동조해 버린 맹랑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文목사는 全民聯의 고문일 뿐 韓國 국민을 대표하는 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동성명이 하등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餘波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첫째, 그의 행동은 韓國내 統一논의를 위축시키고 이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열을 兩極化할 위험이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北方외교를 포함한 南北관계 개선에 저항하는 세력을 자극해서 모처럼 전개되고 있는 이 방향의 노력이 反轉되어 冷戰시대적 분위기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과는 文목사 스스로가 지향해 왔다고 자처하는 統一노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둘째, 北韓으로 하여금 우리 政府와 체제를 무시하고 對南혁명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고무할 가능성이 文목사의 訪北에 따른 상황으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

우리는 文목사의 訪北으로 빚어진 이와같은 統一과업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文목사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政府가 추진해 온 對北회유책을 성급하게 反轉시키지 말고 이 정책의 內實을 더욱 굳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金日成의 조그마한 회롱에 우리 사회의 자세와 政府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줄 때 北韓도 결국 우리 政府의 권능에 순응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잉반응 보다 확신에 찬 의연함과 냉철한 長期的 안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文益煥씨의 責任

서울신문 社說('89. 4. 5.)

몰래 平壤에 잠입했던 文益煥씨 사건과 관련, 平壤당국은 드디어 제2단계 對南 공세를 시작했다. 韓國정부가 文씨를 사법처리할 경우 대화를 포함한 南北韓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文씨도 어제 北京에서 그와 똑같은 말을 했다.

北韓과 文씨가 보조를 맞춰 文씨의 密入北을 최대로 이용, 남쪽의 國論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획책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의 南北韓관계 硬化 책임을 이쪽에 전가하려는 속셈이다.

北韓집단으로서의 제발로 찾아와 저들의 혁명전략적, 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한 文씨가 끔찍히도 고마웠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환영과 환대를 아끼지 않았다. 文씨도 北京에서 『통일관심을 높인데 기여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 목소리와 태도는 법을 어기고 정부를 부인한 言行에 대한 가책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민중을 대변하는듯 我慢으로 가득했다.

北韓집단이나 文씨가 노렸다고 하는 『통일관심의 高潮』는 그러나 공염불이었다. 北韓의 책동이나 文씨의 행위는 그나마 대화와 교류를 모색하고 있던 南北韓관계의 앞날에 먹칠을 하고 만 결과가 되었다.

文씨는 국가權力の 통치와 정부의 권위를 예사로 무시하고 密入北한 개인에 불과하다. 그런 그가 北韓의 소위 祖統의 許談과 공동성명을 내어 지지한 北의 통일정책은 우리의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대부분이 大韓民國의 정통성과 實在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文씨 자신은 변명할지 모르나 北韓의 聯邦制 방식이란 高麗聯邦制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北韓은 10여년 동안 일관해서 이를 주장하며 先決조건으로 韓國에서의 反共관계법폐지, 容共정당단체허용, 駐韓美軍철수 등을 요구한다.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통일을 하자는 마당에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나 南韓체제의 해체를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양에서의 언동·기자회견·공동성명·北京회견 등으로 미루어 文씨가 北韓 지지자이고 金日成주의자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文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北韓의 對南공작과 선전 선동책동에 들러리를 自請했고 그들의 선전원으로 스스로 전락했다. 가족과 함께 몸담아 살아온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무시한데 그치지 않았다. 통일염원이라는 명분아래 민중을 자칭하여 공산주의 北韓의 對南赤化노선을 1백% 지지했다.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대부분의 국민이 그의 행위를 北韓과 共存코자 하는 7·7선언과 우리 통일정책을 부인했다고 나무랐다. 그 때문에 그가 祖統과 내놓은 공동성명의 내용이 一考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했다. 사실이 그러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는다.

文씨는 평양을 떠나기 직전 자신을 환대해 준 北韓인민을 背信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背信』않기 위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 韓國內에서 평소 그의 주장에 동조하던 일부 在野세력과 左傾급진학생들을 부추겨 北의 對南通일전략을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혼란을 원치 않을 뿐더러 모든 國論분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씨는 問責되지 않고 斷罪되어야 하지만 더 이상의 사건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르바 『文쇼크』는 最小化돼야 할 것이며 새로운 統一국력을 모으는 일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統一문제에 毅然한 자세를

世界日報 社說('89. 4. 6.)

文益煥목사가 金日成의 환대속에서 北측의 統一노선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등 온갖 失態를 보인데 대해 그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다. 北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文씨는 聯邦制의 내용이나 交叉승인문제에 관해서는 金日成과 견해를 달리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가 許談과 더불어 발표한 공동성명 자체를 부인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北韓은 이 공동성명으로 文씨의 入北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려고 들었다. 이 공동성명은 그 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一顧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곳 在野 대표들과의 접촉을 존중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이를 두고 두고 이용할 것이 틀림없다.

金日成이 기존의 당국자간 대화에는 별 관심이 없고 民間차원의 접촉에만 열을 올리는 의도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들이 접촉의 상대로 지목하고 있는 全民聯이나 全大協 등은 反體制 내지는 反美的인 성향이 짙은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더불어 反韓 統一전선을 형성하기가 용이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統一전선을 통해 당장에 달성하려는 목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서울의 現政府를 타도하고 美軍철수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거나 하면 그들의 뜻대로 統一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文-許공동성명에 일관해 있는 전략은 南韓체제를 완전히 無力化시키고 그들의 對韓공작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文씨는 이를 이의없이 수용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統一전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그들은 이곳 反政府 세력과의 접촉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이다.

制度圈정치세력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文씨의 언동과 그를 이용하려는 北韓의 의도에 대해 명백하고 斷乎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統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金日成을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

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않은 것은 명백하게 國法을 어긴 행위였고, 누구로부터 代表權을 부여받았다고 北측과 共同성명에 서명했느냐고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 그런데 제1야당인 平民黨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스럽다. 平民黨은 4일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열고 文씨의 행동이 개인활동에 불과하다는 정도의 모호한 결의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平民黨은 보다 책임있는 태도표명이 있어야 했다.

이번 文씨파동은 統一문제와 南北대화에 임하는 우리 자세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統一문제의 활성화가 統一정책의 亂脈으로 그릇 확대되었고 마침내는 左傾세력의 발호로 우리 사회에 사상적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행착오는 그것이 開放정책 그 자체의 잘못에 기인한다기보다 그 정책의 운영이 방만했던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기존의 統一정책을 毅然한 자세로 지키고 추진해야 한다. 政府를 따돌린 불법적 南北접촉이나 左傾세력의 국론分裂책동을 法으로 엄중히 다스리면서 우리 統一역량을 결집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현단계에서 취해야 할 자세일 것이다.

文목사 拘束이후

- 政治的 裁斷 아닌 司法적 처리를 -

京郷新聞 社説('89. 4. 14.)

文益煥목사의 『북한방문극』의 終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민족적 불행을 보았다. 통일에의 통로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환영대신 『拘束』이라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이다. 정상적으로라면 그는 당연히 개선장군처럼 錦衣還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訪北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처럼 그의 귀국에도 비정상적인 待遇가 따른 것이다.

만일 그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平壤에 다녀왔다면 상황은 사뭇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入北방법은 어떠한가.

북한당국은 사전에 알고 우리정보는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의 개인적 거사는 결국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한다』고 술회했다고 한다. 『반성은 한다』는 그의 말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의 入北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文목사는 일본서 귀국하기 전날 한 내국기자와의 회견서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감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나는 惡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는 대목이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멋대로 入北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惡法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實定法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면 사법적 斷罪를 내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成文法이다.

그의 실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모든 통일은 善』이란 논리로 북한식 통일정책에 동조한 점, 철저히 北쪽 편에 서서 남쪽정부와 지도층을 비방한 점 등이 국민을 啞然케 했고 그의 양식을 의심케 했다. 특히 북에서 있는 그의 정부비방 등 언동들은 국민감정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었다.

우리는 文목사가 구속당한 마당에 그의 죄목이 과연 국가보안법 6조2항(지령 수수에 의한탈출)과 7조1항(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평하고 싶지 않다. 보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서는 法의 지나친 확대적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당연한 治罪라는 반응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文목사의 訪北을 역사적인 舉事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재야세력은 左傾·용공의 울가미를 씌워 통일을 갈망하는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메카시즘적 手法이라며 완강히 저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視角이 바르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것인지는 法의 저울과 여론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文목사 사건은 어디까지나 엄격한 司法的 準據에 따라 공정무사하게 처리되어야지 하나라도 정치적 裁斷으로 죄의 輕重이 좌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그만큼 文목사의 入北사건과 그 뒤처리 문제에는 지금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도 多樣多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면 『政權수호』를 위한 5共식 수사라는 반발과 오해를 재야 급진세력들로부터 사기 십상이다. 정부측에 또 한 가지 충고해 두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거울로 삼아 어정쩡한 통일정책과 통일논의를 하루속히 정비해 확실한 區劃을 그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과 혼선을 빚지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文목사 사건만 해도 그가 정부를 무시하고 恣意的으로 入北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7·7선언, 그에따른 鄭周永씨의 방북 先例등 충분히 혼선을 빚을만한 환경을 정부자신이 조성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리라는 여론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튼 國論분열을 더이상 조장하지 않는 방향에서 文목사 사건은 슬기로운 해결을 보아야 한다는게 우리의 견해이다.

文씨 衝擊이후의 課題

— 統一논의 正常化로 충격수습을 —

東亞日報 社說('89. 4. 15.)

우리는 이제 文益煥쇼크의 파장을 하루 속히 수습하여 平常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달 26일 文씨의 平壤도착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로부터 시작된 文益煥쇼크는 13일 文씨가 귀국함으로써 그 第一波는 일단 매듭이 지어진 셈이다.

물론 文씨의 귀국을 계기로 제기된 지지환영의 목소리와 반대 규탄의 움직임들이 또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文씨가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에 그 조사결과를 우리는 지켜보고자 한다.

公權力과 在野세력의 물리적 마찰이나 일부 과격학생들과 상이군경회의 지지 반대 대결로 상징되어지는 第二波는 北韓의 對南전략에 이용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文씨 入北의 배경과 동기를 따져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음미해야할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政治圈은 統一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국회는 文씨 入北쇼크등으로 無力化된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 民主化와 統一이 우선적 가치로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 統一노력은 왜 잠들고 있는가.

지난해 여름 구성된 統一특위는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統一논의를 수렴 여과하여 조정 통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싶다. 국회관계자들은 院內4黨의 주장을 모으는 등으로 『잠은 자지않았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격동 격변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與野총무들은 곧 회담을 갖고 國會의 정상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정치권의 기
능회복을 위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文씨 入北과 관련된 국론의 흐름을 수렴 조정하기 위해 統一특위와 外務委의 조
속한 활동을 촉구한다.

정부측에서도 統一방안 마련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국회도
공청회등의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작업을 해야 한다. 政府案에 의견을 추가
시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독자적인 『국민의 소리』창출에 기대하는 바이다.

文씨 入北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文씨 처신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를 국회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능동적인 대처가 없다면 국회는 政治부재 政治力상실이라는 비판을 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같은 상태의 지속은 國會無用論으로 확대될 것이며 政治圈
전체에 대한 지탄으로 증폭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
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 국회와 정치권의 정상회복을 바란다.

文목사 訪北의 충격과 비극성

金 應 한국의국어대교수

東亞日報 時論('89. 3.28.)

民族主義的 감상

文益煥목사의 돌연한 평양방문은 몇 가지 의미에서 悲劇的이다. 우선 그가 평양도착성명에서 감격어린 어조로 41년전 38선을 넘은 金九先生과 같은 느낌으로 평양땅을 밟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 부터가 그의 訪北이 안고있는 비극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문제된 인물의 성격이나 정치적 비중이 전혀 다르긴 하나 文목사는 그 訪北의 상황적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 표현된 동기에서 일견 金九선생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것처럼 보인다. 1948년 봄 金九선생이 38선을 넘기로 결심한 당시는 左右이념투쟁과 우익 정치세력 내부의 골깊은 분열로 격심한 정치적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 不安을 틈타 北韓이 제의한 것이 南北韓政黨社會國體의 連席會議였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정국이 左右대립과 제도권세력내부의 4黨분열도 몹시 어지러워지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金日成에 의하여 제의된 南北政治協商회의와 그 배경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방적인 지명초청형식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金九선생이 『우리의 통일과 독립과 활로를 찾기 위하여 피와 피를 같이한 同族끼리 마주 앉아 최후의 결정을 보려고……』 北行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이나, 『金日成주석과 더불어 서로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胸襟을 열어 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평양방문을 결심한 것으로 밝힌 文목사의 말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짙은 민족주의적 감상의 표현이다.

政治불안의 새 불씨

이 두 사건간의 유사성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41년의 긴 세

월이 흐르는 사이에 세계의 변화가 가히 혁명적이었고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폐쇄와 교조의 舊穀을 깨고 환골탈태에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든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한국을 향한 몸짓과 의도에서는 털끝만큼의 변화도 엿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놀랍고 비극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桑田碧海의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한 北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제스처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의 분포가 마흔 한 해 전의 그것과 흡사한 상태로 再現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統一문제에 대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성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날 동족상잔과 폭력테러밖에 생산한 것이 없는 金日成집단의 엄살스런 統一至上의 논리와 修辭가 버젓이 반복되고 또 그것이 우리안의 일각에서 열광적으로 復唱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일각에서 생경한 前時代的 反共修辭가 진부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과 함께, 분명히 復古調의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文목사의 감상어린 평양도착 성명이나 그를 맞아들이는 평양측의 틀에 박힌 환영사가 우리에게 진지한 민족주의적 감동으로보다는 復古調 신과 臺詞의 권태로움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슬픈 일이다.

또 한가지 文목사의 충격적 평양방문이 함축하고 있는 비극성은 우리 국내정치에 얽려스러운 앞날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文목사의 訪北 쇼크가 가뜩이나 얽려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左右대립과 정치불안에 새로운 불씨를 댕기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文목사가 그의 평양방문이 몰고올 그러한 위험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우매하고 만약 그가 그러한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다면 그는 확실히 위험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 우리사회안의 極左와 極右의 위험한 대두를 염려하고 경계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두 가지 극단적 세력과 경향이 극소화될 때 우리 사회가 안정된 균형위에서 民主化 과업을 성공으로 이끌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文목사의 訪北사건 같은 충격이 겹칠 경우, 우리중의 어느 누구도 이 兩極의 理念편향의引力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곤혹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될 경우, 민주화된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국내적 과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의 과업은 절망의 해역에서 또다시 좌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 북한 지도자들의 朝鮮革命論의 발상이 한국자유주의체제의 내부붕괴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고무되고 있다는 傳聞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다. 韓國內政의 불안과 남북긴장의 악순환이 아직도 이 한반도를 美『커밍스』교수의 표현대로 『脫冷戰 海域의 冷戰孤島』로 남아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악순환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무조건적 통일지상론은 분명히 무분별한 獨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混線정리 轉機돼야

그러나 끝으로 한 가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절망할 단계에 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文목사 訪北의 충격을 발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혜와 自制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허용될수 있다면 그 사건은 도리어 최근 개방된 통일논의에서 일고있는 심각한 분열과 혼선의 기운을 발전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로 승화될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태를 이에까지 몰고온 與野政治人들의 무원칙 무정견한 시세영합과 파당적 양협성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비장한 각오로 그것을 超克하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국민을 구원해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연의 사명을 더 늦기전에 각성하지 않으면 안될 마지막 시간이다.

主權이 흔들리고 있다

金尙哲 변호사

中央日報 論壇('89. 3.28.)

기어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在野투쟁세력의 代父라 불리던 文益煥씨가 『존경하는 金日成주석과 부동켜 안고』 민족의 미래문제를 의논해 보겠다고 平壤으로 갔다. 가서 韓國을 가리켜 『독재세력과 군사세력, 그리고 外勢에 억압당하는 南쪽』이라 칭하였고, 張俊河씨가 말했다는 『모든 統一은 善』이라고 노래했다.

이렇게해서 大韓民國은 나라도 아닌 것처럼 이른바 美帝와 군사파쇼집단의 식민지적 억압지배지역으로 비웃음을 당한셈이다. 統一은 『목숨보다 소중』하며 自由民主主義체제는 언제 벗어버려도 좋을 깎뎀기처럼 취급당했다.

실은 놀랄일도 아니다. 이미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가 이상스런 氣流에 휩싸여 왔던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드러내놓고 말하려면, 때로 『反統一』세력이요, 『反共이데올로기』의 노예며, 『極左反動』이라는 고약한 비난을 당할 각오도 가져야 했다.

며칠전 텔레비전 深夜討論에 나가서 학생운동권이 급진좌경세력, 심지어는 金日成主體思想派에 의해 끌려다니는 경향을 경고하면서 自由民主體制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였더니, 한 『民主』教授가 대놓고 하는 말이 『마치 公安檢事같다』는 것이었다. 5공화국 치하에서 시국 사건들의 변호를 맡아 고문과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개탄하면서 이러다가는 自由民主體制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더니 公安당국으로부터 『反體制』변호사취급을 당했는데, 허허이제는 『民主』字 내세우고 『民族』字 독점하려드는 세력이 무슨 新種 公安세력처럼 행세하려드는 형국이 되었다.

편을 가르고 남 매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統一세력과 反統一 세력으로 나

누기 시작하니 識字깨나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인물로 낙인찍히지나 않을까 눈치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北方문제 좋아하는 與黨 국회의원이 어떤 세미나에서 『反共이데올로기 脫皮』를 외치고 민주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면서 통일방안이 마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어중간한 혼합적 중간형태에 있는양 얼버무리는 형상마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反共이라는 소극개념이 우리의 國是는 아니었거니와 이데올로기는 더욱 아니다. 우리가 反共하는것, 즉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것은 北韓공산집단 治下에서 겪었던 지긋지긋한 전체주의적 억압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요. 세계 공산국가들이 보이는 황폐와 비능률을 통한 새삼스런 확인이다. 우리가 믿는 신념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적 기본질서에 있고 民主化란 비로 이를 지키고 확충해 나가는 것이요, 이를 훼손하고 희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反民主임을 안다.

그러므로 統一이 안되는한 民主化는 안된다는가, 統一없는 民主化는 없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統一은 우리의 계속되는 염원이되 共產化 통일이나 金日成주체사상하의 전체주의통일은 오로지 민족전체에 患難만을 가져올 뿐이므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면 희생과 부담마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비록 대한민국이 南韓에만 수립되었을 뿐이고 그간에 술한 굴절과 정치적 독재,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하여온 이념체제가 인류의 지혜에 합당하므로 근본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는 나라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나라의 國家主權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그간의 억압적 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하여 민간의 통일 논의를 불법화하고 통일문제를 독점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는 통일논의와 민간 교류를 허용하되 다만 對北窓口는 정부로 단일화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개념상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통일논의의 문제는 表現의 自由權의 영역으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했고 반면 對北交流와 統一政策의 추진은 무슨 교섭 『窓口』 같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國家主權, 즉 領民高權과 領土高權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北韓헌법의 사회주의 내지 『集團主義』 국가체제는 하나의 실재요, 이른바 『南

朝鮮解放』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準敵國적 성격을 가지는 정치집단이다. 南北이 어떻게 화해하여 통일을 이루어낼 것인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그러므로 민간차원의 對北交流가 순전히 비정치적 의미를 가질 때는 국가주권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겠으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할 때는 당연히 국가주권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주권의 행사주체로서 국민의 모든 對北접촉에 대하여 사전 사후에 걸쳐 그 성격을 심사하고 필요한 통제를 가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법률로 기준을 정하고 혹은 생략하거나 혹은 간략화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文益煥씨가 정부 모르게 北韓으로 가서 『존경하는 金日成主席』을 만나 남한 4천만 민중을 의식하며 민족의 미래문제를 상론하는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여러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 鄭周永씨의 北韓방문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과 국가보안법이 악법개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鄭周永씨의 訪北에 대하여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어떤 超法規的 행위로 보려는 발상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訪北이 정부의 심사와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이상 결코 국가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北韓으로의 『脱出·潛入』이라는 범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승인하의 모든 민간교류를 그때마다 대통령의 통치권행사로 보아야 하는 논리역지가 생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의 문제다. 이 법률은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여 그간 많은 誤用과 濫用이 있었으므로 改廢됨이 마땅하다. 다만 그 改廢논의에 있어 西獨기본법 제18조가 명시하는 바와같이 『基本權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하는 투쟁의 방편으로 오용할 때에는 基本權이 상실된다』는 헌법원리를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北韓정치집단은 東獨과도 달리 對南赤化전략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민족주의 운동권중에 폭력적 변혁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세력도 엄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제는 오히려 어떻게 기본권의 존중과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 내느냐에 있을 것이다.

통일의 길로 다가갈수록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체제에 대한 신념의 정신과 역사의식을 다져두지 않으면 안된다. 권위주의적 억압이 무너져내리는 가운데 국가주권의 정당한 권위를 세워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

더이상 눈치와 영합으로 『남이 해주겠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혼돈의 시대에 신념과 담대한 용기를 잃어 우리 삶의 터전이 기어이 難破될까 심히 두렵다.

『존경하는 金日成주석』?

洪思重 논설위원

朝鮮日報 칼럼('89. 3.30.)

自由人の 약속

우리는 법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하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의식하기 이전에 느끼는것은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정부의 규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려는 모든 힘을 역겹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인간이 아니다. 어렸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 그안에는 나와 다른 의견과 꿈을 갖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가하면 나보다 뛰어나게 잘난 사람도 있다. 우리는 또 오늘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네 父祖가 남겨 놓은 과거의 유산도 모두 등에 업고 산다. 우리는 또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고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나라의 기본법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으며, 그 밑에 눌러있을 수도 없다. 기본법을 지켜달라고 사전에 허가를 받고난 다음에 기본법의 준수를 요구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법은 단순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실정법이 아니다.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기율을 말한다. 그것은 때로는 良識일 수도 있고 分別일 수도 있다.

『껴안고 함께 울면 모든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평양에 도착한 文목사는 말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감상이겠는가. 정말로 金日成을 제치고 이북의 동포와 이남의 동포끼리 부둥켜 안는다면 모든 원한도, 어떠한 장벽도 단숨에 무너질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굳게 믿고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통일에의 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것이다.

아무리 내생각에는 아름다운 꿈이라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까지 아름답게 여기는 꿈이라야 한다. 우리가 평양에 간 文목사에 대해서 충격을 느끼는 것도 단순히 그가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냐는 것도 아니다. 당초에 金日成이가 盧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초청한다고 했을때 그는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럴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갔다면 文목사의 행동 역시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또, 지난번에 북한에 간 鄭周永씨와의 차이가 있다. 정주영씨의 경우에는 또 기업가의 자격으로 갔다. 따라서 그의 행동의 결과는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걸 똑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

하나 김일성을 제치고 피를 같이하는 남북의 민중끼리 『뜨겁게 부동켜』안을 수 있다고 정말로 文목사는 믿었던 것일까? 정말로 그랬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환상이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념이겠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나친 信念은 思考의 정지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지나친 신념은 때로는 진실의 위험스러운 敵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지나친 신념에 성실성이 가미될 때 惡德이 될수도 있다.

불투명한 지도자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정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文목사는 감히 아무도 겁에 질려 나가지 못했을 때 反獨裁의 앞장에 서고, 네 차례나 獄苦도 치렀다. 어떻게 해서든 통일의 꿈을 이뤄보겠다는 그의 정열의 순수함을 조금치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동기가 아름답다 해서 免責이 되는것은 아니다.

우리를 뵈보다도 놀라게 만든것은 평소에 만나고 싶어했던 『존경하는 김일성 主席』이라는 제1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산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그 탁월한(?) 정치능력을 존경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북한 전체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고 온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온 수단에 경탄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서울 올림픽의 방해를 위해 무고한 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키고도 시치미떨

수 있는 그 잔인함을 존경한다는 뜻인가?

우리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는 것은 야당정치가들의 불투명한 반응이다.

한 야당은 처음에는 『바람직하나 절차미비가 아쉽다』고 말했다가 『충정은 이해하나 아쉽다』고 살짝 후퇴했다. 또 한 야당은 文목사가 돌아온 다음에나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매우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야당은 文목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은 없이 정부만을 공격하고 있다. 모두가 文목사의 월북에 대하여 정면에서 논평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여론을 따르는 것과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정치지도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文목사의 월북이 왜 잘못되었다는가 또는 왜 잘한 일이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들 나름의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가요 정당이다.

議會정치의 否認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쪽에 많은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어느 일관성있고 뚜렷한 『북방정책』이 아니었다. 그저 그때그때 일이 터질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북방대책』들이 있을 뿐이었다. 하나 정부정책이 잘못되어있다고 해서 文목사가 옳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도권안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文목사가 기성정치가들을 제치고 이북에 가기로 했을때 그는 대한민국정부나 여당만을 무시한게 아니었다. 그는 의회정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잇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둔한다면 야권의 정치가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이라고 文목사가 인사말을 했을 때 오늘 남한의 여-야 정치가들이 한결같이 누리고 있는정치, 사회체제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지도자들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않았다. 국민의 안녕을 생각하고 나라의 내일을 생각한다는 정치지도자들로서 이처럼 무책임한 자

세는 없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를 보다 노엽게 만드는 것은 文목사가 아니라 이들이다.

단 한사람의 평양행으로 온 나라가 벌떡 뒤집혀질만큼 약한 우리다. 모두가 소중히 힘을 합쳐 가며 지키고 가꿔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나무다. 아직 뿌리가 단단히 박혀있지 못해 큰 바람 하나에 쓰러지기 쉬운 나무다. 그걸 옮겨 심겠다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마구 뒤흔들어 놓은 文목사다. 그리고 야당 정치가들은 알게 모르게 그를 옆에서 방관하거나 추켜세우고만 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 물에 빠지게 된다. 文목사가 즐겨 외는 마태복음의 한귀절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오늘의 위태로운 상황이다.

金日成은 웃고있다

尹炳益 통일연수원교수

國民日報時事 칼럼('89. 3.30.)

文益煥목사의 北行은 그렇잖아도 혼돈상태에 빠진 南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금 평양에서 金日成옆에서 있다.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분단의 치욕을 씻으려고 남쪽 민중들은 독재세력과 막강한 군사세력, 경제력을 구사하는 외세와 싸워 이제 마침내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운명적 지점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

文목사 訪北 충격적

文목사의 평양도착 성명의 한 대목이다.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될 운명적 지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펙 오래전서부터 한 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과 만나 서로 흥금을 열어 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 없을까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다』 『통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선이라고 절규하면서 독재자의 손에 암살당한 장준하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김일성 주석동지를 만나고자 한다』 과연 『통일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선』이란 말인가.

문익환목사의 이같은 성명을 접하고 실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한국을 독재세력으로 매도하고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협의하여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통일만하면 된다고 하니 우리 민족은 모두 진정한 통일의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 같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통일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거나 한라산 꼭대기에 『인민공화국기』를 꽂을 수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민족통일은 남북한 體制共存, 상호 사회개방, 교류, 협력 그리고 민족공동체형성이란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공동체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 統一환상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체제공존의 기본전제인 한국정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남전략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北韓은 분단고정화정책을 배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對南赤化전략적 발상이다. 북한은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과의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 고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 응해 올 경우는 軍縮실현 등 현실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의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각계각층간의 대화를 『民衆』차원의 대화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상황만 있음으로 우리와 같은 『민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공동체형성에 불가결한 남북한 사회개방 및 교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은 일반통행이어서는 안된다.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들어간 것과 같이 북한의 주민이 서울을 와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상호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거부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만들어 통일하자는 것은 『남조선』공산화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라산에도 人共旗를 꽂자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이 진정 바람직한 통일의 길로 들어서려면 이상과 같은 이른바 북한통일정책의 實體를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속에서 남북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분단 40여년이 지나면서 北韓과 같은 사회주의체제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가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오늘날 신데탕트추세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對中·蘇 경제접근은 아직 政·經분리원칙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교류·협력이 심화 되면 이것이 외교적 접근으

로 발전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한국불인정 정책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보게 되었다.

中·蘇 공산대국의 개혁·개방의 물결은 북한을 예외지역으로 남겨놓지 않을 것이며 합영법의 제정, 합영공업부의 신설등은 그 전조인지 모른다.

北韓은 변치 않았다.

이같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북한의 대남 전략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은 냉정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북한당국은 국제적 긴장완화추세를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 1992년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한 군사력을 10만이하로 감축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이미 내놓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무조건 철군압력이나 반미감정선동은 남북대화의 진전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둘째, 우리의 민주화과정에서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분출과 혼란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남한적화전전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남조선당국도 연방제통일론을 외면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는 1989년 김일성신년사는 북한당국의 의중을 잘 대변하고 있다.

통일政策의 통일을

그러므로 통일논의를 범국민적 차원으로 활성화시켜 통일정책을 수립하되 정부의 대북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文목사의 생각중에 가장 옳은 듯 하면서도 가장 잘못된 것은 통일만 되면 어떤 통일이든 좋이라는 생각이다.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선이 된다. 그 해답은 남북한 사회를 상호 개방하고 내왕을 해보면 자동적으로 나오리라 확신한다. 남북한 및 주변정세의 동향으로 보아 남북문제타결의 시점은 분명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통일을 열망하면 열망할 수록 통일정책에 대한 국론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文목사는 웃고 있는 金日成옆에 홀로 서 있다. 金日成은 자신의 전략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文목사의 『환상』이 통일문제에 대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본다.

『존경하는 主席』과의 포옹

盧癸源 編輯局長待遇

中央日報 칼럼('89. 3.31.)

文益煥목사의 평양방문이 가져온 충격의 파장은 어디까지 확산될 지 가늠 못 할만큼 심각하다. 굳이 구분해서 말한다면 국민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그 어느때보다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국론이 첨예한 대립과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 무슨 사태로 번질지 불안한 감마저 없지 않다.

한편 정부에서는 南北교류에 장애가 된다해서 뜯어고치려던 國家保安法의 완화방침을 재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하던 南北교류 계획도 지연 또는 후퇴시키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文목사가 강조한 『통일염원의 실현』이라는 訪北목적은 당장은 그의 의도와는 크게 빗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의 방북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그곳에서의 言行이 실정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당국이 판가름할 일이다. 다만 국민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평가·반성해보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요 도리라는 생각이다.

우선 그가 어떤 자격으로 北韓에 갔는가가 중요하다. 그는 기독교단의 목사이요 全民聯고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속해있는 교단이나 전민련에서는 그를 자기들의 대표로 선출한 일이 없다. 全民聯은 그의 北行을 사후에 지지하면서도 사전에 이에 관해 협의받은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연인 文益煥뿐 아무런 자격이나 대표성이 없다.

고향이 滿洲 間島이고, 그래서 항상 고향과 그곳에 살고 있을 친지들을 그리워했다는 70대의 노인 - .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어느 失鄉民과 다름 없으리란 짐작은 어렵지 않다.

統一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의 근본열쇠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해도 그런 사람들이 모두 金日成을 만나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통일을 호소한다 해서 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金日成의 변함없는 한 목소리에 중구난방으로 나선다면 결과는 중잡을 수 없는 논리의 혼선이요 역이용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金日成과 文목사의 면담내용을 보도하는 北韓매스컴들이 金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할 뿐 文목사의 발언은 일체 보도치 않고 있는 사실은 아무래도 불길한 조짐인듯 싶다. 1948년 金九선생이 南北협상 실패의 限을 품고 平壤에서 돌아온 뒤 北韓측이 선생의 발언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날조해서 악용했던 史實이 想起되기 때문이다.

文목사의 北韓발언중 유일하게 보도된 것은 지금까지는 平壤도착성명 뿐이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金日成을 『존경하는 주석』이라 호칭한 대목이다. 또 지난 29일밤 국내 TV 방송이 방영한 北韓TV화면에서의 文목사와 金日成이 첫대면할 때 세 번씩이나 『열렬한』 포옹을 하는 장면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신문에 실려온 수많은 비난전화들이 그 증거이다.

文목사는 도착성명에서 『金日成주석과 더불어 서로 민족의 일원으로서 뜨겁게 부둥켜 안고(중략)…… 이것의 상징적인 뜻을 생각하는 것 뿐만으로도 저는 기쁨과 가슴의 고동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고 했다.

金이 동족이긴 하나 6·25라는 동족상잔의 참극을 일으킨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30여년 동안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일삼아 왔으며, 아웅산과 KAL기 폭파의 실제적 책임자가 아닌가. 아무리 통일의 염원이 간절하다 한들 그리도 감동적으로 포옹을 하고 『존경』이란 찬사가 그리도 쉽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아연할 뿐이다.

文목사의 訪北과 그곳에서의 언행이 이미 국론의 분열과 대립을 극한으로 몰고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북측이 노린 바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계와 대비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쪽 대응은 너무 과민하다는 생각이다. 文목사등의 平壤방문은 아무런 대표성이 없는 단순한 개인적인 『돌발

사건』으로 간주하여 그 파장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히 대처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구하면 된다. 특히 이번 하나의 돌발사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전향적인 北方정책에 제동을 건다거나 후퇴시켜서는 개방과 화해의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끈기와 인내를 발휘하여 의연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文목사의 訪北사건에는 그 책임의 일단이 정부에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北韓과의 각계人士 교류로 집약되는 『7·7 선언』 이후 정부가 취해 온 다분히 선언적인 일련의 북방정책 발표들은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성급한 환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鄭周永씨의 고향방문과 금강산공동개발계획 추진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라는 종래의 거리감에서 『조만간 한번쯤 가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는데 상당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상과 희망은 그렇지 않아도 간절했던 所望만 자극하고 부풀리게만 했을뿐 현실적 뒷받침이 없자 현실의 벽을 내 스스로 깨버리자는 決意가 솟구친 것이 바로 文목사의 경우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의 창구는 一元化하되 모든 정책의 수행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를 원칙으로 다양한 접촉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일에 대한 국민의 환상과 갈증을 해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文목사가 걷는길

鄭達泳

한국일보 칼럼('89. 4. 1.)

舊約학자의 變身

내가 처음 들어서 알게 된 그의 이름은 『구약학자 문익화목사』이다. 그는 50세 이던 1968년에 우리나라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뜻을 모아 벌인 성서의 공동번역 작업에서 개신교측 학자로 참여했다. 번역에 몰두하던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역문(譯文)을 얻게되자 『아, 이제서야 하느님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신다』며 동료학자들과 함께 감격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그 『공동번역성서』가 완간된 것은 1977년의 부활절이었는데, 역사적인 그 순간에 문목사는 그의 생애 첫번째의 감옥살이 중이었다. 어느 새, 『구약학자』는 『반독재 투사』로 변신했던 셈이다.

성서의 구약을 번역하던 중에 민주화투쟁대열에 나서게 된 데에 어떤 필연이 있었던 것인지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구약성서 전체의 40%나 되는 운문부분을 도맡아서 우리말로 옮기던 중에 그의 시인으로서의 잠재적 자질이 잘 드러났고 그때를 계기로 그 자신의 창작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많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환갑 가까운 나이에 시쓰기를 본격화 했는데, 때마침 감옥살이가 그를 열정적인 『시인』으로 거듭 나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구약학자』이고 『투사』이며 『시인』이다. 이 세가지 면모는 그의 갑작스러운 북행(北行)과 TV 화면으로 소개된 그곳에서의 행동, 그의 성명서 같은 언행들에서도 한꺼번에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그를 생각하는 일은 두려운 고통이다. 그는 천진하게 끌어안고 웃고 이야기하는 듯이 보였으나 그것은 『그의 꿈속』일 뿐, 그것을 보는 이쪽의 눈에는 불이나고 현실은 고통스럽다. <개똥같은 내일이야 / 꿈이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 조개속 부드러운 살 바늘에 찔린듯한 / 상처속에 저도 물

래 남도몰래 자라는 / 진주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 꿈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그의 시 『꿈을 비는 마음』에서 처럼 그는 꿈을 쫓는 시인이다. 그 꿈은 그에게
있어서 통일이고 통일은 지고지선한 가치이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
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고 흥분하던 장준하선생의 자문자답은 문목사에게도
그대로 『그렇다』로 이어진다.

銅像 3만5천개

문제는 현실이다. 통일로 가는 길은 꿈길이 아닌 현실의 길이어야 한다. 시인의
꿈은 아름답지만 바늘에 찔린 현실의 상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문목사가 냅다 끌어안는 김일성 주석은 누구인가. 아무리 좋은 형용사를 다 붙
인다 해도, 그가 지난 40여년간 철두철미한 독재체제로 북한 땅에 군림해 온 스
탈린주의자임을 부인할 도리는 없다. 그는 북한 전역에 3만5천개의 동상이 되어
서있다.

북한의 모든 가정마다 액자에 든 사진으로 그의 아들과 함께 걸려있는 『우상』
이다. 그가 북한땅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지독한 방법으로 기독교회를 파괴 살
육 점멸시켰던지는 문목사와 그 가계가 너무나 잘 아는 일들이다.

구약성서는 히브리백성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온갖 우상들과의 투쟁사로 점철
된다. 거의 신격(神格)에 가까운 개인숭배 대상이 되고, 아주 당연한 듯이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김일성주석은 이 시대의 가장어리석은 우상일뿐, 문목사로 하여금
『기쁨과 가슴의 고통을 억누를수 없게 하는』 진정한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

문목사의 북행은 시인다운 순수한 열정을 그 동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
말로 『충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행의 결과가 어떤 엄청난 충격으로 나
타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이 틀림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문목
사의 북행을 빌미로 하는 남북한 내부, 또는 남북관계의 퇴행이나 반동이다.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자 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
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선언은 분명히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6개항중 제1항이다.

이 선언이 담고있는 민족공동체에의 의지와, 국민의 뜨거운 통일열망은 문목사의 일로써 사그라들거나 냉각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땅에서도 미세하게나마 꿈틀대던 개방화 또는 자유화의 움직임이 문목사의 일로써 지체되거나 썩이 잘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민족공동체의 비극은 없을 것이다. 문목사의 주장대로 민주화와 통일이 같은 개념일 때 더욱 그러하다.

꿈의 길 現實의 길

그는 아마도 북녘땅에서 그곳의 민주화나 인권을 말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매우 궁금하다. 그는 거의 확실하게 『돌아오는 즉시』 구속되어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이다.

그의 방에는 『신랑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듯 감옥에 들어가라』는 글씨가 늘 붙어 있다는데, 이번에도 그는 『신랑』의 마음으로 그의 다섯 번째 감옥생활을 각오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장준하선생의 말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통일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게임이 아니오. 통일로 가는 길에서의 희생과 『지는 것』 이야말로 보다 영광스러운 『이김』입니다. 그러나 길은 역시 멀고 험하군요』

역사의 에피소드이기엔 고통이 너무 큰 요즘이다.

鄭씨 - 文씨와 統一논의

金東煥 변호사

朝鮮日報 時論 ('89. 4. 2.)

문익환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은밀히 평양을 방문하여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익환씨의 행위는 남북한 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안을 안겨주었다.

정부主導는 의무

그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돌아온 정주영 씨의 경우와는 또다른 의미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국민들은 두 사람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7·7특별선언으로 남북교류 정책을 표명하였으나 미처 그에 따른 법률적인 준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현행법과 괴리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충동을 빚게된 까닭이라 할 것이다.

이제 위 두 사람의 경우와 아울러 이른바 통일논의에 대하여 순수한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여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정권이 법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선결문제이다.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정권을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하게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견해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오거나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은 자명한 법리이다.

둘째로, 우리가 내세우는 통일정책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대

한민국 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7·7선언의 내용인 남북간의 교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라는 대전제를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이며 이와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바탕을 달리하는 이른바 기층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통일론은 우리헌법이 허용하는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정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무력적화통일 전략이나 『모든 통일은 선』이라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로,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통일논의의 주체와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의 주체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는 모든 국민이 이를 활발히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66조는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책무를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다양한 통일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성숙된 통일방안을 기초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헌법상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私的접촉은 不法

환언하면, 통일을 위한 논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와같은 논의를 통하여 다듬어진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 집행은 대통령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통일정책의 추진을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통일문제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단계를 혼동하였거나 헌법의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넷째로, 7·7 특별선언의 법적 성격과 통치행위 이론에 대한 문제이다. 盧泰愚 대통령의 7·7특별선언은 북한과 각종 교류를 추진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아울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특별선언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내지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내용은 실정법에 비추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로, 대북한 접촉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투표나 선거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대표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점을 살펴보면 북한을 상대로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일한 국가의사의 형성을 통한 국가의 행위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접촉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구성된 정부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행위는 전국민의 위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위 두 사람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각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주영씨는 처벌할 이유가 없으며, 문익환씨의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法체제 정비시급

물론 이 두 사람의 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출죄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주영씨의 경우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7·7 특별선언과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서 벗어남이 없이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심사를 거쳐 북한과의 순수한 경제교류를 추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 절차 및 결과등 모든 점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형법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익환씨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이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자신의 통일방안인 위험적인 민중통일론을 북한당국과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은밀히 입북한 것이므로 현행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내의 일부 급진적인 재야인사들과의 대화를 내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이를 적화통일의 호기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과 입지를 결과적으로 강화시켰음이 명백한 점을 감안하면 그 목적과 절차, 그리고 결과의 모든면에 있어서 현행 법체제가 용인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씨의 문씨의 행위는 법적인 면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별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통일의 문제는 전국민의 염원인 동시에 국가의 지상과제이기도 하나 결코 서둘러서는 아니되며,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대남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서두름과 동시에 이와같은 점진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법체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이를 촉진 완수하는데 뒷받침되는 새로운 법제의 완성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모든 정당은 힘을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목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일남 논설고문

한겨레신문 논단('89. 4. 2.)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변화의 속도는 광고전광판의 글씨 같다. 어떤 선전문구가 나왔다 싶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른 색깔이나 그림이 그걸 지우는 모양과 비슷하다. 그리고 ‘충격체감(遞減)의 법칙’에 길들여졌달까. 어지간한 변혁엔 끄떡이지 않는 생리를 키워온 사람들도 변모의 신기성 때문에 도리없이 그 파문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 뚜렷한 가늠자가 없어 어떤 사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야 할 지 정부 스스로 헛갈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왕의 현안들은 원인무효로 깨끗이 말소되어 속제는 속제대로 쌓이면서 무엇 한 가지 시원스럽게 해결된 적이 없는 채 ‘영거주춤한 시간’은 아, 잘도 간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놓고 나라 전체가 신열에 들떠 있는 듯한 양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다. 아닌게 아니라 어느날 아침 신문에서 문목사의 평양 도착을 ‘발견’하는 마음은 우선 놀랍고, 줄지에 허를 찔린 머리는 신선한 울림으로 멎었다. 과연 그 양반다운 착상이요, 결행이라는 점에서 천의무봉의 순수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염려와 갈등도 없지 않았다. 현실을 초극하여 맞바로 평양행을 시도한 사신(捨身)의 높은 뜻을 역시 높이 사는 한편으로, 정부가 발행해 준 주민등록증을 간직하고 다니는 자의 소시민적 아쉬움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비행기를 타기 전의 마지막 순간,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를 향해 공식적인 통고를 할 수는 없었던가를 생각했다. 그랬을 때 국내에 남아 있는, 문 목사의 행위를 통일염원의 절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의 여러가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안기부장의 국회답변을 보면 이 대목도 매우 모호하여 사안의 핵심이 아닌 듯하다.

하기야 정부에 요청해 봤자였을 것이라는 건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문익환 목사 자신은 실정법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입지였을 터이다. 도쿄서 가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 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내발로 북쪽땅을 디딤으로써 나 스스로 또 한 쪽의 조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벽을 깨는 작업이지요.』

그렇다면 문 목사로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처벌이 별반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든 처지이기도 하여, 그만한 각오쯤은 각오의 수준에도 못 미칠지 모른다. 또 한번 그렇다면, 정부가 재삼 확인하고 있는 법적 처리도 빛이 바래 보일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북한을 ‘동반자’라고 일컫거늘, 처벌만을 앞세울 게 아니라 돌아온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가지고 온 보따리를 함께 풀어본 다음에 대응하는 여유는 없는가. 우리는 아직 당사자의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으니 말이다.

여하간에 모든 일을 당리당락의 사각에 맞추어 ‘호재’와 ‘악재’로만 구분하고, 일껏 개폐를 논의하기로 한 보안법마저 더욱 기름칠해서 써 먹으려는 자세는 한심하다. 전대협이 ‘평양축전’ 참가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당하지, 목사님 한 분의 평양방문으로 온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나대는 광경은 보기에 민망하다. 더구나 평생 동안 민주주의를 외친 ‘죄’ 밖에 없는 노목사를 심지어 ‘미친놈’이라고까지 욕하는 정치풍토는 볼상 사납다. 그와같은 말을 한 정객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방울 튀기지 않고 마른 자리만 골라 앉은, 치사하게 늙은 사람이어서 신용할 수조차 없다. 쪼쪼한 정치는 국민을 쪼쪼하게 만들기 쉽고, 쪼쪼한 국가는 남의 멸시를 사기 십상이다.

북한당국이 얼마나 쪼쪼하고 폐쇄적이고 음울한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존하는 일방의 정부를 묵살하고, 다시 말하면 항상 앞문은 외면하고 뒷문만 터놓는 식의 방식이 남북관계를 한층 꼬이게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러는 속셈을 모를 사람도 없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역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돌풍내습의 김새로 올 봄은 가늠차 있다. 하지만 더는 놀라지 말자. 이보다 더한 참담한 세월을 뚫고 온 우리가 아니더냐.

『獨裁者의 선전원』

深好民 정치평론가

朝鮮日報 時論('89. 4. 4.)

평화통일을 구가한 남북 7·4공동성명이 아직도 살아있던 73년 10월 11일, 金日成은 인민군대 앞에서 자기의 본심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조국의 통일문제는 결국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도와 주어 남조선 인민들이 정권을 쥐어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자고 그저 구호나 불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반드시 결정적인 혁명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언제나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조국의 통일은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식 위장평화통일정책에 핵심을 표현한 말이다. 그후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에는 노사분규-학원소란-극좌파의 난동 등 민주화의 과정에 수반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 일파는 이 혼란을 그들이 오랫동안 남한에서 책동해온 그 『결정적인 혁명투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공작을 꾸미고 있다. 바로 이런 시기에서 文익환목사는 지난달 25일 평양으로 밀행한 것이다. 그가 평양공항에서 발표한 도착성명, 김일성을 찾아가 정열적으로 포옹하는 광경, 2일 그가 평양출발을 앞두고 許鎡과 같이 서명발표한 공동 성명, 그의 기자회견등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큰 충격과 격분을 촉발하여 정국에 파란을 몰아오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하나 둘이 아니다. 文씨라고해서 가지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가고, 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에 있다. 명명백백한 것은 그의 밀행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뺏아하는 듯이 무시하면서 이 나라의 法체계를 의도적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다. 통일의 명분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려는 것은 그의 밀행과 발언이 제기하고있는 정치적 문제다. 그는 몽매간에도 그리던 북한방문을 김일성이 지난 1월1일 초청해준 것을 『기적』이라고해서 감읍했고, 그를 만날 생각만으로도 『기쁨과 가슴의 고통을 억누를 수가 없다』고 흥분했다. 그러나 金의 초청은 그 무슨 기적이 아니라 상투적인 대남교란전술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文씨는 입북제1성에서 『南韓민중은 독재세력과 외세와 싸워 이제 마침내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될 운명의 지점을 하하여 돌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金日成의 깃발밑에서 통일을 해야 할 결전의 시기가 왔다는 뜻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양땅을 밟으면서 『남한 4천만 민중들의 뜨거운 시선이 내 등뒤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아도취했다. 그런데 우리 민중은 그를 대표로 뽑은 일도, 자신들의 운명을 그에게 위탁한 일도 없다. 실로 오만하기 그지없는 독선적 발언이다. 그의 이른바 『민중』은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 존재요, 현실적인 아닌 관념상의 허상이다.

文씨는 또 『통일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선』이라는 망상에서 『김일성동지』를 만나겠다고 했다. 도대체 동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뜻을 같이하고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같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가 김일성을 『동지』라고 서슴지 않고 불렀을 때 그의 정치적 정체는 이미 명확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정당 정치인들은 文씨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막기 위하여 궁색한 변명과 유치한 궤변을 일삼고 있었다.

金日成선전 복창

그러나 그것은 2일에 보여준 文씨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의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날 文씨는 북한이 써준 許鎔²¹의 공동성명에서 통일은 남북 7·4 공동성명의 3대원칙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것, 두개 조선정책에는 반대한다는것, 남북연방제의 방식이 필연적인 통일방안이라는 것, 팀스피리트 훈련은 남북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외국의 남북교차승인 교차접촉을 거부한다는 것 등 김일성의 대남선전공세에 1백%추종했다. 또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를 거듭 지지하면서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느니, 군사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느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고있다느니 하는 등 그들의 정치선전을 그대로 복창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이로써 文씨는 이제 김일성의 일개 선전원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만 천하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북이 교류의 길을 터놓는 선구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느니, 기대한것보다 많은것을 이룩했다느니, 그 무슨 임무를 수행했다느니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국민들을 우롱하려 들고 있다. 그는 북한방문으로 자신의 눈을 떴고 북한에 대한 견해를 바로 잡았다고 했다.

그가 눈을 떴다면 3만개나 되는 金日成의 크고 작은 동상, 그 중 평양시에 군림하는 30m의 그의 금박동상, 60m높이의 개선문, 1백70m의 주체사상탑, 그의 죽보를 영광화한 조선혁명박물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보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민중의 물질 생활, 여행증 없이는 평양은 물론 道와 道の 왕래마저 불가능하다는 기막힌 사실도 간파했어야 했을 것이다.

文씨는 언필칭 인권과 민주화와 민중을 위하여 싸운다고 해왔다. 그런 그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불모지대, 무신론적 우상의 도시, 제소리하는 민중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사회 43년의 1인독재도 모자라 장자에게 자기의 권좌를 물려주려하는 현대판 전체주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 독재자의 방식대로 통일해야한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인권, 민주화, 민중해방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政府에도 책임

그가 통일의 십자가를 짊어진 목사로 자처하건, 그 어떤 소명을 받은 의인으로 자임하건을 막론하고 그의 경망한 발언은 자신을 정치적 백치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6공화국이 들어선 후 盧 대통령은 치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지도 않은채 北에다 일련의 화해발언을 연발하는 안이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平壤에만 가면 통일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대북한정책은 북방정책과 연결된다. 세상은 지금 무엇이라고 비판하고 있는가. 경험도 연구도 없는 대통령의 한 젊은 측근자가 정부내 관계당국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북한을 포함한 북방정책을 독점하고, 여러 공산당 나라들을 드나들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방정책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 구상과 방법과 실천은 철저한 반성 위에서 재검토-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文씨의 入北사건을 정치적으로 확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재야권, 개인이건 南朝鮮혁명을 통한 南朝鮮해방이라는 金日成식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文씨편을 들면 되고,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서 대결하면 그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중간 노선이란 존립할 수가 없게 되었다. 동시에 文씨의 入北과 일련의 金日成 맹종발언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일이며, 군인도 민중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개인들은 어디에나 있다. 따라서 무슨 큰 일이나 난 듯이 동요할 필요 없이 국민모두 자신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꿈과 念願과 現實과

李馨 논설위원

한국일보 칼럼('89. 4. 4.)

文益煥목사의 北韓行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칼·부세의 幸福이라는 詩를 떠올렸다면 엉뚱한 연상이라고 웃을 것인가. 시의 내용은 산너머 저하늘 멀리에 행복이 있다는 남들의 말을 듣고 한번 그 행복을 찾아 나섰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돌아왔다는 간단한 사연이다. 가도가도 행복은 산넘어 또 산넘어 더 멀리가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되돌아와야 했다. 행복을 찾아 헤매이면서 언제나 만족을 얻지 못하는 人間의 아득한 향수같은 것을 잘 나타냈다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애송하는 詩의 하나이다. 행복대신 統一이라는 낱말을 대체시켜보면 왜 文목사의 북한행이 칼·부세의 시를 연상시키게 만들었는지 感이 잡힐만도 하다.

詩속의 주인공은 행복을 찾아 산너머로 먼길을 떠났지만 한국의 文목사는 통일을 찾아 북쪽으로 갔다. 얼핏 생각하기에 詩속의 주인공은 막연한 무지개를 쫓는 이상주의자요, 文목사는 통일이라는 절실한 念願을 쫓는 현실주의자인 것처럼 여겨지나 차분히 따지고 보면 꿈을 쫓는다는 점에서 둘은 별반 다를바가 없다.

통일을 향한 文목사의 염원을 한갓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思考는 『걸어서라도 臨津江을 헤엄쳐서라도,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낚이라도』 北으로 가겠다고 읊은 자작시에서 보듯 이미 현실을 떠난 관념의 세계에 있다.

만약 그의 思考가 詩의 세계에서만 머물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별로 타할 것이 못된다. 벌써 우리는 40년도 더 오래전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을 보내오지 않았던가. 우리겨레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요, 내 목숨 바쳐서 통일이요, 이 겨레 살리는 통

일이요를 외어오던 터에 통일을 갈구하는 文목사의 소망을 환상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일에 대한 그의 염원이 순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유별난 행동을 분단의 限이 응어리지고 극대화되어 나타난 한 症勢로 봐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文목사가 자아낸 불상사는 그가 꿈을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행복』 속의 주인공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섰지만 文목사는 자신이 아닌 우리겨레에 행복을 안겨다 주기 위해 북한행을 단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겨레한테 아무런 행복을 갖다줄 만한 행동이 되지못하는 것을 그렇게 된다고 과신하였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소영웅주의적 心理를 발견한다. 또 그가 남한의 민중을 대표할 수 있다고 자처했다면 비단 외람된 것일뿐 아니라 누가 그를 우리의 대표로 뽑았는지 묻고 싶고, 개인의 자격으로라면 자신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소행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의 경우 통일에 대한 한맺힌 염원이 스스로 힘을 과신케하고 또 과신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해야 하겠다. 외곬로 빠져든 信念은 때로 理想과 현실을 혼돈하고 思考力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염원을 현실화시키는 단계에서 그는 딱 부작용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가 당초의 그의 주장대로 북한의 민중을 꺼안지를 못하고 金日成을 끌어안음으로써 폐쇄사회에 군림하는 金에게 南朝鮮해방에 대한 큰 자신감을 안겨다 주었다면 분명 그는 金에게 이용당한 꼴이 된다. 남한의 민중을 대표한다는 文목사가 金에게 이용을 당했다면 그를 통해 남한의 민중이 이용당한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北과의 통일협상에서 상응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만약 북한이 大韓民國의 主權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만약 金日成이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을 포기하고 건실한 통일논의의 場으로 나올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文목사의 북한행은 별 말썽의 소지를 안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사회가 人權을 유린하지 않고, 自由를 억압하지 않고 공산독재대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사회였다면 애초부터 文목사가 북한을 찾아갔어야 할 계제도 이윽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전혀 그러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단

지 文목사 쪽에서만 통일의 꿈과 정열 하나만으로 北을 찾아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과 불행의 원인이 숨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행의 이유야 여하튼간에 실정법을 어긴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북한행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文목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文목사가 독재에 맞서 싸우다 여러번 투옥되었던 민주투사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있다. 그러기에 더욱 그의 북한행과 북한에서의 행동이 통일의 문제진전에 역효과를 주었거나 불필요한 부작용을 일으켰을 경우 국민앞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크다고 생각한다.

文목사에게는 물어 보고 싶은 말들이 많다. 남한의 군사독재는 타도의 대상이 되지만 북한의 공산독재는 타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남한의 人權옹호는 중대관심사이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사실은 묵인해도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남한의 정부당국이나 제도권 민주세력에는 북과 교섭할 자격이 없으나 在野의 반독재세력은 북의 독재정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다. 文목사는 이같은 우리의 의문에 답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지녔다고 믿는다.

그가 기대이상으로 올렸다는 북한행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기대를 갖지도 않거니와 기대를 걸 만한 어떠한 알맹이도 있을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제1감이다. 행복을 찾아나섰다가 눈물을 짓고 돌아선 詩속의 주인공처럼 북에서 귀국한 文목사의 꿈에서 깨어나면서 북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눈물을 머금게될 지 모를 일이다.

『文益煥쇼크』가 남긴것

池龍雨 논설위원실장

京鄉新聞 時評('89. 4. 5.)

하루 아침에 눈을 뜨자 유명해진 것을 알았다는 건 영국의 미남시인 바이런의 얘기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文益煥 목사만큼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해진 인물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전에도 그는 꽤 유명했지만 이제는 삼척동자도, 두메산골의 村老까지도 文목사라면 다 안다. 그만큼 그는 신문 방송 잡지를 독점하는 톱 뉴스메이커가 된 것이다. 그게 다 『평양潛入』이라는 그의 엉뚱한 돌출행동 때문이고 金日成과 만나 뒷목 혹은 입이 닿을 정도로 뜨겁게 열싸안은 덕택이라면 『존경하는 主席님』 소리를 연발할 만도 하다.

말만은 바로하자 文목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사람들도 그 非凡性만은 인정해야 할 줄 안다. 北韓이 어디 아무나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관광명소라도 되는가. 이 땅에는 40년이 넘도록 北에 두고 온 혈육의 생사조차 모른채 望鄉을 달래다 지친 실향민들이 좀 많은가.

그런데 文씨는 그 『불가능의 壁』을 거뜬히 넘어 선 사람이다. 『평양가는 표를 팔지않겠음 그만두라고 /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그의 豫言詩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아니 걸거나 헤엄치는 수고까지도 필요없이 金日成이 내 준 특별기로 평양에 안착한 것이다. 그게 어디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머리와 수완으로는 될법이나 한 일이던가. 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도 같은 夢幻의 세계를 현실로 이끌어 낸 奇人임에 틀림없다.

그는 바보가 아니면 천재, 둘 중 하나다. 천재에는 대개 약간의 狂氣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머리가 돌지않고 역사를 사는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그의 강한 反問은 매우 含蓄的인 것이다. 러시아의 文豪 투르게네프는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비교문학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가 상징하듯 햄릿은 너무 생각의 포로가 된 나머지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典型인데 비해 돈키호테는 터무니 없는 과대망상인데도 한번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내닫고 보는 행동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文목사는 後者의 인간 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문제는 文씨의 入北동기와 북한에서의 그 놀라운 行蹟들을 과연 정의감의 발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역대정부가 바통을 이어 받으면서 추진해 온 통일사업이 시원치 않고 지지부진한것이 답답해서 참다못해 그 자신이 그야말로 남북간의 橋梁役으로 나선 것이라고 일단 좋게 해석할 수 있다.

만일 文목사가 단신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 蕭遜寧과 담판, 침입한 契丹軍을 물러가게 한 高麗때 徐熙처럼 우리편에 서서 金日成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보였다면 정부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北行을 결행 정부의 권위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그의 실책은 相殺되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존경하는 金日成 주석님』 운운한 평양도착 성명에서부터 남쪽국민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背信感을 느끼게 했던 그는 『聯邦制는 역사의 필연적 요구』라는데 합의한 『文·許鎡공동성명』으로 경악과 충격의 절정을 맛보게 했다.

이제와서 그의 단계적 연방제가 北의 高麗연방제와 다르다고 변명해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뿐인가, 팀스피리트훈련반대·交叉승인및 접촉 반대, 유엔동시가입 반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면 事事件件 반대하고 汎민족대회, 북남고위 정치회담, 『朝·美·남조선간 3者회담개최』등 북한의 주장에는 전폭적으로 동조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니 그는 대체 어느나라 국민인가.

가장 우스꽝스런 해프닝은 귀절마다 『쌍방은……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른바 공동성명 소속의 일방主體에 관한 부분이다. 雙方이라니 文목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일문제의 全權대사라도 된다는 것인가. 4천만 국민이 언제 그에게 그런 大任을 白紙위임했던가. 그는 아무런 대표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한낱 私人에 불과하다. 굳이 대표성을 부여한다면 재야단체의 하나인 全民聯의 고문일 뿐이다.

전민련은 4천만의 人口차원에서 볼때 氷山의 一角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文목사는 北에서 『저를 여기에 올 수 있게 해준 것은 통일을 바라는 남쪽 민중들의 뜨거운 열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마치 전체 민중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誇大妄想과 小영웅주의의 片鱗을 보인 순간이다.

착각은 자유다. 것처럼 『민중』으로부터 뜨거운 위임을 받았다면 어찌해서 통일에 가장 목말라 있는 이북 5도민들이 분개해서 규탄대회를 열며, 또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그의 恣意的 訪北이 『잘한일』이라는 응답다는 13%밖에 안되고 66.8%가 『잘못』이라고 했던가.

자신의 방북이 대성공이라는 自畫自讚은 수령의 특별기까지 내주면서 그의 표현따라 『破格的대우』를 받아서인가.

와서 보니 북한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준비를 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또 무언가. 平壤의 안내코스과 歡待만 보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休戰線북방 그리고 要寒化된 북한의 중무장지대를 가 보았는가. 7旬노인 치고는 참으로 순진한 것이 아니면 北의 두려리를 맹목적으로 선 게 아닌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文목사는 적어도 이번 자신의 무모한 돌출행위와 일련의 訪北中 언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잔잔한 국민들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통일논의에 일대 혼선을 빚게 한 그의 北行의 波紋은 너무나도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이다.

文씨 訪北의 의도와 결과

李正馥 서울대학교수

中央日報 時評('89. 4. 5.)

정부는 보름전 中間評價 유보발표를 전후해 서울시 지하철 파업이나 現代중공업 사태등과 같은 노사분규에 강경대처하기 시작했고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시위자들에게는 무기사용도 불사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최근에는 文益煥목사의 訪北사건을 계기로 全民聯·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등 在野단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해 在野인사와 작가들을 구속하거나 출국금지 시켰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현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은 강력규제하겠다는 자세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뒷전에 밀린 5共청산

정부의 이같은 강경노선은 中評유보를 발표할 때 이미 예고되었었으나 그때만 해도 中評선거공약을 깨뜨린 정부는 守勢에 몰려 있었다.

中評유보발표 닷새후에 일어난 文목사의 訪北사건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여당을 이같은 守勢와 곤경으로 부터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文목사 訪北의 놀라움으로 중간평가와 光州·5共청산문제를 까마득하게 잊게되었고 야당들도 이 사건에 대책을 세우느라 光州와 5共문제는 일단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몇몇 5共핵심인사들의 퇴진을 어느 野黨보다도 강력이 요구해온 平民黨도 文목사의 訪北문제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현재로선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平民黨은 文목사 訪北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여 있는 이 시점에 돌연 의원내각제 검토가능성을 내비칠 정도로 궁색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文목사의 訪北은 정부·여당내 5共 관련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경파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있다.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온 이들의 주장은 文목사의 訪北을 계기로 그 立地를 다시 찾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그들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文목사의 訪北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保守性을 새로이 확인시켜주는 계기도 되었다. 平民黨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文목사가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北韓을 방문한 것은 유감스럽거나 잘못된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그중에서도 民主黨은 民正黨과 마찬가지로 文목사 訪北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들과 TV도 거의 모두 文목사의 訪北활동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강경파 유리한 高地에

우리 국민들도 절대다수가 文목사의 訪北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文목사 訪北 직후에 나온 平民黨 金大中총재의 南北韓 자유왕래 제의와 在野세력의 文목사 귀국환영 위원회 결성도 시의에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文목사의 訪北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은 유신시대 이래의 독재타도운동에 있어 그가 이룩한 공적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民主化를 추진하는 일이 곧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일이고,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일이 곧 민주화를 추진하는 일이라고 믿는 文목사는 訪北으로 국민들의 통일관심을 높여 光州문제해결과 5共청산등을 비롯한 민주화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시키려고 의도했는지도 모른다.

중간평가를 통해 盧정권을 퇴진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文목사와 在野세력은 中評유보로 盧정권 퇴진운동의 합법적 기회를 잃었고, 文목사는 이러한 국면을 訪北을 통한 통일운동으로 타개하려고 계획했는지도 모르겠다. 반복해 말한다면 文목사의 訪北은 中評유보 정국에 대한 타개책으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文목사의 訪北의도가 그러하다면 그 의도는 현단계로선 분명히 실패다. 그의 訪北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文목사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文목사의 訪北으로 정부·여당과 그 내부의 강경파들은 우선 당장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이 기회에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우리경제에 공권력을 사용해 노동질서를 확립시키고 현체제 도전세력을 「좌경폭력세력」 근절이란 관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文목사문제도 그가 귀국하면 앞으로 北韓과 개별적인 민간교류를 막는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자제해 왔던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적극적으로 쓸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輿圈이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면 이같은 판단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冷戰的 사고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文목사의 訪北활동을 질타하고 있고 이를 옹호하는 在野세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거나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盧대통령이 천명한 「7·7선언」의 정신이 아닌 冷戰시대의 정신에 따라 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운동이나 在野세력에 냉전시대의 정신으로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그것은 우리사회의 현분위기를 反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 在野세력은 文목사 귀국후 그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一戰을 불사할 자세를 가지고 있고 전국민주노조와 노총은 청년학생들과 在野세력의 지원을 받아 4월 하순에 전국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文목사의 訪北에 과잉반응해 청년학생들, 在野, 노동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을 지르는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文씨 쇼크와 悲劇의 뿌리

韓昇助 高麗大교수

世界日報 論壇('89. 4. 6.)

文益煥목사의 平壤방문이 보도된 이래 오늘까지 10여일동안 우리 국민들은 연일 놀라고 분개하고 개탄하는 나날을 보내왔다. 첫째, 70년대부터 반독재 民主化 투쟁에 앞장서서 여러차례 투옥된 바 있고 在野와 운동권 세력의 代父나 다름없는 사람이 어느새 平壤에 도착했다는데 놀랐다. 둘째,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에 黃哲暎같은 民衆문학의 인기작가(?)가 수행했다는데 또한 놀랐다. 셋째, 평양 도착 후 『오랫동안 존경해 온 金日成主席, 김일성同志 운운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경악하였다. 넷째, 문목사가 김일성과 여러차례 열정적인 포옹을 계속하는 광경을 TV화면을 통해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섯째, 文목사가 김일성과 전후 9시간이나 만나 對談한 끝에 발표된 북측의 聯邦制 통일안에 적극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한 것이다.

文목사는 평양기자회견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들을 환영해 준 사랑하는 겨레들의 뜨거운 심정을 평생 잊을 수 없고 이것을 절대로 背信할 수 없다. 배신하면 날벼락을 맞을거다. 그런 심정이다... 일주일밖에 안되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민족사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평양방문을 神의 계시인 듯 착각하며 김일성 新年메시지에 담긴 초청을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감격해 하며, 『김일성주석과 뜨겁게 부둥켜 안고 민족의 빛나는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북한 동포의 뜨거운 환영』에 대하여 일생일대의 감격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저렇게도 모르는 단순-소박한 위인이 한국의 저항운동을 주도해왔다는 데 대하여 계속 쇼크를 받았고 어안이 병병해질 뿐이었다.

文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큰 우려를 자아냈으며 정가에도 큰 파문을 던진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보아서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크게 경악하고 분격하면서 依法처단해야 한다. 또 文목사의 容共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그와 같은 북한동조세력을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반응이다. 이것은 정부여당과 제도권 야당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통일논의가 집권세력에만 독점될 수가 없다. 누구는 방북해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번 文목사의 방북은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轉機가 된 것이므로 대대적인 환영준비를 해야겠다는 반응이다. 이것이 全民聯과 그 동조세력의 입장이다. 셋째는 文목사의 귀국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평가한 다음에 처벌여부를 결정하자는 신중론의 입장이다. 이것이 金大中총재등 平民黨입장인 것 같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부당국과 한 마디의 의논도 없이 자의로 평양에 密入國하여 그들의 聯邦制 통일방안에 적극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된 일이며 북측의 대남공작에 놀아난 경거망동으로서 의법 처리됨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文목사의 訪北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일은 아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남북교류 人士왕래 남북한상호방문 등을 주장해 왔고 『7·7선언』에서도 더욱 강조한 터였다. 金日成주석과의 會同은 朴正熙 金斗煥대통령도 희망해 왔고 오늘날 盧泰愚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또 남쪽의 野黨지도자 역시 앞을 다투며 만나보기를 갈망하는 바였을 터이다. 그런데 金日成은 왜 거둬들인 남측의 회담제 의는 외면한 채 유독 文益煥목사나 在野人士들은 환영하고 뜨겁게 포옹하는 제스처를 하는가. 그것은 그가 反政府-反體制 세력의 지도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공산집단의 底意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상대하고 통일문제로 대화하고자 하는 대상은 남한의 體制전복과 민중혁명을 획책해 온 사람들이며 북한의 대남공작에 협력하고 그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뿐이다. 그들은 自主통일 平和통일 또는 사상을 초월한 민족대단결 등을 말해왔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오로지 남한 체제의 질서파괴의 국론분열 체제전복

그리고 적화통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이란 남한체제의 약화와 전복, 종국적인 공산화를 위한 名分밖에 되지 않는다. 文목사의 방북환영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준다.

이 나라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전체이다. 결코 문익환 목사나 재야 민중세력만이 아니다. 문목사나 재야 세력은 그들의 本意였건 아니건 金日成의 赤化政略이나 국론분열 공작에 놀아나 國法을 능멸하며 체제파괴 전복활동을 지속하는 利敵行爲를 삼가고 자숙해 주어야겠다.

문목사의 사법처리는 이제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그 여파도 심각할 것이다.

4월은 학생운동과 격렬시위의 계절이다.

지난 4일 延世大에서는 이미 文목사 방북지지 및 사법처리 반대를 위한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의 전국 확산 역시 시간문제다. 大學街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여 장악, 점거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文목사의 방북행각도 이러한 운동권 세력에 의하여 떠받들어진 행위이며 氷山의 일각이지 결코 한개인의 突出行爲라고만 볼 수는 없다. 김일성독재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서 공산진영에서 조차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만 왜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만 갈 뿐 줄어들지 않는가. 이것은 在野민중세력만이 반성할 일이 아니라 정부 여당 그리고 既成세대가 모두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제5, 제4, 제3 제1공화국이 잘못만 한 정부가 아니라 功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不道德性 非正統性만 들추어내고 터무니없이 과장해온 사고방식이 바로 북한의 正統性을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북측의 대남공작에 휘말리고 동조하는 행위로서 언론계 야당과 함께 정부 여당도 무의식적으로나마 이에 열심히 협력해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나라를 능멸해온 것은 결코 북한만이 아니고 재야민중 운동권세력만도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문목사의 비극은 단순히 그 개인의 비극이 아니요, 우리민족 전체의 비극임을 알아야겠다.

사법처리와 형평의 원칙

한승헌 변호사

한겨레신문 논단 ('89. 4. 6.)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익환 목사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KAL 기 폭파범으로 기소된 김현희가 사형을 구형받던 날, 나는 몇 분의 변호사들과 함께 구속된 두 분의 재야인사를 접견하러 경찰서로 갔다. 민족문학작가회의의 고은 선생과 전민련의 이재오 통일위원장을 또다시 그런 자리에서 만나야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북의 지령으로 항공기를 폭파하여 1백15명의 인명을 죽게한 김현희는 사형구형을 받고도 불구속으로 두는 나라에서, 바로 그 북의 동족을 상대로 조국통일의 논의라도 해보겠다는 사람은 줄줄이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문익환 목사의 평양행을 놓고서도 그의 방북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의 내용은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돌아오기만 해 바라'라는 식의 '구속 엄단'만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과격함' 재야의 통일운동자들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이니 엄중처단이니 하고 신문지면이 끊는 냄비바닥처럼 달아오르는 틈바구니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나 용팔이 사건의 배후 관련자들이 왜 안잡히는가는 대충 짐작이 가는 일이다.

요즘 문 목사의 평양방문을 매도하는 정부나 일부 언론의 자세는 바로 그들이 '7·7선언'을 자랑하고 예찬할 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노 대통령 자신이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적대시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북간의 대결과 소모전을 지양하고 각계의 교류를 촉진하자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만일 문 목사의 방북이 7·4공동성명이나 7·7선언에 어긋나는 잘못이라면 진작부터 김일성과 꼭 만나고 싶다는 제의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

다.

정부쪽에서 어설픈 통치행위론이나 사전허가 면책론(?) 등을 가지고 법의 차별 적용을 변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라는 것이 법으로 국민에게 금지시켜 놓은 일을 정부만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핑계로 이용될 수는 없으며 마음대로, 또한 정부의 허가만 얻으면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면책된다는 논리도 억지다.

결국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는 통치행위론이나 정부허용론을 가지고 그 위법 여부를 따질 바가 아니다. 굳이 실정법을 저울로 삼는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 1조에 정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다.

전민련과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북한의 관계단체와 판문점에서 만나려고 한 것 또한 반국가적인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당국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죄와 회합(미수)죄를 들이댔지만 이번의 회담 추진은 정부의 논리대로 해도 형사책임은 없는 것이다.

실인즉, 위의 재야단체와 북한쪽 사이의 통신·연락은 국토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내외통신 같은 데서 중계 내지 전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미 보도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속중인 두 분의 ‘피의자’로부터 그 경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위의 두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지워놓은 통신·연락행위나 회합미수는 그나마 정부나 적십자사 그리고 통신사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이야기였다. 다 듣고서 나는 말했다. 『아무튼 것처럼 든든한 ‘공범’을 두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 분위기에 맞지 않게 모두 웃었다. 판문점에 가려다가 좌절된 일을 가지고 회합 미수죄라고 하는 모양인데, 거리는 경찰·국군·미군이 겹겹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곳인지라 정부나 미군쪽이 끝내 허용하지 않는 한 판문점 회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명백한 불능범이니까 처벌대상이 아니다. 북한 지역도 아니고 겨우 판문점까지라는데, 그나마 철통같이 막아놓고 처벌까지 한다면 이른바 정부의 ‘통일의지’ 측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못된다.

모든 공권력의 행사나 사법처리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국민들도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變革에도 飛躍은 없다』

韓相震 서울大교수

京鄉新聞 時論('89. 4. 6.)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이 물고 온 파장과 혼란, 대결의 양상을 보면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목사는 분명 통일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트려는 순수한 동기로 북한을 갔을 것이다.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잡꼬대 아닌 잡꼬대』에 형상화된 통일에 대한 지극한 집념을 생각할 때,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남북간의 교류와 통일논의는 보다 『민중적』인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분이 그러했듯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벽을 무너뜨리는 선구자적 행동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문목사의 행동을 동기의 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의 행동은 분명 사사로운 이해나功名심 또는 영웅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칠순의 노구를 이끌고 평양땅을 밟는 그의 마음은 어쩌면 갈라진 북한의 형제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사랑, 통일된 조국에 대한 심정적 열망과 헌신으로 인해 분단의 벽을 뛰어넘는 쾌거이자 꺼지지 않는 민족적 양심의 불빛으로 결국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의지에 못지 않게 결과가 또한 중요하다. 의지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지만 행위의 결과는 이와 무관한 현실, 즉 힘과 힘, 편견과 편견에 서로 부딪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변혁운동은 현실의 질곡을 넘어서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현실을 간단히 뛰어넘는 어떤 비약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 현실 안에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때로는 추악하고 악마적이기조차 한 싸움을 직시하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무한한 책임감으로 변혁의 지평을 열려는 지혜로

운 자세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고 의지가 투철한들 행위의 실제적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短見인가.

진보를 향한 신념에 찬 행동이 슬프게도 반동에의 역습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그러나 역사에는 이런 위험이 항상 크기 때문에 막스 베버는 일찌기 『심정윤리』에 못지 않게 『책임윤리』를 강조했고 이 둘의 조화를 갈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모든 점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문목사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재야 민주운동의 대부로서 존경을 받아왔고 목사이자 시인으로서 상처 받은 민족의 정서를 복원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치인의 자질이나 사회과학적 능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 몸을 던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싸움의 현실에서 북쪽에서는 북쪽대로, 남쪽에서는 남쪽대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당하게 된 것은 그의 중대한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과 그의 행동은 민주화운동에 희망과 전망을 더욱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과 장애를 돌출케하고 수구반동의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인 좌우 격돌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全民聯동 재야 민주운동 세력은 문목사가 물고온 부담을 온몸으로 받아 싸우기보다는 이것을 털어내는데 지혜로워야 할 줄 믿는다. 문목사의 행동이 시기선택에서 잘못되었다는 점, 이론이 없는 모험주의 혹은 낭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의문의 여지가 없을 줄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반성은 전술적 과오에 국한되고 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교훈은 훨씬 더 본질적인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하나는 변혁운동의 이론과 전략이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효과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권위주의의 모순고리는 쉽게 노출되고 넓은 사회적 연대로 끊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분단의 모순고리는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한에 관련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한 강한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너무 쉽게 보았다는 것이다.

문목사는 이 점을 간과한 채 마치 분단의식의 가장 예민하고 심층적인 부분을 일격에 무너뜨릴수 있더라도 한 듯 김일성과 열정적으로 포용함으로써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민주노선의 통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 이것이 북한의 정치·사회현실에 갖는 함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통일운동이 북한인민의 자유와 평등,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립되지 않는한, 또 그런면에서 내적 일관성과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한 민주노선은 이번 문목사의 방북쇼크로 인해 앞으로 걸잡을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믿을 수 있고 책임있는 민주세력이라 한다면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마땅하고 이번의 시련을 새로운 위상정립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앞날의 발전을 위해 긴급하고 옳다고 본다.

아울러 현실에 책임을 저야할 제도권 정치로서는 실종상태의 정치력을 회복하여 좌우 격돌을 피해가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야 운동단체에 대한 전면적 수사나 탄압은 우려스럽기 한이없고 부작용 역시 심각할 것이다. 행여나 정부 여당이 이때다 하고 수구강경노선으로 돌아설까 봐 염려스럽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惡手로 연결되어 멀지않아 큰 위기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칼을 뽑을때도 아니고 부화뇌동을 할 때도 아니다. 신문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은 우리모두가 냉정해질 때이며 문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찾아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금강산 공동개발뉴스로 공허하게 들렸던 민심, 그러나 그 안에 표출된 탈냉전 탈분단의 깨지기 쉬운 소망을 보다 튼튼히 키워가는 책임있는 정치, 책임있는 운동을 진실로 간절히 기대해 본다.

文목사, 말 좀 해봅시다

李静淵 논설위원실장
서울신문 칼럼('89. 4. 7.)

文益煥목사가 평양을 방문중이던 그 시점에, 그곳에는 오는 7월초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기획회의에 참석한 1백25개국의 대표 3백85명도 文목사 비슷한 융숭한 대접을 북한당국으로 부터 받고 있었다.

이들 기획회의에 참석중인 사람들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 서유럽의 공산당 내지는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자들이었다.

고급승용차와 철갑상어알등 온갖 산해진미에 춤상대를 위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여성들의 대접까지 받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련대표는 앞으로의 대회는 너무 호화스런 대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 반체국주의 수사에 너무 지나쳐도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프랑스 공산당의 한 대표는 『나는 오직 놀랄뿐』이라며 金의 우상화와 분수를 모르는 호화판 만찬에 입을 다물었고 다른 한 대표는 金에 대한 북한의 습관적인 아부발언에 이번 대회가 金日成의 업적을 찬양하는데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웨덴대표들이 지체부자유자 시설 방문을 요청하자 북한측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 해결했다』고 답변해 회의장에는 한바탕 폭소가 터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련은 북한의 학생축전을 위한 연대성금에 응해 3천만달러 상당을 지원키로 돼 있다. 말하자면 52억달러의 외채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갚아 서방 세계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다시피한 나라에서 이 무슨 분수모르는 짓거리들이냐는 핀잔이다. 게다가 金日成우상화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지체부자유가 해결됐다니 다 죽여 없앤다는 말이냐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던것 같다.

기실 요즘 너도 나도 가서 예배를 보고 찬송을 부르는 평양 만경대내의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은 지난해 11월 이들 학생축전 참석자들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영화 촬영을 위한 세트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평양에 갔다는 목사 문익환씨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들과 북한 인민들의 환대를 평생 잊을수 없고 그것을 절대로 배신 할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환대에 감사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배신할수 없다』는 무슨 뜻인가. 金日成의 對南 혁명 전사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것인가.

그는 또 북한이 정치·종교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로 생각 하느냐는 물음에 자신은 그같은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金日成과 남북간의 통일을 협의하기 위해 갔다는 사람이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판단도 할수 없다면 어떻게 남북간의 통일의 교량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세트처럼 대외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예배 한번 보고 북한에 종교자유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니 그는 이미 목사이기를 포기하고 金日成에게 배신할수 없는 『사업』에 온 몸을 던지겠다는 뜻인가.

그는 베이징과 도쿄에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나를 잡아 넣으면 對北문이 닫힌다』느니 『金日成이 나의 신변을 걱정한다』는 등 협박인지 『초조감』인지 알수 없는 말을 그는 흘리고 있다.

정녕 문익환씨가 칠순을 넘긴 나이에 자유인으로 살며 확고한 신념의 목사이기를 바란다면 金주석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옳은 것 아닐까.

『金주석,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남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정권을 보아 왔는데 金주석은 무슨 재주로 40년을 한참 넘겨 굳건히 이렇게 아직껏 정권을 쥐고 있는 거요. 스탈린을 비롯, 어느 독재자도 당신만한 절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실 남에 가서 金주석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려해도 걸리는게 많아요. 첫째, 그 3만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金주석 동상, 이젠 그만 거두세요. 스탈린·毛澤東 모두 생전에 세운 동상 남아난 것 봤습니까. 베트남의 胡志明을 보세요. 그는 생존시 동

상은 커녕 집한칸 없이 동네 할아버지 처럼 살다 갔지만 그의 사후 번듯한 기념비적인 동상을 그의 인민들이 세워줬어요. 둘째, 아드님 문젠데요. 스탈린의 아들 바실리 중장은 모스크바 방공군부사령관을 했지만 스탈린 사후 곧 숙청돼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 없어요. 아드님 金正日씨는 영화에 남다른 재주가 있는듯 하니 영화회사 하나 차려 주세요. 그러면 金주석이 이 세상을 하직 한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부자승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대담한 말 처음 듣지요. 남에서 온 목사로 우리처럼 늙은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좀더 참고 들어보세요. 만수대안에 교회 하나 지었더군요. 그거 참 대외선전용 치고는 최고 성공작입니다. 이왕 세웠으니 우선 연내에 각 도청 소재지에 하나씩만 더 지어 보세요. 내가 남에 가서 「보라, 금년안에 북한에는 더 많은 교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큰소리 좀 치게요. 그리고 金주석의 주체사상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하나만 지적 할게요. 이곳에서는 노멘크라툴라나 아파라치키등 붉은 귀족들은 잘사는데 비해 인민들의 생활은 너무 비참해요. 이것도 유념해 두세요. 꿀말만 너무 드려 죄송합니다』

할말이 없거나 면목이 없으면 그저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을...

평양축전 준비차 처음 평양에 왔을 그들, 한국말을 알리 없는 소련과 유럽의 공산당원들에게도 비위에 거슬린 북한사람들의 우상화 놀음에, 남에서 간 양식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우상화를 부추겨 『존경하는 金주석님』이요, 『환대에 배신할수 없다』요, 『북에 종교 자유 있다』니 할말이 없다.

이제 분명한 목소리들을...

李文熙 編輯理事

한국일보 칼럼('89. 4. 15.)

일 때문에 1년의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보내야 하는 친지 한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도시 불안해서 볼수가 없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런대로 굴러가는 것이 어느 시각으로 봐야 진실인지를 가늠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그의 눈엔 웬만한 사태쯤엔 이제 면역이 되어 꿈쩍도 안하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통하게 보였을지 모른다.

文益換목사의 방북이라는 예기치 못한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치고간 후 지금 여기저기선 앞으로 전개될 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7·7선언 이후 방만하게 운영해오던 對北·北方문제에서 갑자기 경직화된 인상이고 좌경서적 압수, 구속사태가 잇따르는 등 강경화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文목사의 환영대회를 열려던 全民聯등 재야세력들은 文목사를 『통일의 선구자』라며 현정부에 맞서 싸울것을 선언했다.

이 대립되는 상황을 소위 제도 정치권이 중재해 나갈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지금으로서는 갖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전개될 사태는 그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격돌이라는 상황은 면치 못할것 같고 이것이 웬만한 불안에는 익숙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이 남다른 불안을 가져다주는 연유이기도 하다. 어디 이 뿐인가. 수 십년 전이나 들어보던 메이데이 총파업설과 아직도 분류와 시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캠퍼스 등이 이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의 정치권이나 소위 운동권에서는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쉽게 들먹이는 것이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혹은 국민의 지지속에 그들의 행동이 근거해 있음을 강조하려 한다. 우리 국민들도 그들의 행동이 정당할 때 그 편에 있었고 그들의

힘이되어 줬던 것은 사실이다. 멀리는 4·19, 가까이는 6·10의 예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감싸기 시작한 불안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국민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무슨圈·무슨세력의 들러리로만 존재하는, 말없는多數로 계속남아 있어야 하는 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民主化라는것이 시작된 이래 어찌면 최대의 위기일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간 기대했던 정부나 정치권의 조정능력, 학생·재야·근로자들의 자체력을 이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국민이 역할 할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 대결하고 있는 두圈에 대해 보다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고, 어느쪽도 誤算에 의한 파국을 만들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표현이 기다려지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목소리를 가지려면 적어도 목소리를 내는 국민 스스로가 그 존재의 값어치를 높이 인정해야 한다. 국민이란 늘 어떤 결속된 의사나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막연한 집단이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의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엄청난 힘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多數가 분명 원치 않으면서 강권이나 폭력, 독재나 파괴에 日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그속에서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없앨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民主化에서도 그렇지만 좌경, 노사분규, 학생시위 등에서도 그렇다. 싫으면 싫다, 지지할 수 없으면 지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말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는 동양적인 문화배경 때문인지 문제를 보는데 너무 명분에 치우치고 그것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속마음과 다른 목소리를 낼때가 많다. 이런 속마음과 목소리의 誤差는 정치권이나 운동권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우리앞에 나타날 수 있다.

오랫동안 民主化·脱獨裁化가 지배적인 이슈가 되어온 사회에 살아오면서 독재에 항거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있고 또 체질화되어 民主와 多樣的 시대에 와서도 그것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유행적인 체질이 文목사 사건을 계기로 그전보다 분명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불안의 요인들은 복합적이다. 文목사 사건으로 증폭된 측면은 분명 있으나 너무 그간의 民主化과정에서 포출되어 왔던 어떻게 보면 나올만한 것들이다. 독재와 권위주의 舊靛을 벗고 民主라는 값진 가치를 우리것으로 하기 위해 겪는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나간 불안, 위기의 상황 때마다 우리들은 이 점을 커다란 위안으로 삼아 왔었다.

이것은 어떤값과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착실히 진행시켜온 民主化를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말없는 결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것은 文목사 사건으로 격노한 국민의 여론에 편승해 필요이상의 힘을 발휘하려는 公權力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갑자기 금강산이다 北方이다하고 들고나와 국민에게 대혼란을 일으키게했던 정부, 文목사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냉각되고 후퇴해버리는듯한 경박한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소리를 낼 것임을 말한다.

떠들썩한 文목사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또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金日成이 살아있는한 통일논의는 한낱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수록 北方은 긴요한 것이고 기왕에 길터진 北方에 좀 더 성실한 접근을 해야한다. 갑자기 예정됐던 경제인들의 訪蘇취소는 그 내막이 어떤것인지는 몰라도 매우 알팍한 전술적 대응의 인상을 강하게 준다.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들은 더욱 긴장완화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 점이 우리가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北方으로 향하는 것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이다. 民主와 긴장완화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에게 매우 소중한 목표이기도 하고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것이 궁극에는 통일에 이르는 바탕이 될 것임을 믿고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떤것인지는 몰라도 불안한 국민들은 노사현장에서도, 우리사회의 이념의 갈등구조속에서도 슬기로운 극복이 있게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民主化의 값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치를 태세도 갖춰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金日成면담과 초월성

金英漢 송실대 교수

國民日報 성서로 보는 세상('89. 4.15.)

현금 우리사회는 文益煥목사가 비밀리 행한 訪北이 던져준 충격과 파문에서 아직도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재야단체들은 그의 방북에 대한 환영대회를 강행하려 했고 당국은 그를 김포공항 도착즉시 연행 구속수사하고 있다. 성직자의 신분을 지닌 그가 북한에서 김일성과 만나 통일에 관한 정치회담을 가지는등 이율배반되는 행동과 발언을 행한 것에 대해서 교계일각의 비난과 규탄의 소리가 높은가 하면 그가 속한 基長교단에서는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사회와 교계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미 과거의 일이 된 사실에 대한 환영과 규탄, 사법처리와 처리반대라는 감정과 흥분의 대립속에만 머물수 없고 이 일이 남겨준 교훈과 통일에 접근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가다듬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첫째, 아무리 그 동기가 애국적 충정에 입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문목사는 통일에 관한 접촉창구를 정부가 독점, 통일논의에 진전이 없으므로 민중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자신이 직접 통일에 관한 접촉창구의 역할을 해보고자 은밀히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목사가 한국의 정부당국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치 않는 김일성의 초청을 수락했고 김일성의 통일방안에 근본적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의 연방제안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은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적 실체성을 외면한 것이며 인권과 자유와 인간존엄뿐만 아니라 통일논의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는 북한사회와 그 당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따라서 그의 방북 통일논의는 통일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켜주었을 뿐 한국정부를 위해 가져온 결실은 현재로는 없다. 통일의 물꼬가 트이기는 커녕 남북고위당국자예비회담이 연기되

고 있을 뿐 아니라 금강산개발을 위한 정주영씨의 2차방북도 연기되고, 경제인들의 소련방문이 연기되었다. 이 충격의 여파로 全民聯간부 및 재야교수들이 구속 또는 연행수사 받으면서 민주화과정에 역행하는 우익전향의 분위기가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다. 또한 북방정책의 가속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둘째, 文목사의 북한에서의 언행은 기독교성직자의 사상과 행동이라고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만일 그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40년 이상이나 이질화되어 온 남북통일에 그러한 감상적 태도와 행동으로 돌파구가 열릴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文목사의 그 대담한 북한 밀행과 김일성면담으로부터 혹시나 바랄 수 있던 것은 그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그러한 정치적 외교적 발언을 넘어서 북한사회에서의 신앙의 자유 요청, 북한사회의 개방화, 정치·사상범의 석방,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왕조세습에 대한 비판적 국제여론 전달, 진정한 통일논의를 위한 전쟁책임자 김일성의 전면 퇴진, KAL기 폭과만행에 대한 책임추궁, 남한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성직자의 순교적 초연성의 태도로써 개진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셋째, 통일이란 냉정한 성찰과 끈기있는 대화와 중단없는 상호신뢰구축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정치적인 협상이나 고위당국자의 결단에 의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전혀 남쪽정부나 시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 한 개인의 영웅주의적 방북및 북한의 정책에 대한 찬사로써 통일의 물꼬가 트이는 것도 결코 아니나.

통일논의의 기초는 남한사회의 북방정책으로서만 닦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해서 북한사회가 개방화되고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개통된다. 북한사회란 애기가 생후 3개월 만에 탁아소에 보내어져 모성애 대신 김일성 어버이상이 주입되고, 네살에는 유치원에 들어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맹세 하고, 국민학교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을 배우고 남한과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주입되는 폐쇄사회요 一次元的 사회이다.

성직자의 정치참여란 어떤 특정 편을 드는 정치화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초월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직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어느 편에 서지않고 양자의 입장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초연한 입장에 서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마땅히 선포 내지 간언해야 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성직자인 文목사에게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면 이 예언자적 초월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 점에 있다.

남한사회에서 그동안 반체제인사로서 북한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던 그야말로 이번 방북기회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종교자유와 개방화에 관해 예언자적 초월성의 입장에서 간곡히 진언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文목사 入北의 충격과 敎訓

卞基榮 天真庵聖地 主任神父

서울신문 칼럼('89. 4.16.)

가보기 힘든 평양 방문과 만나보기 어려운 김일성 면담은 우리의 현실속에서 늘 화제거리중 하나였다. 그런데 세간에 널리 알려져 온 대로 한 정치목사가 현행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실로 과감한 결단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 방문의 목적과 성격 및 결과와 영향에 못지않게 그 정치목사의 과거 경력과 현재의 배경, 그리고 오늘의 우리사회 현실때문에 그 방문의 방법과 순서를 정부는 우선 문제 삼고 있으며 또 그 방문의 목적과 행동자체도 위법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對北제안 좀더 신중히

그러나 사실 따지고보면 평양방문자와 김일성면담자와 북한왕래자들이 문목사 한 사람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참된 문제는 평양이나 김일성이나 문목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제도, 즉 폐쇄사회를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의 무신론사상 자체에 있는 것이다. 특히 한 민족으로서 분단 상태에서의 갖가지 여건이 이를 더욱 살벌한 문제로 다루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적 근본문제를 떠나서 문목사의 평양방문과 김일성방문을 이처럼 사실이상의 큰 사건으로 만든 것은 현재의 여 야3당 정치 지도자들의 탓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여 야3당의 지도자들이 심지어 집권당의 국가원수위치에서까지도 너무나 경솔하고 주책없이 함부로 평양방문과 김일성면담을 국내외에서 제의하고 요청하고 호소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듭하여 왔는가. 그때마다 필자는 속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알면서 왜 저런 헛소리를 크게 하는지』의심스러웠고 여 야 정치지도자들의 이러한 발언과 몸부림들이 오늘의 문목사 평양방문과 김일성면담의 주가를 사실자체이상으

제부터는 여야 정치지도자들 자신이 말없이 일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태산의 무게를 가진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사회를 들뜨게하는 것은 오늘의 발전된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때문에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의 인기추구자세에도 한 큰 원인이 있다. 인기를 추구하려니 인심 잃는 애국적인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이러한 정신상태 때문에 인심잃을 일은 국민들끼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권함으로써, 정부의 불필요성이 실감되게 마련이며 공무원의 애국적인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근면성은 상실되고 기강은 해이해져서 있으나마나한 파출소가 돼버리고 있다.

公職者들 정신 차릴때

인류역사상 모든 나라는 항상 공무원들이 망치고 백성들이 구하였다. 법률이 없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정신기강이 없어서, 해이해져서 망하였다. 국민들의 정신기강은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와 심리상태가 주축이 되는 것이다. 욕먹기 싫고, 인심잃기 싫고, 인기를 원하는이들은 공무원보다는 배우생활이 더 바람직스럽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분명히 정치위기의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괜찮다, 두고봐라, 과도기니 참아라』하는 말은 신용을 잃어간다.

여야의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은 소리없이 피었다가 지고 가는 死線의 한 송이 꽃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위기관리의 사명완수에 신명을 바쳐야 나라도 자신들도 함께 살 것이다.

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싶다.

야당지도자들이야 그들의 위치가 위치만큼 인기획득과 주가를 위하여 이런 소리 저런소리 한다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으나, 내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원수의 발언이나 선언은 좀 신중하고 과묵해야 하겠다. 사전에 북한당국 실무자들과 완전합의가 되고 정확히 결정된 후에라도, 좀 조심스레 천천히 아주 간결히 그것도 대통령 자신이 무슨 선전원처럼 직접 발표하지 말고, 집권당의 사무처 국장급 정도 선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방문과 김일성 면담까지도 거부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조금씩 흘러나가는 식으로, 좀 신중하고 과묵한 국가원수의 체통을 지키도록 해야지, 무슨 큰 일이나 이미 생긴듯이, 되지도 않을 일을, 하지도 못할 일을 선언하고 발표하는 경솔한 처신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앞으로 수권정당의 대통령후보들로 자처하는 이들도 다함께 좀 조심해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하루 아침에 統一되나

특히 그러한 발언내용이나 형식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아 온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의 정신자세와 심리상태이다. 평양방문과 김일성면담 한 번으로 이북이 이남이 될 것도 아니고 통일이 하루 아침에 될 수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결국 희소가치가 있는 정치성을 띤 행위로 온 국민을 좀 깜짝놀라게 해서 인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정치배우의 심리가 아닌가? 이후락씨의 평양방문과 김일성면담으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묻고 싶다. 그렇다고 대화를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식언을 다반사로 여기거나 말부터 앞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여 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與野의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감이나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기위주의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들 중에는 필요이상으로 인기위주의 행동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경우 해야할 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책임회피의 방도나 찾는 이들도, 인기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심지어는 선임자들의 업적도 잘못된양 파헤치고 떠들어대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이

統一論議 資料集Ⅲ

印刷 1989年 7月 25日

發行 1989年 7月 30日

發行 國土統一院
編輯 教育弘報室
印刷 竹村印刷株式會社
